

# Journal of the Association of Korean Geographers

Vol. 14, no. 4 · December 2025

[Articles]

- 413 Developing Learning Modules Based on Border Practices to Foster Critical Global Citizenship  
Daeun Jeong
- 435 The Effect of Regional Opportunity Structures on the Development of Key Competencies:  
A Geography of Opportunity Approach Using Longitudinal Data from the Gyeongnam Office of Education  
Minsuk Son · Kanghee Lee
- 453 Cases of Nature-based Solutions Applied to Rivers in Korea and their Typological Characteristics  
Da Hae Go · Kwang Hee Choi · Yeongkyu Shin
- 467 Developing and Evaluating a River-Based Environmental Geography Program to Foster Ecological Citizenship in Elementary Students  
Yongjun Choi · Minsung Kim
- 483 Spatio-temporal Patterns of Urbanization Stages: Focusing on City-Regions in South Korea (1990-2020)  
Daeheon Cho · Eunsoo Park · Yewon Yoo
- 501 Coastal Commercial Area Extraction and Characteristics Study: Using Image Segmentation Model  
Younghoon Kim · Byeonghwa Jeong · Juhwan Song
- 517 Causes of Attraction Place Formation and Sustainability of 'Sasundae'  
Sungwook Cho

[Book Review]

- 533 Bibliography of Korea's First Geographical Journal 'GEOGRAPHY'  
Won Hoe Choi

[Articles of Association]

- [Ethics Regulation]
- [Editing Regulation]

제 14권 제 4호 · 2025년 12월

# 한국지리학회지

Journal of the Association of Korean Geographers

제 14권 제 4호 · 2025년 12월

[논문]

- 413 비판적 세계시민성 함양을 위한 경계실천 학습 모듈 개발  
정다운
- 435 지역의 기회 구조가 핵심역량 성장에 미치는 영향: 기회의 지리 관점과 경남교육청종단연구 자료의 활용  
손민석 · 이강희
- 453 국내 하천에 적용된 자연기반해법의 사례와 유형별 특징  
고다혜 · 최광희 · 신영규
- 467 초등학생의 생태시민성 함양을 위한 하천 환경지리 프로그램 개발과 교육 효과 분석  
최용준 · 김민성
- 483 도시화 단계 변화의 시공간 패턴 분석: 한국의 개별 도시권을 중심으로(1990-2020)  
조대현 · 박은수 · 유예원
- 501 이미지 분할 모델을 활용한 연안지역 상권 추출 및 특성 연구  
김영훈 · 정병화 · 송주환
- 517 '사선대'의 명소 형성 원인과 지속가능성  
조성욱

[서평]

- 533 한국 최초의 지리학술지 '지리'의 서지  
최원희

- [정관]
- [연구윤리규정]
- [편집규정]

## 한국지리학회 임원 (2025. 1. 1. - 2026. 12. 31.)

회 장:	안재섭(동국대학교)	
부 회 장:	김영호(고려대학교)	김영훈(교원대학교)
	류연택(충북대학교)	박지훈(공주대학교)
	홍일영(남서울대학교)	
편집위원장:	신정엽(서울대학교)	
총무부장:	박종철(공주대학교)	
총무차장:	고민경(경북대학교)	김오석(고려대학교)
	김진관(전남대학교)	
편집부장:	김민성(서울대학교)	
편집차장:	박용하(전북대학교)	한지은(한국교원대학교)
	홍성찬(한국교원대학교)	
학술부장:	조대현(경북대학교)	
학술차장:	김수정(전남대학교)	오정식(경북대학교)
	정해용(강원대학교)	
홍보부장:	배선학(강원대학교)	
홍보차장:	송원섭(제주대학교)	신재열(경상대학교)
	이진희(부산대학교)	
교육부장:	김기남(한국교육과정평가원)	
교육차장:	유재진(공주대학교)	정주연(제주대학교)
	함경림(대구가톨릭대학교)	
감 사:	이광률(경북대학교)	임은진(공주대학교)
고 문:	강철성(충북대학교)	김종욱(서울대학교)
	장 호(전북대학교)	
상임이사:	기근도(경상대학교)	김창환(강원대학교)
	박철웅(전남대학교)	서태열(고려대학교)
	이상일(서울대학교)	장동호(공주대학교)
	조성욱(전북대학교)	최성길(공주대학교)
	최원희(공주대학교)	
이 사:	권상철(제주대학교)	권영락(한국교육과정평가원)
	김다원(광주교육대학교)	김만규(공주대학교)
	김숙진(건국대학교)	김익희(국토연구원)
	김종연(충북대학교)	김현미(한국교육과정평가원)
	김혜숙(한국교육과정평가원)	김효진(삼성전자)
	류중형(부경대학교)	서종철(한국환경지리연구소)
	심승희(서울대학교)	안종욱(한국교육과정평가원)
	양희경(서울특별시교육청)	윤옥경(청주교대학교)
	이간용(공주교대학교)	이건학(서울대학교)
	이나영(강원대학교 DMZ접경지역연구소)	이용균(전남대학교)
	이은걸(경희대학교)	이의한(강원대학교)
	이재복(동국대학교)	이재열(고려대학교)
	이호욱(경남과학고등학교)	장영진(한국교원대학교)
	전보애(가톨릭관동대학교)	정성훈(강원대학교)
	정현주(서울대학교)	지호철(강원대학교)
	최광용(제주대학교)	최광희(가톨릭관동대학교)
	한 민(한국지질자원연구원)	황진태(동국대학교)
총무간사:	김민준(공주대학교)	
편집간사:	정다운(서울대학교)	

## 윤리위원회 (2025. 1. 1. - 2026. 12. 31.)

위원장 : 류주현(공주대학교)  
 부위원장 : 이건학(서울대학교)  
 위 원 : 이용균(전남대학교), 정성훈(강원대학교), 정현주(서울대학교), 정희선(상명대학교)  
 간 사 : 범영우(전남대학교)

## 편집위원회 (2025. 1. 1. - 2026. 12. 31.)

편집위원장 : 신정엽(서울대학교)  
 편집부장 : 김민성(서울대학교)  
 편집차장 : 박용하(전북대학교), 한지은(한국교원대학교), 홍성찬(한국교원대학교)  
 편집위원 : 김결(한국교원대학교), 김숙진(건국대학교), 변종민(서울대학교), 이영아(대구대학교)  
 최광용(제주대학교), Shizhu Jin(Yanbian University), Jo Injeong(Texas State University)

## 한국지리학회지 ISSN 2287-4739 (Print) 제 14권 제 4호 (2025년 12월 31일) ISSN 2733-8991 (Online)

### 발 행 : 한국지리학회

(04620) 서울특별시 중구 필동로 1길 30  
 동국대학교 사범대학 학림관(J동) 1층 105호  
 학사운영실  
 전화: (02)2260-3108 팩스: (02)2260-3113  
 E-mail: geography.akg@gmail.com  
<https://www.koreangeography.or.kr/>

### 조판·인쇄 : (주)에이퍼브

(04626) 서울 중구 필동로8길 43  
 전화: (02)2274-3666(대) 팩스: (02)2274-4666  
 E-mail: apub,edit@apub.kr

### 학회비 납부 및 회원 가입 안내

학회비를 납부하실 회원께서는 다음의 계좌로 학회비를 납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농협: 301-0329-4024-61 (예금주: 한국지리학회)

본 학회 회원으로 가입을 원하시는 분은 학회 사무실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 비판적 세계시민성 함양을 위한 경계실천 학습 모듈 개발\*

정다운\*\*

## Developing Learning Modules Based on Border Practices to Foster Critical Global Citizenship\*

Daeun Jeong\*\*

**요약 :** 본 연구의 목적은 세계화 시대에 요구되는 비판적 세계시민교육을 실천적으로 구현하고자 '경계실천(border practices)' 개념에 기반한 학습 모듈을 개발하고 타당성을 검증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먼저 경계실천의 주요 개념(경계의 이동성·유동성·다층성, 경계짓기, 세계시민적 경계, 경계작업)을 비판적 세계시민성 함양을 위한 교육 전략으로 전환하고 학습 프레임워크를 도출하였다. 이를 바탕으로 각 개념을 5E 탐구 학습모형에 통합하여 학습 모듈을 설계하였으며, 모듈은 학습자가 경계의 권력적 작동 기제를 비판적으로 성찰하고 정치·윤리적 책임감과 실천 의지를 함양하도록 구성되었다. 마지막으로 개발된 모듈에 대한 델파이 조사를 실시하여 내용 타당도 및 전문가 합의도를 확인하였다. 본 연구는 지리교육의 맥락에서 비판적 세계시민교육의 실천적 기반을 마련하고, 최근의 학문적 전환을 반영하여 국가 교육과정 및 현장과의 연계성을 제고하였다는 점에서 의의를 지닌다.

주요어 : 비판적 세계시민성, 비판적 세계시민교육, 경계실천, 지리교육

**Abstract :**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develop learning modules based on the concept of 'border practices' and to validate their effectiveness, thereby practically implementing the critical global citizenship education required in the era of globalization. This study first converted the core concepts of border practices (the mobility, fluidity, and multi-layeredness of borders, bordering, cosmopolitan borders, and borderwork) into educational strategies for fostering critical global citizenship and derived a structured learning framework. Based on this framework, the modules were designed by integrating each concept into the 5E Inquiry Model. The modules are structured to encourage learners to critically reflect on the power mechanisms of borders and cultivate political and ethical responsibility along with a practical willingness to act. Finally, Delphi survey was conducted on the developed modules to confirm their content validity and expert consensus. This research establishes a practical foundation for critical global citizenship education within the context of geography, thereby contributing to enhancing its connection with the national curriculum and educational field, aligning with recent academic shifts.

Key Words : Critical global citizenship, Critical global citizenship education, Border practices, Geography education

### I. 서론

오늘날 전 지구적 현안들은 환경, 정치, 사회, 경제, 안

보를 포함한 여러 영역에서 복합적이고 상호 연결된 형태로 나타나고 있다. 기후 변화, 불평등 심화, 폭력적 극단주의 등은 국가 경계를 초월하여 전 인류에게 영향을 미치

\*이 연구는 정다운의 석사학위논문 일부를 발췌하여 수정 및 재구성한 것임.

\*\*서울대학교 지리교육과 박사과정(Ph.D. Student, Department of Geography Education, Seoul National University, jde1211@snu.ac.kr)

는 주요 도전으로 대두하였다. 이러한 이유로 기존의 국가 중심적 사고방식만으로는 범국경적 현안들을 해결하기 어렵다는 인식이 확산되었고, 개인의 소속감과 책임감을 특정 국가에서 전 지구적 공동체로 확장하려는 세계시민성(Global Citizenship) 개념이 시민교육에서 중요한 논의 주제로 떠올랐다. 그러나 단순히 세계에 대한 인식을 높이는 것을 넘어, 문제의 근본적인 원인을 파악하고 이를 구조적으로 변화시키기 위한 능동적인 개입이 요구되면서 비판적 세계시민성(Critical Global Citizenship)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비판적 세계시민성은 지구적 불평등, 권력 관계, 구조적 부정의 근원을 비판적으로 성찰하고 정치적 해결과 실천적 참여를 강조하는 개념이다(Pashby, 2015; Stein, 2015). 이는 기존 세계시민성 담론이 서구 중심의 보편성에 기반하여, 세계화 문제를 지나치게 온건하게 다룬다는 비판에 대한 대안적 패러다임으로 제시되었다(Andreotti, 2006).

지리교육은 특정 지역의 경계를 넘어 다층적이고 중첩된 공간적 소속감을 기르는 데 강점을 가지며(한희경, 2011), 이러한 특성으로 인해 공간적 관점에서 비판적 세계시민성을 강화할 수 있는 교과로 인식된다(Gonzalez-Valencia *et al.*, 2022). 이러한 배경을 바탕으로 2022 개정 지리과 교육과정에서는 <세계시민과 지리>를 중심으로 비판적 세계시민성을 교과 목표 중 하나로 지향하고 있으며(김민성·이윤구, 2023), 관련 교수·학습 연구 역시 점차 축적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리교육 분야 내 비판적 세계시민성 논의는 여전히 개념적이고 추상적인 수준에 머물거나 구체적인 교수·학습 현장에 적용하기 어렵다는 한계를 지닌다(김갑철, 2022; Dispa *et al.*, 2025). 따라서 비판적 세계시민성 함양을 위한 구체적이고 실천적인 교육 방안의 모색이 요구된다(윤노아, 2022).

본 연구는 경계(border) 개념에 대한 비판적 학습이 비판적 세계시민교육의 효과적인 실천 전략이 될 수 있음에 주목한다. 특히 최근 비판지정학을 중심으로 경계가 다양한 행위자들에 의해 실천되는 과정과 결과를 성찰하는 ‘경계실천(border practices)’ 개념은 주목할 만한 이론적 도구이다. 경계실천은 경계가 사회적·정치적·담론적으로(재)구성되는 과정에서 작동하는 권력과 차별의 기제를 해체적으로 드러내며, 사람들이 일상에서 다양한 방식으로 경계를 만들고 변형하는 행위들에 집중한다. Hafeda(2016:397)는 경계실천을 “비판적 공간 실천의 한 유형”으로 규정하며, 기존의 공간 구조를 새로운 관

점에서 재고하고 변화를 위한 실천적 개입이 가능한 방법론으로 인식한다. 이러한 점에서 경계실천은 지리과가 공간 정의(spatial justice) 관점에서 비판적 세계시민교육을 구현하는 유의미한 의제로 기능할 수 있다.

이에 본 연구는 경계실천 개념을 바탕으로 비판적 세계시민성을 함양할 수 있는 구체적인 교수학습 방안을 모색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먼저 경계실천과 관련된 국내외 선행연구를 검토하여 비판적 세계시민성과의 연계 가능성을 탐색하고, 학습 모듈 개발의 이론적 토대를 마련하였다. 이후 경계실천의 주요 개념들(경계의 이동성·유동성·다층성, 경계짓기, 세계시민적 경계, 경계작업)을 중심으로 학습 모듈을 설계하였다. 마지막으로 현직 교사 10명을 대상으로 한 델파이 조사를 통해 학습 모듈을 보완하고 타당성을 검증하였다. 이 연구는 지리교육의 맥락에서 비판적 세계시민교육의 실천 가능성을 높이고 국가교육과정 및 현장과의 연계성을 강화하는 데 기여할 수 있다. 본 연구의 구체적인 연구 질문은 다음과 같다.

첫째, 비판적 세계시민성 함양을 위한 경계실천 학습 전략은 어떻게 구체화되는가?

둘째, 비판적 세계시민성 함양을 위한 경계실천 학습 모듈은 어떻게 구성되는가?

셋째, 비판적 세계시민성 함양을 위한 경계실천 학습 모듈은 타당한가?

## II. 이론적 배경

### 1. 비판적 세계시민성

최근 세계시민교육 담론에서는 전 지구적 불평등, 권력 관계, 구조적 부정의 근원을 비판적으로 성찰하고, 이에 대한 정치적·실천적 참여를 강조하는 ‘비판적 세계시민성(Critical Global Citizenship)’이 중요한 개념으로 부상하고 있다(Blackmore, 2016). 비판적 세계시민성은 파울로 프레이리(Paulo Freire)의 비판적 페다고지, 탈식민주의, 후기 구조주의의 영향을 받아 발전된 개념이다(Oxley and Morris, 2013). 이는 기존 세계시민교육에서 주류였던 연성적 세계시민성(Soft Global Citizenship)과 이론적으로 대비되는 대항 담론의 성격이 강하다(Andreotti, 2006). 연성적 세계시민성이 현존하는 시스템을 보다 실용적으로 개선하는 데 중점을 두는(신)자유주의적 경향

이 있다면, 비판적 세계시민성은 사회적 부정의를 명시적으로 인정하고 해결하려 하며 기존의 구조에 대한 근본적인 대안을 제시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Pashby et al., 2020). 비판 교육학자들은 연성적 세계시민성이 서구 중심의 세계 경제의 질서를 재생산하고, 인류 공통의 가치를 추상적으로 보편화함으로써 주변부 세계 타자의 목소리와 현실을 불공정하게 제거할 수 있다고 우려하였다(김갑철, 2016). 이러한 한계를 보완하고자 논의된 비판적 세계시민성은 자신의 지식과 그 전체에 대한 성찰을 요구하며, 정의롭고 평등한 사회를 만들기 위한 구체적인 행동과 실천을 핵심으로 삼는다(Blackmore, 2016).

비판적 세계시민성은 2000년대 중반 영미권 교육학계를 중심으로 추상적인 담론 속에서 논의되었으나, 최근에는 이를 구체적으로 정의하고 지리교육 맥락에 적용하려는 시도가 나타나고 있다. 먼저 논의를 촉발한 Andreotti (2006)는 세계의 불평등과 부정의를 문제로 인식하고, 타자에 대한 책임감을 바탕으로 행동하는 시민의 특성으로 설명하였다. 이어 Oxley and Morris(2013)는 억압적 세계 구조를 해체하고 소외된 사람들의 불평등에 도전하는 세계시민성의 하위 유형으로 분류하였다. 보다 구체적으로, Mansouri et al.(2017)은 비판적 세계시민성이 인지적, 정의적, 행동적 역할을 아우르는 연속체이며, 개인의 행동이 지역·국가·세계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윤리적 책임감과 비판적 지식 이해를 포함한다고 정의하였다. 사회과 교육 맥락에서는 Gonzalez-Valencia et al.(2022)이 세계의 부정의에 대한 비판적 리터러시와 사회 변화를 위한 시민의 행동을 강조하였다. 나아가 국내 지리교육 맥락에서 한희경(2013)은 비판적 세계시민성이 지역·국가·세계 간의 위태로운 긴장 속에서 기존의 지배적 메타지리에 얽매이지 않고 중첩적이고 다변적인 정체성에 주목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또한 김갑철(2019)은 특정 권력에서 배제된 세계 타자에 대한 개방성과 정치·윤리적 책

입감을 강조하였다.

이러한 선행 논의를 종합하여, 본 연구는 비판적 세계시민성을 ‘지역·국가·세계 수준에서 얽힌 부정의를 비판적으로 성찰하고, 이에 대한 정치·윤리적 책임감을 바탕으로 사회 변화를 위해 행동하고 참여할 수 있는 자질’로 정의한다. 또한 Mansouri et al.(2017)의 논의와 기존 세계시민성의 하위역량 구분 연구(UNESCO, 2015; 윤성혜·강명희, 2017)를 토대로, 비판적 세계시민성을 인지, 정의, 실천의 세 가지 하위 역량으로 나누어 표 1에 제시하였다. 인지적 측면에서는 지역·국가·세계 수준의 부정의를 구조적인 문제로 인식하는 비판적 사고가 필요하다. 정의적 측면에서는 정의·평등·다원성의 가치를 내면화하고, 소외된 세계 타자들에 대한 정치·윤리적인 책임감을 갖는 태도가 요구된다. 실천적 측면에서는 더 공정한 세계를 만들기 위해 사회에 참여하고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는 의지가 중시된다.

## 2. 경계실천

전통 지리학에서 경계는 국가의 물리적 영토를 분할하는 정적인 선(line)으로 간주되었다. 이러한 기하학적이고 공간 과학적인 접근은 경계의 동적인 형성 과정보다는 고정된 구조에 초점을 맞추었으며, 경계선을 표시하고 구분하는 ‘boundary’로서 경계를 인식하는 지배적 관점이었다(van Houtum, 2005). 그러나 이러한 전통적 개념은 20세기 후반과 21세기 초반에 등장한 다양한 전 지구적 이슈들을 충분히 설명할 수 없는 현실적 한계를 드러냈다(Newman and Paasi, 1998). 이에 따라 지리학자들은 경계가 사회적·심리적·문화적 요소가 개입된 다층적이고 구성적인 형태로 변모하고 있음에 주목하기 시작하였다(Seidel and Budke, 2019). 특히 공간을 중립적 용기로 개념화하는 전통적 방식은 특정 집단을 배제하고 기존

표 1. 비판적 세계시민성의 개념과 하위역량

비판적 세계시민성		
지역·국가·세계 수준에 얽힌 부정의를 비판적으로 성찰하고, 이에 대한 정치·윤리적 책임감을 바탕으로 사회 변화를 위해 행동하고 참여할 수 있는 자질		
인지(지식·이해)	정의(가치·태도)	실천(행동·행동의지)
지역·국가·세계 수준에서 얽혀 발생하는 부정의와 이를 초래하는 구조·체계에 대한 비판적 사고	정의·평등·다원성의 가치를 지향하는 태도 및 소외된 세계 타자들에 대한 정치·윤리적인 책임감	더 공정한 세계를 만들기 위한 사회 참여 및 문제 해결 의지

의 사회적 계층 구조를 합리화하는 데 사용될 위험이 크다는 당시의 학문적 성찰이 패러다임 전환의 주요 동력이 되었다(조철기, 2012).

이러한 학술적 요구 속에서 비판지리학을 중심으로 경계를 여러 행위자들에 의해 구성되는 과정이자 실천으로 인식하는 ‘경계실천(border practices)’ 관점이 부상하였다(Andersen *et al.*, 2016; Hafeda, 2016; Connor, 2025). 1980년대 이후 사회과학 분야에서 나타난 실천적 전회(practice turn)와 공간적 전회(spatial turn)의 흐름은 경계 개념에 대한 근본적인 재해석을 요구하였다(van Houtum, 2005; 조철기, 2012). 이 관점에서 경계는 사회적, 물질적, 상징적, 기술적 활동을 통해 끊임없이 생산, 구성, 유지, 수정되면서 실천된다(Piot, 2010). 이와 같은 패러다임의 전환으로 경계 연구는 지리학의 울타리를 넘어 국제관계학, 인류학, 법학 등 다양한 학문적 통찰을 통합하는 학제적 분야로 확장되고 있다.

이러한 전환으로 인해 지리학의 주요 과제는 ‘경계가 어디에 위치하는가’에서, ‘누가, 왜, 어떻게 경계를 긋고 그에 대항하는가’를 비판적으로 탐구하는 것으로 이동하였다. 경계실천의 관점에서 경계는 공간의 최외곽에만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법, 제도, 상징, 기술 등 다양한 형태와 차원에서 존재하며 일상적으로 작동한다(박위준, 2023). 물질적 경계는 물리적 공간에 설치되는 장벽, 울타리, 검문소와 같은 구체적인 사물로 구현되며, 행정적 경계는 난민법, 여권, 비자 제도와 같이 이주자의 이동과 체류를 통제하는 공식적인 통제 시스템에 해당한다(Popescu, 2011). 이에 더하여 상징적 경계는 이주자에 대한 차별 정책을 정당화하거나 제노포비아(xenophobia)를 조장하는 미디어 담론과 같이, 사회에 확산되는 서사를 통해 내부자와 외부자의 정체성을 구분하고 강화한다(Newman and Paasi, 1998). 예를 들어 최근 미국-멕시코 국경 사례에서 물리적 장벽을 세우고 이민 제도를 강화하는 행위, 이를 정치적 담론으로 활용하는 행위, 그리고 이에 반대하여 경계를 넘나드는 행위들 모두 경계실천으로 해석할 수 있다.

경계실천 관점은 본질적으로 경계가 실천되는 과정과 결과에 대한 비판적 시각을 견지한다. 특히 경계가 사회적, 정치적, 담론적으로 (재)구성되는 과정에서 작동하는 권력, 차별, 불평등에 문제를 제기한다(Popescu, 2011). 이러한 문제의식은 현재의 경계에 대한 윤리적, 정의적 논의를 촉발하며, ‘국익과 안보라는 명분으로 타자의 권리를 제한하는 것이 정당한가’와 같은 질문을 던지게 한

다. 그리고 이러한 물음과 함께 다양한 경계 행위들이 수반되는데, 사람들은 단순한 이주나 이동을 넘어 글로벌 불평등 속에서 경계를 재구성하고 협상하며 탈경제적 주체성을 형성하는 행위에 참여한다(Piot, 2010). 이러한 관점에서 Hafeda(2016)는 사람들이 경계 구성에 참여하는 행위를 일상생활 속에서 ‘비판적으로 공간을 실천하는 것(critical spatial practice)’이라고 설명하였다.

최근에는 다양한 차원에서 작동하는 새로운 형태의 경계를 분석하고 탐색하는 방향으로 연구가 전개되고 있다. 예를 들어 경계 행위론(border praxeology)과 같은 이론적 접근은 인간 중심적 관점을 넘어, 인공지능이나 생체 인식 기술, 강이나 동물과 같은 비인간 행위자의 역할을 조명하는 포스트휴머니즘 관점까지 다루고 있다(Connor, 2025). 나아가 이러한 관점은 기후 위기나 전염병과 같은 비인간 행위자에 의해 변화하고 재구성되는 경계 현상에 대한 탐구로 확장될 수 있다.

요컨대 최근 경계 연구는 경계를 고정된 실체가 아닌 복합적으로 얽힌 다차원적 행위의 총합으로 파악하는 패러다임의 전환을 이루었다. 이러한 경계실천 관점은 물리적 장벽부터 기술적 통제, 상징적 차별에 이르기까지 권력의 발현 방식을 해체적으로 분석할 수 있는 심층적 통찰을 제공한다. 나아가 경계 구성 과정에서 배제된 집단이 새로운 주체적 입장을 구축할 수 있는 가능성을 내포한다. 따라서 경계실천을 교육적 의제로 삼아 구체적인 교수·학습방안을 모색하는 것은 시대적·학술적 요구에 부응하는 실천적 가치를 지닌다고 할 수 있다. 경계를 매개로 글로벌 불평등이 작동하는 방식을 해체하는 것은 국경을 넘어선 중첩된 정체성을 이해하는 데 기여한다(한희경, 2013). 특히 학생들이 경계를 권력과 배제가 투영된 사회적 구성물로 인식하고 이를 비판적으로 탐구하는 과정은 비판적 세계시민성을 강화하는 중요한 교육적 기제이다(원요한·임우진, 2021). 이러한 점에서 경계실천에 대한 탐구는 공간에 대한 변혁적 역량을 기르는 행동 지향적 시민교육의 핵심 주제가 될 수 있다(Seidel and Budke, 2019).

### III. 연구 방법

본 연구는 그림 1과 같은 순서로 진행되었다. 먼저 비판적 세계시민성 함양을 목표로 경계실천 학습 프레임워크를 도출하였으며, 이를 기반으로 학습 모듈의 초안을 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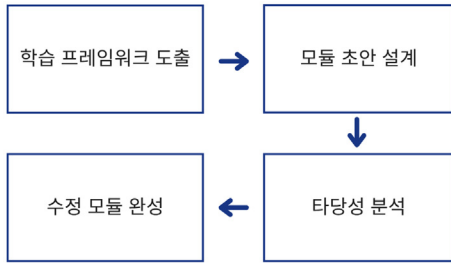


그림 1. 연구 수행 절차

발하였다. 이후 델파이 조사를 통해 모듈의 교육적 타당성을 검토하고, 피드백에 따라 수정하여 최종 모듈을 완성하였다. 주요 절차별 자세한 연구 방법은 다음과 같다.

## 1. 경계실천 학습 프레임워크 도출

본 연구는 구체적인 학습 전략을 모색하기 위해 경계실천을 핵심 키워드로 설정하고, 1990년대 후반 이후로 발표된 국내외 주요 학술지 논문 총 25편을 분석하였다. 분석한 문헌을 중심으로 경계실천 논의의 주된 축을 비판적 세계시민성의 하위 역량과 연계하는 방식으로 프레임워크를 도출하였다. 이 과정에서 경계의 본질 규명에 관한 논의를 인지적 이해의 토대로, 윤리적 성찰을 다루는 논의를 정의적 태도의 영역으로, 그리고 시민의 능동적 참여를 다루는 논의를 실천적 역량의 영역으로 재구조화하였다. 그 결과, ‘경계의 이동성·유동성·다층성’, ‘경계짓

기’, ‘세계시민적 경계’, 그리고 ‘경계작업’의 네 가지 개념이 비판적 세계시민성과 유기적으로 연계될 수 있는 핵심 개념으로 확립되었다. 예컨대, 학술적으로 경계의 사회적 구성을 의미하는 ‘경계짓기’ 개념은 비판적 세계시민성의 목표에 맞추어 ‘경계 이면의 권력 관계와 부정의를 비판적으로 해독하는 학습 전략’으로 교육적 목적을 재설정하였다. 이를 통해 학습 프레임워크를 도출하고, 학습 모듈 개발의 이론적 틀을 마련하였다.

## 2. 경계실천 학습 모듈 설계

경계실천의 핵심 개념을 중심으로 총 4개의 학습 모듈을 설계하였으며, 이 과정에서 다음과 같은 세 가지 주요 원칙을 수립하였다. 첫째, 모듈별 학습목표는 비판적 세계시민성의 하위 역량과 연계하여 세분화한다. 각 모듈의 학습목표는 인지적 역량, 정의적 역량, 실천적 역량의 세 영역으로 설정하여, 학습의 종합적인 효과를 도모하였다. 둘째, 2022 개정 지리과 중등 교육과정과 연계하여 현장 적용성을 높인다. 모듈별로 관련 성취기준을 명시함으로써, 현장 교사들이 과목, 단원, 적용 학년 등을 고려하여 재구성할 수 있도록 하였다. 셋째, 특정 개념이나 현상을 사례를 통해 탐구하는 5E 학습모형에 기반하여 모듈을 구성한다(표 2). 이 모형은 학습자가 기존 지식으로부터 새로운 지식을 능동적으로 구성하도록 유도하는 구성주의적 탐구 절차를 제공한다. 특히 5E 모형의 체계적인 학습 단계는 학생들이 익숙한 경계 개념을 비판적으로 재 개념화

표 2. 5E 학습모형의 단계별 주안점

단계	핵심 목표(Bybee et al., 2006)	경계실천 학습 모듈의 주안점
Engage (도입)	• 학생들의 기존 지식을 이끌어내고 새로운 개념에 대한 호기심을 유발함.	• 경계에 대한 자신의 선지식이나 전통적 인식론을 되돌아보게 함.
Explore (탐색)	• 학생들이 직접 개념을 조사 및 탐구함.	• 경계 현상을 특정 지역사례를 중심으로 탐구하도록 함.
Explain (설명)	• 학생들이 자신의 이해를 설명함. • 교사가 직접적으로 개념을 소개하고 깊은 이해를 유도함.	• 새로운 경계 개념(관점)에 대한 이해를 자신의 언어로 설명하도록 유도함. • 기존의 인식에 대한 비판적 사고를 유도함.
Elaborate (확장)	• 학생들이 새로운 상황에 개념을 적용하여 이해를 확장하고 심화함.	• 학습한 개념(관점)을 다른 지역 맥락에 적용 또는 실세계의 경계 이슈와 연결하게 함.
Evaluate (평가)	• 학생들이 자신의 이해를 평가함. • 교사는 교육 목표 달성 여부를 평가함.	• 학습 전후 인식 변화, 관점 확장에 대한 자기성찰을 유도함. • 다양성 및 차이 인식을 위한 동료 평가를 활용함. • 교사는 비판적 사고, 책임 의식, 대안 제시 능력 등을 중심으로 평가함.

\* Bybee et al.(2006)의 5E 학습모형을 연구자가 재구성함.

하고 실제 맥락에 확장적으로 적용하는 변혁적 학습 목표를 달성하는 데 적합한 기반이 된다. Bybee *et al.*(2006)이 제시한 5E 모형에 따라, 경계실천 학습 모듈에서 학생들은 먼저 경계에 대한 자신의 인식과 경험을 되돌아보고 질문을 던지는 도입 단계(Engage)를 거친다. 다음으로 구체적인 지역의 경계 사례를 탐색(Explore)하고, 이를 통해 새로운 관점을 개념화(Explain)하면서 기존의 인식론을 비판적으로 이해한다. 이후 학습 내용을 새로운 맥락이나 지역에 적용 및 확장(Elaborate)하고, 학습 전후로 자신의 변화를 성찰 및 평가(Evaluate)하는 순서로 진행된다.

### 3. 타당성 분석

수정형 델파이 기법(Modified Delphi Method)을 활용하여 학습모듈의 타당성을 검증하였다. 이 기법은 전통적 델파이 기법과 달리, 첫 번째 델파이 조사에서 개방형 의견 수렴 단계를 생략하고, 문헌과 정책 등 다양한 출처로부터 도출한 내용을 바탕으로 의견을 구하고 합의에 도달하는 절차를 따른다(Hsu and Sandford, 2007). 이

표 3. 델파이 패널 구성 현황

구분	항목	인원(명)	비율(%)
성별	남	3	30
	여	7	70
학교급	초등학교	1	10
	중학교	4	40
	고등학교	5	50
경력	1~5년	5	50
	6~10년	3	30
	11~15년	2	20
최종 학력	학사	1	10
	석사과정	7	70
	석사	1	10
	박사과정	1	10

에 따라 선행연구 문헌과 2022 개정 교육과정 문서를 통해 도출한 학습 모듈의 초안을 전문가들이 1차 설문부터 평정하도록 하였다. 전문가 그룹은 현직 지리교육 전공 교사 10명으로 구성되었으며, 다양한 배경을 고려하여 고루 선정하였다(표 3). 델파이 패널의 수는 신뢰성 있는 연구 결과를 얻기 위해 10명에서 15명이 적합하다고 밝힌 선행 연구(Dalkey, 1969; Delbecq, 1975)를 근거로 하였다.

설문 문항(표 4) 중 정량적 평가는 Abdelmohsen(2020)의 학습 모듈 평가문항을 수정하여 활용하였다. 또한 매우 적합(5점)부터 전혀 적합하지 않음(1점)까지 5점 리커트 척도에 따라 모듈별로 6개의 평가영역을 평정하도록 하였다. 정성적 평가는 각 모듈에서 수정 및 보완되어야 할 부분, 효과적이라고 판단하는 점, 현장 적용 시 예상되는 장점과 한계 등을 주관식으로 자유 기술하도록 하였다.

정량적 결과 분석에서는 내용타당도를 명확히 판별하기 위해 Lawshe(1975)의 내용타당도 비율(Content Validity Ratio, 이하 CVR)을 적용하였다. 또한 전문가 의견이 안정적으로 합의되는 정도를 분석하기 위해 사분위 범위(Interquartile Range, 이하 IQR)와 변이계수(Coefficient of Variation, 이하 CV)를 활용하였다(Hasson *et al.*, 2000; Shah and Kalaian, 2009). 선행연구에서 제시한 기준에 따라, 패널 10명 기준으로 CVR이 0.62 이상, IQR 값이 1.0 이하, 변이계수(CV) 값이 0.50 이하일 때 내용타당성이 확보되고 높은 합의도에 도달한 것으로 판단하였다.

## IV. 연구 결과

### 1. 경계실천 학습 프레임워크

경계실천 학습을 위한 프레임워크는 그림 2와 같이 도출하였으며, 주요 학습 개념은 ‘경계의 이동성·유동성·다층성’, ‘경계짓기’, ‘세계시민적 경계’, 그리고 ‘경계작

표 4. 델파이 설문 문항

평가영역	평가문항
내용 연계성	학습개념과 주제가 비판적 세계시민성과 관련되어 있는가?
목표 실현 가능성	글로벌 이슈에 대한 비판적 사고, 책임감, 참여 의지를 촉진 가능한가?
교수학습 적절성	학습활동과 전략이 내용과 목표에 부합하도록 설계되었는가?
학습자 수준 적합성	수업의 구성, 내용, 활동이 중고등학생 수준에 적합한가?
현장 적용성	모듈에서 제공되는 사례, 자료, 활동 안내 등이 충분하고 명확한가?
평가 계획의 적절성	학습 과정과 결과에 대한 평가 방법이 적절하게 설계되었는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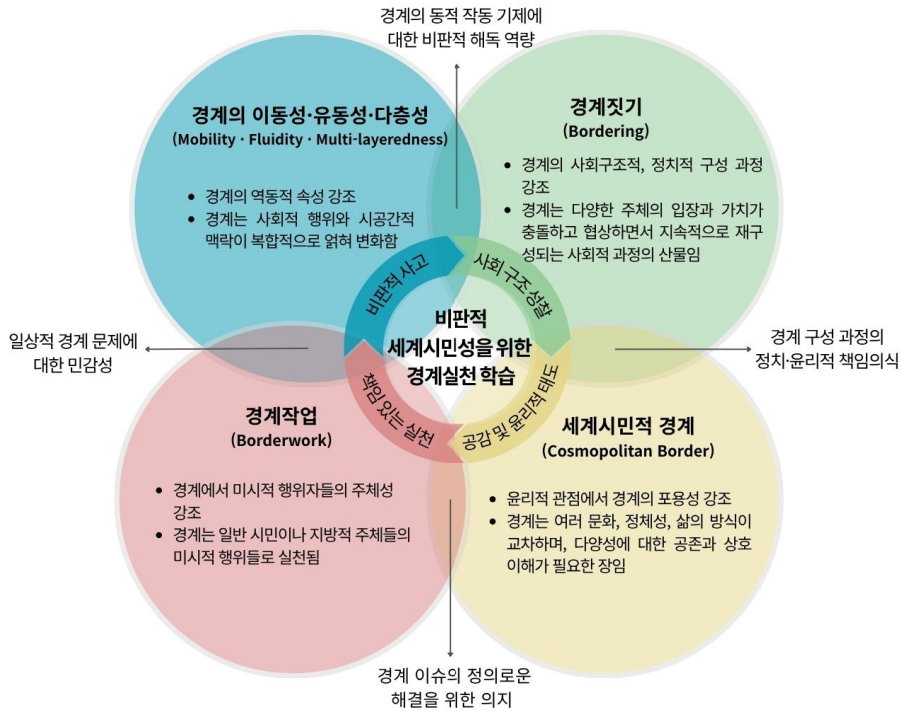


그림 2 경계실천 학습 프레임워크

업'이다. 이 개념들은 경계를 정태적인 구조가 아닌 실천적 관점에서 조망하지만, 각기 주목하는 초점에는 미묘한 차이가 존재하며 비판적 세계시민성 함양에 구체적이고 다층적인 전략을 제시한다.

### 1) 경계의 이동성(Mobility)·유동성(Fluidity)·다층성(Multi-layeredness)

이동성, 유동성, 다층성은 경계실천 관점에서 경계의 본질적인 속성을 규명한다. 전통적으로 경계가 고정적이고 단일한 것으로 간주되었던 것과 달리, 이 세 가지 속성은 경계가 사람들의 사회적 행위와 시공간적 맥락이 복합적으로 얽혀 변화하는 역동적인 현상임을 강조한다 (Rumford, 2007). 먼저 이동성은 경계의 지리적 위치나 물리적 범위가 변화하는 특성을 의미하는데, 이는 경계가 단순한 지도상의 선이 아니라 지정학적 힘과 사회적 맥락에 의해 움직일 수 있는 존재임을 설명한다. 유동성은 경계의 통제 강도나 접근성과 같은 내부적 성질이 맥락에 따라 일시적 또는 상황적으로 강화되거나 완화되는 특성을 말하며, 특정 정치적 상황이나 경제적 필요에 따른 국경 심사의 강화 또는 완화 현상이 대표적이다. 마치

막으로 다층성은 경계가 국가를 넘어 다양한 스케일의 행위자들에 의해 복수적이고 다층적으로 실천되는 특성을 의미하며, 경계가 여러 겹의 층위(레이어)에서 존재하며 재구성됨을 시사한다.

이 세 개념의 학습은 학생들로 하여금 경계를 고정된 실체가 아닌 유연하고 복합적인 현상으로 재개념화하도록 유도하며, 세계화 시대의 복잡한 경계 현상에 대한 비판적 사고의 토대를 마련한다. 인지적 측면에서는 무의식적으로 수용했던 경계 현상의 역동성을 파악하는 능력을 함양하며, 정의적 측면에서는 경계의 고정 또는 변화가 초래할 사회적·경제적 파급력을 숙고하는 책임의식을 내면화한다. 실천적 측면에서는 일상에서 경계 설정 문제를 민감하게 인식하고, 책임감 있는 의사결정 역량을 제고할 수 있다.

### 2) 경계짓기(Bordering)

경계짓기는 경계를 정태적인 명사 'border'가 아닌 'bordering'이라는 동적인 행위이자 과정으로 파악한다 (Popescu, 2011). 즉 경계는 선형적으로 완성된 실체가 아니라, 다양한 주체의 입장과 가치가 충돌하고 협상하면서

지속적으로 (재)구성되어가는 사회적 과정의 산물이다. 이는 반드시 경계를 강화하는 행위뿐만 아니라 완화, 해체, 또는 새로운 형태로 형성하는 모든 과정을 포괄한다.

경계짓기 학습은 경계가 형성되는 과정의 정치적 성격을 성찰함으로써, 경계 이면의 불평등과 권력 구조에 대한 문제의식을 심화시키고 이를 해결하기 위한 책임감 있는 행동을 촉구한다. 인지적 측면에서 학생들은 경계가 특정 집단의 이익을 위해 도구화될 수 있음을 비판적으로 이해한다. 이를 통해 정의적 측면에서는 경계 설정 과정에서 소외 또는 배제된 존재들에 대한 정치적, 윤리적 책임을 느낄 수 있다. 나아가 불평등한 경계 구성 과정에 적절한 대안을 요구하고 관철하려는 실천 의지를 강화할 수 있다.

### 3) 세계시민적 경계(Cosmopolitan Border)

세계시민적 경계는 윤리적 측면에서 경계의 포용성을 강조하는 개념이다. 경계는 흔히 분리를 위한 닫힌 공간으로 인식되지만, 실제로는 다양한 문화, 정체성, 삶의 방식이 만나고 공존하는 접이지대의 성격을 갖는다. 이러한 점에서 Rumford(2007; 2014)는 경계를 연결과 교차의 장으로 이해해야 한다고 주장하며, 세계시민적 경계 개념을 제안하였다. 그는 세계시민적 경계를 국경이 사라지거나 폐지된 상태가 아니라, 다양성과 상호작용을 수용하는 보다 유연하고 개방적인 경계라고 설명한다. 이를 기반으로 세계시민적 경계는 다양한 민족, 문화, 종교 등이 공존하며 상호 이해하는 포용적 경계로 정의할 수 있다.

세계시민적 경계를 학습함으로써 학생들은 경계에서 타자와 연대하는 가치를 중시하며, 윤리적 관점에서 배제와 혐오를 넘어서는 포용적 태도를 형성하게 된다. 먼저 인지적 측면에서 학생들은 경계를 배타적 공간이 아닌 다양한 문화와 정체성이 교차하는 공간으로 재해석하게 된다. 이를 바탕으로 정의적 측면에서는 경계에서 배제되는 세계 타자에 대한 공감 능력을 높이고 평등, 인권과 같은 보편적 가치를 내면화할 수 있다. 나아가 타자와의 공존을 위해 경계 문제를 공동체적 차원에서 해결하려는 의지를 증진함으로써 포용적인 사회를 만들기 위한 실천 방안을 모색한다.

### 4) 경계작업(Borderwork)

경계작업은 미시적인 행위자들의 일상화된 경계 구성 행위에 주목한 개념이다. 이 개념은 경계에 대한 시선을 국가적 행위자보다는 접경지역 및 주변부 주민들의 일상

적 행동으로 전환한다. 미시적 경계 행위자들은 국가 중심의 지정학적 이해관계에 의해 만들어진 경계 서사나 담론과 괴리된 경계 경험을 하며, 그 과정에서 무기력함과 억울함을 느끼면서도 저항, 협상과 같은 주체적인 대응을 취한다(박배균 등, 2021). Rumford(2013)는 이와 같이 경계를 만들고, 유지하고, 재해석하는 시민 주도의 사회적 경계 형성 활동을 경계작업으로 설명하였다. 즉 경계작업은 일반 시민이나 지방적 주체들이 일상에서 경계를 미시적으로 실천하는 행위를 의미한다.

경계작업을 학습하는 것은 경계 문제 해결의 주체로서 시민의 역할을 이해하고, 일상적 실천을 통해 경계에 대한 인식과 담론을 변화시키는 능동적인 시민성을 강화한다. 인지적 측면에서 학생들은 경계가 국가 중심적인 사고에서 벗어나 여러 사람들의 일상과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음을 파악한다. 이를 통해 정의적 측면에서는 경계 문제가 정부의 책임만이 아니라 시민 사회의 역할이 중요함을 인식하고 책임감을 느낀다. 마지막으로 실천적 측면에서는 경계와 관련된 지역 이슈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며, 편협한 사회 인식을 바꾸려는 실천 의지를 함양할 수 있다.

## 2. 경계실천 학습 모듈

학습모듈은 앞서 제시된 학습 프레임워크와 주요 설계 원칙(학습목표 연계, 교육과정 연계, 5E 모형 기반)에 기반하여 개발되었으며, 최종 수정된 모듈별 구체적인 결과는 다음과 같다.

### 1) 경계의 역동성과 지역 변화에 대한 비판적 분석

모듈 1(표 5)은 경계의 이동성, 유동성, 다층성과 같은 역동적 속성으로 인해 나타나는 지역 변화를 비판적으로 인식하고 해석하도록 설계되었다. 학생들은 유럽의 경계가 과거부터 이동하고, 쟁쟁한 협정을 통해 유동적으로 기능하며, 국가 외 다양한 주체들에 의해 다층적으로 형성된 사례를 분석한다. 이 과정에서 유럽의 경계 변화가 지역사회와 시민들에게 초래한 긍정적 및 부정적 결과를 검토하고, 경계 설정과 변화에 대한 신중한 접근과 책임감 있는 결정의 필요성을 내면화한다. 마지막 활동으로 학생들은 다른 지역의 경계 변화 사례와 그로 인한 문제를 조사하여 보고서를 작성한다. 본 모듈에 제시된 사례들은 유럽 경계의 역동적 성격을 효과적으로 설명한 Rumford(2007)의 연구를 참조하였다.

표 5. 유럽의 역동적 경계와 지역 변화 탐구하기(모듈 1)

질문	경계는 어떻게 역동적으로 변화하며, 경계 변화는 지역과 시민의 삶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	
학습 목표	인지	경계는 사회적, 정치적, 제도적 맥락에 따라 이동하고, 다층적으로 재구성된다는 것을 인식하고, 이러한 경계의 역동성이 지역 변화와 관련되어 있음을 이해할 수 있다.
	정의	경계 설정·변화가 지역사회와 시민들에게 미치는 영향을 신중하게 고려하고, 민감하게 인식하는 책임감을 가질 수 있다.
	실천	세계 여러 지역의 경계 설정·변화 사례를 맥락과 함께 비판적으로 검토하고, 이로 인해 발생한 문제를 개선하기 위한 실천방안을 모색할 수 있다.
교육 과정 연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9사(지리)03-03] 지역 간 역학관계에 따른 유럽의 통합과 분리의 움직임이 유럽연합의 변화와 주민 생활에 미치는 영향을 탐색한다.</li> <li>• [12세지01-02] 지역 통합과 분리 현상의 사례와 주요 원인을 탐구하고, 이를 바탕으로 지역 변화의 역동성을 파악한다.</li> </ul>	
단계	학습 내용 및 활동	관련 질문
Engage - 도입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b>경계·국경</b>에 대한 평소 자신의 생각과 경험을 공유한다.</li> <li>- 예: 옆 동네와의 경계, 학교 안과 밖의 경계, 온/오프라인의 경계, 한국과 일본의 경계 등</li> </ul>	☞ 경계와 관련된 나의 경험을 떠올리면, 경계란 무엇이라고 생각하나요?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평소 <b>유럽의 경계</b>에 대한 나의 인식과 생각을 확인하는 시간을 갖고 이를 공유한다.</li> </ul>	☞ 유럽의 경계에는 무엇이 있을까요? 우랄산맥, 대서양, 지중해와 아프리카와 같은 자연적 경계뿐일까요?
Explore - 탐색	<p>[경계의 '이동성' 탐색]</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b>과거 동유럽의 서구화 과정이나 브렉시트</b> 사례를 통해 <b>유럽의 경계가 이동한</b> 이유와 결과를 탐색한다.</li> <li>㉠ EU 경계 변화 및 확장을 지도화한 영상자료</li> <li>㉡ 영국 EU 탈퇴 관련 보도자료</li> </ul>	☞ 동유럽의 서구화 또는 브렉시트 사례에서 유럽 내부에 어떤 경제, 문화, 정치적 갈등이 발생했나요?
	<p>[경계의 '유동성' 탐색]</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b>생권협정의 변동 사례</b>를 통해, 유럽 내부 경계가 <b>상황에 따라 유동적으로 작동</b>한 과정과 결과를 탐색한다.</li> <li>㉢ 코로나19 생권협정 중단 및 재개 관련 보도자료</li> </ul>	☞ 생권협정의 중단은 시민들의 일상생활(출퇴근, 무역, 가족 방문)이나 지역경제에 어떤 영향을 주었나요?
	<p>[경계의 '다층성' 탐색]</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b>국가 외 다양한 주체</b>(EU, 도시, 시민, 범죄조직 등)에 의해 경계가 <b>다층적으로 설정</b>되는 사례를 탐구한다.</li> <li>㉣ EU 수준: EU 외부 국경을 관리하는 국경 관리기구 'Frontex'</li> <li>㉤ 도시 수준: 런던 도심의 감시체계 '링 오브 스틸'</li> <li>㉥ 시민단체 수준: 국경 통제·강제추방에 반대하는 시민 활동 'No Borders 네트워크'</li> <li>㉦ 비국가 행위자 수준: 국가의 통제력이 약화된 몰도바 동부의 '트란스니스트리아(범죄조직이 실질적 국경 관리)</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이들은 각각 왜, 무엇을 위해 경계를 만들었나요?</li> <li>☞ 이 사례들은 '경계는 국가가 만든다'는 기존 인식에 어떤 변화를 요구하나요?</li> </ul>
Explain - 설명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유럽 경계의 이동성·유동성·다층성을 바탕으로, 경계와 지역의 변화가 관련되어 있음을 이해한다.</li> <li>• <b>경계 설정이 지역사회와 시민들의 삶에</b> 미치는 영향을 설명한다.</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경계가 역동적인 것이 지역의 변화와 어떤 관련이 있을까요?</li> <li>☞ 경계 설정 문제는 왜 신중한 접근이 필요할까요?</li> </ul>
Elaborate - 확장	<p>[Re]porting Borders 활동]</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경계 설정·변화로 인해 지역사회나 주민들의 삶이 변화된 <b>세계 지역의 사례를 조별로 조사</b>한다.</li> <li>• 해당 사례에서 나타나는 긍정적 영향과 문제점, 개선을 위한 실천방안을 정리하여 <b>보고서를 작성</b>한다.</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조사한 사례의 어떤 점에서 경계의 [이동성/유동성/다층성]이 나타나나요?</li> <li>☞ 그로 인해 지역에서는 어떤 긍정적, 부정적 변화가 발생했나요?</li> <li>☞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누가 어떠한 노력을 해야 할까요?</li> </ul>
Evaluate - 평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b>자기성찰</b>: 세계의 경계 설정·변화 문제에 대한 자신의 인식이 어떻게 변화했는지 성찰한다.</li> <li>• <b>교사 평가</b>: 핵심 학습 목표(경계의 역동성 이해, 지역 변화와의 관계 인식, 비판적 해석 능력)를 얼마나 달성했는지 진단하고 피드백한다.</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수업 이후, 내가 경험하거나 알고 있던 경계 문제를 새롭게 해석해 본다면 어떻게 달라질까요?</li> <li>☞ 앞으로 세계 여러 지역의 경계 문제를 어떠한 시각으로 바라볼 수 있을까요?</li> </ul>

\* 모듈별 활용자료, 지도 시 유의사항, 평가 루브릭은 [부록]에서 참고할 수 있음.

2) 지역 경계 설정의 정치성 성찰 및 공정한 논의

모듈 2(표 6)는 경계짓기의 관점에서 경계 이면에 잠재된 정치성을 성찰하도록 지원한다. 학생들은 코로나19로 인한 제주 무사증(무비자) 제도의 중단 사례를 탐색한다. 이는 전염병 확산이라는 글로벌 이슈가 비자 없이 통행 가능했던 제주의 특별 무사증 제도를 중단시켜 지역의 경계를 강화한 사례이다. 학생들은 출입국법과 통행 제도로 실천된 지역 경계가 강화되는 과정에서 나타난 사회적 갈등과 권력 관계를 발견한다. 이에 대한 문제의식을 바탕으로 지역·국가·세계의 다양한 주체들의 긴장 속에서 이

들의 입장을 존중하며 경계를 설정하고자 하는 책임감을 함양한다. 이후 공청회 역할극을 통해 서로 다른 입장과 가치를 숙고하고 공정한 경계 결정을 위해 합의하는 활동을 거치면서 적극적인 경계 논의 참여 의지를 증진한다.

3) 타자와 공감적 대화를 통한 포용적 경계 지향

모듈 3(표 7)은 세계시민적 경계의 관점에서 경계에서 배제된 타자에 대한 공감을 바탕으로 이들과의 공존을 위한 윤리적 태도와 실천 의지를 함양하도록 설계되었다. 학생들은 경계에서 타자화되기 쉬운 전쟁난민, 기후난

표 6. 글로벌 이슈 속 공정한 지역 경계 논의하기(모듈 2)

질문	세계적 이슈 속에서 지역의 경계는 어떤 기준과 누구의 시선에서 결정되어야 할까?	
학습 목표	인지	글로벌 이슈와 지역의 경계 간 상호 연계성 속에서 지역 경계를 둘러싼 다양한 가치와 지역-국가-세계의 이해관계자들의 입장을 분석할 수 있다.
	정의	지역 경계 설정 논의에서 나타나는 다양한 가치와 입장의 차이를 공정하게 존중하고, 소외되거나 배제되는 집단에 대한 책임감을 내면화할 수 있다.
	실천	공정한 경계 설정을 위해 적극적으로 의견을 개진하고, 책임 있는 주체로서 의사결정에 참여하려는 의지를 기를 수 있다.
교육 과정 연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9사(지리)01-02] 다양한 스케일에서 지역이 서로 연계되어 있음을 공간적 상호 작용의 사례를 통해 파악한다.</li> <li>• [9사(지리)01-03] 세계의 변화가 지역에 영향을 미치고 지역의 변화가 세계에 영향을 미치는 사례를 조사한다.</li> <li>• [12세지01-01] 세계화의 의미를 지리적 스케일에 따라 이해하고, 세계화와 지역화의 관계 속에서 세계시민의 역할을 탐색한다.</li> </ul>	
단계	학습 내용 및 활동	관련 질문
Engage - 도입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제주 무사증(무비자) 제도와 코로나19로 인한 제도 중단의 배경을 살펴본다.</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무사증 제도의 중단과 제주 경계는 어떤 관련이 있을까요?</li> <li>☞ 세계적 전염병 상황에서 지역의 경계가 강화된 것은 어떤 관련이 있을까요?</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제도 중단으로 인해 강화된 제주 경계가 지역사회에 미친 영향을 생각해본다(지역 경계, 인구 유입 등의 측면).</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경계가 강화된 결과, 그로 인해 어떤 변화와 문제가 발생했을까요? 이것은 제주 지역만 관련된 문제일까요?</li> </ul>
Explore - 탐색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이 사안에 대한 제주도민, 중앙행정기관, 관광업 종사자, 외국인 관광객, 국제기구(WHO) 등 글로벌 수준의 다양한 이해관계자의 입장을 분석한다.</li> <li>• 이들 각자의 입장이 경계 설정 논의에서 어떻게 반영되었는지를 확인한다.</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제주 지역에 사는 관광업 종사자는 무엇을 위해 경계를 어떻게 설정해야 한다는 입장인가요? (-&gt;경제적 이익을 위해 경계를 다시 완화해야 한다.)</li> <li>☞ 무사증 제도의 중단 과정에서 누구의 목소리가 주로 반영되었고, 누구의 목소리가 배제되었을까요?</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제주 사례를 통해 경계 설정 문제가 지역-국가-세계와 어떻게 상호 연계되어 나타나는지 이해한다.</li> <li>• 경계 이면의 갈등과 권력관계를 인식하고, 공정한 경계 결정의 중요성을 정리한다.</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지역의 경계 설정에 대한 책임과 권한은 누구에게 있을까요?(중앙정부, 지자체, 시민, 국제기구, 해외이주민 등)</li> <li>☞ 경계 설정에는 어떤 가치들이 서로 충돌할까요?(안전vs경계, 인도주의vs국익 등)</li> <li>☞ 경계를 둘러싼 다양한 가치, 입장, 사람을 고려하는 것은 왜 중요할까요?</li> </ul>
Elaborate - 확장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경계 설정’ 공청회 역할극] 학생들이 다양한 주체의 입장을 맡아, ‘제주 무사증 제도 재개 여부’에 대한 공청회에 참여한다.</li> <li>- 각자 입장을 발표하고 서로 질의응답한다.</li> <li>- 의사결정집단은 논의 내용을 종합하여 최종 결정을 내린다.</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다른 사람들은 어떤 이유에서 어떤 가치를 중시하고 있나요?</li> <li>☞ 최종 결정된 경계로 인해 피해를 입을 집단에게 사회는 어떤 보상이나 지원을 제공해야 할까요?</li> </ul>
Evaluate - 평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자기성찰: 공정한 경계 논의와 설정을 위해 각자 어떤 마음가짐과 자세를 가져야 할지 공유한다.</li> <li>• 교사평가: 공청회 참여 중 주장과 근거의 논리성, 토론 참여도, 공동체적 책임 의식, 문제 해결 능력을 진단하여 피드백한다.</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복잡한 경계 문제를 해결하는 과정에서 [나/개인/지자체/기업/정부/국제사회]의 역할은 무엇일까요?</li> <li>☞ 만약 비슷한 팬데믹 상황이 다시 발생한다면, 공정한 경계 합의를 위해 어떤 교훈을 줄 수 있을까요?</li> </ul>

민, 이주노동자가 경계를 넘고 정착하는 과정에서 겪는 어려움(차별, 불평등 등)을 이해한다. 그리고 어려움을 감수하면서도 경계를 넘어야만 했던 사회구조적 배경을 인식하며 이들에게 공감하고 책임의식을 배양한다. 이를

위해 각 인물의 페르소나를 설정한 챗봇과 대화 및 인터뷰하는 활동을 통해 세계 타자의 목소리를 깊이 있게 경청하고 공동체적 해결 의지를 고취한다.

표 7. 포용적 경계로 타자와의 공존 모색하기(모듈 3)

질문	경계에서 배제되는 사람들과 어떻게 공존하고 연대할 수 있을까?	
학습 목표	인지	세계의 구조적 문제로 인해 경계에서 배제되는 사람들을 인식하고, 연대와 공존의 공간으로서 경계의 포용성을 이해할 수 있다.
	정의	세계 타자들이 경계에서 겪는 어려움(차별, 불평등)에 공감하고, 그들의 목소리를 경청하며 윤리적 책임감을 느낄 수 있다.
	실천	세계 타자들의 목소리를 사회적으로 공유하고, 이들의 시선에서 경계 이슈의 해결에 기여하려는 의지를 기른다.
교육 과정 연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10통사2-02-03] 사회 및 공간 불평등 현상의 사례를 조사하고, 정의로운 사회를 만들기 위한 다양한 제도와 시민으로서의 실천 방안을 제안한다.</li> <li>• [12도탐03-03] 국제 이주에 따라 도시의 인구 구성과 공간 구조가 변화하여 발생하는 문제를 조사하고, 도시 구성원들의 다양성과 차이를 존중하고 공존하는 방안을 모색한다.</li> </ul>	
단계	학습 내용 및 활동	관련 질문
Engage - 도입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b>경계에서 배제되는 사람들과 세계타자</b>의 의미를 함께 생각해본다.</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경계에서 쉽게 차별받고 배제될 수 있는 사람들은 누구 일까요?</li> <li>☞ 우리 주변에도 그런 사람이 있나요? 나는 이들을 어떻게 바라보고 있었나요?</li> </ul>
Explore - 탐색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뉴스 영상을 통해 <b>경계를 넘어서 세계타자(㉠전쟁난민, ㉡기후난민, ㉢이주노동자)</b>의 이야기를 살펴본다.</li> <li>- 주목할 내용: 이주 경로(출신지역→정착지역), 이주 원인, 어려움·편견, 후속 대책의 시행여부 등</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이들은 경계를 넘는 과정에서 어떤 어려움을 감수해야만 했나요?</li> <li>☞ 그럼에도 다른 지역으로 이동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무엇인가요? 그것은 이들 개인의 문제인가요?</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b>세계타자 페르소나 챗봇</b>과 각 인물에 대한 설명을 바탕으로, 챗봇에게 질문할 내용을 사전에 구상해본다.</li> <li>• <b>챗봇과 대화하며 이들의 목소리를</b> 듣고, 이들에게 경계는 어떤 의미인지 탐색한다.</li> <li>• <b>페르소나 예시:</b>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전쟁난민': 시리아 내전으로 독일로 망명한 청소년, 우크라이나 전쟁 직후 폴란드 국경을 넘는 가족</li> <li>㉡ '기후난민': 해수면 상승으로 마을을 떠난 투발루 주민, 가뭄과 식량난으로 수단을 떠난 청년</li> <li>㉢ '이주노동자': 카타르 건설 현장의 네팔 출신 노동자, 이탈리아 가사노동에 종사하는 필리핀 출신 여성</li> </ul> </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국경을 넘는 과정에서 어떤 위험이 있었고, 어떤 감정을 느꼈나요?</li> <li>☞ ㉠ 전쟁을 피해 타국에서 난민지위를 인정받기 위한 과정은 어떠했나요?</li> <li>☞ ㉡ 기후 재난으로 터전을 잃은 사람들에 대한 제도적 장벽은 어떻게 개선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나요?</li> <li>☞ ㉢ 노동 현장의 부당한 처우를 개선하기 위해 고용주와 정부에서는 어떤 노력을 해야 할까요?</li> </ul>
Explain - 설명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경계에서 타자들이 겪는 문제가 개인적 차원이 아닌, <b>사회구조적 배경에서 비롯됨</b>을 이해한다.</li> <li>• 이를 바탕으로 <b>경계의 포용성</b>이 필요한 이유를 정의와 윤리적 측면에서 설명한다.</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경계에서 발생하는 차별과 배제는 왜 타자 개인의 노력만으로는 해결될 수 없을까요?(㉠정치적 불안정, ㉡기후변화, ㉢경제적 불균등 등)</li> <li>☞ 보다 정의로운 경계를 만들기 위해, 개인과 사회에 어떤 윤리적, 도덕적 책임이 요구될까요?</li> </ul>
Elaborate - 확장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페르소나 챗봇과의 대화 내용을 바탕으로, 이들의 메시지를 담아내는 <b>인터뷰 카드뉴스를 제작</b>한다.</li> <li>- 포함 요소(예시): (1)인물 정보(유형, 출신 지역), (2)이주와 경계 경험(이주 경로·원인, 구체적인 어려움·감정), (3)구조적 원인 분석, (4)현재의 삶과 바람, (5)우리의 실천방안</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내가 들은 타자의 목소리를 어떻게 하면 더 많은 사람들에게 전달할 수 있을까요?</li> <li>☞ 언급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개인/지자체/기업/정부/국제사회] 등은 어떤 실천을 할 수 있을까요?</li> </ul>
Evaluate - 평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b>자기성찰:</b> 경계에서 배제되는 사람들을 위한 세계시민의 역할을 성찰한다.</li> <li>• <b>동료평가:</b> 결과물에 '포함 요소(5)'가 모두 충실히 반영되었는지를 기준으로 상호 평가를 진행한다.</li> <li>• <b>교사평가:</b> 내용의 충실성, 비판적 문제 인식, 공감과 책임의식, 전달력을 중심으로 학생들의 활동 결과물을 진단하고 피드백한다.</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이번 활동을 통해 타자들의 삶에 대한 나의 인식과 마음가짐은 어떻게 달라졌나요?</li> <li>☞ 경계에서 발생하는 문제 해결을 위해 세계시민으로서 나는 무엇을 할 수 있을까요?</li> </ul>

표 8. 접경지역의 경계 서사 다시 쓰기(모듈 4)

질문	주민들은 어떻게 경계 문제를 받아들이고 저항하며, 접경지역을 재구성해왔는가?	
학습 목표	인지	접경지역을 다양한 의미와 삶이 담겨 있으며, 주민들의 주체적인 실천으로 재구성되는 역동적이고 일상적 공간으로 이해할 수 있다.
	정의	경계를 일상에서 실천하며 살아가는 주민들의 삶에 공감하고, 경계 문제에 대한 공동체적 책임감과 시민의식을 가질 수 있다.
	실천	사회와 미디어 보도에서 나타나는 편협한 경계 서사를 다시 작성하면서 주민들의 목소리와 시민적 책임의식을 담아 새로운 서사를 제시할 수 있다.
교육 과정 연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9사(지리)11-02] 분단이 우리의 일상생활에 미친 영향을 살펴보고, 분리와 연결의 공간으로서 접경지역의 다양한 모습을 세계 여러 지역의 사례를 통해 비교한다.</li> <li>• [12한탐05-02] 한반도를 둘러싼 국가 간 경계와 접경지역을 분석하고, 동아시아 지역의 발전과 평화·공존을 위한 지정학적 전략을 토론한다.</li> </ul>	
단계	학습 내용 및 활동	관련 질문
Engage - 도입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b>DMZ 접경지역과 경계를 어떤 공간으로 인식</b>하고 있는지 공유한다.</li> <li>• 이미지 자료를 통해 접경지역이 <b>군사, 평화, 생태, 개발 등 다양한 의미를 가진 복합적 공간</b>임을 인식한다.</li> <li>- 이미지 자료: 대북확성기, 평화테마노선, 생태코스, 경기북부개발 사업 등</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DMZ 접경지역과 경계를 생각하면 어떤 이미지나 단어가 떠오르나요?</li> <li>☞ 이미지 속 접경지역의 모습은 기존 인식과 어떻게 다른가요?</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탐구자료에서 나타나는 <b>주민들의 실제 생활 모습을 통해 경계가 이들의 일상에 어떤 영향</b>을 미치는지 분석한다.</li> <li>• 이들이 <b>경계 이슈를 어떻게 수용, 저항, 협상, 또는 재구성</b>해왔는지를 분석한다. 특히 <b>주민들이 경계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 어떻게 행동</b>했는지를 찾는다.</li> <li>- 예) 대북 방송에 저항, 지뢰 제거를 위한 협상, 마을을 재생하려는 노력</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사례 속에서 주민들은 대북 확성기 방송을 어떻게 생각 하나요? (고통스러운 일상 속 소음)</li> <li>☞ 민통선 출입 통제는 파주 농민들에게 <b>정당한 보호 조치</b> 일까요? 아니면 불편한 규제일까요?</li> <li>☞ 이길리 주민들의 지뢰 제거 축구 운동은 DMZ의 평화 이미지 뒤에 숨겨진 어떤 문제를 보여주나요?</li> <li>☞ 대성동 주민들은 접경지역에서 살아가기 위해 국가나 군대와 어떻게 협상했을까요?</li> <li>☞ 인구소멸 위기 속에서 주민들이 접경지역을 살리려는 노력은 경계의 의미를 어떻게 바꾸고 있나요?</li> <li>☞ 접경지역을 ‘위험한 분단의 현장’이 아닌 ‘지속 가능한 삶의 터전’으로 만들기 위해 주민들은 어떤 노력을 하고 있나요?</li> </ul>
Explore - 탐색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경계를 단순히 ‘국가가 정한 선’이 아니라, <b>‘주민들이 살아가고, 만들어나가는 일상적 공간’</b>으로 이해한다.</li> <li>• 우리 국토의 한 지역으로서, 접경지역의 경계 문제 해결을 위한 <b>공동체적 노력이 필요함을 인식하고, 시민의 역할과 책임</b>을 인식한다.</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접경지역을 ‘주민들의 삶의 공간’으로 바라볼 때, 경계 문제에 대한 우리의 역할은 어떻게 달라질까요?</li> <li>☞ 시민들은 일상에서 어떤 행동을 통해 기여할 수 있을까요?</li> <li>☞ 접경지역의 문제에 대한 개개인의 작은 관심과 행동이 어떻게 공동체 차원의 실천으로 이어질 수 있을까요?</li> </ul>
Explain - 설명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b>[접경일보 재구성하기]</b></li> <li>주민생활에 대한 고려나 이들의 목소리가 배제된 <b>기존 기사를 비판적으로 분석</b>하고, 이들의 관점에서 <b>기사의 내용을 다시 서술</b>한다. 기사에 일반 시민들의 참여를 촉구하는 메시지를 포함한다.</li> <li>- 고려사항·포함요소(예시): (1)기존 기사에 대한 문제의식, (2)주민들의 일상과 경계의 관계, (3)주민들의 인식 또는 바람, (4)주민들의 구체적 행동, (5)시민의 책임 및 행동 강조</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기존 기사에서 보이지 않는 주민의 이야기에 어떤 것이 있었을까요?</li> <li>☞ 만약 내가 그 지역 주민 또는 기자라면, 기사에 제시된 상황을 어떻게 세상에 알리고 싶나요?</li> <li>- 예) “평화관광구역 개발 눈앞에” → “지뢰밭 위 농부의 사라진 일터”(수정)</li> </ul>
Elaborate - 확장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b>자기성찰:</b> 접경지역에 대한 사회의 편향된 시각을 주의하는 의식을 키운다.</li> <li>• <b>동료평가:</b> 결과물에 ‘고려사항·포함요소(5)’가 모두 충실히 반영되었는지를 기준으로 상호 평가를 진행한다.</li> <li>• <b>교사평가:</b> 내용의 충실성, 비판적 문제 의식, 공감과 책임의식, 전달력 및 논리적 서술 능력을 중심으로 학생들의 활동 결과물을 진단하고 피드백한다.</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접경지역 주민들의 이야기를 직접 작성해보면서, ‘경계’라는 단어의 의미가 어떻게 다르게 다가오나요?</li> <li>☞ 앞으로 접경지역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내가 할 수 있는 작은 실천에는 무엇이 있을까요?</li> </ul>
Evaluate - 평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b>자기성찰:</b> 접경지역에 대한 사회의 편향된 시각을 주의하는 의식을 키운다.</li> <li>• <b>동료평가:</b> 결과물에 ‘고려사항·포함요소(5)’가 모두 충실히 반영되었는지를 기준으로 상호 평가를 진행한다.</li> <li>• <b>교사평가:</b> 내용의 충실성, 비판적 문제 의식, 공감과 책임의식, 전달력 및 논리적 서술 능력을 중심으로 학생들의 활동 결과물을 진단하고 피드백한다.</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접경지역 주민들의 이야기를 직접 작성해보면서, ‘경계’라는 단어의 의미가 어떻게 다르게 다가오나요?</li> <li>☞ 앞으로 접경지역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내가 할 수 있는 작은 실천에는 무엇이 있을까요?</li> </ul>

#### 4) 국가 중심 경계 담론에서 일상적 경계 서사로 재해석

모듈 4(표 8)에서는 경계작업의 관점에서 접경지역의 주민들이 마주하는 경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시민의식을 구축한다. 학생들은 접경지역을 군사·안보적 의미뿐만 아니라 다양한 의미와 삶이 담겨 있는 공간이며, 주민들의 주체적 참여에 따라 변화하고 재구성되는 공간임을 인식한다. 특히 경계 문제를 주민 입장에서 재서술함으로써 사회나 미디어에서 나타나는 편협한 경계 서사를 민감하게 인식하고 교정할 수 있는 역량을 강화한다.

### 3. 학습 모듈 타당성 검증

본 연구는 총 2차에 걸쳐 델파이 조사를 진행하였으며, 조사 결과는 표 9와 같다. 1차 조사 결과, 모듈 전체의 평균 평점은 4.6점이었고, CVR은 0.81로 기준치(0.62)를 상회하여 내용타당성이 높게 확보되었음을 입증하였다. 합의도 지표인 IQR은 0.52, CV는 0.13으로, 전문가들의 의견이 안정적으로 수렴되었음을 확인하였다.

그러나 학습자 수준 적합성, 현장 적용성, 평가계획의 적절성 등 일부 항목은 판단 기준치에 미치지 못했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 전문가의 서술형 응답을 분석한 결과,

표 9. 델파이 조사 결과

구분	평가영역	평점 평균(M)		CVR		IQR		CV	
		1차	2차	1차	2차	1차	2차	1차	2차
모듈 1	내용 연계성	4.8	4.8	1	1	0	0	0.08	0.08
	목표 실현 가능성	4.4	4.4	1	1	1	1	0.11	0.11
	교수·학습 적절성	4.9	4.8	1	1	0	0	0.06	0.08
	학습자 수준 적합성	4.3	4.4	0.6	0.8	1	1	0.18	0.15
	현장 적용성	4.6	4.6	0.8	0.8	0.75	0.75	0.14	0.14
	평가 계획의 적절성	3.8	4.4	0.4	0.8	1.5	1	0.28	0.15
모듈 2	내용 연계성	5	5	1	1	0	0	0	0
	목표 실현 가능성	4.9	4.9	1	1	0	0	0.06	0.06
	교수·학습 적절성	5	5	1	1	0	0	0	0
	학습자 수준 적합성	4.6	4.9	0.8	1	0.75	0	0.14	0.06
	현장 적용성	4.9	5	1	1	0	0	0.06	0
	평가 계획의 적절성	4.7	5	0.8	1	0	0	0.19	0
모듈 3	내용 연계성	4.9	4.9	1	1	0	0	0.06	0.06
	목표 실현 가능성	4.9	5	1	1	0	0	0.06	0
	교수·학습 적절성	4.8	5	0.8	1	0	0	0.12	0
	학습자 수준 적합성	4.4	4.6	0.8	1	1	1	0.15	0.1
	현장 적용성	4	4.4	0.2	0.8	2	1	0.22	0.15
	평가 계획의 적절성	4.1	4.7	0.6	1	1	0.75	0.27	0.09
모듈 4	내용 연계성	4.7	4.9	0.8	1	0	0	0.13	0.06
	목표 실현 가능성	4.7	4.9	1	1	0.75	0	0.09	0.06
	교수·학습 적절성	4.7	4.9	0.8	1	0	0	0.13	0.06
	학습자 수준 적합성	4.3	4.6	0.6	1	1	1	0.18	0.1
	현장 적용성	4.6	4.9	0.8	1	0.75	0	0.14	0.06
	평가 계획의 적절성	4.3	4.8	0.6	1	1	0	0.23	0.08
전체 평균		4.6	4.78	0.81	0.97	0.52	0.31	0.13	0.07

\* 음영 표시는 해당 항목이 판단 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에 해당함: 평점 평균<4.00 또는 CVR<0.62 또는 IQR>1.00 또는 CV>0.50).

일부 용어(예: 타자화, 담론)의 학술적 난이도, 평가 계획의 구체성 부족, 그리고 일부 탐구 활동의 난이도가 주된 문제점으로 파악되었다. 이러한 의견을 반영하여, 학술 용어를 학생 및 현장 교사가 이해 가능한 수준으로 정제하고, 동료평가 및 교사평가 루브릭을 추가적으로 제시하였다. 또한 학생 탐구 활동의 경우, 모듈 1의 '경계 다시 그리기' 활동을 '탐구 보고서 작성'으로 수정하고, 모듈 3의 '챗봇 설계'와 모듈 4의 '이주 관련 데이터 해석' 활동은 학생 수준을 고려하여 삭제하였다. 이와 같이 수정된 학습 모듈은 2차 델파이 조사를 통해 타당성을 재검증하였다.

2차 델파이 조사 결과, 1차 조사에서 기준치에 미치지 못했던 모든 항목이 기준을 충족하며 전체 모듈의 타당성과 합의도가 최종적으로 확보되었다. 전체 모듈의 평균 평점은 4.78점으로 1차 조사 대비 상승했으며, CVR은 0.97로 타당도가 더욱 강화되었다. 합의도를 나타내는 IQR과 CV는 각각 0.31과 0.07로, 전문가 의견이 높은 수준으로 수렴되었음을 확인하였다.

정성적 평가에서도 모듈 전체에 대해 일관된 긍정적 의견이 도출되었으며, 이를 종합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모든 모듈이 경계와 관련된 실제 사례를 중심으로 구성되어, 학생들이 사회적 이슈를 자신의 문제처럼 탐구하며 행동 의지를 함양하는 데 적합하다. 둘째, 학생들의 고정된 가치관이나 편견을 해소하고, 기존과 다른 시각으로 사안을 바라볼 수 있는 비판적 통찰력을 효과적으로 제공한다. 셋째, 새롭게 개정된 교육과정의 방향성에 부합하며, 난민, 이민자, 접경지역과 같은 시의성 있는 주제를 다루어 현장과의 연계성이 높다. 특히 평가 루브릭, 다양한 활용 자료, 지도 시 유의사항 등이 함께 제시된 점은 수업 적용 측면에서 유용하다는 평가를 받았다. 이러한 정량적 및 정성적 결과를 종합하여, 본 연구에서 개발한 경계 실천 학습 모듈이 비판적 세계시민교육을 실천하는 방안으로서 충분한 타당성을 지님을 확인하였다.

## V. 논의

### 1. 비판적 세계시민교육에서 지리교육의 역할

본 연구는 지리교육의 공간적 관점을 비판적 세계시민

교육의 이론적 담론에 통합함으로써 학문적 기반을 확장하는 데 기여한다. 비판적 세계시민교육은 세계 불평등의 구조를 인식하고 변혁적 실천 의식을 함양하는 것을 목표로 하지만, 이념적 지향에 비해 구체적인 실천 전략이 부족하다는 비판에 직면해왔다(Pashby and Costa, 2021). 이러한 이론-실천의 괴리를 해소하기 위해, 지리교육 분야에서는 지리적 현상 이면에 내재된 구조적, 정치적, 경제적 배경을 비판적으로 해독하는 접근 방식이 필요하다는 논의가 지속되어 왔다(이경환, 2018). 이에 따라 최근 학계는 공간을 권력과 이데올로기가 경합하는 장으로 재개념화하려는 시도를 이어가고 있으며, 다중적이고 경쟁적인 공간의 본질을 이해하기 위한 다양한 지리과 교수학습 연구가 축적되었다. 이는 지역의 혼성성(한희경, 2011) 및 지역 편견(김민성, 2013) 탐구, 나아가 이주(김갑철, 2017), 경계(원요한·임은진, 2021), 공간적 불균등(김예슬·최아수, 2025) 등 계통지리적 주제료까지 그 범위를 넓혀왔다.

본 연구는 이러한 선행 논의를 뒷받침하여 지리교육이 공간 정의(spatial justice) 실현을 위한 비판적 세계시민교육에서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음을 보여준다. 지리교과는 학생들이 공간을 사회적 텍스트로 간주하고 이를 재해석하도록 함으로써 보다 나은 세계 질서를 형성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한다(조철기, 2012). 이는 지리교과가 단순한 지식 전달 기능을 넘어 글로벌 정의를 실천하는 능동적인 시민적 실천의 장으로 기능할 수 있음을 시사한다(범영우, 2025).

### 2. 비판적 세계시민교육의 교수학적 구체화와 실천적 과제

비판적 세계시민교육의 핵심은 학습자가 자신과 세계의 관계를 재구성하고 사회적 책임 및 실천 의지를 내면화하도록 지원하는 데 있다(SOLIDAR Foundation, 2023). 이러한 변혁적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교수학적 접근은 단편적 사실 전달을 지양하고, 구조적 억압에 대한 민감성, 자기성찰을 통한 공동 책임, 그리고 사회적 실천을 위한 숙의 과정을 핵심 요소로 강조해왔다(Blackmore, 2016; 김갑철, 2019; de Vries, 2020).

본 연구는 이러한 이론적 논의를 구체화하기 위해 현장 적용이 용이한 교수·학습 전략을 제시하였다. 개발된 모듈은 경계 이면의 문제 분석, 공청회, 챗봇 인터뷰, 편향

기사 재서술 등 학생들이 사회 구조를 비판적으로 인식하고 타자의 목소리를 해독하는 과정을 경험하도록 설계되었다. 이러한 접근은 파울로 프레이리의 비판적 교육학에 기반한 비판적 의식화(Conscientização) 개념을 교수 학습 전략으로 전환한 것으로, 비판적 세계시민교육의 교수학적 실천을 구체화한다(Blackmore, 2016; de Vries, 2020). 특히 모듈에서 학생들은 행동에 앞서 충분한 대화, 공감, 정치적 논의를 경험하며 자신의 실천적 역할을 깊이 고민하고 대안을 상상하는 기회를 얻는다. 이러한 교수학적 접근은 캠페인 참여처럼 미리 정해진 행동을 강요하는 세계시민교육의 한계를 극복하고(Blackmore, 2016), 학습자가 공유된 이해를 바탕으로 사회문제 해결을 위한 심의 과정에 주도적으로 참여한다는 점에서 주목할 만하다(de Vries, 2020).

한편 이와 같은 교수학습 전략이 교육 현장에서 효과적으로 구현되기 위해서는 제도적·구조적 여건이 병행되어야 한다. 교사들은 학습 내용에 내재된 헤게모니적 관점을 비판적으로 성찰하고, 자신의 교육 실천에 대한 인식론적 기반을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 Pashby and Costa (2021)는 이러한 과정에서 교사의 성찰적 실천(reflexive praxis)이 중요하며, 이를 촉진하기 위해 제도적 차원에서 교사 전문성을 개발하고 동료 교사 간 협력적 공간을 마련할 것을 강조한다. 또한 비판적 세계시민교육은 본질적으로 복잡하고 논쟁적인 주제를 포함하기에, 정치적 민감성을 지닌 사안을 안전하고 건설적으로 다룰 수 있는 교육 환경 조성이 선행되어야 한다. 특히 한국의 입시 중심 교육 문화는 여전히 비판적 세계시민교육의 해방적 목표 실현을 제약하는 요인으로 작용한다(Kim and Yoo, 2022). 따라서 구조적 한계 속에서도 학생들에게 사회 참여 경험을 제공하거나 일상적 문제에 대한 비판적 인식과 성찰을 유도할 수 있는 교수학습 전략이 지속적으로 모색되어야 할 것이다.

### 3. 경계 담론의 전환과 교육과정 연계에의 함의

본 연구는 확장된 경계 논의를 수용하고 이를 국가 교육과정의 관점에서 재구성함으로써 정책적 방향성을 제시한다. 국제적으로 경계 개념은 위치(Where)의 문제에서 권력 역할(How)의 문제로 전환되고 있다. 독일의 교육과정은 경계를 정치지리학적 관점에서 가변적 구성, 정

치적 갈등, 정체성의 문제로 접근하며(Seidel and Budke, 2019; Seidel et al., 2019), 국제 바칼로레아(IB)는 사이버 보안이나 초국경적 데이터 관리와 같은 현대 경계의 비물질적이고 네트워크화된 특성을 학습 내용에 반영한다(International Baccalaureate, 2019).

이러한 해외 교육과정 동향은 국내 교육과정에서도 경계 개념을 확장적으로 도입할 필요성을 제기한다. 한국 지리교육은 오랫동안 분단이라는 특수한 지정학적 맥락으로 인해 제한된 경계 담론에 초점을 맞추어 왔으나(김기남, 2020; 범영우, 2025), 이제는 다양한 스케일과 영역에서 작동하는 사회적 경계를 탐구하고 학생들의 민감성을 제고할 필요가 있다(박위준, 2023). 본 연구는 국내 지역의 사례를 중심으로 경계 현상 이면의 보편적 사회 문제를 탐구할 가능성을 제시하며, 이는 교육과정 설계 차원에서 함의를 제공한다. 특히 2022 개정 교육과정은 다중 스케일 접근과 관계적 사고 함양을 명시하고 있으며(김민성·이운구, 2023), 경계의 사회적 구성성과 역동성을 성취기준에 반영하려는 변화를 보이고 있다. 본 연구는 이러한 움직임에 부응하여 학계의 최신 경계 논의가 국내 교육과정에 통합될 수 있는 방향성을 구체화하였다.

본 연구에서 탐색된 경계의 일상성 논의는 향후 공간적 시민성 함양의 측면에서 지리 교육과정에서 긴밀히 연결될 수 있는 지점이다. 학교나 동네에 내재된 경계와 그로 인한 사회적 배제 현상은 학생들이 현장에서 사회문제를 재인식하게 하는 핵심 소재로 작용한다(김민성, 2017). 이러한 점에서 일상 공간에서 경계에 대한 민감성은 힘있는 시민 지식(powerful civic knowledge)을 형성하도록 도우며(de Vries, 2020), 궁극적으로 지속 가능한 지역사회 형성과 책임 있는 공간 행동으로 이어질 수 있다(Weiss, 2020).

## VI. 결론

본 연구는 비판적 세계시민교육의 실천적 구체화를 목표로, 경계실천 개념을 이론적 기반으로 정립하고 학습 모듈을 개발한 후 타당성을 검증하였다. 모듈은 경계실천의 주요 개념(경계의 이동성·유동성·다층성, 경계짓기, 세계시민적 경계, 경계작업)을 5E 탐구 모형에 기반하여 설계되었다. 각 모듈에서 학습자들은 경계 설정과 지역 변화 간의 관계를 비판적으로 분석하고, 지역의 경

계를 공정하게 설정하기 위한 속의 과정에 참여한다. 또한 윤리적 관점에서 경계에 필요한 가치를 내면화하고, 시민 주체의 시선에서 일상화된 경계를 재해석한다. 이를 통해 경계의 작동 기제를 심층적으로 성찰하고, 부정의한 문제를 해결하려는 책임감과 실천 의지를 함양하게 된다. 타당성 검증을 위한 델파이 조사 결과, 1차 조사에서는 일부 항목이 판단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여 정성적 응답을 바탕으로 모듈을 보완하였다. 수정된 모듈에 대한 2차 조사에서는 모든 항목에서 내용 타당도와 전문가 합의도가 최종적으로 확보되었으며, 정성적 평가 또한 긍정적이었다.

본 연구는 다음과 같은 측면에서 학술적 및 교육적 의의를 지닌다. 첫째, 공간정 의적 관점을 기반으로 비판적 세계시민교육에서 지리과의 위상을 강화하였다. 이를 통해 지리교육이 사회 변혁을 위한 능동적인 참여의 장으로 기능할 수 있는 이론적 기반을 공고히 하였다. 둘째, 비판적 세계시민교육의 실천적 한계를 보완하고 현장 연계성을 제고하였다. 본 연구는 교육 현장에 적용 가능한 학습 모듈을 제시하여 기존 논의의 추상성을 극복하였다. 또한 현직 교사들의 타당성 검증을 거쳐 학교 지리 수업에서의 적합성을 높였다. 이는 향후 비판적 세계시민성 관련 수업 연구 및 교사 연수를 위한 실질적인 토대를 제공한다. 셋째, 확장된 경계 담론의 교육과정 통합 가능성을 제시하였다. 본 모듈은 지리학계와 해외 지리교육에서 전환되는 경계 논의의 최신 흐름에 부응하여 국내 교육과정과의 접점을 모색하였다. 특히 경계실천 관점은 사회학, 정치학, 법학, 윤리학 등 다양한 인접 학문과의 연계 지점이 풍부하여, 개발된 모듈이 통합사회와 같은 융합 교과목에서 개념적 가교 역할을 수행할 잠재성을 보여준다.

한편 본 연구는 몇 가지 한계점을 가지며, 이를 보완하기 위한 후속 과제를 다음과 같이 제언한다. 첫째, 본 연구에서 개발한 모듈의 학습자의 반응이나 교육적 효과성을 확인하지 못했다. 따라서 후속 연구에서는 개발된 모듈을 학생들에게 직접 적용하고, 그 효과를 실증적으로 분석하는 연구가 필요하다. 둘째, 비판적 세계시민성의 실천적 역량 측면에서 본 모듈은 학생들의 '행동의지'를 함양하는 것에 그쳤으나, 실천적 역량을 보다 강화하기 위한 방안이 모색될 필요가 있다. 향후 연구에서는 학생들이 지역사회 프로젝트에 직접 참여하는 등 실제 행동이나 사회 참여 경험을 포함하는 교육 프로그램을 개발 및 진

행할 필요가 있다. 셋째, 비판적 세계시민교육을 구현할 수 있는 학습 주체의 다양성 확보가 요구된다. 본 연구는 '경계실천' 개념을 중심으로 모듈을 구성하였으나, 후속 연구에서는 도시, 영토, 이주, 자원, 기후와 같은 다양한 지리적 주제들을 활용하여 비판적 세계시민교육의 실천적 가능성을 폭넓게 탐색할 필요가 있다.

## 참고문헌

- 김갑철, 2016, “정의의 향한 글로벌 시민성 담론과 학교 지리,” 한국지리환경교육학회지, 24(2), 17-31.
- 김갑철, 2017, “세계지리 교과서의 이주 다시 읽기: 정의로 온 글로벌 시민성을 향하여,” 한국지리환경교육학회지, 25(3), 123-138.
- 김갑철, 2022, “학교 지리교실에서 비판적 세계시민성과 해체적 페다고지,” 한국지역지리학회지, 28(1), 118-132.
- 김기남, 2020, “평화와 통일을 위한 한국지리 교육과정 구상-영토와 경계의 관계론적 인식을 중심으로,” 한국지리환경교육학회지, 28(2), 73-87.
- 김민성, 2013, “비판적 세계시민성을 통한 지리 교과서 재구성 전략: 르완다를 사례로,” 사회과교육, 52(2), 59-72.
- 김민성, 2017, “공간적 시민성의 개념화와 적용: 장애인 시각에서 대구 근대화 골목 바라보기,” 한국지리학회지, 6(3), 339-354.
- 김민성·이윤구, 2023, “2022 개정 세계시민과 지리 교육과정의 주요 내용,” 한국지리환경교육학회지, 31(2), 1-14.
- 김예슬·최아수, 2025, “포토보이스를 활용한 비판적 세계 시민성 교육의 교수학습 모델 개발,” 한국지리환경교육학회지, 33(1), 35-53.
- 박배균·쉬진위·신진숙, 2021, “지방적 주체의 경계만들기: 대만과 한국의 미시적 경계작업을 사례로,” 공간과 사회, 77, 163-197.
- 박위준, 2023, “국경 너머의 보더: 오늘날 보더는 어디에 있고 무엇으로 이루어졌는가?,” 대한지리학회지, 58(6), 563-584.
- 범영우, 2025, “비판지정학을 활용한 지리 교수학습의 전환적 탐색: 세계시민과 지리를 중심으로,” 한국지리학회지, 14(3), 281-297.
- 원요한·임은진, 2021, ““비판적 경계 읽기”수업을 통한 세계시민교육 방안 연구,” 한국지리학회지, 10(1), 51-65.

- 윤노아, 2022, “사회과 수업에 나타난 세계시민성에 대한 비판적 분석,” *사회과교육*, 61(1), 47-65.
- 윤성혜·강명희, 2017, “텔파이 기법을 통한 대학생용 세계 시민성 (Global Citizenship) 측정도구 개발,” *시민교육연구*, 49(4), 63-87.
- 이경한, 2018, “세계시민교육의 관점에서 세계지리와 여행지리 교육과정의 비판적 분석,” *국제이해교육연구*, 13(2), 39-75.
- 조철기, 2012, “비판교육학의 공간적 관심과 지리교육의 재개념화,” *대한지리학회지*, 47(5), 775-790.
- 한희경, 2011, “비판적 세계 시민성 함양을 위한 세계지리 내용의 재구성 방안-사고의 매개로서,” *한국지리환경교육학회지*, 19(2), 123-141.
- Abdelmohsen, M. M., 2020, The development and validation of a module on enhancing students' critical thinking, collaboration and writing skills, *SAR Journal-Science and Research*, 3(4), 166-177.
- Andersen, D. J., Klatt, M., and Sandberg, M., 2016, *The Border Multiple: The Practicing of Borders between Public Policy and Everyday Life in a Re-scaling Europe*, New York: Routledge.
- Andreotti, V., 2006, Soft versus critical global citizenship education, *Policy & Practice: A Development Education Review*, 3, 40-51.
- Blackmore, C., 2016, Towards a pedagogical framework for global citizenship education, *International Journal of Development Education and Global Learning*, 8(1).
- Bybee, R. W., Taylor, J. A., Gardner, A., Van Scotter, P., Powell, J. C., Westbrook, A., and Landes, N., 2006, *The BSCS 5E Instructional Model: Origins and Effectiveness*, Colorado Springs, CO: BSCS.
- Connor, U., 2025, Border praxeology: Linking border studies to practice theories, *Journal of Borderlands Studies*, 1-20.
- Dalkey, N. C., 1969, An experimental study of group opinion, *Futures*, 1(5), 408-426.
- de Vries, M., 2020, Enacting critical citizenship: An inter-sectional approach to global citizenship education, *Societies*, 10(4), 91.
- Delbecq, A. L., Vande Ven, A. H., and Gustafson, D. H., 1975, *Group Techniques for Program Planning*, Glenview, IL: Scott, Foresman, and Co.
- Dispa, J., Vloeberghs, W., and Skenderija, K., 2025, Getting critical about critical world citizenship: Bottom-up skills development and in-classroom operationalization within a dutch liberal arts college, *Teaching in Higher Education*, 1-21.
- González-Valencia, G., Massip Sabater, M., and Santisteban Fernández, A., 2022, Critical global citizenship education: A study on secondary school students, *Frontiers in Education*, 7, 867113.
- Hafeda, M., 2016, Bordering practices: Negotiating theory and practice, *Architecture and Culture*, 4(3), 397-409.
- Hasson, F., Keeney, S., and McKenna, H., 2000, Research guidelines for the Delphi survey technique, *Journal of Advanced Nursing*, 32(4), 1008-1015.
- Hsu, C.-C. and Sandford, B. A., 2007, The Delphi technique: Making sense of consensus, *Practical Assessment, Research & Evaluation*, 12(1), Article 10.
- Kim, H. and Yoo, S. S., 2022, Global citizenship education for critical consciousness: Emancipatory potentials and entrenched realities in South Korea, *The Palgrave Handbook on Critical Theories of Education*, 147-161.
- Lawshe, C. H., 1975, A quantitative approach to content validity, *Personnel Psychology*, 28(4).
- Mansouri, F., Johns, A., and Marotta, V., 2017, Critical global citizenship: Contextualising citizenship and globalisation, *Citizenship and Globalisation Research Papers*, 1(1), 1-9.
- Newman, D. and Paasi, A., 1998, Fences and neighbours in the postmodern world: Boundary narratives in political geography, *Progress in Human Geography*, 22(2), 186-207.
- Oxley, L. and Morris, P., 2013, Global citizenship: A typology for distinguishing its multiple conceptions, *British Journal of Educational Studies*, 61(3), 301-325.
- Pashby, K., 2015, Conflations, possibilities, and foreclosures: Global citizenship education in a multicultural context, *Curriculum Inquiry*, 45(4), 345-366.
- Pashby, K. and Costa, M. da, 2021, Interfaces of critical global citizenship education in research about secondary schools in 'global north' contexts, *Globalisation, Societies*

- and Education*, 19(4), 379-392.
- Pashby, K., Da Costa, M., Stein, S., and Andreotti, V., 2020, A meta-review of typologies of global citizenship education, *Comparative Education*, 56(2), 144-164.
- Popescu, G., 2011, *Bordering and Ordering the Twenty-first Century: Understanding Borders*, Lanham: Rowman & Littlefield Publishers (이용균·이현옥·이영민 역, 2018, 「국가·경계·질서: 21세기 경계의 비판적 이해」, 서울: 푸른길).
- Rumford, C., 2007, Does europe have cosmopolitan borders?, *Globalizations*, 4(3), 327-339.
- Rumford, C., 2013, Towards a vernacularized border studies: The case of citizen borderwork, *Journal of Borderlands Studies*, 28(2), 169-180.
- Seidel, S. and Budke, A., 2019, "A border is a ban"-students' conceptual understanding and experiences of europe's borders and boundaries, *Review of International Geographical Education Online (RIGEO)*, 9(1), 82-101.
- Seidel, S., Bettinger, P., and Budke, A., 2019, Representations and concepts of borders in digital strategy games and their potential for political education in geography teaching, *Education Sciences*, 10(1), 10.
- Shah, H. A. and Kalaian, S. A., 2009, Which is the best parametric statistical method for analyzing Delphi data?, *Journal of Modern Applied Statistical Methods*, 8(1), 20.
- SOLIDAR Foundation, 2023, *We All Belong: The Role of GCE in Supporting Democratic Participation and Addressing Current Global Challenges (Policy Paper)*.
- Stein, S., 2015, Mapping global citizenship, *Journal of College and Character*, 16(4), 242-252.
- UNESCO, 2015, *Global Citizenship Education: Topics and Learning Objectives*, Paris: OECD.
- van Houtum, H., 2005, The geopolitics of borders and boundaries, *Geopolitics*, 10(4), 672-679.
- Weiss, G., 2020, The social-constructivist concept of space in a german geography education context: Status-quo and potential, *Review of International Geographical Education Online*, 10(4), 684-705.
- International Baccalaureate, 2019, *International Baccalaureate Diploma Programme Geography guide*, <https://www.ibo.org/programmes/diploma-programme/curriculum/individuals-and-societies/geography/>.
- Oxfam, *Education for Global Citizenship*, <https://www.oxfam.org.uk/education/who-we-are/global-citizenship-guides/>.
- 교신 : 정다운, 08826, 서울시 관악구 관악로 1, 서울대학교 지리교육과(이메일: jde1211@snu.ac.kr)
- Correspondence: Daeun Jeong, 08826, 1 Gwanak-ro, Gwanak-gu, Seoul, South Korea, Department of Geography Education, Seoul National University (Email: jde1211@snu.ac.kr)

투고접수일: 2025년 10월 27일  
심사완료일: 2025년 11월 10일  
게재확정일: 2025년 11월 16일

## 부 록

### 1) 모듈 1 활용자료, 유의사항, 평가 루브릭

활용 자료	[Explore(탐색) 단계 중 미디어 자료] ㉠ “The Expansion of the European Union (1952-2022)”(Youtube, 2023.03.12.) ㉡ “유럽의회 터키와 EU 가입협상 중단해야” (YTN, 2017.07.07.) ㉢ “코로나19로 퇴색한 쟁쟁협정 복원되나…유럽 국경통제 일단 완화”(SBS 뉴스, 2020.05.14.) ㉣ “Frontex, the European Border and Coast Guard Agency”(Youtube, 2017.06.01.) ㉤ “To Fight Terror, New York Tries London's 'Ring of Steel'”(New York Times, 2005.07.24.) ㉥ “아무도 인정해주지 않는 국가, 트란스니스트리아세계여행#51”(Youtube, 2023.12.18.)
지도 시 유의 사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유럽의 경계 결정 사례에 대한 비판적 시각과 토론을 독려한다. 예) 코로나 당시 쟁쟁협정 중단이 정당한지?, 유럽 외부(Frontex)와 런던 도심(링 오브 스틸)의 지나친 경계 강화는 어떤 차별을 낳을지?</li> <li>• Elaborate(확장) 단계에서는 다음의 사례들을 제공할 수 있다: 대구시-군위군 통합(이동성), 영토전쟁의 국제화(다층성), 미국-멕시코 이민정책 변화(유동성) 등. 또한 학생의 희망진로나 관심분야와 연계하여 실천방안을 계획하도록 지도할 수 있다.</li> </ul>
<b>교사 평가용 루브릭(요약)</b>	
평가 영역	평가 기준
개념 이해 및 적용	개념(경계의 이동성, 유동성, 다층성)을 정확하게 이해하고, 조사한 사례에 매우 적절하게 적용하여 설명한다.
비판적 사고 및 분석	경계 변화가 지역사회와 시민에게 미치는 긍정적, 부정적 영향을 심층적으로 분석한다.
문제 해결 능력 및 대안 제시	문제점을 명확히 진단하고, 현실적이고 책임감 있는 개선 방안을 논리적으로 제시한다.
보고서 및 발표의 논리성	보고서 내용이 논리적이고 체계적이며, 발표가 명확하고 설득력이 있다.

### 2) 모듈 2 활용자료, 유의사항, 평가 루브릭

활용 자료	[Explore(탐색) 단계 중 참고 자료] - “제주 무사증 입국중단 한달…중국인 입도 94% 감소”(연합뉴스, 2020.03.03.) - “정세균 국무총리 ‘제주도 무사증 제도 일시 중단’”(제주의 소리, 2020.02.02.) - “18년 만에 중단된 제주 무사증…“뼈를 깎는 고통스러운 결정””(KBS 뉴스, 2020.02.02)
지도 시 유의 사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공청회 논의 과정에서 감염병 피해에 대한 불안과 낙인을 조장하지 않도록 유의한다. 다양한 의견을 존중하고, 감정보다는 논리와 근거에 기반하여 토론하도록 지도한다.</li> <li>• 공정한 토론 절차에 따라 공청회를 진행할 수 있도록 여러 입장 소개, 절차 안내, 시간 관리의 역할을 수행한다.</li> <li>• 공청회에서 경계를 결정할 뿐만 아니라, 그로 인해 예상되는 사회적 문제에 대한 해결 방안까지 함께 모색하도록 유도한다.</li> </ul>
<b>교사 평가용 루브릭(요약)</b>	
평가 영역	평가 기준
주장과 근거의 논리성	같은 이해관계자의 입장을 충분히 이해하고, 주장과 근거를 논리적이고 설득력있게 제시한다.
토론 참여도	공청회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상대방의 의견을 경청하며 상호작용한다.
공동체 책임의식	경계 설정의 이면을 성찰하고, 소외되는 집단에 대한 책임감을 바탕으로 토론에 임한다.
대안 제시 능력	경계 설정으로 발생하는 문제점을 다각도로 진단하고, 합리적이고 실현 가능한 해결 방안을 제안한다.

3) 모듈 3 활용자료, 유의사항, 평가 루브릭

활용 자료	[Engage(도입) 단계 중 뉴스영상 자료] ㉠전쟁난민: "누구도 반겨주지 않는다"...난민 비극 계속된 2021년(YTN 뉴스, 2021.12.18.) ㉡기후난민: "'집단 이주' 날벼락...10억 기후 난민이 온다"(KBS 뉴스, 2024.06.19.) ㉢이주노동자: "일하고 싶어요"...지게차에 묶인 이주노동자 강제 출국 위기(YTN 뉴스, 2025.07.25.)
지도 시 유의 사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특정 국가나 인종에 대한 편견 없이 타자의 입장에 접근하도록 개입한다.</li> <li>• 세계 타자에 대한 공감을 촉진하되, 개인적 서사에 함몰되지 않고 문제의 구조적 원인을 함께 파악하도록 지도한다.</li> <li>• 교사는 튜튼의 크랙(<a href="https://crack.wrtn.ai/">https://crack.wrtn.ai/</a>)과 같이, 복잡한 프롬프트 작성 없이도 페르소나 챗봇을 만들 수 있는 사용자 친화적인 플랫폼을 활용할 수 있다.</li> <li>• 챗봇 활동 이전에, 학생들에게 챗봇과 질의응답하는 방법에 대해 간단하게 소개한다.</li> <li>• 인터뷰 카드뉴스 제작: Canva와 같은 플랫폼의 인터뷰 템플릿(<a href="https://www.canva.com/templates/">https://www.canva.com/templates/</a>)을 활용하여 온라인 상으로 제작할 수 있다.</li> </ul>
학생 동료 평가용 루브릭(요약)	
평가요소	평가내용
(1)인물정보	챗봇 페르소나의 유형(예: 전쟁난민, 기후난민)과 출신지역이 명확하게 제시되었는가?
(2)이주와 경계경험	챗봇 인터뷰를 통해 이주경로와 원인, 경계에서 겪는 구체적인 어려움과 감정이 잘 드러났는가?
(3)구조적 문제 분석	개인의 어려움에 그치지않고, 그 이면에 있는 제도적·사회적·정치적 불평등과 같은 구조적 문제를 비판적으로 분석했는가?
(4)현재의 삶과 바람	챗봇 페르소나의 현재 삶의 모습과, 더 나은 미래를 위해 바라는 점이 구체적으로 표현되었는가?
(5)우리의 실천 방안	챗봇과의 인터뷰를 바탕으로 우리가 실천할 수 있는 구체적이고 현실적인 해결방안을 제시했는가?
• 동료의 카드뉴스를 읽고 세계타자들이 겪는 문제와, 이에 대한 나의 생각이 어떻게 달라졌나요?	
교사 평가용 루브릭(요약)	
평가 영역	평가 기준
내용의 충실성	'포함 요소'(인물 정보, 이주 경험, 구조적 문제, 실천 방안 등)를 모두 구체적으로 담고, 내용이 서로 유기적으로 연결된다.
비판적 문제 인식	타자가 겪는 문제를 개인적 차원을 넘어, 세계의 구조적 문제와 연관 지어 깊이 있게 분석한다.
공감과 책임 의식	타자의 감정에 깊이 공감하고, 그들의 어려움에 대한 공동체적 책임 의식을 구체적인 실천 방안으로 표현한다.
전달력	카드뉴스의 구성이 명확하며, 메시지를 효과적으로 전달하여 타인의 공감과 행동을 이끌어낸다.

4) 모듈 4 활용자료, 유의사항, 평가 루브릭

활용 자료	[Engage(도입) 단계 중 이미지 자료] - 군사(대북확성기): "北 향해 BTS 봄날 틀었다"... 6년 만에 다시 쉼 대북확성기(국민일보, 2024.06.09.) - 평화(평화테마노선): 'DMZ 평화의 길' 10개 테마노선 전면 개방(대한민국 정책브리핑, 2025.03.28.) - 생태(생태관광): 고양시 DMZ 평화의 길, '장항습지 생태코스' 전면 개방(메트로신문, 2024.05.17.) - 개발(경제개발사업): 경기북부대개조 프로젝트 가속화 '기대'(산업종합저널, 2025.03.06.)  [Explore(탐색) 단계 중 탐구 자료] - 국가안보로 인한 주민피해에 대한 저항: "귀곡성 올리는 대성동..여긴 생지옥", 주민들 "나라가 우릴 버렸다"(파이낸셜뉴스, 2024.11.01.) - 국가안보로 인한 주민피해에 대한 저항과 협상: "육군 1사단, 파주 민통선 영농인 출입통제 완화"(한겨레, 2021.10.15.) - 일상적 평화를 위한 저항: "내 돈으로 지뢰 제거했더니 불법이랍니다" (오마이뉴스, 2015.07.05) - 일상적 평화를 위한 저항: 군사긴장 속 '쌀보내기' 강행...인천 석모도 주민 불안 고조 (인천투데이, 2020.06.19.)
-------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청정지역의 개발위기에 대한 저항과 협상: “청정철원에 축사 허가 남발 웹 말이나”(한국농정, 2018.05.04.)</li> <li>- 생태보존을 위한 협상과 재서술: 실향민 3세대의 파주 민통선 내 DMZ 숲 조성(동일부 영상, 세계일보, 2025.02.24.)</li> <li>- 주민들의 마을 개발 속 협상과 재서술: 대성동의 주민으로 살아가기, 그리고 마을이장의 경계 관리(&lt;대성동: DMZ의 숨겨진 마을&gt; 소개글)</li> <li>- 개발제한구역의 인구소멸위기 속 협상과 재서술: “이웃은 계속 줄어들지만... 그래도 살길은 있더라”(경기일보, 2023.05.27.)</li> </ul>
지도 시 유의 사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학생들이 접경지역의 특정 이미지에 매몰되지 않고, 다중적 시각을 가질 수 있도록 지도한다.</li> <li>• 사례에서 나타나는 주민들의 행동을 단순히 민원이나 불만보다는, 주체성으로 해석할 수 있도록 지도한다.</li> <li>• ‘접경일보 재구성하기’에서 분석할 기존 기사는 빅카인즈(<a href="https://www.bigkinds.or.kr/">https://www.bigkinds.or.kr/</a>)와 같은 플랫폼을 활용하여 찾을 수 있다. 이때 [Explore-탐색 단계]에서 제시한 사례들의 관련 기사를 찾게 하거나, 아예 새로운 사례를 직접 찾아보도록 할 수 있다.</li> </ul>
<b>학생 동료 평가용 루브릭</b>	
평가요소	평가내용
(1)기존 기사에 대한 문제의식	기존 기사가 접경지역을 어떤 시각으로 보았는지 명확히 파악하고, 문제점을 명확히 지적했는가?
(2)주민의 일상과 경계의 관계	재구성된 기사에서 주민들의 일상적인 삶과 경계가 어떻게 연결되는지 구체적으로 서술했는가?
(3)주민들의 인식과 바람	주민들이 경계 문제에 대해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으며, 어떤 미래를 바라는지 담아냈는가?
(4)주민들의 구체적 행동	주민들이 경계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 했던 저항, 협상 등 구체적인 행동을 잘 묘사했는가?
(5)대안 제시 또는 책임의식	기사 재구성 내용에서 접경지역 문제에 대한 구체적인 대안이나 공동체적 책임 의식을 강조했는가?
• 동료의 기사를 읽고 접경지역에 대한 인식이나 책임의식이 어떻게 달라졌나요?	
<b>교사 평가용 루브릭</b>	
평가 영역	평가 기준
내용의 충실성	재구성 기사에 고려사항·포함요소(5가지)를 모두 깊이 있게 반영했다.
비판적 문제의식	기존 기사의 편협한 시각을 파악하고, 대안적 관점으로 적절히 재서술하였다.
책임 의식	주민들의 삶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접경지역의 문제에 대한 책임 의식이 나타난다.
전달력 및 논리적 서술	기사의 제목과 내용이 독자에게 명확하고 설득력 있게 전달된다.



# 지역의 기회 구조가 핵심역량 성장에 미치는 영향: 기회의 지리 관점과 경남교육청종단연구 자료의 활용\*

손민석\*\* · 이강희\*\*\*

## The Effect of Regional Opportunity Structures on the Development of Key Competencies: A Geography of Opportunity Approach Using Longitudinal Data from the Gyeongnam Office of Education\*

Minsuk Son\*\* · Kanghee Lee\*\*\*

**요약 :** 본 연구의 목적은 ‘기회의 지리’ 관점을 바탕으로, 지역 간 기회 구조의 차이가 중학생들의 핵심역량 성장에 미치는 영향을 실증적으로 규명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경남교육청종단연구에 참여한 경상남도 8개 하위 지역 중학생 785명의 핵심역량 자료(2022-2024년)와 각 지역의 4대 기회 구조 자료(경제적·공공 및 민간 서비스·커뮤니티 및 시민 참여·자연 및 건조 환경)에 대한 다층 성장 모형 분석을 진행하였다. 그 결과, 첫째 무조건 성장 모형에서 자기관리, 지식정보처리, 공동체 역량의 성장 기울기가 지역 간 차이를 보였다. 둘째, 조건 성장 모형 분석 결과, 자기관리 역량과 공동체 역량의 예측 성장 기울기는 기회 구조 수준이 높은 지역에서 상대적으로 가파르게 나타났지만, 지식정보처리 역량의 예측 성장 기울기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지역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결론적으로, 지역의 기회 구조가 일부 핵심역량 성장의 맥락적 요인으로 기능하며, 특히 자기관리 및 공동체 역량 성장의 지역 격차에 영향을 미친다는 점을 확인하였다. 본 연구는 주로 개인·학교 요인으로 접근하였던 기존 핵심역량 논의에 공간적 관점을 부여하였다는 의의가 있다.

주요어 : 기회의 지리, 지역의 기회 구조, 핵심역량, 다층 성장 모형, 종단연구

**Abstract :** This study aims to empirically examine how differences in regional opportunity structures influence the development of middle school students' key competencies, drawing on the framework of the “geography of opportunity.” To this end, a multilevel growth model was applied using data from 785 students across eight sub-regions of Gyeongsangnam-do who participated in the Gyeongnam Office of Education Longitudinal Study (2022-2024), along with regional indicators representing four domains of opportunity structures: economic opportunity, public and private services, community and civic engagement, and natural and built environments. The unconditional growth model showed that the growth trajectories of self-management, information-processing, and community competencies varied significantly across regions. In the conditional growth model, predicted growth slopes for self-management and community competencies were steeper in regions with higher levels of opportunity structures, whereas the predicted growth slope of information-processing competency did not exhibit statistically significant regional differences. These findings indicate that regional opportunity structures function as contextual factors shaping the development of certain key competencies, particularly influencing regional disparities in self-management and community competencies. The study contributes to existing discussions on key competencies by incorporating a spatial perspective that extends beyond individual- and school-level explanations.

Key Words : Geography of opportunity, Regional opportunity structures, Key competencies, Multilevel growth model, Longitudinal study

\*본 논문은 경상남도교육청에서 수행한 경남교육청종단연구의 2차~4차 년도 자료를 활용하여 작성함.

\*\*장유고등학교 교사(Teacher, Jangyu High School, syc1616@jangyu-h.gne.go.kr)

\*\*\*부산 신정초등학교 교사, 부산대학교 지리교육 전공 박사과정(Teacher, Sinjeong Elementary School, Doctoral Student, Department of Geography Education, Pusan National University, kanghee6430@gmail.com)

## I. 연구 배경 및 목적

“교육은 세상을 바꿀 수 있는 가장 강력한 무기다.”라는 넬슨 만델라(Nelson Mandela)의 명언은 인간의 전인적 성장, 훌륭한 사회 구성원의 양성 및 민주 사회의 발전에 공헌하는 교육의 희망적 기능(OECD, 2024a)을 강조한다. 동시에 평등한 교육 기회의 중요성을 역설적으로 함축하며, 모든 사람에게 동등한 교육 기회를 제공하는 형식적 평등뿐만 아니라 사회적·경제적·문화적 차이에 따른 교육 격차를 해소하는 실질적 평등도 보장해야 함(MacKinnon, 2020)을 시사한다.

그러나 현실에서는 교육 불평등이 만연해 있다. 동등한 교육 기회를 강조하는 호주, 미국, 스위스 등 주요 선진국에서도 학생들의 학업 성취는 이민자 여부, 가정의 사회적·경제적 지위, 성별 등의 차이에 따라 큰 격차를 보인다(OECD, 2018). 특히 미국은 부모의 소득과 주거 지역의 공간적 분리가 결합하면서 학업 성취의 큰 격차를 보이는데, 고소득 지역과 저소득 지역 학생 간의 성취도 격차는 최근 수십 년간 약 30~40% 이상 확대된 것으로 나타났다(Reardon, 2011). 교육열이 뜨거운 한국 역시 부모의 소득이나 학력 수준, 사회적 지위 등이 자녀의 학력 격차를 확대하고 있으며(남인숙, 2011), 서울 강남과 비수도권, 광역시와 중소도시·읍면 지역(김경근, 2005), 도시와 농촌(이종연·김창해, 1997), 대도시 내부의 지역들(하봉운, 2005; 임선희·김경희, 2006) 간의 교육 불평등이 발생하고 있다(추경모, 2012).

그동안 한국의 교육 불평등을 진단 및 해결하려는 다수의 연구는 대부분 사회적·경제적 요인에 주목하였다. 하지만 공간과 사회의 상호 구성적 성격(Lefebvre, 1991)을 고려할 때, 교육 불평등 문제는 사회적·경제적 차원만이 아니라 공간적 측면까지 분석해야 할 필요성이 크다. 교육 성취의 지역 격차는 교육 불평등의 단순한 공간적 결과로 그치지 않고, 교육 기회와 결과의 불평등을 확대·재생산하는 구조적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 예컨대 낙후 지역의 학생들은 양질의 교육 기회와 자원 활용에 제약을 받으며, 이는 학업 성취의 향상을 제한하고 나아가 다른 지역과의 교육 격차를 더욱 심화하는 악순환 구조를 형성할 수 있다. 따라서 교육 불평등 문제를 분석 및 해결하기 위해서는 공간적 접근이 필수적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다양한 불평등 문제를 공간적 관점으로 규명하는 ‘기회의 지리(geography of opportunity)’ 개념

(Galster and Killen, 1995)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기회의 지리는 지역(공간)이 제공하는 주택·노동 시장, 교육·보건·교통 서비스, 자연 및 건조 환경 등의 기회 구조가 그곳에 거주하는 사람들의 사회적·경제적 성취나 삶의 전망에 미치는 영향을 이해하는 데 도움을 준다(Galster and Sharkey, 2017). 즉 기회의 지리를 통해 다양한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하는 교육 불평등의 공간적 특성을 이해하고 학생들의 거주 지역 특성과 교육 성취 간의 관련성을 분석할 수 있다. 이는 교육 불평등을, 지역이 제공하는 기회 구조의 총량과 질에 따라 생산·재생산되는 공간적 불평등의 결과로 해석하도록 이끈다는 점(Briggs, 2005)에서 한국의 교육 불평등 해소에 관한 통찰력을 제공할 수 있다.

이상의 내용에 따라 본 연구는 도시·농업·산지·해안 지역이 공존하여 지역 간 기회 구조 변동성이 뚜렷한 경상남도를 대상으로, 하위 지역들의 기회 구조 차이가 중학생들의 핵심역량 성장에 미치는 영향을 실증적으로 규명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먼저 이론적 측면에서 기회의 지리 개념과 특징을 검토하고, 핵심역량의 의미와 교육적 중요성을 살핀다. 다음으로, 경남교육청중단연구<sup>1)</sup>의 중학생 핵심역량 자료와 지역별 기회 구조 통계자료를 활용하여, 지역의 기회 구조 차이가 핵심역량의 성장에 미치는 영향을 규명하는 다층 성장 모형(Multilevel Growth Model) 분석을 진행한다. 마지막으로 실증적 분석 결과를 통해 지역의 기회 구조가 핵심역량 성장에 미치는 영향을 확인한다. 본 연구는 경상남도 사례 분석을 통해 지역 수준의 공간적 요인을 핵심역량 논의에 통합함으로써, 기존 경제적·사회적 요인 중심의 교육 불평등 연구가 소홀하였던 공간적 요인의 설명력을 확장하고, 교육의 실질적 평등 논의에 새로운 관점을 제공한다.

## II. 이론적 배경

### 1. 기회의 지리 개념과 특징

기회의 지리는 미국 도시 내 인종·계층 간 공간적 분리가 기회의 불평등에 미치는 영향을 밝히려는 Galster and Killen(1995)의 문제의식에서 비롯하였다. 우선, 이들은 기회의 지리 개념 정립을 위해 기회를 과정과 전망이라는 두 차원에서 구조화하였다. 과정은 개인이 사회적·경제

적 성취를 향해 나아가는 경로에서 경험하는 사회적·제도적·공간적 조건의 작동 과정을 의미하며, 교육 및 복지 시설, 노동 시장, 사회적 연결망과 같은 외적 조건들의 총체가 특정한 공간 구조에서 개인에게 어떠한 제약 또는 가능성을 제공하는지를 설명한다. 전망은 이러한 과정과의 상호작용 결과로 도달할 수 있는 성취의 객관적·잠재적 가능성과 이에 대한 주관적 기대를 뜻하며, 사회적·경제적 성취 가능성, 계층 이동의 기회, 삶의 질 향상 등이 해당한다. Galster and Killen(1995)은 이러한 두 차원으로 구성된 기회를 통해 기존의 기회 평등 논의가 간과한 공간적·지리적 요소를 포괄할 수 있다고 강조하였다.

기회의 지리는 개인의 가정환경, 성장 지역 차이가 각종 경험, 소득, 지위의 차이를 유발하고, 나아가 결과의 불평등뿐만 아니라 또 다른 기회의 불평등을 양산하는 것에 관한 공간적 관점을 제공한다(이승욱 등, 2023). 기존 불평등 연구들이 대부분 부모의 소득, 교육수준 등 사회적·경제적 요인을 통해 문제 현상을 분석했다면(신우진 등, 2015), 기회의 지리는 지역(공간)의 기회 구조가 개인의 사회적·경제적 성취나 삶의 전망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설명할 수 있는 개념적 틀이 된다(Briggs, 2005; Galster and Sharkey, 2017). 또한, 기회의 지리는 지역의 기회 구조를 구성하는 공공 정책이 형식적 수준인지 혹은 실효성을 지니는지 평가하고, 이를 통해 정책 개선에도 효과적으로 활용할 수 있다(Galster, 2012).

기회의 지리 논의는 다양한 지표(변수)들을 활용하여 지역 기회 구조의 영향력을 정량적으로 분석하는 데 중점을 둔다.<sup>2)</sup> Lens(2017)는 기회의 지리 논의에서 지역의 구체적이고 측정 가능한 지표들을 활용해야 함을 강조하고, 그 예로 고등학교 졸업률, 범죄율, 고용률, 실업률, 소득수준, 인구 구성 비율 등을 제시하였다. Galster and Sharkey(2017)는 지역의 기회 구조를 노동·주택·금융 시장, 사법·교육·보건·교통 및 사회 서비스, 자연 및 건조 환경, 공공 및 민간의 제도적 자원과 서비스, 사회적 연결망, 지방 정치 체제로 채택하고, 종속 변수는 개인의 인지 및 행동 발달, 교육 성취, 10대 임신율, 신체 및 정신 건강, 노동 참여 및 소득, 범죄율로 설정한 세분화된 양적 측정 모델을 제시하였다. 그리고 Bernard *et al.*(2023)은 경제적 요인에 집중한 기회 구조 측정 방식의 한계를 비판하며, 기회 구조를 경제적 기회, 공공 및 민간 서비스, 커뮤니티 및 시민 참여 기회, 자연 및 건조 환경으로 영역화하고 이를 통해 지역의 특성을 보다 균형 있게 측정하는 분

석 기준을 제시하였다. 즉, 기회의 지리 연구는 개인의 성취에 미치는 공간적 영향력을 정교하게 규명하기 위해 지역의 기회 구조를 대변하는 다차원적 영역의 지표를 활용한다.

실제로 기회의 지리가 다양한 불평등 문제를 분석하는데 효과적이라는 점은 여러 연구를 통해 입증되고 있다. Chyn(2016)은 지역의 주거 환경이 아동의 장기적인 삶에 큰 영향을 미친다는 사실을 입증하였는데, 빈곤 지역에서 벗어난 아동은 장기적으로 높은 고용률과 소득을 보였지만, 반대의 경우는 고교 중퇴율과 범죄 가담률이 높았다는 사실을 제시하였다. 이연재(2024)는 청소년기 도시환경의 기회 구조가 성인 이행기의 역량에 중단적으로 미친 영향을 분석하였고, 기회 구조가 풍부한 지역에서 성장한 청년일수록 자기효능감, 교육 성취, 취업 성과 등이 더욱 높게 나타난다는 결과를 제시하였다. 그리고 Owens(2018)의 연구는 지역의 기회 구조가 교육 성취도에 미치는 영향을 규명했다는 측면에서 본 연구에서 시사점을 제공한다. Owens(2018)는 미국 대도시권들을 대상으로, 학군의 평균 소득, 소득 분리도(고소득층과 저소득층의 거주 분리 정도), 교육자원 분포 등을 활용하여 지역 간 학업 성취를 비교하였고, 그 결과 고소득 학군에 양질의 교육자원이 밀집되고 이에 따라 소득 분리도가 높은 지역일수록 학군 간 학업 성취 수준의 격차가 크다는 사실을 보고하였다.

결국, 기회의 지리는 지역 간 기회 구조의 차이가 개인의 성취나 삶의 전망에 미치는 영향력을 분석할 수 있는 공간적 분석 틀로 기능한다(Galster and Killen, 1995; Galster and Sharkey, 2017). 이를 통해 경남 하위 지역 간 기회 구조의 차이가 중학생의 핵심역량 성장에 누적적·지속적으로 미치는 영향을 실증적으로 검증하고, 나아가 지역 간 역량 격차 완화를 위한 교육 정책 수립 과정에 공간적 관점을 제공할 수 있다.

## 2. 핵심역량의 의미와 교육적 중요성

기존의 전통적 교육은 학생들의 지식 축적과 인지적 성과를 강조하여 급변하는 사회, 첨단 기술 환경, 미래형 인재 양성 요구와 부합하지 않는다는 비판을 받았다(Care *et al.*, 2018). 그 가운데, 직업 교육이나 훈련 분야에서 활용되었던 역량(competency)이 급변하는 사회를 대비하는 학교 교육의 근본적인 변화를 이끄는 주요한 대안으로

주목받기 시작하였다(소경희, 2007).

과거 직무 분야의 역량은, 직무 수행에서 효과적이고 성공적인 결과와 관련된 개인의 내재적 특성(Boyatzis, 1982), 특정한 직무나 상황에서 구체적 준거에 따라 보이는 뛰어난 수행과 관련된 개인의 내적 특성(Spence and Spencer, 1993) 등 직무 수행에 필요한 실제적인 개인의 내적 능력을 의미하였다. 그러나 OECD DeSeCo 프로젝트를 통해 역량의 의미는 일상생활 또는 생애와 관련된 능력으로 확장되었다. DeSeCo 프로젝트는 역량을 성공적인 삶과 사회 발전에 기여하는 개인의 능력·자질로 간주하고, “인지적·비인지적 측면을 모두 포함하는 개인의 심리적·사회적 특성들을 동원하여 특정한 상황(맥락)에서 발생하는 복잡한 요구에 성공적으로 대응하는 능력”으로 정의하였다(Rychen and Salganik, 2003; 김현미, 2013). 이 정의에는, 개인이 직면한 개인적·사회적 요구에 따라 역량이 규정된다는 요구 지향적 특성, 지식과 기술에 더해 태도, 감정, 가치, 동기 등 개인의 사회적·행동적 요소들이 역량의 내적 구조에서 결합한다는 특성, 그리고 특정 맥락 속에서 개인이 취한 행동을 통해서만 역량을 볼 수 있다는 맥락 의존적 특성이 포함돼 있다(OECD, 2002, 소경희, 2007에서 재인용). 즉 역량은 지능, 기능, 인성, 태도 등을 포괄하는 총체적인 개념이라는 것이다(소경희, 2007; 이근호 등, 2012). 물론 교육적 맥락에서 역량을 정의하려는 다양한 연구가 후속적으로 수행되고 있으나, DeSeCo 프로젝트에서 제시된 역량의 의미를 크게 벗어나지 않고 있다.

총체적인 역량 개념을 현대 또는 미래 사회의 복잡성과 변화 속도에 비추다면, 필요한 역량의 목록은 상당히 방대해질 수밖에 없다. 하지만 교육의 맥락에서는 무수히 많은 역량을 모두 가르칠 수 없으므로, 모든 사람에게 공통으로 필요한 역량들을 선별한 후 이를 교육 내용으로 구성할 필요가 있다. 이에 따라 등장한 것이 핵심역량(key competencies)이다. 핵심역량은 삶의 영위에 필요한 수많은 역량 중 가장 필수적이고 핵심적인 역량을 뜻한다. 이는 모든 사람의 삶에 반드시 필요하다는 점에서 일반적·보편적 특성을 가지며, 특정한 분야나 상황에서만 필요한 특수역량과는 대조된다(소경희, 2007). 또한 학교 교육에서 핵심역량은 교육을 통해 가르쳐야 할 역량들의 우선순위를 설정하는 기준으로 작용한다. 즉, 다양한 사회적·학문적 요구 속에서 핵심역량은 가장 필수적이고 본질적인 역량에 해당하는 것으로, 학교 교육의 목

표와 내용, 평가 전반을 재구조화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이근호 등, 2012; 2013; 이광우 등, 2015).

핵심역량의 중요성에 따라 세계 각국이 역량 중심의 교육과정 개편을 단행하였고, 한국 또한 ‘학교 교육을 통해 21세기 사회가 요구하는 역량을 어떻게 길러낼 것인가?’에 대한 정책적 응답으로, 핵심역량을 명시적으로 반영한 2015 개정 교육과정을 제시하였다. 이 교육과정은 창의·융합형 인재의 육성을 목표로, 자기관리 역량, 지식정보처리 역량, 창의적 사고 역량, 심미적 감성 역량, 의사소통 역량, 공동체 역량을 6대 핵심역량으로 선정하고, 학생들이 이 핵심역량들을 학교 교육의 전 과정을 통해 함양하도록 이끄는 데 중점을 두었다(교육부, 2015; 이광우 등, 2015).<sup>3)</sup>

2015 개정 교육과정의 핵심역량은 학생들이 현대 사회에서 자기주도적·자율적으로 사고하고, 다양한 상황에 유연하게 대처하며, 문제해결을 위해 여러 분야의 지식들을 융합하고 공동체와 협력하는 데 필요한 인지적·비인지적 요소의 총체적인 능력이다. 이러한 핵심역량은 선천적으로 타고난 특별한 능력·자질이 아니라 누구나 교육과정 경험을 통해 함양할 수 있으며(이근호 등, 2012; 김현미, 2013), 지식의 습득이나 교과 성적에 비해 학생 생애의 전반에 지속적으로 영향을 미친다는 점(Rychen and Salganik, 2003)에서 더욱 중요한 교육 성과로 보아야 한다.

이러한 견지에서 중학생의 핵심역량에 대한 분석은 발달적·교육적 측면에서 중요한 의의가 있다. 중학생 시기는 급격한 인지적·정서적·신체적 변화가 나타나며, 핵심역량과 관련된 자아 정체감, 학습 동기, 자기 주도성, 공동체 의식 등의 기반이 견고해지기 시작한다(김우리 등, 2014; 황여정·김경근, 2014). 더욱이 이 시기의 핵심역량은 개인의 직접적인 학습경험에 더해 학교 및 지역사회 환경의 영향을 받으며(문은식, 2013) 향후 학업 성취, 진로 선택, 시민성 함양 등 삶의 다양한 영역에 걸쳐 발휘된다(김기현 등, 2010; 김남희·이정운, 2013; 김경애 등, 2016). 따라서 중학생 시기의 핵심역량은 발달적 전환기의 특성, 환경의 영향력과 맞물리고, 향후 시기의 교육적 성취 및 사회적 성장의 기초를 형성한다는 측면에서 다른 학령기보다 더욱 중요하게 살펴봐야 할 필요가 있다.

### III. 연구 설계

본 연구는 경상남도 중학생들의 핵심역량 성장 변화를

추정하고, 경남 하위 지역들의 기회 구조 차이가 그 성장 경향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기 위해 교육 분야의 종단연구에서 널리 활용되는 다층 성장 모형(Multilevel Growth Model)을 연구 방법으로 채택하였다(Raudenbush and Bryk, 2002).

다층 성장 모형은 시간에 따라 변화하는 개인의 성장을 분석하고, 동시에 그 성장 변화에 개인이 속한 지역(집단) 수준의 영향까지 함께 추정할 수 있는 통계 모형으로, 군집 구조를 지닌 교육 자료 분석에 적합하다(Snijders and Bosker 2012). 더불어 표본 수의 불균형을 허용하고 성장 궤적의 무선 효과 변이(random variation)를 반영한다는 점에서 단일 수준의 회귀 분석이나 분산 분석보다 실제 교육 맥락에서 발생하는 구조적 차이를 충실하게 포착할 수 있다(Raudenbush and Bryk, 2002).

다층 성장 모형의 분석 구조는 3년 동안 측정된 경남 학생들의 핵심역량을 1수준, 학생 개인별 차이를 2수준으로 설계하였다. 여기서 지역을 3수준으로 설정할 수 있지만, 그 경우에는 지역 수가 8개에 불과하여 표준 오차의 편향, 신뢰구간의 부정확성이 커질 수 있으므로, 지역의 기회 구조는 2수준의 맥락 고정 효과(contextual fixed effects)<sup>4)</sup>로 설정하였다(Maas and Hox, 2005).

## 1. 분석 자료

### 1) 핵심역량

본 연구의 핵심역량은 2015 개정 교육과정에서 설정한 것으로, 자아정체성과 자신감을 가지고 자신의 삶과 진로에 필요한 기초 능력·자질을 갖추어 자기주도적으로 살아갈 수 있는 자기관리 역량, 문제를 합리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다양한 영역의 지식과 정보를 처리·활용할 수 있는 지식정보처리 역량, 폭넓은 기초 지식을 토대로 다양한 전문 분야의 지식, 기술, 경험을 융합적으로 활용하여 새로운 것을 창출하는 창의적 사고 역량, 인간에 대한 공감적 이해와 문화적 감수성을 바탕으로 삶의 의미와 가치를 발견·향유하는 심미적 감성 역량, 다양한 상황에서 자기 생각과 감정을 효과적으로 표현하고 다른 사람의 의견을 경청·존중하는 의사소통 역량, 그리고 지역·국가·세계 공동체의 구성원에게 요구되는 가치와 태도를 가지고 공동체 발전에 능동적으로 참여하는 공동체 역량이다(교육부, 2015).

이러한 핵심역량의 자료는 경상남도교육청이 한국교

육개발원의 2015 개정 교육과정 핵심역량 측정 도구를 경남 지역의 특성과 맥락에 따라 수정·보완한 리커트 5점 척도 설문을 통해 수집된 것이다(구경호, 2024). 이는 자기관리, 지식정보처리, 창의적 사고, 심미적 감성, 의사소통, 공동체의 6대 핵심역량과 그 하위의 10개 영역(긍정적 자아의식, 자기 주도성, 진로 성숙도, 지식정보처리 역량, 창의적 사고 역량, 문화적 소양, 다문화 수용성, 의사소통 역량, 사회성, 민주 시민성, 학교 민주주의 기본 원리)에 대한 91개 문항으로 구성된다.

핵심역량 설문 응답자는 3년(2022년~2024년) 동안 진행된 경남교육청중단연구에 참여하여 핵심역량 설문의 모든 문항에 성실히 응답한 785명의 중학생이다. 이들의 소속 지역과 그 비율은 표 1과 같고, 여기서 8개 지역의 구분은 인구 규모가 작은 지역의 연구 대상자 모집 제약을 해소하기 위해 일부 인접 지역을 권역으로 설정한 경남교육청의 기준을 준용한 것이다.

표 1. 핵심역량 설문 응답자의 소속 지역 및 비율

지역	학생 수(명)	비율(%)
1. 창원	174	22.17
2. 진주	202	25.73
3. 김해	50	6.37
4. 통영·거제	72	9.17
5. 양산	83	10.57
6. 밀양권(밀양·의령·함안·창녕)	116	14.78
7. 사천권(사천·고성·남해·하동)	49	6.24
8. 산청권(산청·함양·거창·합천)	39	4.97
총계	785	100

### 2) 지역의 기회 구조

지역의 기회 구조를 균형 있게 대변하는 자료를 수집하기 위해, 먼저 Bernard *et al.*(2023)이 제안한 ‘경제적 기회’, ‘공공 및 민간 서비스’, ‘커뮤니티 및 시민 참여 기회’, ‘자연 및 건조 환경’을 4대 영역으로 선정하였는데, 이는 지역의 물적·제도적 자원, 사회적 관계, 환경 조건이 청소년의 학습 기회 및 학업 성과에 주요한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평가받는 데 따른 것이다(Galster and Sharkey, 2017). 그리고 각 영역에 적합한 하위 지표는 여러 선행 연구를 검토하여 표 2와 같이 선정하였다.

우선 경제적 기회 영역의 하위 지표는 지역의 고용률, 사업체 수, 가구의 월평균 소득으로 설정하였다. 이 지표

**표 2** 지역의 기회 구조 4대 영역별 하위 지표

대영역	하위 지표	자료 출처
경제적 기회	고용률	통계청(2013년 1/2~2024년 2/2 반기 자료)
	사업체 수	통계청(2021년, 2022년, 2023년 자료)
	가구의 월평균 소득	경남통계(2022년, 2023년, 2024년 자료)
공공 및 민간 서비스	교육환경 만족도	경남통계(2021년, 2023년 자료)
	사회적 지원 가능 여부	경남통계(2022년, 2024년 자료)
	의료기관 수	경남통계(2022년, 2023년, 2024년 자료)
커뮤니티 및 시민 참여 기회	이웃 간 신뢰도	지역사회건강조사(2021년, 2023년 자료)
	사회활동 참여도	지역사회건강조사(2022년, 2024년 자료)
	지역사회에 대한 자부심 및 소속감	경남통계(2021년, 2023년 자료)
자연 및 건조 환경	주거 환경 만족도	경남통계(2021년, 2023년 자료)
	공원 수	경남통계(2022년, 2024년 자료)
	대중교통 만족도	지역사회건강조사(2021년, 2023년 자료)

들은 지역사회의 경제 활성화와 고용 기회를 나타내며 (Lens, 2017; 이연재, 2024), 학생들의 교육 선택권, 진로 기대 등을 매개하여 학업 성과 촉진에 영향을 미치는 것이다(남인숙, 2011; Reardon, 2011).

둘째, 공공 및 민간 서비스 영역은 공교육 외에 필요한 교육환경에 대한 만족도, 난처한 상황에서 도움을 요청할 수 있는 사회적 지원 가능 여부, 그리고 시민의 건강 수준 및 삶의 질과 직결되는 의료기관 수를 지표로 설정하였다(Galster and Sharkey, 2017). 이는 지역사회의 추가적인 학습 기회 및 다양한 학습 선택권(이호준·김지연, 2025), 사회적 지지와 학업 성취간의 긍정적 관계(Zhang and Qian, 2024), 시민들의 삶의 만족도(OECD, 2024b)를 보여줄 수 있다. 특히 정서적 안정감과 학습지원 경험은 자기조절 및 문제해결 역량을 강화하는 것으로 보고된다(Zhang and Qian, 2024).

셋째, 커뮤니티 및 시민 참여 기회 영역은 이웃 간 신뢰도, 사회활동 참여도, 지역사회에 대한 자부심 및 소속감을 지표로 설정하였다(Bernard et al., 2023). 이것들은 청소년의 사회성과 공동체 의식 및 시민성 신장(이중섭 등, 2006), 지역민들의 협력(고호석, 2013), 사회적 자본 형성(이연재, 2024)에 영향을 미치는 지표라는 점에서 공동체 역량이나 의사소통 역량과의 관련성이 크다고 판단하였다.

마지막, 자연 및 건조 환경 영역은 주거 환경 만족도, 공원 수, 대중교통 만족도를 지표로 설정하였다(Galster and Sharkey, 2017). 이는 일상생활 전반의 안정감과 만족도, 신체적·정서적 발달과 관련된 요소들이며 학습몰입과 정서

조절 능력을 촉진하는 것으로 보고된다(Galster, 2008; 이은교, 2022). 더욱이 대중교통 만족도는 청소년들의 생활 반경과 삶의 기회 확대에 연관된 지표이다(장동의 등, 2018).

한편, 기회 구조의 하위 지표들은 핵심역량 측정 기간, 즉 2022년~2024년에 수집된 통계자료의 활용을 원칙으로 설정하였다. 다만, 일부 지표는 2년마다 측정되어 2021년과 2023년 또는 2022년과 2024년의 자료를 활용하였다. 여기서 특정 연도의 결측값은 자료의 시계열적 연속성을 확보하기 위해 선형 보간(linear interpolation)을 통해 통계적으로 추정하였다(Little and Rubin, 2002).

그리고, 하위 지표들의 측정 단위가 비율, 건수 등과 같이 서로 다른 문제가 존재하여 이를 동일한 척도에서 비교하기 위해 대영역별 표준점수(Z-score)를 표 3과 같이 산출하였다(추경모, 2012).

**표 3** 지역별 기회 구조의 표준점수(Z-score)

지역	경제적 기회	공공 및 민간 서비스 기회	커뮤니티 및 시민 참여 기회	자연 및 건조 환경 기회
창원	0.77	0.52	0.46	1.42
진주	0.02	-0.07	0.14	0.30
김해	0.42	-0.48	-0.56	-0.47
통영·거제	-0.42	-0.53	-0.37	-0.19
양산	-0.04	-0.01	-1.19	0.79
밀양권	-0.48	0.25	0.48	-0.84
사천권	-0.11	0.24	0.21	-0.28
산청권	-0.17	0.09	0.83	-0.74

## 2. 다층 성장 모형 분석 절차 및 방법

기본적으로 경남의 여러 하위 지역에 속한 학생들이 본인 핵심역량 점수의 일반적 경향을 파악하기 위해 기술통계 분석을 진행한 후, R 4.5.1을 활용하여 다층 성장 모형 분석을 무조건 모형, 무조건 성장 모형, 조건 성장 모형의 3단계 절차로 수행하였다.

첫째, 무조건 모형에서는 어떠한 예측 변수도 투입하지 않은 상태에서 ICC(Intraclass Correlation Coefficient, 급내상관계수)<sup>5)</sup>와 DEFF(Design Effect, 설계효과)<sup>6)</sup>의 산출을 통해 다층 성장 모형 적용의 통계적 타당성을 검증하였다(Raudenbush and Bryk, 2002; Snijders and Bosker 2012; Hox et al., 2017; Lorah, 2018). 이 과정에서 활용한 모형의 기본 수식은 다음과 같다.

- 1수준:  $Y_{ij}$  ( $j$ 지역  $i$ 학생 핵심역량 점수) =  $\mu_j$  ( $j$ 지역 연도별 핵심역량 평균 점수) +  $r_{ij}$  ( $j$ 지역 내 분산)
- 2수준:  $\mu_j = \mu_{total}$  (전체 학생의 연도별 핵심역량 평균 점수) +  $u_j$  ( $j$ 지역 간 분산)
- 통합모형:  $Y_{ij} = \mu_{total} + u_j + r_{ij}$

둘째, 무조건 성장 모형 분석은 시간의 흐름에 따른 핵심역량 성장의 지역 간 차이를 확인하는 과정이다. 이를 위해, 먼저 시간 변수를 1수준에 투입한 무조건 성장 모형, 그리고 무조건 모형에 대한 우도비 검정(Likelihood-Ratio Test)을 진행하여 시간 변수의 투입이 모형 적합도를 유의하게 개선하는지를 검증하였다. 다음으로 전체 학생 집단의 평균적인 핵심역량들의 초깃값( $\beta_0$ ) 및 성장 기울기( $\beta_1$ )를 추정하는 고정 효과(fixed effects)와, 이러한 평균 성장 경향으로부터 개인별 초깃값 및 성장 기울기가 이탈한 정도를 나타내는 무선 효과(random effects)의 분산을 검증하였다. 또한 무선 효과 분산의 지역 차이가 존재하는지를 확인하기 위해  $F$  검정을 수행하였다. 덧붙여 무조건 성장 모형의 수식은 다음과 같다.

- 1수준:  $Y_{ti}$  ( $i$ 학생의  $t$ 시점 핵심역량 점수) =  $\beta_{0i}$  ( $i$ 학생의 개인 초깃값) +  $\beta_{1i}$  ( $i$ 학생의 핵심역량 성장 기울기) ×  $TIME_{ti}$  +  $e_{ti}$  ( $i$ 학생의  $t$ 시점 잔차)
- 2수준:  $\beta_{0i} = \beta_0 + r_{0i}$  (평균 초깃값에서 벗어난 개인별 편차)  
 $\beta_{1i} = \beta_1 + r_{1i}$  (평균 성장 기울기에서 벗어난 개인별 편차)

• 통합모형:  $Y_{ti} = \beta_0 + \beta_1 \times TIME_{ti} + r_{0i} + r_{1i} \times TIME_{ti} + e_{ti}$

셋째, 조건 성장 모형 분석은 지역별 기회 구조 차이가 핵심역량 성장에 미치는 실질적인 영향을 검증하는 과정으로, 다음과 같은 수식을 활용하였다.

- 1수준:  $Y_{ti} = \beta_{0i} + \beta_{1i} \times TIME_{ti} + e_{ti}$
- 2수준:  $\beta_{0i} = \beta_0 + \delta$  (기회 구조가 역량의 초깃값에 미치는 영향) ×  $Z_j + r_{0i}$   
 $\beta_{1i} = \beta_1 + \gamma \times Z_j + r_{1i}$
- 통합모형:  $Y_{ti} = \beta_0 + \delta \times Z_j + \beta_1 \times TIME_{ti} + \gamma Z_j \times TIME_{ti} + r_{0i} + r_{1i} \times TIME_{ti} + e_{ti}$

세부적으로, 해당 모형을 통해 지역 간 성장 기울기의 유의한 차이가 확인된 핵심역량을 대상으로, 지역의 기회 구조를 2수준의 맥락 변수로 투입하여 시간 변수와 기회 구조 변수의 상호작용 항에 대한 '표준화된 상호작용 계수( $\gamma$ )'를 산출하였다. 이 계수는 시간 흐름에 따른 핵심역량 성장 기울기의 지역 차이와 지역 기회 구조 간의 통계적 관련성을 나타낸다. 이후, 표준화된 상호작용 계수( $\gamma$ ), 전체 집단의 평균 성장 기울기( $\beta_1$ ), 지역별 기회 구조 지렛값(Z-score,  $Z_j$ )를 활용하여 지역별 '예측 성장 기울기( $\hat{\beta}_{1j}$ : 예측성장기울기 $_j = \beta_1 + \gamma \times Z_j$ ,  $j$ =지역)'를 제시하였다(Lorah, 2018). 이것은 지역의 기회 구조 수준이 반영된 시간 계수로, 특정 지역의 핵심역량이 시간 경과에 따라 평균적으로 얼마나 증가 또는 감소하는지를 추정한다. 즉, 기회 구조가 핵심역량 성장 속도(점수/년)에 미치는 영향을 정량적으로 제시하며, 지역 간 핵심역량의 성장 격차가 형성되는 정도를 실질적으로 보여준다(Lorah, 2018).

한편, 일부 지역을 권역(예: 밀양권, 사천권)으로 설정하여 권역 내 이질성을 온전하게 반영하지 못한 점, 그리고 지역 수가 8개에 불과하다는 점에 따라 본 연구에서 제시하는 통계분석 결과의 안정성이 다소 낮을 수 있다는 사실에 유의할 필요가 있다.

## IV. 연구 결과

### 1. 기술통계 분석 결과

지역별 3개년 핵심역량 점수에 대한 기술통계 분석 결

과는 표 4와 같다. 먼저, 핵심역량의 왜도와 첨도의 최댓값은 0.29와 5.88로 나타났는데, 이는 각각의 절댓값이 2와 7 미만일 때 정규성 가정을 충족한다는 기준(West et al., 1995)에 부합하였다(구경호, 2024).

경남 8개 지역의 핵심역량 평균 점수는 역량 유형과 지역에 따라 미세한 차이를 보였다. 역량 유형별로 살펴보면, 자기관리 역량은 평균 점수의 지역 간 최대 격차가 0.12점으로 가장 작았으나, 심미적 감성 역량은 0.37점으로 가장 큰 격차를 보였다. 그 외 역량의 최대 격차는 의사소통 역량 0.24점, 지식정보처리 역량 0.21점, 창의적 사고 역량 0.17점, 공동체 역량 0.16점으로 나타났다.

지역 측면에서, 산청권은 자기관리 역량(3.40점), 창의적 사고 역량(3.31점), 심미적 감성 역량(3.59점)에서 가장 높은 점수를 보였고, 진주는 지식정보처리 역량(3.64점), 의사소통 역량(3.67점)에서 가장 높은 점수를 기록하였다. 그러나 양산은 자기관리 역량(3.28점), 심미적 감성 역량(3.22점), 의사소통 역량(3.43점), 공동체 역량(3.38점)에서 최저 수준을 나타냈다. 즉 여러 역량에서 높은 수준을 보이는 지역(진주, 산청권)과 다수 영역에서 낮은 역량 수준을 기록한 지역(양산)이 공존하였다. 이는 지역별 기회 구조의 격차에 따라 핵심역량 성장의 지역 차이가 존재할 가능성을 보여준다. 다음으로, 김해는 자기관리 역량(3.28점), 지식정보처리 역량(3.43점), 창의적 사고 역량(3.14)은 최저 수준을 보였으나, 공동체 역량에서는 최고 수준(3.54점)을 보여 지역의 기회 구조가 역량 유형에 따라 차별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나타낸다.

요컨대, 기술통계 분석 결과는 핵심역량이 개인 특성에 더해 지역 수준의 요인과의 관련성이 있을 수 있고, 지역

의 기회 구조가 역량에 미치는 영향은 역량 유형별로 서로 다를 수 있음을 보여준다. 다만, 이러한 해석은 핵심역량 수준의 전반적인 경향만을 추론한 것이므로, 다층 성장 모형 분석을 통해 지역의 기회 구조가 핵심역량 성장 궤적에 미치는 영향을 통계적으로 검증할 필요가 있다.

## 2. 다층 성장 모형 분석 결과

### 1) 무조건 모형 분석 결과

다층 성장 모형 적용의 통계적 타당성을 정밀하게 검토하기 위해 핵심역량의 측정 연도별 ICC와 DEFF를 산출하였다(표 5). 산출된 ICC 값은 0에 수렴하지 않았고, 0.004에서 0.117까지 다양하게 분포하였다. 특히 지식정보처리 역량(2022년 ICC=0.117)과 심미적 감성 역량(2023년 ICC=0.055)은 상대적으로 높은 수치를 보였으나, 공동체 역량(2022년 ICC=0.004)과 창의적 사고 역량(2024년 ICC=0.006)은 낮은 수치를 보였다.

사회과학 분야에서 활용하는 모형 적용의 엄격한 판단 기준인 ICC '0.05 이상'을 고려하면(Hox et al., 2017), 자기관리 역량(2022년 ICC=0.055), 지식정보처리 역량(2022년 ICC=0.117, 2024년 ICC=0.056) 등 특정 연도의 일부 역량에만 모형 적용의 통계적 타당성이 입증되었다. 그러나 본 연구와 같이 분석 지표가 다수인 종단연구의 경우에는 0.05 이상의 ICC 값이 일부 지표에서만 산출되더라도, 다층 성장 모형 적용의 통계적 타당성을 겸비했다고 판단하기도 한다(Jaakkola et al., 2015).

한편, ICC가 절대적인 판단 기준이 아니라는 지적(Sommet and Morselli, 2021)에 따라, DEFF를 보조 근거로 활용하

표 4. 기술통계 분석 결과

지역	자기관리 역량				지식정보처리 역량				창의적 사고 역량				심미적 감성 역량				의사소통 역량				공동체 역량			
	M	S.D.	왜도	첨도	M	S.D.	왜도	첨도	M	S.D.	왜도	첨도	M	S.D.	왜도	첨도	M	S.D.	왜도	첨도	M	S.D.	왜도	첨도
창원	3.28	0.35	-0.20	3.29	3.54	0.56	0.15	3.17	3.24	0.55	-0.20	3.73	3.35	0.55	0.15	3.10	3.54	0.54	0.21	3.27	3.45	0.46	0.20	3.63
진주	3.36	0.37	0.29	3.82	3.64	0.64	-0.18	2.97	3.24	0.60	-0.06	2.99	3.47	0.64	-0.04	2.62	3.67	0.60	-0.01	2.80	3.52	0.50	0.18	3.01
김해	3.28	0.38	-0.07	2.53	3.43	0.63	0.03	3.03	3.14	0.60	-0.15	3.35	3.40	0.63	0.01	2.57	3.61	0.62	-0.02	2.65	3.54	0.51	0.26	2.76
통영·거제	3.37	0.33	-0.11	2.49	3.52	0.57	0.03	3.09	3.29	0.57	-0.34	3.36	3.30	0.62	-0.02	2.71	3.55	0.52	-0.10	3.57	3.50	0.52	-0.07	3.46
양산	3.28	0.35	-0.51	4.08	3.44	0.61	-0.27	4.40	3.24	0.55	-0.44	4.18	3.22	0.62	0.12	2.71	3.43	0.57	-0.49	5.00	3.38	0.47	-0.37	5.88
밀양권	3.30	0.36	-0.15	3.99	3.46	0.63	-0.43	4.45	3.29	0.59	-0.20	3.29	3.31	0.60	-0.07	2.77	3.48	0.55	0.04	3.57	3.45	0.49	0.23	3.28
사천권	3.38	0.41	0.29	4.49	3.51	0.67	-0.14	4.16	3.26	0.71	-0.38	3.68	3.30	0.56	0.15	3.17	3.53	0.62	0.25	2.97	3.51	0.51	0.41	3.10
산청권	3.40	0.36	0.07	3.46	3.63	0.60	-0.11	3.05	3.31	0.59	-0.25	4.34	3.59	0.49	0.23	2.42	3.61	0.52	0.05	3.30	3.48	0.44	0.28	2.60
전체	3.32	0.36	0.00	3.76	3.53	0.62	-0.13	3.57	3.25	0.59	-0.21	3.51	3.37	0.60	0.03	2.80	3.56	0.57	0.03	3.35	3.48	0.49	0.15	3.51
최대 격차	0.12				0.21				0.17				0.37				0.24				0.16			

표 5. 무조건 모형 분석 결과

역량	연도	지역 간 분산	지역 내 분산	ICC	DEFF
자기관리 역량	2022	0.008	0.138	0.055	6.342
	2023	0.015	0.825	0.018	2.748
	2024	0.001	0.123	0.008	1.777
지식정보처리 역량	2022	0.058	0.440	0.117	12.364
	2023	0.003	0.393	0.008	1.777
	2024	0.021	0.353	0.056	6.439
창의적 사고 역량	2022	0.003	0.354	0.008	1.777
	2023	0.006	0.343	0.017	2.651
	2024	0.002	0.337	0.006	1.583
심미적 감성 역량	2022	0.021	0.486	0.041	4.982
	2023	0.028	0.482	0.055	6.342
	2024	0.018	0.463	0.037	4.594
의사소통 역량	2022	0.017	0.354	0.046	5.468
	2023	0.014	0.340	0.040	4.885
	2024	0.013	0.283	0.044	5.274
공동체 역량	2022	0.001	0.264	0.004	1.389
	2023	0.013	0.238	0.052	6.051
	2024	0.003	0.200	0.015	2.457

여 모형 적용 판단의 타당성을 제고하였다. 일반적으로 DEFF 수치가 '2.0 이상'이면 다층 성장 모형의 적용을 권장하는데(Muthén and Satorra, 1995), 본 연구에서 창의적 사고 역량은 2023년도에만 2.651을 기록하였으나, 나머지 5개 유형의 핵심역량은 적어도 2개 연도 이상에서 2.0을 상회하였다. 따라서 ICC 및 DEFF 지표의 검증을 통해 일반적 회귀 모형이 설명하지 못하는 잔여 변동인 오차항(잔차)의 독립성 위배가 존재하여 다층 성장 모형 적용의 타당성이 확보되었다고 판단할 수 있다(Muthén and Satorra, 1995; Jaakkola *et al.*, 2015).

## 2) 무조건 성장 모형 분석 결과

시간에 따른 변화량(df=2: 시간, 임의 기울기 분산)을 투입한 무조건 성장 모형의 적합도를 확인하기 위해 수행한 우도비 검정 결과는 표 6과 같다. 무조건 성장 모형은 무조건 모형보다 -2LL, AIC, BIC 값이 모두 낮은 수치를 보이고, 통계량( $\chi^2$ )과 유의확률( $p < 0.05$ )도 양호한 수준으로 나타났다는 점을 통해 무조건 성장 모형이 통계적 적합도를 갖추었다고 판단할 수 있다(Heck *et al.*, 2012).

다음으로, 전체 학생 집단의 핵심역량 초깃값 및 성장

기울기를 보여주는 고정 효과와, 평균 성장 경향으로부터 개인별 이탈 정도를 나타내는 무선 효과의 분산을 분석한 결과는 표 7과 같다. 고정 효과의 분석 결과, 모든 핵심역량의 초깃값( $\beta_0$ )은 0보다 큰 값을 보였고 통계적으로도 유의한 차이를 나타냈다( $p < 0.001$ ). 이는 관측 시점 시점부터 학생들의 핵심역량 점수가 일정 수준 이상이었음을 보여준다. 성장 기울기( $\beta_1$ )의 경우, 심미적 감성 역량을 제외한 나머지 5개의 핵심역량에서 모두 시간 경과에 따라 통계적으로 유의한 증가가 나타났다( $p < 0.05$ ). 반면, 심미적 감성 역량의 3년간 성장 기울기는 유의한 변화를 보이지 않았다( $p = 0.628$ ).

무선 효과 분석 결과, 초깃값의 분산( $\sigma_0^2$ )과 성장 기울기의 분산( $\sigma_1^2$ )은 모든 역량에서 0보다 큰 값으로 나타났고, 이에 따라 학생들 간 핵심역량의 초기 수준뿐만 아니라 시간에 따른 성장 속도에도 차이가 존재함을 파악할 수 있다. 또한 잔차 분산( $\sigma^2$ )이 모든 핵심역량에서 0보다 큰 값으로 나타나, 개별 학생의 핵심역량 점수가 시간 경과에 따라 일정하지 않으며 측정 시점 간 점수 변동을 보인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다.

무선 효과 분산의 지역 차이를 확인하는 F 검정 결과,

표 6. 우도비 검정 결과

역량	모형	-2LL	AIC	BIC	$\chi^2$	df	p
자기관리 역량	무조건	1546.767	1552.767	1570.060	-	-	-
	무조건 성장	1497.153	1509.153	1563.738	34.615	2	0.000***
지식정보처리 역량	무조건	3790.968	3796.968	3832.261	-	-	-
	무조건 성장	3764.883	3776.883	3828.469	30.085	2	0.000***
창의적 사고 역량	무조건	3254.856	3260.856	3278.149	-	-	-
	무조건 성장	3204.778	3216.778	3251.364	50.078	2	0.000***
심미적 감성 역량	무조건	3325.436	3331.436	3348.729	-	-	-
	무조건 성장	3289.389	3301.389	3335.975	36.047	2	0.000***
의사소통 역량	무조건	3335.762	3341.762	3359.055	-	-	-
	무조건 성장	3309.182	3321.182	3355.768	26.580	2	0.000***
공동체 역량	무조건	2608.895	2614.895	2653.188	-	-	-
	무조건 성장	2564.013	2576.013	2632.599	44.881	2	0.000***

\* $p < 0.05$ , \*\* $p < 0.01$ , \*\*\* $p < 0.001$

표 7. 고정 효과 및 무선 효과 분석 결과

구분		자기관리 역량	지식정보처리 역량	창의적 사고 역량	심미적 감성 역량	의사소통 역량	공동체 역량		
고정 효과	초깃값	$\beta_0$	3.322	3.534	3.251	3.368	3.562	3.476	
		SE	0.013	0.021	0.021	0.021	0.019	0.016	
		t	254.332	169.182	156.506	159.255	186.443	212.435	
		p	0.000***	0.000***	0.000***	0.000***	0.000***	0.000***	
	성장 기울기	$\beta_1$	0.022	0.025	0.034	0.005	0.023	0.032	
		SE	0.009	0.013	0.010	0.010	0.010	0.010	
		t	2.532	2.130	3.487	0.485	2.286	3.152	
		p	0.011*	0.033*	0.000***	0.628	0.022*	0.002**	
무선 효과	개인 차이	초깃값	$\tau_0^2$	0.082	0.211	0.249	0.266	0.180	0.134
		성장 기울기	$\tau_1^2$	0.017	0.027	0.026	0.027	0.016	0.018
		잔차 분산	$\sigma^2$	0.060	0.153	0.100	0.102	0.124	0.087
	지역 차이	초깃값	F	2.503	2.268	0.718	2.374	2.057	1.488
			p	0.015*	0.027*	0.657	0.021*	0.043*	0.167
		성장 기울기	F	4.406	2.149	1.195	0.366	1.013	2.038
			p	0.000***	0.036*	0.302	0.922	0.420	0.045*

\* $p < 0.05$ , \*\* $p < 0.01$ , \*\*\* $p < 0.001$

초깃값 분산에서 창의적 사고 역량( $p=0.657$ )과 공동체 역량( $p=0.167$ )을 제외한 자기관리 역량( $p=0.015$ ), 지식정보처리 역량( $p=0.027$ ), 심미적 감성 역량( $p=0.021$ ), 의사소통 역량( $p=0.043$ )이 통계적 유의성을 보였다( $p < 0.05$ ). 즉 4개 유형의 핵심역량은 경남 하위 지역별로 초기 수준의 차이를 보인다는 것이다. 성장 기울기의 분산에서는

자기관리 역량( $p < 0.001$ ), 지식정보처리 역량( $p=0.036$ ), 공동체 역량( $p=0.045$ )이 통계적 유의성을 보여( $p < 0.05$ ), 지역 간에 해당 역량들의 성장 기울기 차이가 나타남을 알 수 있다. 그러나, 창의적 사고 역량( $p=0.302$ ), 심미적 감성 역량( $p=0.922$ ), 의사소통 역량( $p=0.420$ )은 성장 기울기의 유의한 지역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이를 통해 핵심역량의 초깃값과 성장 기울기는 모든 역량 유형에서 동일한 수준을 보이지 않고, 역량 유형별로 초기 수준 및 성장 기울기가 서로 다르며, 일부 역량에서는 이것들의 지역 차이가 존재한다는 점을 파악할 수 있다. 여기서 성장 기울기의 지역 차이가 유의한 자기관리 역량, 지식정보처리 역량, 공동체 역량은 지역의 기회 구조를 2수준의 맥락 변수로 투입한 조건 성장 모형 분석을 통해, 지역별 기회 구조 차이가 해당 역량의 성장에 미치는 실질적인 영향을 검증해 볼 필요가 있다(Raudenbush and Bryk, 2002).

### 3) 조건 성장 모형 분석 결과

성장 기울기의 지역 간 차이가 통계적으로 확인된 자기관리 역량, 지식정보처리 역량, 공동체 역량을 대상으로, 성장 기울기의 지역 차이와 지역 기회 구조의 각 영역 간의 상호작용성을 검증하기 위해 1수준 변수로 시간을, 2수준의 맥락 변수로 기회 구조의 표준점수(Z-score)(표 3)를 투입하여 표준화된 상호작용 계수( $\gamma$ )를 분석하였다(표 8).

분석 결과, 역량 유형과 기회 구조 영역에 따라 통계적 관련성이 다르게 나타났다. 자기관리 역량의 경우, 경제적 기회( $\gamma=0.032, p=0.040$ ), 커뮤니티 및 시민 참여 기회( $\gamma=0.027, p=0.026$ ) 영역이 시간 흐름에 따른 성장 기울기의 지역 차이에 유의한 관련성을 보였다. 그리고 지식정보처리 역량은 초깃값과 성장 기울기의 지역 차이가 모두 존재하였음에도(표 7), 커뮤니티 및 시민 참여 기회 영역( $\gamma=0.037, p=0.038$ )에서만 통계적으로 유의한 관련성이 확인되었고, 다른 기회 구조 영역에서는 통계적 유의성이 나타나지 않았다. 마지막, 공동체 역량에서는 경제적 기회( $\gamma=0.045, p=0.013$ ), 공공 및 민간 서비스 기회( $\gamma=0.021, p=0.043$ ), 그리고 자연 및 건조 환경 기회( $\gamma=0.021, p=0.043$ ) 영역이 성장 기울기의 지역 차이와 통계적으로 유

의한 상호작용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지역 기회 구조가 일부 핵심역량 성장의 지역 격차와 연관되어 있음을 드러낸다.

다음으로, 지역의 기회 구조가 자기관리 역량, 지식정보처리 역량, 공동체 역량 성장 기울기의 지역 차이를 어떻게 설명하는지를 구체적으로 확인하기 위해 예측 성장 기울기( $\hat{\beta}_{1j}$ )를 분석하였다(표 9). 그 결과, 핵심역량의 성장 속도(점수/년)는 지역의 기회 구조에 따라 이질적인 양상을 보였는데, 경제적 기회 영역에서는 지식정보처리 역량을 제외한 자기관리 역량과 공동체 역량의 뚜렷한 지역 차이가 나타났다. 전체 8개 지역 중 경제적 기회 지표(Z-score, 표 3)가 상대적으로 높은 6개 지역은 두 역량 모두에서 통계적 유의성을 보였다( $p<0.05$ ). 특히 경제적 지표가 가장 높은 창원( $Z=0.77$ )과 그다음의 김해( $Z=0.42$ )는 0.047(창원의 자기관리 역량), 0.066(창원의 공동체 역량), 0.036(김해의 자기관리 역량), 0.050(김해의 공동체 역량)의 예측 성장 기울기 값( $\hat{\beta}$ )을 보여 가장 높은 성장 기울기를 나타냈다. 반면, 경제적 기회 지표가 가장 낮은 통영·거제( $Z=-0.42$ )와 밀양권( $Z=-0.48$ )에서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예측 성장 기울기가 확인되지 않았다. 즉 경제적 기회 지표가 상대적으로 높은 지역에서는 자기관리 역량과 공동체 역량의 성장이 강화된다는 것으로, 가구의 소득수준이 높을수록 자녀의 긍정적 자아의식(박성희·최은영, 2016), 진로 성숙도(금지현, 2012), 공동체 의식(김위정, 2012), 기초 질서 존중(강영혜 등, 2011)에 긍정적이라는 기존 연구와 궤를 같이한다고 판단할 수 있다.

공공 및 민간 서비스 기회 영역(이하 서비스 기회)은 공동체 역량에서만 통계적 유의성이 확인되었다. 공동체 역량의 예측 성장 기울기는 서비스 기회 지표가 가장 낮은 2개 지역을 제외한 나머지 6개 지역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수치를 보였다( $p<0.01$ ). 특히 해당 지표가 높은 창원( $Z=0.52$ ), 밀양권( $Z=0.25$ ), 사천권( $Z=0.24$ ) 순으로 예

표 8. 표준화된 상호작용 계수 분석 결과

기회 구조 영역	자기관리 역량		지식정보처리 역량		공동체 역량	
	$\gamma$	$p$	$\gamma$	$p$	$\gamma$	$p$
경제적 기회	0.032	0.040*	0.025	0.302	0.045	0.013*
공공 및 민간 서비스 기회	-0.020	0.338	-0.022	0.490	0.021	0.043*
커뮤니티 및 시민 참여 기회	0.027	0.026*	0.037	0.038*	0.003	0.859
자연 및 건조 환경 기회	0.007	0.458	-0.001	0.915	0.021	0.043*

\* $p<0.05$ , \*\* $p<0.01$ , \*\*\* $p<0.001$

표 9. 예측 성장 기술기 분석 결과

기회 구조 영역	지역	자기관리 역량		지식정보처리 역량		공동체 역량	
		$\hat{\beta}_{ij}$	$p$	$\hat{\beta}_{ij}$	$p$	$\hat{\beta}_{ij}$	$p$
경제적 기회	창원	0.047	0.000***	-	-	0.066	0.000***
	진주	0.023	0.004**	-	-	0.032	0.000***
	김해	0.036	0.000***	-	-	0.050	0.000***
	통영·거제	0.009	0.403	-	-	0.012	0.344
	양산	0.021	0.009**	-	-	0.029	0.003**
	밀양권	0.007	0.528	-	-	0.010	0.479
	사천권	0.019	0.023*	-	-	0.026	0.009**
	산청권	0.017	0.047*	-	-	0.024	0.023*
공공 및 민간 서비스 기회	창원	-	-	-	-	0.037	0.006**
	진주	-	-	-	-	0.027	0.003**
	김해	-	-	-	-	0.019	0.229
	통영·거제	-	-	-	-	0.018	0.285
	양산	-	-	-	-	0.028	0.001**
	밀양권	-	-	-	-	0.032	0.000***
	사천권	-	-	-	-	0.032	0.000***
	산청권	-	-	-	-	0.030	0.000***
커뮤니티 및 시민 참여 기회	창원	0.023	0.015*	0.022	0.130	-	-
	진주	0.014	0.097	0.012	0.363	-	-
	김해	-0.004	0.712	-0.009	0.636	-	-
	통영·거제	0.001	0.951	-0.003	0.850	-	-
	양산	-0.021	0.239	-0.029	0.315	-	-
	밀양권	0.024	0.013*	0.023	0.121	-	-
	사천권	0.016	0.058	0.015	0.280	-	-
	산청권	0.033	0.006**	0.034	0.067	-	-
자연 및 건조 환경 기회	창원	-	-	-	-	0.053	0.000***
	진주	-	-	-	-	0.030	0.000***
	김해	-	-	-	-	0.014	0.204
	통영·거제	-	-	-	-	0.020	0.034*
	양산	-	-	-	-	0.040	0.000***
	밀양권	-	-	-	-	0.006	0.648
	사천권	-	-	-	-	0.018	0.068
	산청권	-	-	-	-	0.008	0.520

\* $p < 0.05$ , \*\* $p < 0.01$ , \*\*\* $p < 0.001$

측 성장 기술기(창원=0.037, 밀양권=0.032, 사천권=0.032)도 크게 나타났다. 반대로, 서비스 기회 지표가 가장 낮은 김해( $Z=-0.48$ )와 통영·거제( $Z=-0.53$ )에서는 유의한 성장이 확인되지 않았다. 이러한 결과는 일정 수준 이상의 서비스 기회를 확보한 지역에서는 사회적 지지(Zhang and

Qian, 2024), 삶의 만족도(OECD, 2024b) 등이 상대적으로 높게 유지되며, 이러한 환경적 요인이 학생들의 공동체 역량 성장을 뒷받침할 수 있음을 보여준다.

커뮤니티 및 시민 참여 기회 영역(이하 참여 기회)은 자기관리 역량과 지식정보처리 역량에 표준화된 상호작용

의 유의한 영향을 나타냈으나(표 8), 예측 성장 기울기는 자기관리 역량에만 통계적 유의성을 보였고, 그 지역의 수도 소수였다. 구체적으로 창원( $\beta=0.023, p=0.015$ ), 밀양권( $\beta=0.024, p=0.013$ ), 산청권( $\beta=0.033, p=0.006$ )에서만 통계적으로 유의한 예측 성장 기울기가 확인되었다( $p<0.05$ ). 이 지역들은 참여 기회 지표(Z-score)가 가장 높은 3개 지역(창원:  $Z=0.46$ , 밀양권:  $Z=0.48$ , 산청권:  $Z=0.83$ )으로, 특히 지표 수준이 가장 높은 산청권에서 예측 성장 기울기 역시 가장 크게 나타났다. 이를 통해 참여 기회가 일정 수준 이상인 지역에서는 자기관리 역량의 성장 속도가 상대적으로 빠르게 나타나지만, 그 수준이 낮은 지역들에서는 참여 기회의 영향이 제한되거나 불안정함을 추론할 수 있다. 한편, 표준화된 상호작용의 통계적 유의성이 확인되었던 지식정보처리 역량은 어떠한 지역에서도 예측 성장 기울기의 통계적 유의성을 보이지 않았다. 이는 해당 역량의 성장이 지역의 참여 기회보다는 정보통신 기술 기반 구축(임정훈·이진석, 2003)이나 개인의 디지털 역량(최은주·박남진, 2005) 등 다른 요인의 영향을 더 크게 받을 가능성을 드러낸다.

마지막으로, 자연 및 건조 환경 기회 영역(이하 환경 기회 영역)에서는 공동체 역량 성장 기울기의 통계적 유의성이 확인되었다. 환경 기회 지표가 상대적으로 높은 창원( $\beta=0.053, p<0.001$ ), 진주( $\beta=0.030, p<0.001$ ), 양산( $\beta=0.040, p<0.001$ )의 예측 성장 기울기가 통계적 유의성을 보였으나, 나머지 5개 지역에서는 유의성이 확인되지 않았다. 이를 통해 환경 기회 지표가 높은 일부 지역에서는 학생들이 일상적 안정과 사회적 안전감을 더 쉽게 경험할 수 있으며(Galster, 2008; 장동익 등, 2018; 이은교, 2022), 이러한 환경적·정서적 기반이 공동체 역량의 성장을 지지할 수 있음을 시사한다.

지역을 기준으로 정리하면, 기회 구조 4대 영역 지표가 높은 창원(자기관리 역량과 공동체 역량 모두에서 가장 일관적이고 높은 성장 기울기를 보였다. 김해는 자기관리, 공동체 역량에서 경제적 기회가 주도하는 성장 양상이 가장 분명하게 나타났다. 사천권은 경제적 기회에 대해 서비스 기회의 영향이 일부 확인됐으나, 기울기 크기는 창원이나 김해보다 낮았다. 진주와 양산에서는 자기관리 역량 성장에 경제적 기회가, 공동체 역량 성장에 경제적 기회, 서비스 기회, 환경 기회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진주와 양산의 예측 성장 기울기 값은 창원과 김해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았다. 밀양권은 자기

관리 역량에서 참여 기회, 공동체 역량에서는 서비스 기회가 각각 유의하게 작용하였고, 산청권은 자기관리 역량에서 경제적 기회와 참여 기회가, 공동체 역량에서는 경제적 기회와 서비스 기회가 유의성을 보였다. 밀양권과 산청권의 예측 성장 기울기는 진주나 양산에 비해 낮은 경향을 보였고, 산청권은 서비스 기회와 참여 기회에 대한 반응성이 비교적 높다는 것이 특징적이다. 마지막, 통영·거제는 환경 기회에서만 공동체 역량 성장의 유의성이 나타났고, 두 역량 모두 전반적으로 낮은 성장 수준을 보였다.

요컨대, 예측 성장 기울기의 분석 결과, 자기관리 역량의 예측 성장 기울기는 경제적 기회와 커뮤니티 및 시민 참여 기회, 그리고 공동체 역량의 예측 성장 기울기는 경제적 기회에 더해 공공 및 민간 서비스 기회, 자연 및 건조 환경 기회의 영향에 따라 지역 격차를 보였다. 그러나 지식정보처리 역량의 예측 성장 기울기는 어떠한 기회 구조 영역과도 통계적 유의성을 나타내지 않았다. 이를 통해, 지역의 기회 구조가 모든 핵심역량 성장에 보편적으로 작용하는 공통의 결정요인이라기보다는, 역량의 성격과 지역별 기회 구조 수준이 결합하여 특정 역량에서만 선별적으로 영향력을 행사하는 맥락적 요인임을 시사한다. 즉, 지역별 기회 구조의 차이는 일부 핵심역량 성장 속도의 지역 격차를 불러일으킬 수 있음을 보여준다.

## V. 결론

본 연구는 기회의 지리 관점을 기반으로, 경상남도 하위 8개 지역의 3개년 핵심역량 중단적 자료와 지역 기회 구조 지표를 활용한 다층 성장 모형 분석을 수행하였다. 그 결과, 지역의 기회 구조는 일부 역량의 성장에 조건적으로 작용한다는 점을 도출하였으며, 특히 지역사회의 경제·사회·환경적 특성이 자기관리 역량과 공동체 역량 성장의 중요한 요인이 될 수 있음을 제시하였다.

세부적으로, 핵심역량의 초기 수준에서 자기관리 역량, 지식정보처리 역량, 심미적 감성 역량, 의사소통 역량의 지역 차이가 확인되었으나, 성장 기울기 측면에서는 자기관리 역량, 지식정보처리 역량, 공동체 역량만이 지역 차이를 나타냈다. 성장 기울기와 지역 기회 구조 영역 간 상호작용 분석 결과, 자기관리 역량은 경제적 기회와 커뮤니티 및 시민 참여 기회, 지식정보처리 역량은 커뮤니

터 및 시민 참여 기회, 공동체 역량은 경제적 기회, 공공 및 민간 서비스 기회, 자연 및 건조 환경 기회 영역과 각각 통계적으로 유의한 관련성을 보였다.

예측 성장 기울기 분석에서는 경제적 기회가 자기관리 역량과 공동체 역량 성장에 주요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특히 경제적 기회 수준이 높은 창원과 김해는 두 역량 모두에서 가장 가파른 성장 기울기를 기록하였다. 반면, 경제적 기회 수준이 낮은 통영·거제와 밀양권은 유의한 성장 경향이 확인되지 않았다. 또한 공공 및 민간 서비스 기회는 김해와 통영·거제를 제외한 6개 지역에서 공동체 역량 성장에 유의한 영향을 미쳤고, 자연 및 건조 환경 기회는 창원, 진주, 통영·거제, 양산에서 공동체 역량 성장을 이끄는 것으로 나타났다. 커뮤니티 및 시민 참여 기회는 창원, 밀양권, 산청권에서만 자기관리 역량 성장과 유의하게 관련되었다. 반면, 지식정보처리 역량은 커뮤니티 및 시민 참여 기회와 상호작용 영향이 확인되었으나, 예측 성장 기울기에서는 어떠한 기회 구조에서도 통계적 유의성을 보이지 않아 지역의 기회 구조보다 개인·학교 요인의 영향이 더 크게 작용한 것으로 해석된다.

지역별로 종합하면, 기회 구조 지표가 전반적으로 높은 창원은 자기관리 역량, 공동체 역량 모두에서 가장 일관되고 가파른 성장세를 보였고, 김해는 두 역량 모두에서 경제적 기회의 영향이 뚜렷하게 나타났다. 산청권은 경제적 기회와 일부 공공 및 민간 서비스 기회의 유의한 영향이 확인되었으나, 성장 기울기는 창원, 김해보다 낮았다. 진주와 양산은 자기관리 역량에 경제적 기회가, 공동체 역량에 공공 및 민간 서비스 기회와 자연 및 건조 환경 기회가 유의하게 작용하였으나 전반적 성장세는 강하지 않았다. 밀양권과 산청권은 일부 기회 구조가 역량에 따라 선택적인 영향을 미쳤으며 성장 기울기는 진주, 양산보다 낮은 편이었다. 다만 산청권은 공공 및 민간 서비스 기회에 대한 반응도가 비교적 높았으나 성장 수준은 중간 정도였다. 마지막으로 통영·거제는 자연 및 건조 환경 기회에서만 공동체 역량 성장에 유의성이 확인되었고, 두 역량의 성장세가 가장 제한적이었다.

한편, 창의적 사고 역량, 심미적 감성 역량, 의사소통 역량의 성장은 지역 간 유의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이는 해당 역량들이 지역의 기회 구조보다 수업 경험, 학습 실천, 개인 특성 등과 같은 다른 요인의 영향을 더 많이 받는 것으로 보인다.

이상의 결과를 고려하면, 핵심역량 교육은 역량 유형별

특성에 더해 지역사회가 제공하는 경험 가능성과 참여 기회를 포괄하는 방향으로 개선될 필요가 있다. 즉 학생들의 성장은 개인 내부 능력뿐만 아니라 가정·지역·사회 등의 환경에 영향을 받지만(Bronfenbrenner, 1979), 기존 핵심역량 연구들은 학생 개인의 능력·자질과 교과적 접근에 집중하여(남궁지영 등, 2015) 지역 맥락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 한계를 보였다. 비록 경상남도 중학생 핵심역량의 지역 차이를 확인한 국내의 연구(황석현, 2025)가 존재하였으나, 지역별 격차를 확인하는 수준에 그쳤다.

본 연구는 이러한 한계를 보완하고, 핵심역량이 동일한 경로로 성장하지 않으며 일부 역량은 지역의 기회 구조 수준에 따라 성장 양상이 달라질 수 있음을 실증적으로 제시하였다. 이는 모든 역량을 일률적으로 강화하려는 접근이 아닌, 역량 유형별 성장 맥락을 구분하고 지역 기회 구조의 영향까지 폭넓게 고려하는 핵심역량 교육 체제의 재구조화가 필요함을 시사한다. 다만, 이를 위해서는 핵심역량의 진단 또한 학생 개인 수준과 지역의 특성 및 기회 구조를 함께 다루는 방향으로 확장될 필요가 있다.

본 연구는 주로 개인·학교 요인으로 핵심역량을 살펴 보았던 기존 연구의 관점을 확장하여 지역의 기회 구조라는 공간적 맥락을 핵심역량 논의에 포섭하였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특히 지역사회가 제공하는 경제적·사회적·환경적 기회 구조가 학생들의 핵심역량 성장에 미치는 공간적 영향을 실증적으로 확인하여 지역 간 교육 격차를 공간 정의(spatial justice) 관점에서 재조명할 수 있는 단초를 제시하였다.

그럼에도 본 연구는 시 또는 군 단위 지역이 통합된 지역 구분을 활용하여 일부 지역의 고유한 특성이 부분적으로 희석될 가능성이 존재하고(Hox, 2010), 통계자료 기반 기회 구조 지표가 학습자의 실제 경험 전반을 반영하지 못할 수 있다는 한계를 가진다. 또한, 핵심역량 성장에 영향을 미치는 개인·학교·지역 수준 변수의 상호작용을 분석하지 못하였다. 이러한 한계를 보완하는 후속 연구를 통해 지역적·공간적 변수를 포괄적으로 고려하는 핵심역량 교육 체제가 구축되길 기대한다.

註

- 1) 경상남도교육청은 교육 정책과 학교 교육과정의 개선을 위해 경남 초·중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들의

역량 발달, 전인적 성장 등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을 중장기적으로 수집하는 중단연구를 2021년(1차년도)부터 수행하고 있고, 중학생은 2022년(2차년도)부터 중단연구 대상자에 포함되었다(경상남도교육청, 2024, 「제4차 년도(2024) 경남교육중단연구(GELS) 사용자 매뉴얼」).

- 2) 기본적으로 성취가 개인의 내적 요인(노력, 성향 등)에 따른 결과인지 공간(지역)의 영향인지를 판별하고, 공간의 독립적·인과적 영향을 양적으로 검증하는 데 어려움이 존재한다(Glaster and Sharkey, 2017; 이승욱 등, 2023). 따라서 Galster(2008)는 개인의 성취가 자신이 거주하는 지역(근린)의 사회적·제도적·물리적 특성에 의해 영향을 받는다는 근린효과(neighbourhood effects) 개념을 도입하였고, 이것이 작동하는 메커니즘-지역 주민 간 상호작용을 통한 사회화, 지역 내 공공·민간 제도의 제공 수준과 접근성, 지역 시장 구조의 특성, 물리적·환경적 조건-을 구조화하였다. 이를 통해 공간(지역)이 개인의 삶의 궤적에 직접적·구조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요인임을 밝히고, 지역별 기회 구조의 질적 차이를 양적 지표로 분석하려는 기회의 지리에 이론적 타당성과 방법론적 방향성을 제시하였다.
- 3) 2015 개정 교육과정은 교육과정 전체를 아우르는 6대 핵심역량(총론)에 더해 교과별 핵심역량(각론)도 제시하고 있다. 교과별 핵심역량은 교과 고유의 구조나 논리체계를 고려하되, 총론의 방향성(6대 핵심역량 함양)을 반영하는 조정 과정을 거쳐 선정되었다(이광우 등, 2015). 6대 핵심역량은 2015 개정 교육과정의 철학을 반영하며, 각 교과가 따라야 할 공통 기준이자 학생들이 학교 교육의 전 과정을 통해 함양해야 할 가장 필수적인 역량이다. 추가적으로, 2025년 처음으로 시행된 2022 개정 교육과정 또한 역량의 함양을 강조하며 2015 개정 교육과정의 핵심역량을 체계적으로 개선하여 다룬다. 다만, 본 연구에서 분석하는 중학생의 핵심역량이 2015 개정 교육과정의 것에 중점을 두므로, 2022 개정 교육과정의 역량에 대한 언급은 생략하였다.
- 4) 맥락 고정 효과는 다층모형에서 상위 수준(Level 2 이상의 집단)의 집단 변수가 하위 수준(Level 1)의 개인 종속 변수에 미치는 체계적·평균적 영향을 추정하는 고정 효과를 의미한다. 즉 개인이 속한 집단의 구조적·환경적 특성이 개인의 결과 변수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를 나타내는 2수준 계수로, 개인 수준의 효과와는 구분되는 집단 맥락의 영향력을 설명한다(Raudenbush and Bryk, 2002; Snijders and Bosker, 2012).

- 5) ICC는 총분산(지역 간 분산과 지역 내 분산 성분의 합)에 대한 지역 간 분산이 차지하는 비율을 나타내는 지표이다(Lorah, 2018). 본 연구에서 지역 간 분산은 경남 하위 8개 지역별 평균 핵심역량 수준이 전체 평균에서 벗어난 정도에 대한 분산으로 지역 수준의 요인에서 비롯된 변동의 크기를 의미한다. 그리고 지역 내 분산은 동일한 지역에 속한 학생 개인들 간의 차이에 대한 분산이며, 개인 수준의 요인에 따라 발생하는 변동의 크기를 뜻한다. ICC 값이 0에 가까울수록 핵심역량의 차이가 개인 수준의 요인에 의한 것이며, 1에 근접할수록 지역 수준의 요인에서 비롯되었음을 의미한다(Snijders and Bosker, 2012; Hox *et al.*, 2017).
- 6) DEFF는 연구 자료를 지역과 같은 집단 단위로 설정했을 때, 단순 무작위 표집을 가정한 경우보다 분산이 얼마나 증가했는지를 나타내는 비율 지표로,  $1 + ICC \times (N-1)$ 으로 계산하며 여기서 N은 집단(지역)별 평균 사례 수를 의미한다. DEFF 값이 1을 초과한다는 것은 집단 내 관측치(개인) 간 유사성이 커 독립성 가정이 성립하지 않음을 의미하며, 단일 수준의 분석을 사용할 경우, 표준 오차가 과소 추정될 가능성이 있으므로 다층 성장 모형의 적용이 통계적 타당성을 얻게 된다(Raudenbush and Bryk, 2002; Snijders and Bosker, 2012).

## 참고문헌

- 강영혜·양승실·유성상·박현정, 2011, 「민주 시민교육 활성화 방안 연구(연구보고 RR2011-09)」, 서울: 한국교육개발원.
- 고호석, 2013, “지역축제의 인지된 효과가 지역사회 애착도 및 협력의사에 미치는 영향” 지역산업연구, 35(2), 265-284.
- 교육부, 2015, 「초·중등학교 교육과정 총론(교육부 고시 제2015-74호 별책 1)」.
- 구경호, 2024, “중단자료를 활용한 초등학교 학생의 핵심역량 성장궤적 및 경상남도교육청의 혁신교육 정책 효과

- 성 분석,” *교육종합연구*, 22(1), 399-425.
- 김지현, 2012, “초등학생의 학교생활적응과 부모의 사회 경제적 지위, 부모애착, 진로성숙도의 인과적 관계,” *한국청소년연구*, 23(3), 5-26.
- 김경근, 2005, “한국사회 교육격차의 실태 및 결정요인,” *교육사회학연구*, 15(3), 1-27.
- 김경애·선혜연·조은주·임중현·이상은·안해정·한은정, 2016, 「중학생의 성장과정 분석: 학교, 가정, 지역사회를 중심으로 I (연구보고 RR2016-10)」, 서울: 한국교육개발원.
- 김기현·장영근·조광수·박현준, 2010, 「청소년 핵심역량 개발 및 추진방안 연구 Ⅲ: 총괄보고서(연구보고 10-R17)」, 서울: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 김남희·이정운, 2013, “지각된 부모자녀관계가 중학생의 학습몰입에 미치는 영향: 자기결정성 동기의 매개효과,” *청소년상담연구*, 21, 211-232.
- 김우리·박영희·김정섭, 2014, “중학생의 기본심리욕구, 자아정체감, 진로정체감 간의 구조적 관계,” *교육심리연구*, 28, 333-352.
- 김위정, 2012, “가정환경과 학교경험이 청소년의 시민성 형성에 미치는 영향: 사회참여의식과 공동체 의식을 중심으로,” *한국청소년연구*, 23(1), 201-222.
- 김현미, 2013, “21세기 핵심역량과 지리 교육과정 탐색,” *한국지리환경교육학회지*, 21(3), 1-16.
- 남궁지영·김양분·박경호·정동철·박현정, 2015, 「KEDI 학생역량 조사 연구: 조사 도구 개발 및 타당화(연구보고 RR 2015-31)」, 서울: 한국교육개발원.
- 남인숙, 2011, “한국의 사회·경제적 양극화와 교육 격차,” *현상과 인식*, 35(3), 15-38.
- 문은식, 2013, “중학생이 지각한 교실의 사회적 환경, 동기적 신념, 참여 및 학업성취도의 구조적 관계,” *아동교육*, 22, 25-43.
- 박성희·최은영, 2016, “부모의 양육태도가 청소년의 자아 존중감, 학습동기 및 삶의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 소득계층 차이를 중심으로,” *한국학교사회복지학회*, 35, 53-83.
- 소경희, 2007, “학교교육의 맥락에서 본 ‘역량(competency)’의 의미와 교육과정적 함의,” *교육과정연구*, 25(3), 1-21.
- 신우진·서환주·김준일, 2015, “2000년 이후 한국의 기회 불평등 추이,” *국제경제연구*, 21(4), 83-108.
- 이광우·정영근·이근호·백경선·온정덕·소경희·양일모·김경숙·이미숙·김창원·박병기·모경환·구정화·진재관·박경미·곽영순·진의남·서지영·이경연·박소영·임찬빈, 2015, 「2015 개정 교과 교육과정 시안 개발 연구 I -국가교육과정 각론 조정 연구(연구보고 CRC 2015-9)」, 서울: 한국교육과정평가원.
- 이근호·곽영순·이승미·최정순, 2012, 「미래 사회 대비 핵심역량 함양을 위한 국가 교육과정 구상(연구보고 RRC 2012-4)」, 서울: 한국교육과정평가원.
- 이근호·이광우·박지민·박민정, 2013, 「핵심역량 중심의 교육과정 재구조화 방안 연구(연구보고 CRC 2013-17)」, 서울: 한국교육과정평가원.
- 이승욱·박철웅·강승범, 2023, “도시불평등과 기회의 지리,” *공간과 사회*, 33(3), 285-320.
- 이연재, 2024, “청소년기 도시환경의 기회구조가 성인이행기 역량에 미치는 중단적 영향,” *서울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이은교, 2022, “다변량 잠재성장모형을 활용한 청소년기 성장환경과 진로결정자기효능감 및 진로성숙, 청년기 직업만족도 간의 구조적 관계에 대한 중단분석,” *한양대학교 박사학위논문*.
- 이종연·김창해, 1997, “도시와 농촌지역 중학생들의 수학 교육 격차에 관한 비교 분석: 부산·경남 지역의 학교를 중심으로,” *교육이론과실천*, 7(1), 179-204.
- 이중섭·박해석·김성훈·박선희·정현숙, 2006, 「청소년 발달권 현황과 지표개발(연구보고 06-R05-3)」, 서울: 한국청소년개발원.
- 이호준·김지연, 2025, “국가 간 사교육 현황 및 학업성취도와의 관계 비교 분석: OECD 국가를 중심으로,” *교육행정학연구*, 43(1), 51-77.
- 임선희·김경희, 2006, “대전의 동서지역 교육격차실태와 해소방안,” *교육사회학연구*, 16(3), 189-210.
- 임정훈·이진석, 2003, “초등학교에서 ICT 활용수업이 학습 및 정보활용능력에 미치는 효과,” *초등교육연구*, 16(2), 415-441.
- 장동익·김찬성·홍성표, 2018, “대한민국의 교통접근성 평가 연구,” *교통기술과정*, 15(4), 65-74.
- 최은주·박남진, 2005, “대학생의 정보활용능력에 미치는 영향 요인에 관한 연구 -정규 교과목 정보이용교육 수강생을 중심으로-,” *정보관리학회지*, 22(4), 153-172.
- 추경모, 2012, “교육의 지역적 격차에 관한 연구: 중학교

- 교육현황을 사례로,” 한국지리학회지, 1(1), 33-52.
- 하봉운, 2005, “지방분권시대 지역간 교육격차 실태 및 개선방안 연구: 서울시를 중심으로,” 교육행정학연구, 23(3), 167-193.
- 황석현, 2025, “중학생의 핵심역량에 미치는 요인 분석: 경상남도지역 중심으로,” 학습자중심교과교육연구, 25(6), 649-680.
- 황여정·김경근, 2014, “중학생의 자아탄력성 영향요인 분석: 사회심리학적 접근,” 교육사회학연구, 24, 205-229.
- Bernard, J., Steinführer, A., Klärner, A., and Keim-Klärner, S., 2023, Regional opportunity structures: A research agenda to link spatial and social inequalities in rural areas, *Progress in Human Geography*, 47(1), 103-123.
- Boyatzis, R.E., 1982, *The Competent Manager: A Model for Effective Performance*, New York: John Wiley & Sons.
- Briggs, X.de S., 2005, *The Geography of Opportunity: Race and Housing Choice in Metropolitan America*, Washington, D.C.: Brookings Institution Press.
- Bronfenbrenner, U., 1979, *The Ecology of Human Development: Experiments by Nature and Design*, Cambridge: Harvard University Press.
- Care, E., Kim, H., Vista, A., and Anderson, K., 2018, *Education System Alignment for 21st Century Skills: Focus on Assessment*, Washington, DC: Center for Universal Education at The Brookings Institution.
- Chyn, E., 2018, Moved to opportunity: The long-run effects of public housing demolition on children, *American Economic Review*, 108(10), 3028-3056.
- Galster, G.C., 2008, Quantifying the effect of neighbourhood on individuals: Challenges, alternative approaches, and promising directions, *Journal of Contextual Economics-Schmollers Jahrbuch*, 128(1), 7-48.
- Galster, G.C., 2012, The mechanism(s) of neighbourhood effects: Theory, evidence, and policy implications, in van Ham, M., Manley, D., Simpson, L., Bailey, N., and Maclennan, D., eds., *Neighbourhood Effects Research: New Perspectives*, Dordrecht: Springer, 23-56.
- Galster, G.C. and Killen, S.P., 1995, The geography of metropolitan opportunity: A reconnaissance and conceptual framework, *Housing Policy Debate*, 6(1), 7-43.
- Galster, G.C. and Sharkey, P., 2017, Spatial foundations of inequality: A conceptual model and empirical overview, *RSF: The Russell Sage Foundation Journal of the Social Sciences*, 3(2), 1-33.
- Heck, R.H., Thomas, S.L., and Tabata, L.N., 2012, *Multilevel Modeling of Categorical Outcomes Using IBM SPSS*, New York: Routledge.
- Hox, J., Moerbeek, M., and van de Schoot, R., 2017, *Multilevel Analysis: Techniques and Applications (3rd ed.)*, New York: Routledge.
- Jaakkola, T., Wang, J., Yli-Piipari, S., and Liukkonen, J., 2015, A multilevel latent growth modelling of the longitudinal changes in motivation regulations in physical education, *Journal of Sports Science & Medicine*, 14(1), 163-171.
- Lefebvre, H., 1991, *The Production of Space*, Oxford: Blackwell(양영란 역, 2011, 「공간의 생산」, 서울: 에코리브르).
- Lens, 2017, Measuring the geography of opportunity, *Progress in Human Geography*, 41(1), 3-25.
- Little, R.J.A. and Rubin, D.B., 2002, *Statistical Analysis with Missing Data (2nd ed.)*, New York: Wiley Interscience.
- Lorah, J.A., 2018, Effect size measures for multilevel models: Definition, interpretation, and TIMSS example, *Large-scale Assessments in Education*, 6(8), 1-11.
- MacKinnon, C.A., 2020, Equality, *Daedalus*, 149(1), 213-221.
- Maas, C.J.M. and Hox, J.J., 2005, Sufficient sample sizes for multilevel modeling, *Methodology: European Journal of Research Methods for the Behavioral and Social Sciences*, 1, 85-91.
- Muthén, B.O. and Satorra, A., 1995, Complex sample data in structural equation modeling, *Sociological Methodology*, 25, 267-316.
- OECD, 2018, *Equity in Education: Breaking Down Barriers to Social Mobility*, Paris: OECD Press.
- OECD, 2024a, *What Does Child Empowerment Mean Today?: Implications for Education and Well-being*, *Educational Research and Innovation*, Paris: OECD Press.
- OECD, 2024b, *How's Life? 2024: Well-Being and Resilience*

- in Times of Crisis*, Paris: OECD Press.
- Owens, A., 2018, Income segregation between school districts and inequality in students' achievement, *Sociology of Education*, 91(1), 1-27.
- Raudenbush, S.W. and Bryk, A.S., 2002, *Hierarchical Linear Models: Applications and Data Analysis Methods (2nd ed.)*, Thousand Oaks: Sage.
- Reardon, S.F., 2011, The widening academic achievement gap between the rich and the poor: New evidence and possible explanations, in Murnane, R.J., and Duncan, G.J., eds., *Whither Opportunity? Rising Inequality, Schools, and Children's Life Chances*, New York: Russell Sage Foundation Press, 91-116.
- Rychen, D.S. and Salganik, L.H., 2003, *Key Competencies for a Successful Life and a Self-Functioning Society*, Ashland: Hogrefe & Huber Publishers.
- Snijders, T.A.B. and Bosker, R.J., 2012, *Multilevel Analysis: An Introduction to Basic and Advanced Multilevel Modeling*, Thousand Oaks: Sage.
- Sommet, N. and Morselli, D., 2021, Keep calm and learn multilevel linear modeling: A three-step procedure using SPSS, Stata, R, and Mplus, *International Review of Social Psychology*, 34(1): 24, 1-19.
- Spencer, L. and Spencer, S., 1993, *Competence at Work: Models for Superior Performance*, New York: John Wiley & Sons.
- West, S.G., Finch, J.F., and Curran, P.J., 1995, Structural equation models with nonnormal variables: Problems and remedies, *Sociological Methods & Research*, 24(1), 167-213.
- Zhang, X. and Qian, W., 2024, The effect of social support on academic performance among adolescents: The chain mediating roles of self-efficacy and learning engagement, *PLOS ONE*, 19(12), 1-17.
- 교신 : 손민석, 50980, 경상남도 김해시 월산로 77, 장유 고등학교(이메일: syc1616@jangyu-h.gne.go.kr)
- Correspondence: Minsuk Son, 50980, 77 Wolsan-ro, Gimhae-si, Gyeongsangnam-do, South Korea, Jangyu High School (Email: syc1616@jangyu-h.gne.go.kr)

투고접수일: 2025년 11월 20일

심사완료일: 2025년 12월 7일

게재확정일: 2025년 12월 11일

# 국내 하천에 적용된 자연기반해법의 사례와 유형별 특징\*

고다해\*\* · 최광희\*\*\* · 신영규\*\*\*\*

## Cases of Nature-based Solutions Applied to Rivers in Korea and their Typological Characteristics\*

Da Hae Go\*\* · Kwang Hee Choi\*\*\* · Yeongkyu Shin\*\*\*\*

**요약 :** 산업화와 도시화에 따른 그레이 인프라 기반의 하천 관리는 단기적으로는 효과적이지만, 하천 고유의 생태·지형적 기능을 약화시키는 한계를 드러내고 있다. 기후위기 시대에서 자연기반해법(Nature-based Solutions, NbS)은 하천 관리의 대안으로 대두되고 있으나, 실제 적용 사례와 그 효과에 대한 연구는 부족하다. 본 연구는 국내 하천에 적용된 하천 정비 현황을 조사하고, 자연기반해법 사례를 유형화하여 그 특징을 분석하였다. 적용된 자연기반해법은 횡단구조물 제거, 저류지 조성, 습지 조성, 제방 이설, 하도 내 식생 제거, 하도 습지 복원 및 조성, 둔치 제거 및 준설, 자연 제방 보전 등으로, 총 27건의 사례가 확인되었다. 하천 공간 단위별로 유형을 구분하여 분석한 결과, 하천 내부에 대한 관리는 비교적 활발하게 이루어졌으나, 하천 외부나 제방에 대한 개선은 상대적으로 부진한 것으로 나타났다. 제방 및 제내지의 변경은 이해관계가 복잡하고 비용이 많이 소요되지만, 하천의 회복력을 증진시킨다는 점에서 보다 긍정적으로 평가된다. 향후 지속가능한 하천 관리를 위해서는 자연기반해법의 효과를 실증적으로 검증할 필요가 있으며, 장기적인 관점에서 회복탄력성을 높이는 정책 마련이 요구된다.

**주요어 :** 하천 관리, 회복탄력성, 자연기반해법, 지속가능성, 그린인프라

**Abstract :** River management based on gray infrastructure under industrialization and urbanization has been effective in the short term but has revealed clear limitations by weakening the intrinsic ecological and geomorphological functions of rivers. In the era of climate crisis, nature-based solutions (NbS) are emerging as an alternative approach to river management; however, research on their real-world applications and effectiveness remains limited. This study investigates the current status of river management practices in South Korea, classifies the cases that correspond to NbS, and analyzes their characteristics. The identified NbS include removal of cross-river structures, construction of detention reservoirs, wetland creation, levee setback, removal of in-channel vegetation, restoration and creation of in-channel wetlands, removal and dredging of floodplains, and maintenance of natural levees, totaling 27 cases. An analysis by river space units shows that management interventions within the river corridor have been relatively active, whereas improvements outside the channel or along levees have been comparatively limited. Although modifications to levees and the floodplains involve complex stakeholder interests and high costs, they are evaluated more positively because they can enhance river resilience. For sustainable river management in the future, it is necessary to empirically verify the effectiveness of NbS and develop policies that strengthen resilience over the long term.

**Key Words :** River management, Resilience, Nature-based Solutions, Sustainability, Green Infra

\*본 논문은 기획재정부의 재원으로 국립환경과학원의 “자연기반해법을 활용한 자연재해 대응방안 연구(I)”(NIER-2023-03-03-001)의 지원을 받아 수행하였음.

\*\*가톨릭관동대학교 지속가능환경학과, 박사과정생(Ph.D student, Department of Sustainable Environment, Catholic Kwandong University, ekgo3232@cku.ac.kr)

\*\*\*가톨릭관동대학교 지리교육과, 부교수(Associate Professor, Department of Geography Education, Catholic Kwandong University, geoist@cku.ac.kr)

\*\*\*\*국립환경과학원 연구관(Senior Researcher, National Institute of Environment Research, shingeo@korea.kr)

## I. 서론

하천은 산과 바다를 연결하는 자연의 순환 통로로서, 인류와 자연을 포함한 다양한 생명체에게 식수원, 이동 경로, 그리고 삶의 터전을 제공한다(Bridges *et al.*, 2021). 그러나 산업화와 도시화가 본격화되면서 인간의 자연 개입이 심화되었고, 그에 따라 하천의 지속가능성이 점차 저하되었다(Hooke, 2000). 특히 홍수 방지와 수자원 확보를 위한 대응 수단으로 인공 제방, 댐, 보 등 회색 인프라(Gray Infrastructure)가 일반적으로 활용되면서 하천은 고경화되었으며, 하천의 역동성은 상실되었다.

기존의 전통적인 하천 정비 방식은 단계적으로 치수와 저수 기능을 수행하고 물리적 제어 능력을 향상시켰으나, 하천의 자생 능력을 제한하여 자연 순환을 저해하는 결과를 초래했다. 예를 들어, 상류 지역에 설치된 대형 댐은 퇴적물의 하류 이동을 차단하여 해안 침식을 초래하고(Ishikawa *et al.*, 2013), 식생 피복 변화는 하상의 침식 및 퇴적 작용을 가속화하는 등 지형학적 변화를 유발한다(최성욱 등, 2004). 또한 수문학적 특성, 토지 이용, 수질, 유수량 등의 급격한 변화를 일으킨다(이찬주 등, 2013; Ourloglou *et al.*, 2020).

최근 기후변화로 인한 강수 패턴 변화와 급속한 도시화로 인해 전 세계 홍수 위험은 2050년까지 현재 대비 3배 이상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WMO, 2024). 국제사회는 이러한 문제에 대응하여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정책 프레임워크로 지속가능발전목표(Sustainable Development Goals, SDGs)를 수립하였다. 2015년 유엔 총회에서 채택된 SDGs는 2030년까지 달성해야 할 17개 목표와 169개 세부 목표로 구성되어 있으며, 환경·사회·경제의 균형 있는 발전을 위한 통합 전략을 제시한다. 이 중 ‘깨끗한 물과 위생(SDG 6)’, ‘기후변화 대응(SDG 13)’, ‘육상 생태계 보호(SDG 15)’ 등은 생태계 보전 및 자원 관리의 중요성을 강조한다. 또한 인간 활동으로 인한 환경 영향을 최소화하고 생태계의 회복력과 지속가능성을 확보하는 정책 전환을 요구한다(European Commission, 2015). 이러한 상황에서 하천과 같은 자연 생태계는 단계적 재해 대응보다는 장기적 회복력과 순환성 확보가 중요하며, 이는 단순한 물리적 정비를 넘어 생태계 기반의 통합 관리 방안이 필요함을 의미한다.

자연기반해법(Nature-based Solutions, Nbs)은 하천의 자연적 흐름을 존중하고 범람원 등 하천 고유의 공간을

복원함으로써(Binder, 2008; Rijke *et al.*, 2012), 자연의 자율적 조절 기능을 회복하는 데 중점을 둔다(Eggermont *et al.*, 2015; 우효섭·한승완, 2020; 우효섭, 2023). 기존 하천 공법이 인공 구조물을 기반으로 한 일시적 홍수 방어에 초점을 맞췄다면, 자연기반해법은 생태계 서비스의 유지와 복원을 통해 장기적이고 복합적인 편익을 제공한다. 따라서 하천 관리에서의 자연기반해법은 단순한 인프라 대체가 아니라 자연과 인간의 지속가능한 공존을 가능하게 하는 전략적 전환점으로 평가되며, 그 중요성이 지속적으로 부각되고 있다(Dunlop *et al.*, 2024; Zhou *et al.*, 2024).

국내 하천의 지속가능한 관리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인공 구조물 중심의 전통적 하천 정비 방식에서 벗어나 생태적 건강성과 자연 회복탄력성을 담보하는 자연기반해법의 도입이 요구된다. 국내에서는 그간 ‘자연형 하천 기술’을 비롯하여 친환경을 표방한 다양한 방식의 복원 혹은 정비사업이 수행되어 왔다. 하지만 이러한 복원공사를 모두 자연기반해법으로 보기는 어렵다. 또한, 이러한 사업들이 언제, 어떠한 방식으로, 혹은 어느 곳에 적용되었는지에 관해 일목요연하게 정리된 자료는 찾아보기 어렵다.

본 연구는 지속가능한 하천관리를 위하여, 국내에 적용된 자연기반해법의 사례와 유형별 특성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하여, 최근 수십 년 동안 우리나라에서 수행된 주요 하천 복원 및 정비 사례를 조사하고 자연기반해법의 관점에서 그 내용을 분석하였다. 먼저, 문헌 및 신문 기사를 참조하여, 한강, 낙동강, 금강, 영산강, 섬진강 등 대권역 하천을 대상으로 수행된 주요 하천 정비 사업들을 조사하였다. 이후, 위성영상 및 항공사진을 통해 실제 적용 여부를 파악하였으며, 일부 사례는 현장조사를 통해 확인하였다. 이들 사례에 대해 네덜란드의 ‘Room for the River’를 준용하여 유형화 하였다(Rijke *et al.*, 2012; Van Alphen, 2020). 마지막으로, 하천의 공간 단위에 따라 각 하천 관리기법을 분류하고 자연기반해법의 관점에서 그 특징을 분석하였다.

## II. 하천관리를 위한 자연기반해법

### 1. 자연기반해법의 개념

자연기반해법은 자연을 활용해 우리 사회가 당면한

사회·환경적 문제를 해결하려는 접근론이다(European Commission, 2015; Cohen-Shacham, 2016; 우효섭·한승완, 2020; IPCC, 2023; 우효섭, 2023). 이 개념은 자연에 맞서기보다 자연과 협력함으로써 회복력 있고 자원 효율적인 방식으로 자연 시스템의 관리를 위한 해결책을 찾는 과정에서 등장했다. 자연기반해법은 단순히 자연을 활용하는 수단적 개념을 넘어, 자연과 인간 사회의 상호작용을 재정의하는 패러다임 전환의 틀로 여겨진다. 이를 통해 식량 안보, 기후변화 대응, 수자원 확보, 인간 건강 증진, 재난 위험 감소, 지속가능한 사회·경제 개발 등 광범위한 사회문제를 해결하고자 한다(Cohen-Shacham et al., 2016; IUCN, 2016; Seddon et al., 2020).

자연기반해법은 회복력(resilience)과 적응(adaptation)의 개념과도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다. 이는 기후변화, 도시화, 생물다양성 손실 등 예측 불가능한 환경 변화에 대해 자연 시스템의 내재된 자기조절 및 복원 능력을 통해 탄력적으로 대응하고, 장기적 관점에서 사회 전체의 적응 능력을 향상시키는 데 기여한다(IPCC, 2023). 특히 자연기반해법은 생태계에 가해지는 부담을 최소화하면서도 사회경제적 이익을 동시에 창출할 수 있는 자연 기반의 지속가능한 해법으로 전 세계적으로 정책적 주목을 받고 있다.

국내에서도 자연기반해법 도입을 위한 시도가 제도·정책·연구 차원에서 점차 확산되고 있다. 제도 및 정책적 차원에서는 복원 중심 하천관리를 위한 정책적 기반이 제시되었고(국토교통부, 2019), 생물 서식처 단절 문제에 대한 조사·평가 방법이 마련되었다(국립환경과학원, 2020). 자연기반해법은 기후위기 대응, 하천 및 해안 정비, 자연재해 위험 저감, 도시 관리 등 다양한 분야에서 적용을 모색하고 있다(우효섭, 2023; 한국수자원공사, 2023; 김다슬 등, 2024; 김선혁 등, 2025). 또한 기후변화 및 지속가능발전 교육에서도 자연기반해법의 개념과 맥락이 중요하게 다루어지고 있다(함경림, 2024).

## 2. 하천관리를 위한 자연기반해법의 도입

자연기반해법에 기반한 하천 관리 개념은 유럽과 미국을 중심으로 다양한 지역에서 이미 적용되고 있으며, 그 효과도 실증적으로 확인되고 있다. 특히 국외에서는 국가 차원의 정책으로 추진하면서 하천의 자연성을 회복하고 생태계의 복원력과 치수 기능을 동시에 강화하려는 노

력이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다(Boelee et al., 2017; Valero et al., 2021; WWF, 2022).

유럽의 경우 독일, 네덜란드, 스코틀랜드의 사례가 대표적이다. 독일의 이자르 강 복원계획(Isar Plan, 2000~2007)은 획일적인 하천 정비로 인한 수질 및 수온 변화 문제를 해결하고 하천의 고유한 물리적 특성을 회복하기 위해 홍수터 역개간화, 제방 고도 조정 및 후퇴 등의 방안을 적용한 생태적 통합 복원사업으로 추진되었다(Binder, 2008). 이러한 복원사업으로 과거의 하천 경관이 모두 회복된 것은 아니지만, 홍수 위험이 줄고 친수공간을 찾는 방문자가 늘어났다(김혜주, 2010). 네덜란드 사례도 이와 비슷하다. 강을 위한 공간(Room for the River, 2006~2015)은 1995년 대홍수 이후 기존 인공적 제방 중심 관리 방식의 한계를 인식하고 “강에게 공간을 되돌려준다”는 철학 아래 홍수위 저감과 함께 수변 경관 및 생태계를 회복하고자 하였다(Rijke et al., 2012; Van Alphen, 2020). 한편 스코틀랜드의 애들스턴 유역 프로젝트(Eddleston Water Catchment Restoration Project, 2009~2016)는 저류지와 습지를 조성하고 하도를 만곡화하여 자연형 하천 구조로 복원함으로써 홍수 위험을 줄이고 생물다양성을 높인 사례로 평가된다(Davies, 2023).

자연기반해법의 적용은 유럽뿐 아니라 전 세계로 확산되고 있다. 미국의 엘와강 복원 프로젝트(Elwha River Restoration Project, 2011~2014)는 댐 철거를 통해 연어 산란 서식처를 회복하고 수생 생태계를 복원한 대표적 사례로 평가된다(Duda et al., 2008; Pess et al., 2008). 댐 철거 이후, 연어의 개체 수가 2~4배 증가 하였다(Duda et al., 2021). 필리핀의 파시그 강 복원(Protecting and Investing in Natural Capital in Asia and the Pacific, 2019~2020)은 주요 하천 유역을 대상으로 범람원 확장, 제방 제거 및 후퇴 등의 자연기반해법을 적용하여 홍수 대응과 생태 복원을 동시에 달성하고 있으며, 이는 아시아 내 대표적 사례로 꼽힌다(ADB, 2020).

이처럼 세계 각국은 인공 구조물 중심의 하천 관리에서 벗어나 하천의 자연성과 생태 기능을 중시하는 자연기반해법을 통해 지속가능한 하천 복원을 실현해 가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네덜란드의「Room for the River」프로젝트를 조금 더 소개하고자 한다. 다른 연구들에 비해 유형별 분류체계가 명확하고 유형의 갯수와 적용된 사례가 많아서, 우리나라 하천관리 사례를 일차적으로 분류하는데 적합하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 3. 「Room for the River」의 하천관리 유형

네덜란드 수자원관리 기관인 라이크스워터슈타트(Rijkswaterstaat)에서 수행한 「Room for the River」는 실제 하천 현장에 적용 가능한 구체적 관리 사례를 보여준 대규모 프로젝트로, 여기에서 제안된 방안이 이미 필리핀 하천에 적용되었고(ADB, 2020) 국내에도 도입될 예정이다(지은 등, 2022). 이 프로젝트는 라인강, 뫼즈강, 발강 등 39개 지점을 대상으로 시행되었으며, 하천 기능의 회복, 홍수 저감, 생태적 연결성 확보를 위한 아홉 가지 유형의 관리 방안을 제시하였다. 이들 유형은 제방 옮기기, 우회수로 조성, 그로인 낮추기, 횡단구조물 제거, 역개간화, 제외지 범람원 준설, 저류지 조성, 하상 굴착, 제방 보강 등이다(그림 1). 본 연구에서는 이 프로젝트에서 제시한 하천 관리 유형을 보다 구체적으로 분석하고자 한다.

제방 옮기기는 제방을 내륙 쪽으로 이동시켜 하천의 폭을 넓히는 방법으로, 강은 더 넓은 공간을 확보하고 높은 수위를 수용할 수 있는 여유 공간도 늘어난다. 우회수로 조성은 만수위에 도달했을 때 물의 일부를 다른 경로로 흐르게 하는 것으로, 우리나라에서는 구하도 복원과 유사한 관리 방안으로 볼 수 있다. 그로인 낮추기와 횡단구조물 제거는 물의 흐름을 방해하는 장애물을 해소하는 방

안이다. 역개간화는 이전에 개간했던 지역을 원래 상태로 되돌려 물의 투수율을 증가시키는 것을 의미한다. 범람원 준설과 하상 준설은 만수위 도달 시점을 늦추는 역할을 한다. 제방 보강은 해수면이 높은 네덜란드의 특수성을 반영한 것으로, 강 주변에 충분한 공간이 없어 강폭을 넓히기 어려운 경우에 적용한다. 이러한 방식들은 강의 여유 공간을 확보함으로써 홍수 피해를 줄이는 기능을 한다. 또한 일부 방법은 하천의 본래 모습 회복에도 기여한다.

이들 방안은 주로 네덜란드의 하천 특성을 바탕으로 개발되었기에, 국내에 적용할 때에는 적절한 수정이 필요하다. 국내의 경우, 홍수 시 하천 유속이 매우 빨라 그로인과 같은 구조물은 부작용이 크게 나타난다. 우리나라는 제방을 높게 쌓거나 보를 막는 치수 방식을 더 선호하여, 그로인이 설치된 하천은 알려진 것이 없다. 따라서 ‘그로인 낮추기’ 등의 방안은 국내 하천관리 현실에는 부적합하다. 한편, ‘우회수로 조성’의 경우, 하도를 새로 만드는 경우도 있으나, 국내에서는 하도를 직강화하는 과정에서 유기된 ‘구하도’를 복원하는 방식이 더 자주 사용된다. 따라서, 국내 하천에 맞는 새로운 분류체계가 필요 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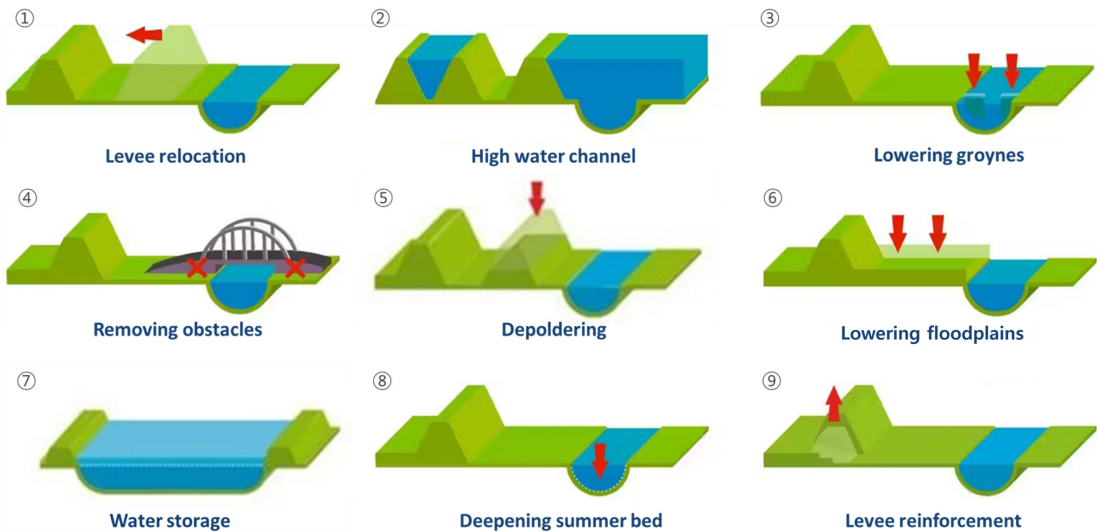


그림 1. 「Room for the River」 프로젝트에 제시된 하천관리 유형

\* 해당 연구자료는 Rijkswaterstaat의 자료를 재구성함(출처 : <https://www.rijkswaterstaat.nl>).

### III. 국내 하천의 자연기반해법 현황 및 유형화

#### 1. 사례지 현황

본 연구에서는 한국건설기술연구원(2008; 2016), 국토교통부(2019), 경기도(2022), 대전지방국토관리청(2011), 부산지방국토관리청(2013), 서울지방국토관리청(2014),

원주지방국토관리청(2022), 금강유역환경청(2023)에서 발간한 보고서와, 국가수자원관리종합정보시스템, 국가환경산업기술정보시스템, 대전광역시청, 평택시청 등의 웹사이트를 통해 하천 복원 사례지를 탐색하였다. 검토 결과, 자연기반해법을 넓은 의미<sup>1)</sup>로 볼 때 적어도 30개소 이상에서 이 해법이 적용된 것으로 파악되었다(표 1). 하천별로는 한강 13개소, 낙동강 4개소, 금강 7개소, 영산강 5개소, 섬진강 1개소로 한강에서 가장 많은 적용 사례가

표 1. 국내의 주요 하천복원사업

유역	하천명	적용 시기(년)	방법	내용
한강	양재천	2000	역개간화	인공피복을 자연피복으로 전환
	곡릉천	2006	횡단구조물 제거	곡릉 2보 철거
	한탄강	2007	횡단구조물 제거	고탄보 철거
	황구지천	2009	습지 조성(구하도 복원)	제기 지구 구하도 복원
	황구지천	2009	습지 조성(구하도 복원)	송산 지구 구하도 복원
	황구지천	2011	습지 조성(구하도 복원)	귀래 지구 구하도 복원
	평창강	2013	저류지 조성(구하도 복원)	방절리 구하도 복원
	청미천	2016	제방 이설	노탑지구 구하도 복원
	탄천	2018	횡단구조물 제거	미금보 철거
	주천천	2021	하상 준설	하상 준설
	탄천	2022	횡단구조물 제거	정자제1낙차공(백공보) 철거
	탄천	2024	횡단구조물 제거	수내제1보(백현보)
	안성천	2025*	습지 복원 및 조성	하도 내부 습지 복원
금강	금강	2012	둔치 준설	제외지 범람원 준설
	미호강	2021	횡단구조물 제거	삼성 3보 철거
	미호강	2021	횡단구조물 제거	삼성 5보 철거
	미호강	2021	횡단구조물 제거	삼성 6보 철거
	갑천	2023	횡단구조물 제거	태봉보 철거
	대청댐 상류	2025*	제방 이설	장동지구 제방 후퇴
	무주남대천	2023	자연 제방	자연 그대로 보전
낙동강	태화강	2006	횡단구조물 제거	방사보 철거
	태화강	2012	저류지 조성(신규)	저류지 조성
	화계천	2020	하상 준설	화계천 하상 준설
	내성천	2023	하도내 식생 제거	하도내 식생 제거
영산강	함평천	2010	제방 이설	구하도 복원
	영산강	2011	저류지 조성(구하도 복원)	송촌공원 구하도 복원 저류지
	영산강	2012	저류지 조성(구하도 복원)	영산강 정원
	만경강	2019*	제방 이설	만경강 전주천 합류부
	순천동천	2021	저류지 조성(신규)	저류지 조성
섬진강	서시천	2022	하상 준설	서시천 하상 준설

\* 계획 또는 예정

확인되었다.

하천 복원 및 정비 방법으로는 횡단구조물 제거, 하상 준설, 저류지 조성, 습지 조성, 제방 이설, 하도내 식생 제거, 하도 습지 복원 및 조성, 둔치 준설, 자연 제방 보전 등이 주로 시행되고 있다. 이중 횡단구조물 제거 사례가 10건으로 33.3%를 차지하였으며, 저류지 조성(4건, 13.3%)과 제방 이설(4건, 13.3%)이 그 다음으로 많았다. 「Room for the River」에서 제시한 유형에 따라 분류하면 구조물 제거(Removing obstacles), 저류지 조성(Water storage), 제방 재배치(Levee relocation) 등이 해당하였다. 다만 제방 재배치의 경우, 실제로 시행되기 보다는 예정 단계에서 멈추는 경향이 있었다.

네덜란드와 달리, 국내에서는 구하도를 이용한 저류지 복원이나 습지 조성 사례, 하도 내부 식생 제거 등의 사례도 확인할 수 있었다. 저류지 복원이나 습지조성은 여름철 집중호우로 범람 우려가 큰 하천에서 주로 시행되었으며, 하중도 및 포인트바 등의 하도 지형에 식생이 계속 침입하고 있는 상황의 극복을 위해 식생제거 등이 하천정비 사업으로 추진되기도 하였다.

## 2. 하천 공간별 관리 유형

하천 공간은 제방을 기준으로 안쪽(제외지), 바깥쪽(제내지), 그리고 제방터로 구분된다. 본 연구에서는 하천에

적용되는 관리 방식을 하천 공간에 따라 나누어 살펴 보았다(그림 2).

### 1) 하천 내부

하천 내부, 즉 제외지는 제방과 제방 사이의 공간, 곧 평상시 물이 흐르는 구간을 의미한다. 제외지에 대한 하천 관리 유형은 크게 1) 보나 댐과 같은 횡단구조물 제거, 2) 하도 내부 식생 제거, 3) 둔치 제거 또는 준설, 4) 하도 내 습지 조성 및 복원, 5) 하상 준설 등으로 구분할 수 있다. 이들은 관점에 따라 자연기반해법의 적용 사례로 볼 수도 있으나, 하천의 자기조절 능력 및 지속가능성 측면에서는 단순한 하천 관리에 머무를 가능성도 있다.

횡단구조물 제거 사례로는 2023년 대전 갑천 태봉보 철거를 들 수 있다(그림 3). 이 지역에서는 하류 습지보호 지역의 생태계 복원을 위해 폭 1.5m, 길이 245.0m, 높이 0.6m 규모의 보를 철거하였다. 2025년 4월에 방문하여 조사한 결과, 보 철거 이후 하천의 생태적 연결성이 개선되고 수질이 향상되었으며, 하상의 고도가 낮아지고 하상 지형의 기복도 다양해진 것으로 나타났다. 물환경정보시스템(<https://water.nier.go.kr>)에서 제공하는 부영양화 지표인 TOC, T-N, T-P 항목에서 수질 개선 효과가 확인되었다.

충청남도 금산군 부리면 수통리 금강 도파지구는 둔치를 일부 제거한 사례이다(그림 4). 통수 공간을 확보하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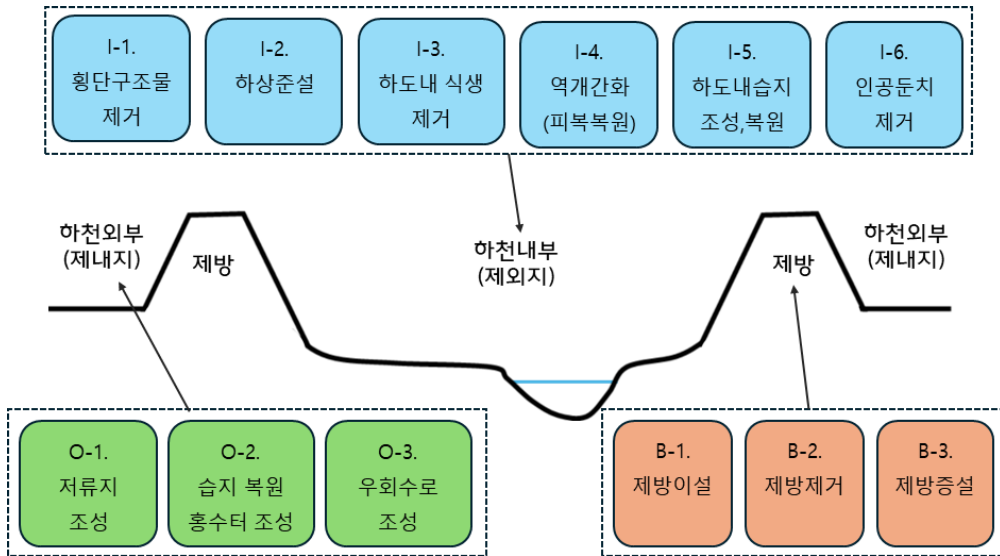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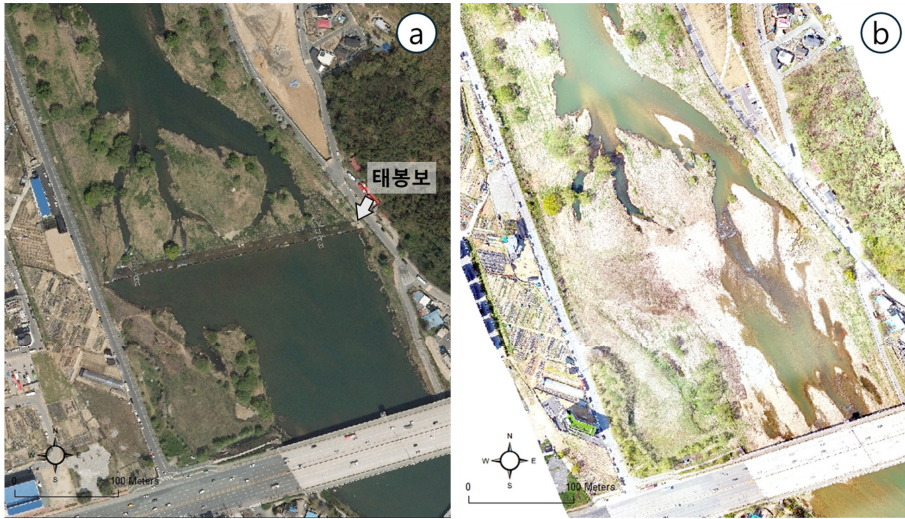


그림 2 하천 공간별 관리 유형



**그림 3.** 갑천 태봉보 철거 전후 비교

\* a는 2021년 국토지리정보원 영상을, b는 2025년 드론촬영 영상을 활용하였다.



**그림 4.** 금강 도파지구 둔치 준설 전후 비교

\* 영상은 Google Earth 이미지로 a는 2014년, b는 2023년에 촬영되었다.

도로 폭을 확대하기 위해 제방 위 기존 도로를 제내지로 이설하고, 둔치(고수부지)를 절취하여 급경사였던 제방 사면을 1:3의 완만한 사면 경사로 변경하였다(대전지방 국토관리청, 2011). 그 결과 금강의 통수 능력을 확보하고, 생태·환경적 완충 기능과 추이대로서의 역할을 강화하는 계기가 되었다.

## 2) 하천 외부

하천 외부, 즉 제내지는 제방의 보호를 받으며 사람이 거주하는 쪽의 공간을 뜻한다. 제내지의 하천 관리 유형

은 1) 구하도를 복원한 저류지 조성, 2) 새로운 저류지 조성, 3) 구하도를 활용한 습지 조성 및 홍수터 복원, 4) 우회수로 조성 등이 있으며, 주로 홍수 저감과 수질 개선을 목적으로 실행되고 있다.

평창강 영월 강변 저류지 공원은 구하도를 복원하여 저류지를 조성한 대표적인 사례이다(그림 5). 이곳은 상습 침수 지역의 피해를 줄이기 위해 687,805m<sup>2</sup> 면적에 290만 톤의 저류 용량을 확보한 저류지로, 옛 물길을 활용해 제내지에 저류지를 조성했다는 점에서 자연기반해법의 전형적인 사례로 평가된다. 이 저류지는 80년 빈도 수문



그림 5. 평양강 영월 강변 저류지 조성 전후 비교

\* 영상은 Google Earth 이미지로 a는 2005년, b는 2020년에 촬영되었다.

곡선에서 저류지 유입 전후를 비교했을 때 최대  $214\text{m}^3/\text{s}$ 의 유량을 저감하는 효과가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원주지방국토관리청, 2022).

### 3) 제방터

제방에 대한 관리 방식으로는 1) 제방을 높이거나, 2) 제방을 없애거나, 3) 제방을 이설하는 방법 등이 있다. 이 가운데 제방을 없애거나 이설하는 방식은 하천의 자기조절 능력을 강화한다는 점에서 자연기반해법의 하나로 볼 수 있다.

국내에서는 만경강과 금강에서 제방 이설이 계획된 적이 있다. 만경강의 경우 2019년 일부 구간에서 제방 이설 계획이 수립되었으나, 아직까지 실제로 시행되지는 않았다. 이른바 장동지구로 불리는 대청댐 상류 금강 본류 구간에서도 2022년 제방 이설 계획이 마련되었다. 이는 수질 개선과 수생태계 연결성 강화를 위해 기존 제방을 철취한 뒤, 제방을 이설하여 홍수 완충 공간을 확보하려는 것으로, 제방을增高하는 방식보다 이설하는 편이 경제적이란 판단에서였다(그림 6-a). 해당 사업은 2025년 착공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수변구역과 연계한 다기능



그림 6. 제방에서의 하천 관리

\* a는 장동지구 제방 이설 계획, b는 굴암1지구 자연 제방 보존에 대한 내용이다. 영상은 Google Earth 이미지로 a, b 모두 2023년에 촬영되었다.

수변 생태공간 조성도 함께 추진될 계획이다(금강유역환경청, 2023).

한편 금강 유역 무주 남대천의 굴암1지구에서는 홍수 피해 예방을 위해 좌안에 제방을 축조할 계획이었으나, 하천 생태계 보전과 치수 기능의 통합을 위해 해당 계획을 철회하였다(그림 6-b). 이는 자연 제방이 가진 고유의 통수 기능을 더 높게 평가한 사례라 할 수 있다.

### 3. 자연기반해법 관점에서 분석한 하천복원사업의 유형

2023년 우리나라 하천의 개수율은 국가하천 94.4%, 지방하천 77.8%로, 평균 79.5%에 이른다(국가수자원관리종합정보시스템). 이는 대부분의 하천이 자연 상태가 아니라 인공 제방을 통해 관리되고 있음을 의미한다. 이러한 하천은 용수 공급, 홍수 예방, 수질 관리 등을 위해 인위적인 관리가 불가피하며, 하상 준설과 같은 행위는 홍수 예방을 위해 흔히 시행되는 관리 방법이다. 넓은 의미에서 이러한 관리 방식도 자연기반해법으로 분류되기도 하지만, 하천의 회복력을 높이는 방법과는 거리가 있다. 본 연구에서는 자연기반해법의 관점에서 하천에 가해지는 관리 방법들을 분석하였다. 이를 위하여 하천의 기능

적 측면과 관련된 홍수 저감, 생태계 회복, 수질 개선, 물질 이동 측면의 평가 항목과 자기조절 능력, 관리 주기, 이해당사자, 비용 등의 항목을 설정하고 하천 관리 유형을 정성적으로 평가하여 그 특징을 분석하였다(표 2).

연구 결과, 제외지에서의 둔치 제거(준설)와 제방 이설이 모든 기능적 측면에서 긍정적으로 분석되었다. 둔치 제거(준설)는 중기적인 관리가 필요하고 이해당사자의 수준이 중간 정도이며, 비교적 저비용으로 관리가 이루어진다. 반면 제방 이설은 관리 주기가 길지만, 실행까지 이해당사자의 개입 정도와 수가 많고 공사비가 고비용이라는 한계를 가진다.

다음으로 긍정적인 유형은 제외지에서의 횡단구조물 제거와 제방 제거이다. 횡단구조물 제거는 하천 생태계 회복, 수질 개선, 물질 이동, 자기조절 기능 측면에서 긍정적으로 평가되며, 구조물 철거를 통해 하천 관리 주기가 장기적으로 변화한다. 다만 철거 과정에서 이해당사자의 개입과 비용이 중간 수준으로 발생한다. 보 철거와 같은 횡단구조물 제거의 주된 목적은 수질 개선과 생태적 연결성 회복에 있으며, 홍수 저감 기능 측면에서는 그 효과를 정량적으로 평가하기 어려웠다. 제방을 제거하는 경우 물의 공간이 확대되어 물질 이동과 자기조절 능력이 향상될 수 있으나, 홍수기에 물이 쉽게 범람하여 제내지 거주

표 2. 자연기반해법 관점에서 평가한 하천복원 유형

하천 공간	분류	내용	(1)기능					(2) 관리 주기	(3) 이해 당사자	(4) 비용
			홍수 저감	생태계 회복	수질 개선	물질 이동	자기 조절			
하천 내부 (제외지)	I-1	횡단구조물 제거		+	+	+	+	장	중	중
	I-2	하상 준설	+	-	+	+		단	소	저
	I-3	하도 내부 식생 제거	+	-		+	+	단	소	저
	I-4	역개간화(피복 복원)		+			+	단	소	중
	I-5	습지 조성 및 복원	+	+	+	-		중	중	중
	I-6	둔치 제거(준설)	+	+	+	+	+	중	중	저
제방	B-1	제방 이설	+	+	+	+	+	장	다	고
	B-2	제방 제거	-	+	+	+	+	장	다	중
	B-3	제방 준설	+				-	중	중	고
하천 외부 (제내지)	O-1	저류지 조성	+	+				장	다	중
	O-2	습지 복원 및 홍수터 조성	+	+			+	장	다	고
	O-3	우회 수로 조성	+	+				장	다	고

\* 각 항목의 기호는 (1) + 긍정적, - 부정적; (2) 장기, 중기, 단기; (3) 다수, 중간, 소수; (4) 고비용, 중비용, 저비용을 의미.

주민에게 피해를 줄 수 있어 홍수 저감 기능에서는 부정적인 측면이 있다. 반대로 제방 증설은 홍수 저감 기능에서는 긍정적이지만, 자기조절 기능에서는 부정적으로 분석되었다.

이 밖에 습지 조성 및 복원, 저류지 조성, 습지 및 홍수터 복원, 우회수로 조성 등의 하천 관리 방법은 홍수 저감과 생태계 회복 기능 측면에서 긍정적이라고 할 수 있다. 특히, 구하도를 이용한 습지 조성과는 같은 관리 방법은 고비용 공사비가 요구된다. 하도 내부 식생 제거와 하상 준설은 홍수위를 저감한다는 점에서 홍수 저감 기능은 긍정적이지만, 생물 서식처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점에서 생태계 회복 기능 측면에서는 부정적이다.

#### IV. 고찰

경제개발이라는 명목 아래 급속히 진행된 산업화와 도시화로 인해, 오늘날 대부분의 하천은 인공적으로 변형된 모습을 띠고 있다. 콘크리트 제방으로 폭이 제한되고 수많은 횡단구조물과 어도가 설치된 하천은 이제 익숙한 풍경이 되었다. 고정된 유로를 따라 흐르는 이러한 인공 하천에서는 스스로 유로를 조절하고 지형을 형성하는 자연 하천의 역동성을 찾아보기 어렵다. 인공화된 하천은 유로 뿐만 아니라, 토지 이용, 유수량 변화, 식생특성, 수질 변화 등 하천의 특성 자체를 변화시키고(이찬주 등, 2013; Ourloglou *et al.*, 2020), 하루로 이동할 퇴적물을 차단하여 궁극적으로 해안침식에 영향을 준다(Ishikawa *et al.*, 2013).

이러한 문제 인식에 따라 자연형 하천 기술(Green Engineering)을 시작으로 생태계 기반의 하천 관리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였다(García-Serna *et al.*, 2007). 이후 저영향개발(LID), 그린 인프라(GI), 블루-그린 인프라(BGI), 자연기반해법(Nbs) 등 다양한 개념들이 제시되었다(우효섭·김한태, 2010). 유럽을 중심으로 자연기반해법이 본격적으로 도입되었고 네덜란드 ‘Room for the River’ 프로젝트를 포함하여, 여러 국가에 걸쳐 다수의 프로젝트가 성공적으로 수행되었다. 국내에서도 자연형·생태·자연친화 하천 개념이 자연기반해법으로 통합되고 있다.

본 연구는 이러한 흐름 속에서 국내 하천관리의 다양한 유형을 검토하고 자연기반해법의 관점에서 체계적으로 분류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였다. 하천 복원 및 정비 사업

을 조사하여 5대 수계에서 총 30개소 이상의 사례가를 확인하고, 이 중 단순한 ‘하상 준설’을 제외한 27개 사례를 자연기반해법의 적용으로 보았다.<sup>2)</sup> 이는 명시적 정책 부재에도 불구하고 자연기반해법이 그동안 활발하게 적용되어 왔음을 보여준다.

하천관리 유형 중 제방 이설과 둔치 준설은 홍수 저감, 수질 개선, 자기조절 기능 강화 측면에서 상당히 긍정적으로 평가된다. 그러나 제방 이설은 높은 사업비와 이해당사자 갈등으로 지연 또는 무산된 사례가 있다. 그 결과, 실제로 진행된 자연기반해법은 제내지의 저류지 조성이나 구하도 복원과 같은 사업이 주를 이룬다. 한편, 하상 준설과 식생 제거는 단기적으로 치수 효과가 있으나 생물다양성을 저해하고 하상을 평탄화시키는 부작용이 발생한다(배연재 등, 1996). 하천 식생은 유속을 늦추는 효과가 있으나, 과도한 식생은 홍수피해를 유발하므로 적절한 관리가 필요하다(지운·장은경, 2024). 저류지 조성은 홍수 저감을 위한 핵심 전략으로 평가되나, 극한강우 시 한계가 있어 보완이 필요하다(원주지방국토관리청, 2023).

본 연구는 문헌·행정자료 및 위성영상을 통해 자연기반해법 사례를 분석하였으나 실행 여부 확인에는 일부 한계가 있었다. 자연기반해법과 유사 개념의 포괄적 접근으로 유형 분류에 대한 논쟁의 여지도 있다. 하천 공간 단위별로 자연기반해법의 특징을 정성적으로 평가한 것은 시론적인 수준에 불과하여, 앞으로 객관화된 평가방안 마련이 필요하다.

이러한 단점에도 불구하고 본 연구는 국내에서 시행된 여러 하천 관리사업을 자연기반해법의 관점에서 살펴보고 유형화함으로써, 지속가능한 하천을 위한 방향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자연기반해법은 자연과 인간의 조화로운 공존을 추구하는 전환적 전략이다. 하천에 관한 관리 체계는 제방·하상 준설 등 단기적인 관리 중심에서 보철거, 제방 후퇴, 습지·저류지 조성 등 중장기적 관점의 관리 전략으로 전환되어야 한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지역의 지형·기후 맞춤형 해법을 ‘지리기반해법(Geo-based Solutions, GbS)’이라고 부르고자 한다. 지속가능한 하천을 위한 해법은 하천의 역동성, 자기조절능력 혹은 회복탄력성을 강화하는 방향이어야 한다.

자연기반해법의 적극적인 도입을 위해서는 법·제도 정비, 장기 모니터링, 주민·전문가 거버넌스가 요구되며, 기후·물관리 정책 연계가 필수적이다. 결론적으로 자연기반해법은 한국 하천의 회복탄력성 제고와 지속가능한

물환경 조성을 위한 핵심 전략이자 패러다임 전환점이다. 본 연구의 분류 체계 및 사례들은 이를 위한 기초 자료로 활용되길 기대한다.

## V. 결론

본 연구에서는 국내의 하천 복원 및 정비 사례를 조사하고, 이 가운데 자연기반해법으로 분류할 수 있는 사례를 유형화하여 그 특징을 분석하였다. 국내에 적용된 자연기반해법은 횡단구조물 제거, 저류지 조성, 습지 조성, 제방 이설, 하도내 식생 제거, 하도 습지 복원 및 조성, 둔치 제거 및 준설, 자연 제방 보전 등이었으며, 한강, 금강, 낙동강, 영산강, 섬진강에서 모두 27건의 사례를 확인하였다. 하천 내부의 횡단구조물 제거가 10건으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였다. 제방의 이설은 계획된 사례가 4곳이었으나, 실제로 이행된 경우는 1곳에 불과하였다. 하천 내부에서의 관리는 비교적 비용이 적게 들고 이해관계자가 적어 쉽게 진행되는 편이지만, 그 효과는 비교적 짧다. 반면, 하천 외부나 제방터에 대한 계획은 이해관계가 복잡하고 비용이 많이 소요되나, 하천의 회복력을 증진할 수 있다는 점에서 보다 적극적인 자연기반해법이라고 하겠다.

본 연구는 문헌, 행정자료, 위성영상, 현장조사 등 다양한 방식으로 자연기반해법 사례를 수집·분석하였다. 하지만, 일부 지역의 실행 여부 확인 및 현장 검증에는 한계가 있었다. 또한, 자연기반해법과 유사 기법 등에 있어서 개념 및 유형 분류에 대한 논쟁의 여지가 있다. 특히, 공간 단위별로 분류한 자연기반해법에 대한 평가에 관해서는 시론적 수준이기에, 향후 면밀한 검토와 개선이 필요하다. 지속가능한 하천 관리를 위해서는 향후 자연기반해법의 효과를 실증적으로 검증하는 연구와 장기적인 관점에서 회복탄력성을 높이는 정책 마련이 요구된다.

## 註

1) 엄밀하게 말하면, 자연기반해법은 ‘자연을 활용하여 사회적 문제를 해결하고 생물다양성 혜택을 동시에 제공하는 솔루션이다. 하지만, 일부 학문분야에서는 전통적 의미의 하천복원을 모두 자연기반해

법으로 치부하는 경향이 있다.

2) 여기서 ‘단순한 준설’이라는 의미는 준설토를 하류 구간으로 보내지 않는 경우를 의미한다. 보와 같은 구조물로 인한 퇴적물을 준설하고 하류에 투입한다면 자연의 순환에 도움이 된다.

## 참고문헌

- 경기도, 2022, 「탄천 하천기본계획 변경 보고서」, 수원: 경기도.
- 국립환경과학원, 2020, 「수생태계 연속성 조사 및 평가 방법 지침」, 인천: 국립환경과학원.
- 국토교통부, 2019, 「하천공간 복원 기본계획 수립 기술보고서」, 세종: 국토교통부.
- 금강유역환경청, 2023, 「금강 상류 하천기본계획 보고서」, 대전: 금강유역환경청.
- 김다슬·이동근·황혜미·허수정·윤석환·김은섭, 2024, “자연기반해법의 탄소저장과 생물다양성의 공동·상쇄 효과 평가,” 한국환경복원기술학회지, 27(1), 45-54.
- 김선혁·최재연·박찬, 2025, “주제범위 문헌고찰을 통한 자연기반해법의 증거 활용 방안 탐색: 옥상녹화 도시 열 완화 효과 연구를 중심으로,” 한국기후변화학회지, 16(2), 171-189.
- 김혜주, 2010, “독일 이자 강 복원 사례의 하천환경적 시사점,” 국토연구, 13(4), 77-89.
- 대전지방국토관리청, 2011, 「금강수계 하천기본계획 금강, 미호천, 갑천, 유동천 보고서」, 대전: 대전지방국토관리청.
- 배연재·박선영·윤일병·박재홍·배경석, 1996, “왕숙천 준설구간의 저서성 대형무척추동물 군집변동,” 생태와 환경, 29(4), 251-261.
- 부산지방국토관리청, 2013, 「태화강 하천기본계획 변경 보고서」, 부산: 부산지방국토관리청.
- 서울지방국토관리청, 2014, 「안성천 중하류권역 하천기본계획 보고서」, 서울: 서울지방국토관리청.
- 우효섭·김한태, 2010, “하천복원의 목표·자연성에 초점을? 인간 서비스에 초점을?” 대한토목학회 학술대회, 217-221.
- 우효섭, 2023, “지속가능한 하천 관리를 위한 NbS 전략” 환경정책연구, 42(1), 55-76.

- 우효섭·한승완, 2020, “자연기반해법의 개념 정립과 국내 적용 방안,” 국토계획, 55(3), 1-20.
- 원주시방국토관리청, 2022, 「평창강 대화천합류점~한강 합류점 하천기본계획 변경 보고서」, 원주: 원주시방국토관리청.
- 이찬주·정상준·황승용, 2013, “댐 건설로 인한 모래하천의 지형 및 수변식생 변화에 관한 모니터링 연구: 댐 건설 전 단계, 내성천을 사례로,” *Water for future*, 46(5), 120-127.
- 지운·장은경, 2024, “자연기반해법의 하천관리를 위한 수리해석 정보 융합 플랫폼,” 대한토목학회 학술대회 발표초록집, 625-626.
- 지운·장은경·배인혁·안명희·배준, 2022, “자연성기반기술의 홍수완충구간 조성을 위한 입지 선정 방법에 관한 연구-대청댐 상류부터 용담댐 하류구간 사례 연구,” *Ecology and Resilient Infrastructure*, 9(3), 131-140.
- 최성욱·윤병만·우효섭·조강현, 2004, “댐 건설에 의한 유황 변화에 따른 하류 하도에서 하천지형학적 변화 및 식생피복의 변화: 황강 합천댐 사례,” *한국수자원학회논문집*, 37(1), 55-66.
- 한국건설기술연구원, 2008, 「기능을 상실한 보 철거를 통한 하천 생태통로 복원 및 수질개선효과 최종보고서」, 과천: 환경부.
- 한국건설기술연구원, 2016, 「옛물길(터) 복원을 위한 조사 연구」, 과천: 환경부.
- 한국수자원공사, 2023, 「자연기반해법(NBS) 기반 하천정비방안 연구」, 대전: 한국수자원공사.
- 함경림, 2024, “자연기반해법의 지리교육적 활용 방안 탐색, *한국지리학회지*,” 13(4), 317-333.
- Almond, R.E.A., Grooten, M., Juffe Bignoli, D., and Petersen, T., 2022, *Living Planet Report 2022-Building a nature-positive society*, WWF: Gland, Switzerland (WWF Korea 역, 2022, 지구생명보고서, 세계자연기금 한국본부).
- Asian Development Bank, 2020, *Protecting and investing in natural capital in Asia and the Pacific: Nature-based solutions in Philippine river basins (Consultant's report, TA 9461-REG)*, Mandaluyong City, Philippines: Asian Development Bank.
- Binder, W., 2008, Case Studies: Isar; Germany, *Proceedings of Exposición Internacional del Agua, Zaragoza*.
- Boelee, E., Janse, J., Le Gal, A., Kok, M., Alkemade, R., and Ligtoet, W., 2017, Overcoming water challenges through nature-based solutions, *Water Policy*, 19(5), 820-836.
- Bridges, T.S., Burks-Copes, K.A., Bates, M.E., Collier, Z.A., Fischenich, J.C., Piercy, C.D., Russo, E.J., Shafer, D.J., and Suedel, B.C., 2015, *Use of natural and nature-based features (NNBF) for coastal resilience* (No. ERDCSR151), Vicksburg: US Army Engineer Research and Development Center, Environmental Laboratory, Coastal and Hydraulics Laboratory.
- Cohen-Shacham, E., Walters, G., Janzen, C., and Maginnis, S., 2016, *Nature-based solutions to address global societal challenges*, Gland, Switzerland: IUCN.
- Davies, R., 2023, *Variations in Peak Flow Behaviour, With Reference to the Eddleston Water, Scotland*, Edinburgh: Scottish Environment Protection Agency.
- Duda, J.J., Freilich, J.E., and Schreiner, E.G., 2008, Baseline studies in the Elwha River ecosystem prior to dam removal: Introduction to the special issue, *Northwest Science*, 82(sp1), 1-12.
- Duda, J.J., Warrick, J.A., Magirl, C.S., McHenry, M.L., and Liermann, M.C., 2021, Reconnecting the Elwha River: Spatial patterns of fish response to dam removal, *Frontiers in Ecology and Evolution*, 9, 765488.
- Dunlop, T., Khojasteh, D., Cohen-Shacham, E., Glamore, W., Haghani, M., van den Bosch, M., Rizzi, D., Greve, P., and Feld, S., 2024, The evolution and future of research on nature-based solutions to address societal challenges, *Nature-Based Solutions*, 4, 100093.
- Eggermont, H., Balian, E., Azevedo, J., Beumer, V., Brodin, T., Claudet, J., Fady, B., Grube, M., Keune, H., Lamarque, P., Reuter, K., Smith, M., van Ham, C., Weisser, W.W., and Le Roux, X., 2015, Nature-based solutions: New influence for environmental management and research in Europe, *Gaia*, 24(4), 243-248.
- European Commission, 2015, *Towards an EU Research and Innovation policy agenda for Nature-Based Solutions & Re-Naturing Cities: Final report of the Horizon 2020 expert group on 'Nature-based solutions and*

- re-naturing cities'*, Brussels: Publications Office of the European Union.
- García-Serna, J., Pérez-Barrigón, L., and Cocero, M.J., 2007, New trends for design towards sustainability in chemical engineering: Green engineering, *Chemical Engineering Journal*, 133(1-3), 7-30.
- Hooke, J.M., 2000, Anthropogenic influence on channel processes, *Geomorphology*, 35, 229-248.
- IPCC, 2023, *Climate Change 2023: Synthesis Report*, Geneva: Intergovernmental Panel on Climate Change.
- Ishikawa, T., Uda, T., San-nami, T., and Hosokawa, J., 2013, Verification of shore protection effect of beach nourishment on Chigasaki coast, *Proceedings of the 7th International Conference on Asian and Pacific Coasts (APAC 2013)*, Bali, Indonesia, 1-8.
- Jongman, B., Ward, P.J., and Aerts, J.C., 2012, Global exposure to river and coastal flooding: Long term trends and changes, *Global environmental change*, 22(4), 823-835.
- Ourloglou, O., Stefanidis, K., and Dimitriou, E., 2020, Assessing nature-based and classical engineering solutions for flood-risk reduction in urban streams, *Journal of Ecological Engineering*, 21(2), 46-56.
- Pess, G.R., McHenry, M.L., Beechie, T.J., and Davies, J., 2008, Biological impacts of the Elwha River dams and potential salmonid responses to dam removal, *Northwest Science*, 82(sp1), 72-90.
- Rijke, J., van Herk, S., Zevenbergen, C., and Ashley, R., 2012, Room for the River, delivering integrated river basin management in the Netherlands, *International journal of river basin management*, 10(4), 369-382.
- Seddon, N., Chausson, A., Berry, P., Girardin, C.A., Smith, A., and Turner, B., 2020, Understanding the value and limits of nature-based solutions to climate change and other global challenges, *Philosophical Transactions of the Royal Society B*, 375(1794), 20190120.
- Valero, S., Miranda, J.J., and Murisic, M., 2021, *Nature-based solutions for improving resilience in the Caribbean*, Washington, DC: World Bank.
- Van Alphen, S., 2020, Room for the river: Innovation, or tradition? The case of the Noordwaard, *Adaptive Strategies for Water Heritage*, 309.
- WMO, 2023, *State of Global Water Resources 2022*. Geneva: World Meteorological Organization.
- Zhou, K., Kong, F., Yin, H., Destouni, G., Meadows, M.E., Andersson, E., and Su, J., 2024, Urban flood risk management needs nature-based solutions: A coupled social-ecological system perspective, *npj Urban Sustainability*, 4(1), 25.
- 국가수자원관리종합정보시스템(WAMIS), <https://www.wamis.go.kr>
- 국가환경산업기술정보시스템(KONETIC), <https://www.konetic.or.kr>
- 대전광역시청, <https://www.daejeon.go.kr>
- 평택시청, <https://www.pyeongtaek.go.kr>
- Google Earth, <https://earth.google.com>
- Rijkswaterstaat <https://www.rijkswaterstaat.nl>
- 교신 : 최광희, 25601, 강원특별자치도 강릉시 범일로 579번길 24, 가톨릭관동대학교 지리교육과(이메일: geoist@cku.ac.kr)
- Correspondence: Kwang Hee Choi, 25601, 24 Beomil-ro 579beon-gil, Gangneung-si, Gangwon-do, South Korea, Department of Geography Education, Catholic Kwandong University (Email: geoist@cku.ac.kr)

투고접수일: 2025년 11월 23일  
 심사완료일: 2025년 12월 16일  
 게재확정일: 2025년 12월 19일



# 초등학생의 생태시민성 함양을 위한 하천 환경지리 프로그램 개발과 교육 효과 분석\*

최용준\*\* · 김민성\*\*\*

## Developing and Evaluating a River-Based Environmental Geography Program to Foster Ecological Citizenship in Elementary Students\*

Yongjun Choi\*\* · Minsung Kim\*\*\*

**요약 :** 본 연구의 목적은 지역 하천을 중심으로 한 환경지리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해당 프로그램이 초등학생의 생태시민성 함양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는 것이다. 초등학교 환경지리 동아리에 참여한 3~5학년을 대상으로 생태시민성의 네 영역(덕성, 지식, 기능, 태도)을 반영한 7차시 프로그램을 설계하여 적용하였다. 프로그램은 관심-탐색-조사-실천 단계로 구성되었으며 지역 기사 분석, 현장 답사, 커뮤니티 매핑, 지역사회 참여 및 제안 활동을 포함하였다. 교사 관찰일지, 학생 성찰일지, 심층 면담 자료를 수집하여 질적으로 분석하였고 주요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참여 학생들은 덕성 영역에서 공공의 가치를 중시하고 정의, 배려, 그리고 공감을 바탕으로 하천 생태계와 함께 살아가는 인격을 함양하였다. 둘째, 지식 영역에서 하천 환경의 복잡성과 관계성을 이해하는 생태학적 지식을 증진하였다. 그러나 정치적 지식 습득에 있어서는 학생의 발달 수준에 따라 차이를 보였다. 셋째, 기능 영역에서 지역 하천의 환경문제를 해결하는 과정을 통해 비판적 사고, 성찰, 의사소통 능력을 발휘하였다. 넷째, 태도 영역에서 하천에서 일어나는 환경문제를 공동체의 문제로 인식하고 생태시민으로서 자발적으로 참여하겠다는 의지를 보였다. 본 연구는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생태시민성 함양을 위한 하천 기반 환경지리 프로그램의 구체적 실행 가능 모델을 제시했다는 점에서 의의를 지닌다.  
주요어 : 생태시민성, 하천, 환경지리, 초등학생

**Abstract :**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develop an environmental geography program centered on local rivers and to analyze its impact on fostering ecological citizenship in elementary school students. A seven-session program was designed and implemented for third- to fifth-grade elementary school environmental geography club members, reflecting the four dimensions of ecological citizenship (virtue, knowledge, skills, and attitudes). The program consisted of the stages of interest, exploration, investigation, and action, and included local news analysis, field trips, community mapping, community engagement, and proposal activities. Data collected from teacher observation logs, student reflection logs, and in-depth interviews were qualitatively analyzed. Key findings are as follows. First, in the virtue dimension, participating students fostered a character that values public values and fosters coexistence with river ecosystems based on justice, consideration, and empathy. Second, in the knowledge dimension, they enhanced their ecological knowledge, understanding the complexity and interconnectedness of river environments. However, differences in political knowledge acquisition were observed across students' developmental levels. Third, in the skill dimension, they demonstrated critical thinking, reflection, and communication skills through the process of solving environmental problems related to local rivers. Fourth, in the area of attitude, participants recognized environmental issues arising in rivers as community issues and demonstrated a willingness to voluntarily participate as ecological citizens. This study is significant in that it presents a concrete, feasible model for a river-based environmental geography program aimed at fostering ecological citizenship in elementary school students.  
Key Words : Ecological citizenship, Rivers, Environmental geography, Elementary school students

\*본 논문은 최용준의 석사학위논문 중 일부를 발췌하여 수정 및 재구성한 것임.

\*\*서울대학교 지리교육과 박사과정(Ph.D. Student, Department of Geography Education, Seoul National University, youngjun0610@snu.ac.kr)

\*\*\*서울대학교 지리교육과 부교수(Associate Professor, Department of Geography Education, Seoul National University, geomskim@snu.ac.kr)

## I. 서론

인류는 수천 년에 걸쳐 문명을 발전시키며 물질적 풍요를 이루어 냈다. 그러나 그 과정에서 지구 생태계에는 심각한 부작용이 나타났다. 과학기술의 발달은 삶에 편리함을 가져왔지만 동시에 기후변화, 대기 및 수질 오염, 생물 다양성 감소 등 다양한 환경문제를 일으켜 지구 생태계 전반을 위협하였다. 환경문제는 복합적인 성격을 지니며, 특정 국가나 지역에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전 지구적 차원에서 영향을 미친다. 국제사회는 환경문제 해결을 위해 공동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으며 2016년 체결된 파리 기후변화 협정은 대표적인 사례이다. 이 협정은 전 세계가 환경문제 해결을 위해 상호 협력할 것을 선언한 국제적 약속이며 정부는 물론 시민사회와 개인의 책임 모두를 강조한다. 이에 발맞추어 NGO와 시민단체는 지속 가능한 환경을 위해 환경보전 활동과 캠페인을 주도하며 개인이 일상 속 환경문제 해결에 참여할 수 있도록 장려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참여가 단발성에 그친다는 한계가 지적되기도 하였다. 개인의 환경 활동 참여가 일회적인 수준에 머물지 않고 지속적이고 체계적으로 이어지기 위해서는 환경교육이 필수적이다.

환경교육은 환경 이슈를 올바르게 인식하고 환경문제 해결을 위한 실천 역량을 함양하는 교육이다. 나아가 생태 중심적 세계관을 구성하여 환경보호 활동으로 이어지도록 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김희경·신지혜, 2012). 이는 환경문제 해결의 궁극적인 방안으로 교육의 역할을 강조하는 것이며, 사람들의 인식과 태도가 교육을 통해 변화될 수 있을 때 환경문제의 근본적인 해결 가능성이 열릴 수 있음을 시사한다(김민성·유수진, 2016). 그러나 현재 학교에서 이루어지는 환경교육은 주로 지구적 차원의 문제에 집중되어 있어 학생들이 실제로 생활하고 있는 지역의 환경문제를 인식하고 참여할 기회를 충분히 제공하지 못하고 있다(이재영, 2013). 학생들이 자신의 지역에는 심각한 환경문제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생각하거나 환경문제를 자신과 관련성이 적다고 느끼는 이유는 교육이 삶의 공간적 맥락과 분리되어 이루어지기 때문이다(이향유, 2010). 환경교육은 학습자의 일상과 연결되어야 하며 학습자가 자기 삶의 공간에서 환경문제를 어떻게 경험하고 실천할 수 있는가에 관심을 가져야 한다(Kim, 2019). 이를 위해 지역 기반의 구체적인 환경문제를 중심으로 학생들의 참여와 주도성을 높일 수 있는 교육적 접근을 확

용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맥락에서 기존 시민성 개념으로는 현재의 환경 문제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어렵다는 비판이 제기되었다. 이에 따라 등장한 생태시민성(ecological citizenship) 개념은 생태환경과의 관계 속에서 책임과 의무를 자각하고 실제적인 환경문제 해결을 실천하는 시민성을 지향한다(이간용, 2021). 생태시민성은 개인이 속한 지역의 문제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발생하는 다양한 환경문제에 관심을 가지며 그 원인이 자신과 무관하지 않다는 인식을 바탕으로 행동하려는 태도를 강조한다(김병연, 2012). Dobson(2003)은 생태시민성의 특성으로 탈영역화, 책임과 의무, 덕성, 사적 영역을 제시하였으며, 이는 환경교육에서 요구되는 실천 중심 시민성의 방향과 맞닿아 있다.

효과적인 생태시민성 교육을 위해서는 적절한 교육 공간과 대상의 설정이 중요하다. 먼저, 본 연구는 하천이 생태적으로 의미 있는 공간으로 활용될 수 있음에 주목한다. 하천은 다양한 생물의 서식지로 인간과 자연의 관계를 동시에 이해할 수 있는 교육의 장이다. 하천은 인문환경과 자연환경이 복합적으로 상호작용 하는 공간이기에 학생들이 하천을 관찰하고 분석하는 과정에서 생태계의 관계성과 구조를 이해할 수 있으며, 동시에 인간 활동이 생태계에 미치는 영향을 체감할 수 있다. 하천 탐구는 환경문제를 인식하는 출발점이자 해결하기 위한 실천적 태도를 기르는 계기가 될 수 있다. 한편, 초등학교 학령기는 생태시민을 양성하기에 적절한 시기로 이때의 교육은 장기적인 행동 변화를 촉진할 수 있다. 서우석 등(1999)은 초등학교 단계에서 환경에 대한 지식, 감수성, 신념, 태도 등이 형성되며, 이러한 측면의 교육이 친환경적 행동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보았다. 즉, 환경 태도와 가치관이 형성되기 시작하는 초등학교 시기의 환경교육은 생태시민성 함양에 결정적인 역할을 한다.

이에 본 연구는 학생들의 일상과 밀접하게 관련되는 공간인 하천을 교육 공간으로 설정하고 환경지리 프로그램을 구성하여 해당 프로그램이 초등학교 학생의 생태시민성 함양에 미치는 영향을 검증하고자 한다. 본 연구에서 개발한 하천 탐구 활동을 통해 학생들은 단순히 지식을 전달받는 수동적 경험이 아니라 환경문제를 인식하고 분석하며 해결 방안을 구상하고 실천하는 능동적 학습을 경험하게 된다. 이를 통해 학생들은 자신이 속한 지역의 환경문제를 자각하고 책임감 있는 태도와 행동 역량을 갖춘 생태시민으로 성장할 수 있을 것이다.

## II. 이론적 배경

### 1. 생태시민성

#### 1) 생태시민성 개념의 등장 배경과 정의

세계화가 급속히 진행되면서 국가 간의 자본과 자원의 이동이 자유로워졌고, 이는 경제 발전을 촉진함과 동시에 다양한 환경문제를 초래하였다(김정화, 2015). EU, UN 등 초국가적 기구의 부상과 초국적 기업의 등장은 국민국가의 전통적 역할과 시민 개념에 근본적인 변화를 요구하고 있다(박수경, 2021). 기존의 시민성 개념은 이러한 변화된 현실, 특히 전 지구적 차원에서 발생하는 환경문제를 포괄적으로 해석하고 실천할 수 있는 이론적 틀로는 한계를 노정했다(Melo-Escrihuela, 2008). 고정된 영토와 국민 간의 관계를 전제로 하는 전통적 시민성은 점점 그 실효성을 잃어가고 있으며 정보통신의 발달, 자본의 탈규제화, 인구의 국제적 이동, 인권 체계 확대 등은 국경을 넘나드는 네트워크의 형성을 요구하게 되었다(Desforge, 2004). 기후변화와 같은 초국가적 환경문제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공간적 규모에서 사고하고 행동할 수 있는 시민적 역량이 필요하게 되었고, 생태시민성은 이러한 요구에 부응하는 대안적 시민성 개념으로 등장하였다(김병연, 2012; 박순열, 2012).

생태시민성은 지역적 차원은 물론 전 지구적 차원에서 벌어지는 다양한 환경문제를 나와 무관한 것으로 여기지 않고 그 원인과 해결이 나의 삶과 연계되어 있다는 인식에 기반해 윤리적 책임감을 느끼고 행동하는 시민성이다(Hayward, 2006). 생태시민성은 기존 시민성 개념에 ‘환경’이라는 요소를 단순히 덧붙이는 방식이 아니라 환경을 위해 정의롭고 책임감 있게 의사와 태도를 결정하는 시민성이라 할 수 있다(김소영·남상준, 2012). 따라서 생태시민이란 다층적인 시공간에서 발생하는 환경문제를 자신과 연관된 문제로 인식하고 그것을 해결하기 위해 자발적이고 윤리적인 책임과 실천을 수행하는 시민이다. 또한 생태시민은 단순히 규범을 준수하는 수동적인 시민이 아니라 생태적 관점에서 자신의 행동을 성찰하고 지역과 세계의 환경문제를 자신의 책임으로 인식하며 적극적으로 해결에 참여하는 능동적인 존재이다. 초기에는 많은 환경이론가들이 환경문제 해결을 위한 국가의 제도적 개입을 강조했지만, 최근에는 개개인의 일상적 행위와 선택이 지구 환경에 미치는 영향에도 주목하는 경향이

확대되고 있다(김병연, 2012). 환경규제와 같은 제도적 장치만으로는 복잡하고 난해한 환경문제를 해결하기 어려운 현실 속에서 인간이 자연과 맺는 관계에 대한 근본적인 성찰과 전환이 필요하다는 인식이 대두하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전환은 시민 개개인의 삶의 방식과 일상의 결정들이 환경문제의 중요한 원인을 드러낸다. 그러나 이러한 인식이 환경문제를 개인의 문제로만 치부하는 것은 아니며 환경에 대한 개인 차원의 책임 있는 의식과 행동이 구조적 변화와 연계될 가능성에 주목하는 접근이다.

#### 2) 생태시민성의 특징

Dobson(2003)은 『Citizenship and the Environment』에서 생태시민성의 주요 특징을 탈영역화, 책임과 의무, 덕성, 사적 영역으로 제시하였다. 이 4가지 특징은 시공간적 책임 범위를 확장하며, 자율적인 도덕적 책무를 수행하고 내적 동기에 의한 윤리적 요소에 기반하여, 공적 영역을 넘어 일상생활에서 실천하는 생태시민을 상정한다.

첫째, 탈영역화(deterritorialization)는 시민성의 공간적 범위가 특정 지역이나 국가에 국한되지 않고, 시간상으로도 현재뿐 아니라 미래 세대까지 고려하는 특성을 의미한다. 생태시민성은 개인의 환경적 행위가 지역을 넘어 다른 공간과 미래 세대에까지 영향을 줄 수 있음을 전제로 한다(Jagers and Hammar, 2009). 기후변화처럼 국경을 초월한 환경문제는 탈영역화의 필요성을 부각하며, 이는 시민의 책임 시공간을 재정의하도록 요구한다(김병연, 2011; 김희경·신지혜, 2012). 이러한 인식은 단순히 ‘지금-여기’의 시공간에 머무르지 않고 ‘저기-미래’까지 포함하는 생태적 연대 의식을 강조한다(박우용, 2020).

둘째, 책임과 의무(responsibility and duty)는 생태시민성의 핵심으로 인간과 자연 간의 상호작용 속에서 발생하는 비 호혜적이고 비 계약적인 도덕적 책임을 포함한다. 생태시민은 행위의 결과에 대한 보상을 기대하지 않으며 자신의 이익을 초월하여 환경을 보호해야 할 도덕적 책무를 자발적으로 수행한다(박우용, 2020). Dobson(2003)은 이러한 책임이 모든 개인과 국가에 동등하게 분담되지 않는다는 점에서 비대칭적임을 강조하였다. 이는 유엔 기후변화협약의 ‘공동의 그러나 차별된 책임’ 원칙과도 맥을 같이 한다(김찬국, 2013). 즉, 생태시민성은 단지 법적 의무를 이행하는 것을 넘어 생태적 가치를 인식하고 그에 따른 자발적인 책임 수행을 강조하는 윤리적 실천이

라 할 수 있다(Wolf et al., 2009). 생태시민은 권리보다 책임에 더 무게를 두며, 환경 보호의 목적이 자기 이익의 보전이 아닌 생태계 자체에 대한 존중에서 비롯된다는 점을 인식한다(김병연, 2011; 김정화, 2015).

셋째, 덕성(virtue)은 생태시민성이 강조하는 도덕적 성향으로 정의, 배려, 공감과 같은 내면의 윤리적 요소를 포함한다. 생태시민은 정의(正義)를 중심으로 생태공간에서 발생하는 불공정한 상황을 인식하고, 이에 대한 공정성을 회복하려는 태도를 보인다(Dobson, 2003). 정의의 실천을 뒷받침하는 배려와 공감은 타자의 고통에 대한 감수성을 높이고 생태적 책임을 내면화하도록 돕는 중요한 정서적 기반이다. 박순열(2010)은 외적 규범이나 제재만으로는 생태시민을 양성하기 어렵다고 보며 생태적 덕성을 통해 지속 가능한 사회에 헌신하는 태도를 기를 수 있다고 주장하였다. 결국 생태시민성에서의 행동은 법적 규제에 강제되는 것이 아니라 정의, 배려, 공감에 기반한 내적 동기에 의해 자발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이라 할 수 있다(김병연, 2011).

넷째, 사적 영역(private domain)은 생태시민성의 실천 공간이 단지 공적 영역에만 머무르지 않고 일상생활의 사적 관계 속에서도 구현되어야 함을 강조한다. 생태적 행동은 정부나 공동체 차원의 노력뿐만 아니라 개인의 생활양식 속에서 실현되어야 하며 이에는 가정, 소비 활동, 인간관계 등과 같은 사적 공간이 포함된다(김병연, 2011). Barry(1999)는 생태 시민의 실천이 일상의 사적 공간 속에서도 이루어져야 한다고 강조했는데, 이는 생태시민성의 적용 범위가 일상 전반으로 확장됨을 보여준다. 즉, 생태시민은 공적 영역뿐만 아니라 사적 영역에서도 생태적 가치를 실현하는 시민이다.

요컨대 생태시민성은 탈영역화, 책임과 의무, 덕성, 사적 영역이라는 네 가지 특징을 통해 구현되며 이는 생태 시민이 갖추어야 할 자질과 밀접하게 연결된다. 이러한 특성들은 교육 현장에서 생태시민성을 어떻게 실천할 수 있는 역량으로 전환할 수 있을지에 대한 논의의 출발점이 된다.

### 3) 생태시민의 자질

Dobson(2003)이 제시한 생태시민성의 네 가지 특징은 김희경·신지혜(2012)가 개발한 생태시민성 교육 분석틀을 통해 교육적 관점에서 구체화되었다(표 1). 해당 틀은 생태시민성 개념을 환경교육의 목표와 연계하기 위한

표 1. 생태시민성 교육 분석 틀

환경교육 영역	생태시민성 요소	
덕성	개인이익<공공이익	
	정의	인간, 비인간 생물종
		현세대, 미래세대
	배려, 동정	인간, 비인간 생물종
		현세대, 미래세대
	지속가능성	
연대		
지식	생태학적 지식	관계성
		탈영역화
정치적 지식		
기능	비판적 사고	
	성찰	
	의사소통	
	정치 및 사회 참여	
태도	사회 참여	
	개인 행위 의사	

출처 : 김희경·신지혜, 2012.

목적으로 구성되었으며 덕성·지식·기능·태도의 네 가지 요소로 이루어져 있다. 이 틀은 생태전환교육(박현진 등, 2023), 장소기반 환경교육(장진아·조수진, 2022), 생태시민성 함양 프로그램 개발(방윤영 등, 2022) 등 다양한 맥락에 활용되었다. Dobson(2003)의 개념화와 김희경·신지혜(2012)의 분석 틀은 다음과 같이 연결된다.

첫째, ‘덕성’은 덕성 영역과 관련지을 수 있다. 생태시민성은 법적 강제나 사회적 계약에 따른 외부적 동기가 아닌 정의·책임·배려·공감과 같은 생태적 덕성을 기반으로 실천되는 윤리적 성향을 요구한다(김병연, 2011). 이는 인간과 비인간 생물종에 대한 고려, 생태 공간 내에서의 정의로운 분배 문제에 대한 감수성과 연결되며(Karatekin and Uysal, 2018), 생태시민은 이러한 내적 동기를 바탕으로 지속 가능한 사회를 위해 헌신한다.

둘째, ‘탈영역화’는 지식 영역의 탈영역화와 밀접하게 연계된다. 탈영역화는 환경문제를 특정 국가나 지역의 경계를 넘어 전 지구적 맥락에서 인식하는 관점이다(김희경·신지혜, 2012). 탈영역화 이해에는 생태계 상호작용과 인간 활동이 다른 지역·세대에 미치는 영향을 아우르는 생태학적 지식이 필요하다. 생태시민은 시공간적 관점에서 환경문제를 통합적으로 인식하고 상호 연계성

과 의존성을 이해할 수 있다.

셋째, ‘책임과 의무’는 지식 영역의 관계성과 태도 영역의 사회 참여, 개인 행위 의사와 연관성이 있다. 생태시민은 관계성에 기초해 환경에 미친 영향 정도에 따라 각기 다른 수준의 차별적 책임을 지닌다는 점을 인식하며(김찬국, 2013), 이러한 비대칭적 책임을 느끼고 능동적으로 환경문제 해결에 참여한다(김병연, 2011). 이들은 권리보다 더 큰 의무를 자발적으로 수용하며 집단적 실천이나 사회·정치적 행동을 통해 환경문제에 개입한다는 점에서 사회적 참여 역량을 갖춘 존재로 볼 수 있다(Karatekin and Uysal, 2018).

넷째, ‘사적 영역’은 지식 영역 중 정치적 지식과 깊은 연관이 있다. 생태시민은 공적 영역에 국한하지 않고 일상생활과 개인적 관계를 포함한 사적 공간까지 확장하여 활동한다. 환경에 대한 책임은 개인·기업·정부에 모두에게 적용되기에, 개인의 사적 소비나 생활양식 또한 생태시민의 행동 범주에 포함된다(김병연, 2011). 이는 곧 비정치적으로 간주하던 사적 공간이 정치적 판단과 실천의 장으로 전환되는 과정이며, Barry(2002)는 이를 사적 영역의 정치화로 해석한다. 따라서 생태시민은 공적 담론에 참여할 뿐만 아니라 가정, 소비, 생활 전반에 걸친 사적 영역에서도 정치적 지식에 근거한 환경친화적 선택과 행동을 실천할 수 있어야 한다.

결론적으로 생태시민의 자질은 덕성, 지식, 기능, 태도의 다면적 역량으로 구성되며, 이는 이론적 기반을 교육적 실천으로 확장할 수 있는 틀을 제공한다. 이러한 자질은 생태시민성 교육을 구체화하는 핵심 기준으로 기능할 수 있다.

## 2. 하천과 생태시민성

### 1) 환경교육장(場)으로서 하천의 가치

하천은 산, 평야, 해안, 섬과 함께 국토 환경을 구성하는 핵심 요소 중 하나로 물과 흙이 함께 이루는 복합적인 자연 공간이다. 이러한 특성 덕분에 하천은 물만으로 이루어진 해역이나 흙만으로 이루어진 육역과는 다른 독특한 생태적 서식지를 제공한다. 하천은 다양한 식물과 동물이 공존하며 살아가는 생명의 터전으로 서로 다른 생명체들이 상호작용을 통해 복합적인 관계망을 형성하는 중요한 생태 공간이다(환경부, 2002). 이러한 생태적 특색을 지닌 하천은 환경에 대한 균형 잡힌 가치관을 형성하는

데 있어 유의미한 장소가 될 수 있다(김인호·김귀곤, 1998). 환경교육의 공간으로 하천은 다음과 같은 가치를 지닌다.

첫째, 하천은 생태계의 구조와 기능을 이해하는 데 효과적인 공간이다. 하천 생태계는 생물 요소 간 상호작용뿐만 아니라, 이들과 영향을 주고받는 비생물 요소를 포함하는 통합적 시스템이다. 학생들은 하천에서 살아가는 생물 간 관계와 하천을 둘러싼 물, 토양, 온도와 같은 비생물 요소와의 연관성을 탐구하며 생태계의 기본 메커니즘을 학습할 수 있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 생태학적 개념에 대한 실제적 이해가 이루어진다(서유환 등, 2014).

둘째, 하천은 자연환경과 인문환경의 관계를 직접적으로 체험하고 이해할 수 있는 공간이다. 하천은 촌락과 도시 모두에서 어렵지 않게 접근할 수 있는 곳으로 학생들은 하천을 통해 자연환경이 인간의 생활에 어떤 영향을 미치고 반대로 인간 활동이 하천 환경에 어떠한 영향을 주는지를 종합적으로 이해할 수 있다. 따라서 하천은 자연과 인간 활동의 상호작용을 통합적으로 살펴볼 수 있는 적합한 학습 장소이다(환경부, 2002).

셋째, 하천은 학생들의 장소 애착을 함양하는 데 효과적인 공간이다. 하천은 선형으로 이어진 수계와 수변대가 공존하는 장소로, 유속과 수심 변화에 따른 시각·청각 자극과 토양·식생에서 비롯되는 후각·촉각 자극 등을 통합적으로 체험할 수 있는 환경이다. 이러한 경험을 통해 하천 공간에 대한 정서적 유대감이 형성되며, 이 유대감은 하천과 내가 서로 밀접하게 연결됨을 느끼는 장소 애착으로 이어진다(Wooltorton et al., 2022). 더 나아가 장소 애착은 하천 공간에 관심을 가지고 책임감을 가지고 지켜주는 환경친화적인 행동으로 이어지는 심리적·행동적 변화의 근간이 된다(Angiel and Janicki, 2010). 따라서 하천은 장소 애착을 불러일으켜 책임 행동으로 전환되는 환경교육의 핵심 장소로 기능한다.

넷째, 하천은 환경문제를 중심으로 지리적 시각에서의 문제 중심 학습(problem-based learning)이 이루어질 수 있는 공간이다. 학생들은 하천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환경문제를 조사하고, 그 원인을 추론하며 해결 방안을 논의하는 과정에서 문제 해결 능력을 향상할 수 있다. 이러한 학습 과정은 학습 내용을 다른 상황에 적용할 전이(transfer)의 기회를 제공하며 자기 주도적인 문제해결 역량을 함양하는 데에도 기여한다(백순화·정인철, 2003).

이와 같이 하천은 생태계 이해, 인문환경과 자연환경의

관련성, 장소 애착, 문제 해결 역량을 통합적으로 함양할 수 있는 환경교육 공간으로 교육적 가치를 지닌다. 특히 생태시민성을 함양하는 데 있어 하천은 학습자들이 생태계와 인간의 관계를 더욱 실질적으로 이해할 수 있는 교육 장소로 기능할 수 있다.

## 2) 하천에서의 생태시민성 교육

하천은 산지에서 바다로 이어지는 흐름 속에서 다양한 환경과 접촉하는 유동적인 곳으로, 생태시민성을 실제 맥락에서 학습할 수 있는 교육 공간이다. 하천은 Dobson (2003)이 제시한 생태시민성의 네 가지 특징(탈영역화, 책임과 의무, 덕성, 사적 영역)과의 관계 속에서 다음과 같은 교육 공간으로서의 의미를 지닌다.

첫째, 생태시민성의 특징 중 탈영역화는 시공간적 경계를 넘어 과거, 현재, 미래를 포괄하며 인간과 비인간, 개인과 집단, 지역과 지구 차원의 문제를 구분 짓지 않고 연결하는 사고를 의미한다(Jagers and Hammar, 2009). 하천은 산지에서 시작해 도시와 평야를 지나 바다로 흘러가는 과정에서 다양한 인문·자연환경과 접촉하며 다른 지역과 상호작용 하는 유동적 공간이다. 학습자는 하천이라는 흐름의 공간을 통해 개별적인 행동이 지역을 넘어 지구 전체에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인식할 수 있으며, 이는 생태시민성이 요구하는 시공간적 확장을 가능하게 한다(Dobson, 2003). 나아가 하천은 인간뿐 아니라 다양한 생물종과 미래 세대의 존재까지 고려하게 만드는 학습 기회를 제공하며 생태계 내 다종 간의 공존을 인식하도록 돕는다.

둘째, 하천은 학습자들이 책임과 의무를 실천하는 장으로 기능할 수 있다. 하천 탐방과 환경문제 인식 과정에서 학습자는 보상이나 권리보다 책임과 의무를 내면화한다. 즉, 하천에서 생태적 가치를 인식하고 실천하는 과정 자체가 목적이 된다. 자신의 이익과 손해를 계산하여 행동하기보다 공동체와 환경의 지속 가능성을 위해 마땅히 수행해야 할 책임감과 의무감을 느끼는 공간이 되는 것이다(김정화, 2015).

셋째, 하천은 덕성을 함양하는 데 유의미한 영향을 끼칠 수 있다. 학생들은 하천 생태계를 관찰하면서 인간의 활동이 생태계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를 체감하게 되며 이 과정에서 정의, 배려, 공감함을 내면화할 수 있다(Dobson, 2003). 특히 하천에서의 책임 있는 행동은 외부 규범이 아니라 정의, 배려, 공감과 같은 도덕적 동기에 기반한 자발

성에서 비롯된다(김병연, 2011). 이러한 내부 동기의 활성화는 생태시민성을 심화시키는 핵심적인 요소로 작용한다.

넷째, 하천은 학생들에게 공적 공간일 뿐만 개인적인 경험이 쌓이는 사적 공간으로도 인식된다. 사적 공간은 일상에서 가족, 친구와의 관계가 형성되고 유지되는 물리적·심리적 공간을 뜻한다(김병연, 2011). 이처럼 학습자가 일상에서 친숙하게 접하는 하천 공간은 자신이 속한 삶의 터전으로 인식되며, 그 속에서의 환경적 실천은 단순한 학습이 아니라 자신의 삶을 구성하는 실천적 행위로 전환된다. 결국 학생은 하천을 중심으로 한 환경문제를 개인의 삶과 연결된 문제로 인식하게 되며, 이를 통해 생태시민으로서의 역량을 함양하게 된다.

요컨대 하천은 생태시민성 교육을 위한 적합한 환경교육 공간이다. 하천의 유기적인 시공간적 유기성과 생태적·사회적 복합성은 학습자가 생태시민으로 성장하기 위한 인지, 정의, 행동 기반을 제공한다. 하천을 매개로 한 환경교육은 자연과 사회, 현재와 미래, 개인과 공동체를 연결하는 통합적 생태교육을 실현하는 데 중요한 실천적 토대가 된다.

## III. 연구 방법

### 1. 연구 절차

본 연구는 기초 계획 수립-연구 및 실행-결과 정리 의 세 단계로 진행되었다(그림 1). 우선, 기초 계획 수립 단계에서는 연구 목적과 방향을 설정하고 생태시민성, 환경교육 프로그램과 관련된 국내외 선행 연구와 관련 자료를 검토·분석하였다. 그 결과를 바탕으로 기존 연구의 성과와 한계를 파악하고 본 연구가 기여할 수 있는 부분을 탐색하여 연구 문제를 도출하였다.

다음으로, 연구 및 실행 단계에서는 하천 환경지리 프로그램을 기획하고 운영하였다. 먼저 초등학교의 발달 수준과 지역 하천의 특성을 고려하여 하천 환경지리 프로그램을 설계하였다. 이후 전문가 검토를 통해 프로그램의 타당성을 점검하였다. 아울러 프로그램에 참여할 대상을 선정하였으며 방과 후 시간을 활용해 프로그램을 적용하였다. 프로그램 실행 중 교사 관찰일지, 학생 성장일지를 수집하여 기초 분석 자료로 활용하였다. 프로그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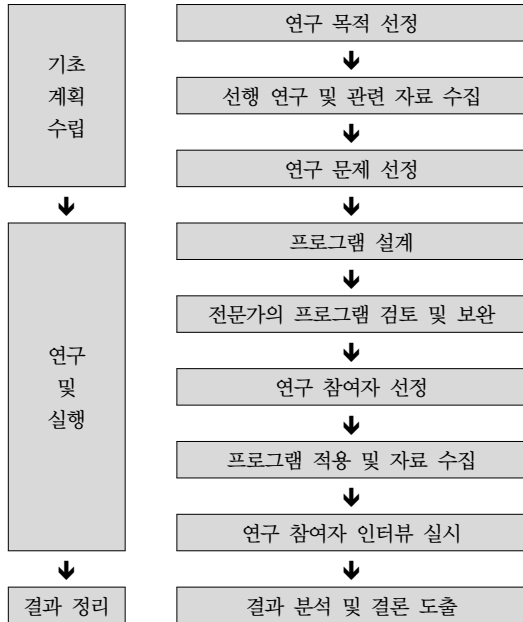


그림 1. 연구 절차

종료 후에는 관찰일지, 성찰일지의 예비 분석을 토대로 심층 면담을 진행하여 추가적인 자료를 수집하였다.

마지막으로, 결과 정리 단계에서 수집된 자료를 분석하고 종합하여 연구 문제에 대한 답을 도출하였다. 분석은 덕성·지식·기능·태도 영역별로 진행하였으며 참여 전후 변화와 활동 과정의 특징을 검토하였다. 분석 결과를 토대로 결론을 도출하고 연구의 의의·한계 및 후속 연구 제언을 제시하였다.

## 2. 연구 참여자

참여자는 경기도 남양주시 S 초등학교 환경지리 동아리 ‘푸름’에 지원한 초등학생 9명이다. 이들은 본 연구와 같은 방과 후 환경 프로그램 참여 경험이 없었다. 3학년 8명, 5학년 1명으로 구성되었으며, 성별은 남학생 5명, 여학생 4명이었다.

## 3. 연구 설계

### 1) 프로그램 설계

하천 환경지리 프로그램 개발 과정은 기획-준비-개발-개선 단계를 거쳤고 단계별 고려 사항은 다음과 같다. 기

획 단계에서 선행 연구를 검토하여 프로그램의 목적을 설정하였다. 구순옥·남상준(2019)의 환경지도 제작 활동, 이민부 등(2014)의 지역화 교육 답사 프로그램, 김희경·신지혜(2012)의 생태시민성 연구를 참고하여 프로그램의 전체적인 방향을 구상하였다. 분석한 결과를 통해 설정한 지향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환경문제를 올바르게 인식하고 주도적으로 해결하는 실천적 태도를 함양한다. 둘째, 초등학교 3~6학년 수준에 맞춘 내용을 설계한다. 셋째, 지역 하천 답사를 통해 실제적 환경지리 학습을 가능하게 한다. 넷째, 커뮤니티 매핑을 활용해 지역 환경문제를 시각화한다. 다섯째, 학생들이 하천 공간을 주체적으로 인식하고 의사결정 과정에 참여하도록 한다.

준비 단계에서 초등학교 3~6학년 수준에 적합하고 실제성 있는 환경지리 프로그램 목표를 설정하고, 이를 달성하기 위해 생태시민성 구성 요소를 세분화하여 학습내용을 구상하였다. 아울러 생태시민성을 함양하기 위한 공간인 마석우천을 사전 조사·답사하였다. 또한 학습자의 수준을 고려하여 커뮤니티 매핑 활동을 ‘환경지도 만들기’ 형태로 계획하였으며, 이를 실현하기 위해 스마트폰 기반 위치 태그 기술과 웹 기반 통계지리정보서비스(SGIS)를 검토하였다.

개발 단계에서는 프로그램의 구조를 목표, 내용, 교수 학습 방법, 평가를 중심으로 마련하였다(표 2). 교육 내용은 관심-탐색-조사-실천의 4단계로 설계되었으며 각 단계에 생태시민성 요소가 반영될 수 있도록 차시별 활동을 구체화하였다. 관심 단계에서 학생들이 하천의 의미를 탐구하고 하천에서 나타날 수 있는 환경문제를 인식할 수 있도록 하였다. 또한 학습자 수준에 맞는 지역 관련 자료를 제시하여 학생들이 일상속 환경문제에 관심을 가질 수 있도록 구상하였다. 탐색 단계에서 마석우천을 중심으로 자연환경과 인문환경을 조사하고 지역 환경문제와 지역 환경이 어떤 관련을 맺고 있는지 유추할 수 있도록 구성하였다. 조사 단계에서 커뮤니티 매핑의 개념과 방법을 학습하고 마석우천 답사를 통해 환경문제를 매핑하는 활동을 설계하였다. 이후 통계지리정보서비스(SGIS)를 활용하여 유형별로 문제를 정리하고 사례 조사를 통해 원인, 결과, 그리고 해결 방법을 탐구하도록 설정하였다. 또한 학생들이 협의를 통한 의사결정 방식으로 최선의 해결 방안을 도출하도록 기획하였다. 실천 단계에서 조사한 결과를 토대로 환경 캠페인을 기획하거나 지방자치단체와 협력하는 활동 등 실제적인 참여 활동을 구상하였다. 이를 통

표 2 하천 환경지리 프로그램의 구조

구조	내용		
교육 목표	지역 하천 마석우천의 환경문제를 해결하는 과정을 통해 생태시민성을 함양한다.		
교육 내용	관심	하천에서 나타나는 주요 환경문제 관심 두기	
		하천의 주요 환경문제 학습하기	우리 지역 하천에 관심 두기
	탐색	마석우천 자연적/인문적 환경문제 탐색하기	
		마석우천 자연/인문환경 탐색하기	마석우천 환경문제 탐색하기
조사	마석우천 환경문제 원인과 해결 방법 조사하기		
	마석우천 답사하기 / GIS 매핑하기	문제 비교 및 분석하기	해결 방법 강구하기
	실천	홍보 및 공공기관에 해결 방안 제시하기	
환경보호 교내 캠페인 활동하기		지자체와 협의하기	주민에게 홍보하기
교수 학습 방법	의사결정 학습	협동 학습	현장 학습
평가	관찰법	연구 보고서법	포트폴리오법

해 학생들이 지역 하천 문제 해결에 주체적으로 참여하며 생태시민으로서의 역할을 함양할 수 있도록 하였다.

개선 단계에서 김주연·이상원(2017)의 프로그램 평가 기준을 참고하여 개발된 프로그램을 검토·수정하였다(표 3). 10년 이상의 교육 경력을 가진 초등교사 7명, 지리 교육 석박사 연구자들, 그리고 지리교육 전공 교수의 자문 및 검토를 받아 다각적인 의견을 수렴하였다. 검토는 주로 차시별 수업 내용과 연구 설계를 중심으로 이루어졌으며 난이도 조정, 지역 문제와의 연계 강화 등 개선 사항을 반영하였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 프로그램이 교육 현장에서 효과적으로 적용될 수 있는 구조로 완성되었으며 초등학생의 생태시민성 향상을 위한 실천적 교육 전략으로서의 가능성을 높였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 표 4와 같은 환경지리 프로그램이 개발되었다.

## 2) 프로그램 적용

하천 환경지리 프로그램은 2022년 9월 3일부터 24일까지 총 7차시에 걸쳐 운영되었다. 관심 단계(1차시)에서 학생들은 하천의 의미를 이해하고 하천에서 나타날 수 있는 환경문제를 파악하였다. 이를 통해 하천이 지닌 가치와 그 속에서 발생하는 문제 상황을 인식할 수 있었다. 탐색 단계(2~3차시)에서 참여자들은 백지도를 활용하여 마석우천의 자연·인문 환경을 탐색하고, 그 공간에서 발생할 수 있는 환경문제를 유추하였다. 이어서 지역 기사를 통해 마석우천의 실제 환경문제와 하천을 위한 공동체의 노력을 확인하였다. 또한 현장 답사에서 하천의 환경문제를 심층적으로 파악하기 위해 백지도와 기사를 통해 유추한 환경문제를 쓰레기·수질 오염·위험 시설 문제의 세 가지 유형으로 나누어 준비하였다. 조사 단계(4~6차

표 3. 하천 환경지리 프로그램의 평가 기준

평가 요소	평가 내용
학습 목표 진술	도달할 수 있으면서 구체적으로 진술되었는가?
생태시민성과의 관련성	생태시민성을 함양하기 위한 요소를 포함하고 있는가?
내용 선정	선정된 내용이 하천 환경지리 프로그램으로 적합한가?
활동지	학습자 수준에 적절하고 학습 목표를 달성하는 데 효과적인가?
학년 적합성	난이도가 초등학교 3~6학년 학생 수준에 적합한가?
시간 구성	학습 목표를 달성할 수 있도록 시간 배분이 적절히 이루어졌는가?

출처 : 김주연·이상원, 2017 재구성.

표 4. 하천 환경지리 프로그램의 내용

단계	차시	프로그램 명칭	학습 목표	생태시민성 요소		시간
				덕성	정의	
관심	1차시	우리에게 하천은?	하천의 의미를 알고 하천에서 나타나는 환경문제를 파악할 수 있다.	덕성	정의	40분
				지식	생태학적 지식 (관계성, 탈영역화)	
탐색	2차시	마석우천 주변은 어떤 환경일까?	우리 지역의 하천인 마석우천의 자연/인문 환경에 대해 탐색하고, 이 공간에서 나타나는 환경문제를 유추할 수 있다.	덕성	개인이익<공공이익	40분
				지식	생태학적 지식 (관계성, 탈영역화)	
	3차시	지역기사로 마석우천의 환경문제를 찾아보자!	기사를 통해 하천에서 어떤 환경문제가 나타나고 있는지 탐색하고 이를 해결하려는 노력을 확인할 수 있다.	태도	사회 참여	40분
조사	4차시	함께 그린 (GREEN) 마석우천 환경지도	SGIS 매핑의 개념과 방법을 알고, 마석우천을 답사한 후 환경문제를 지도 위에 표현할 수 있다.	덕성	정의, 배려, 동정	120분
				지식	생태학적 지식(관계성)	
	5차시	마석우천을 위한 베스트 아이디어!	기사를 통해 확인한 환경문제와 실제 마주한 환경문제를 비교·분석하여 다양한 아이디어 중 최선의 아이디어를 선정할 수 있다.	지식	정치적 지식	40분
6차시	마석우천, 우리가 바꿔보자!	최선의 아이디어를 홍보하는 계획을 수립하고 다양한 대상에게 제안할 수 있다.	지식	정치적 지식	40분	
			기능	의사소통/정치 및 사회참여		
			태도	사회 참여/개인 행위 의사		
실천	7차시	함께 그리고 누리는 마석우천	활동 결과를 교내/외에 홍보 및 전시하고 시민으로서 지방자치단체에 해결 방안을 적극적으로 건의할 수 있다.	지식	정치적 지식	80분 / 학교 축제
				기능	성찰	
				태도	사회 참여/개인 행위 의사	

시)에서는 현장 답사를 통해 마석우천의 환경문제를 직접 관찰하고, 그 결과를 SGIS 기반 커뮤니티 매핑 활동으로 시각화하였다(그림 2). 학생들은 유형별로 역할을 나누어 무단 투기 및 적치물 등 쓰레기 문제, 녹조·오염원 유입 징후 등 수질 오염 문제, 도로 파손·무단 진입로 같은 위험 시설 문제를 답사 활동 중 촬영하였다. 이후 학생들은 사진의 GPS 좌표를 토대로 답사 지점을 유형별 마커로 기록해 유형별 문제의 공간 분포와 중첩 양상을 확인하였다. 이후 기사 분석 결과와 답사에서 확인한 문제를 비교·분석하고 토의를 통해 다양한 아이디어 중 최선의 해결 방안을 선정하였다. 또한 아이디어를 알리기 위해 홍보 계획을 수립하고 대상을 고려하여 제안서를 작성하였다. 실천 단계(7차시)에서 실제로 제안서를 지방자치단체에 제출하고 교내외 홍보와 전시 활동을 진행하였다.

### 3) 프로그램 효과 분석

본 연구는 프로그램의 효과를 검증하기 위해 김희경·신지혜(2012)가 개발한 생태시민성 교육 분석 틀을 활용하였다. 해당 분석 틀은 생태시민성을 교육적 맥락에서 구체화하기 위해 ‘덕성’, ‘지식’, ‘기능’, ‘태도’의 네 가지 영역을 설정하였으며, 이는 환경교육의 전통적 목표인 인식, 지식, 태도, 기능, 참여(UNESCO, 1977)를 생태시민성 관점에서 재구조화한 것이다.

분석의 타당성을 확보하기 위해 삼각 검증법(triangulation)을 활용하였다. 삼각 검증법은 서로 다른 자료를 교차 분석해 결과의 신뢰도를 높이는 방법이다(유기웅 등, 2018). 본 연구에서는 교사 관찰일지, 학생 성찰일지, 사후 심층 인터뷰를 통해 수집된 질적 자료를 상호 보완적으로 활용하였다. 첫째, 교사 관찰일지는 수업 중 학생들의 언어·행동 반응을 전자 기록물로 기록한 자료이다. 이는 생태시민성 분석 틀에 따라 차시별로 나타난 변화를 1차로



그림 2. 마석우천 환경문제의 각 영역별 사진, 커뮤니티 매핑 활동 결과물, 활동 사진

\* (A)는 쓰레기 문제 부분, (B)는 수질 오염 문제 부분, (C)는 위험 시설 문제 부분, (D)는 커뮤니티 매핑 활동 결과물과 활동 사진이다.

확인하고 사후 심층 인터뷰에서 질문을 설계하는 자료로 활용되었다. 둘째, 학생의 성찰일지는 차시별 학습활동 후 작성된 기록이다. 연구자는 성찰일지를 통해 생태시민성의 구성 요소들이 어떻게 드러나는지 분석하고 관찰일지에서 포착된 변화가 학습자의 자기 서술에서도 일관되게 드러나는지를 확인하였다. 셋째, 프로그램 종료 후 실시한 사후 심층 인터뷰는 약 30~40분간 개별 면담으로 진행되었다. 학생의 진술을 통해 인식한 변화와 의미를 토대로 관찰일지, 성찰일지의 분석 결과를 재검증하였다.

자료 분석은 ‘덕성’, ‘지식’, ‘기능’, ‘태도’ 네 가지 범주를 중심으로 진행하였다. 먼저 세 자료를 영역별로 코딩하여 의미 단위를 추출하고, 이후 관찰일지-성찰일지-인터뷰 자료를 종합하여 변화 양상을 파악하였다. 이러한 다각적 자료 분석을 통해 하천 환경지리 프로그램이 초등학교의 생태시민성 함양에 미친 영향을 통합적으로 파악하고자 하였다.

## IV. 연구 결과

### 1. 덕성

생태시민성의 한 축인 ‘덕성’은 인간이 생태계를 대할

때 갖추어야 할 내면의 도덕성을 의미한다. 이는 단순한 친절함을 넘어 선함과 옳음, 그리고 도덕적 기준에 근거한 판단과 행동을 가능하게 하는 개인의 성품과 자질을 포괄한다. 덕성을 갖춘 생태시민은 환경문제를 바르게 인식하고 정직하며 도덕적으로 책임 있는 태도를 보이는 시민이다.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덕성의 주요 하위 요소인 ‘공공 이익 우선’, ‘정의’, ‘배려와 동정’을 중심으로 학생들의 변화를 분석하였다.

먼저 ‘공공 이익 우선’ 측면에서 학생들은 자신의 이익보다 공동체 전체의 이익을 우선하는 태도를 보였다. 예를 들어 3학년 A 학생은 1차시에서는 관찰일지에서 개인의 관점에서 하천을 바라보았지만, 프로그램 후반인 6차시에서는 공동체와 하천 생태계를 함께 고려하는 태도로 변화하였다. A 학생의 인터뷰에서 “나의 즐거움보다 다른 사람의 행복이 중요하다”라고 진술하며 공공의 이익을 중시하는 태도를 보여주었다.

‘정의’의 측면에서 5학년 B 학생은 하천 오염과 생물 다양성에 대해 도덕적 판단을 내리는 모습을 보였다. 프로그램에서 하천 오염 사례에 대해 생물의 입장을 고려한 B 학생은 인터뷰를 통해 “모든 생명은 동등한 가치를 지니며 어떠한 생명도 차별받아서 안 된다”라고 설명하였다. 이는 생태계 내 다양한 존재들이 가진 권리와 역할을

존중하고 불평등이나 생물 간 차별을 거부하는 생태 정의 개념과 맞닿아 있다.

‘배려와 동정’이라는 덕성 요소도 관찰되었다. 3학년 E 학생은 4차시 현장답사 중 마석우천에 서식하는 동식물의 열악한 환경을 보며 그들의 고통에 공감했고, 이를 돕고자 하는 감정을 표현하였다. 인터뷰에서 E 학생은 “동물들도 우리와 같이 감정을 느낀다. 그래서 동물들이 행복을 느낄 수 있도록 우리가 조금만 배려하고 도와준다면 함께 살아갈 수 있다”라고 언급하였다. 또 다른 3학년 I 학생은 수업 중 플라스틱 쓰레기로 인해 다친 오리 사례에 깊이 공감하며 “자신도 모르게 자연에 피해를 줄 수 있다는 사실에 미안함을 느꼈다”라고 밝혔다. 동시에 I 학생은 깨끗하고 건강한 하천 생태계를 만들고 싶다는 의지를 드러내며 동정을 넘어 책임 있는 실천의 의지를 내비쳤다.

본 연구의 프로그램 적용 결과, 덕성 영역에서는 생태 시민으로서 도덕성과 공감 능력을 바탕으로 타자와 자연을 존중하고 공동체를 위한 책임 있는 행동으로 나아가려는 내면의 변화를 확인할 수 있었다. 학생들은 프로그램을 통해 개인의 이익보다 공공의 가치를 중시하고, 생물의 생존과 권리를 정의롭게 바라보며, 배려와 동정을 통해 타자와의 공존을 실천하는 방향으로 변화하였다. 이는 생태시민성의 핵심 영역인 덕성이 학습을 통해 함양될 수 있음을 보여준다.

## 2. 지식

생태시민성의 지식은 생태 구조를 올바르게 이해·해석하고 환경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의사결정, 유능하게 시민 참여를 할 수 있게 하는 인지적 토대를 의미한다. 이는 환경을 단편적으로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생태 관계망 속에서 파악하도록 돕고 환경을 위한 판단과 선택을 합리적 근거를 바탕으로 할 수 있도록 한다. 이러한 지식의 주요 하위 요소인 생태학적 지식과 정치적 지식을 중심으로 변화를 분석하였다.

학생들은 전반적으로 생태학적 지식에서 높은 이해도를 보였다. 2차시에서는 학생들의 생태학적 지식을 증진하기 위해 마석우천 주변의 자연환경과 인문환경 요소를 백지도에 직접 표시하는 활동을 하였다. 이 과정을 통해 참여자들은 하천과 주변 환경 간의 연관성을 탐색하였고, 그 영향에 대해 심층적으로 사고하였다. 5학년 B 학생

은 마석우천, 한강, 그리고 바다까지 이어지는 수계 구조를 이해하며 “작은 하천의 오염도 광범위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라는 점을 언급하였다. 인터뷰를 통해 확인한 결과 B 학생은 인문환경(예: 주거지, 도로 등)과 자연환경(예: 하천, 산지 등)이 상호작용을 하며 환경에 영향을 준다는 관계성과 생태계의 구조를 이해하였다. 이 학생은 생태계가 파괴되면 결국 인간에게도 부정적 결과가 초래된다는 점을 설명하였다. 한 마을에서 발생한 오염이 하천을 따라 다른 지역에게까지 영향을 미친다는 사실을 깨달으며 지역 환경문제를 보다 넓은 시각에서 관련지어 바라보는 생태적 사고를 함양하였다.

한편 정치적 지식은 주로 5, 6, 7차시에서 다루어졌는데, 환경문제 해결을 위한 아이디어 도출과 적용, 공공기관과의 협력 등을 중심으로 활동이 이루어졌다. 3학년 학생들 다수는 정치적 지식을 단편적으로 인식하거나 이해하지 못하였다. 예를 들어, 3학년 E 학생은 아이디어를 직접 생성하거나 적용하는 활동에서 어려움을 겪는 모습을 보였다. 인터뷰 결과 E 학생은 프로그램 내 제시된 해결책은 이해하였지만, 시민으로서 주체적으로 의견을 제시하는 과정이 부담스럽게 다가왔다고 진술하였다. 이는 3학년 학생들이 정치적 지식의 개념을 충분히 이해하지 못한 데에서 비롯된 것으로 보이며, 정치적 지식이 상대적으로 높은 인지적 능력을 요구함을 시사한다. 반면 5학년 학생은 정규 사회 수업에서의 배경지식을 바탕으로 정치적 개념을 비교적 잘 이해하였다. 예를 들어, B 학생은 토의와 협의를 통해 공공의 문제를 해결하는 정치적 과정을 명확히 설명하였고 실제 문제 해결 시 공공기관과의 협력이 필요하다고 언급하였다. 이는 해당 학생이 기존 학습 경험을 기반으로 정치적 지식을 현실에 적용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고 있음을 보여준다. 이러한 결과는 정치적 지식이 학생의 발달적 특성에 따라 향상되는 정도가 다르다는 점을 시사하며 정치적 지식을 효과적으로 지도하기 위해서는 학년 수준에 적합한 비계(scaffolding)를 마련할 필요가 있음을 보여준다. 정치적 지식은 환경정책의 수립과 실천을 위한 필수적인 요소이므로 후속 연구에서는 이를 보완하는 교육적 설계가 요구된다.

요약하면 본 연구의 프로그램을 통해 학생들은 생태학적 지식을 함양하며 마석우천의 자연환경과 인문환경이 서로 연결되어 있음을 인식하고 하천은 단절된 대상이 아닌 유기적이고 연속적인 존재라는 사실을 이해하였다. 반면 정치적 지식에서는 학년별 차이가 드러났다. 3학년

학생들은 정치적 지식을 이해하는 데 어려움을 보였으며, 그 의미를 파악하는 활동에서 부담을 느끼는 경향이 나타났다. 이에 반해 5학년 학생은 정치적 개념을 이해하고 적용하는 데 비교적 능숙하였지만, 사례 수가 적어 일반화에는 한계가 있다. 이러한 결과는 본 프로그램이 생태계의 복잡성과 상호연결성에 대한 지식을 증진하는 데에는 효과적이었으나, 정치적 지식 차원에서는 발달 수준에 맞춘 단계적 접근의 필요하다는 점을 시사한다.

### 3. 기능

생태시민성의 기능은 생태계와 인간 사회 사이의 복잡한 상호작용 속에서 개인이 수행할 수 있는 실천적 역할을 의미한다. 이는 지속 가능한 삶을 실천하며 지구 환경과 사회의 건강한 미래를 위해 책임과 의무를 다하는 능력을 뜻한다.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기능을 비판적 사고, 성찰, 의사소통의 세 가지 요소를 중심으로 분석하였다.

먼저, 참여 학생들은 환경문제를 접하고, 이를 해결하려는 과정에서 비판적 사고를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모습을 보였다. 예를 들어, 5학년 B 학생은 5차시 활동에서 제공된 환경 관련 기사와 현장 답사 경험을 바탕으로 여러 환경문제를 비교하고 분석하였다. 이 과정에서 다양한 선택지를 검토하고 어느 것이 더 효과적인 해결 방안인지, 실현 가능성이 있는지를 판단하며 비판적 시각을 형성하였다. 인터뷰를 통해 B 학생이 단순히 정보를 수용하는 데 그치지 않고 그것을 분석하고 해석하며 주제적으로 결론을 도출하려는 태도를 보였다는 점을 확인하였다.

다음으로, 자기 생각과 행동을 깊이 반성하며 되돌아보는 성찰 과정은 성찰 일지와 인터뷰에서 찾아볼 수 있었다. 프로그램이 끝난 후 3학년 G 학생의 성찰일지를 분석한 결과, 하천과 관련된 자기 행동을 되돌아보며 이전에는 무심코 지나쳤던 오염 문제에 대해 자각하고 실제 행동 변화가 나타난 점을 확인할 수 있었다. 3학년 I 학생 역시 하천 공간에 대한 인식이 변화하였다고 응답하였다. 그는 단순한 수자원이 아닌 다양한 생물종과 함께 살아가는 생태계로서의 하천 공간을 이해하게 되었으며 그 안에서 발생하는 문제의 심각성에 주목하게 되었다. 이러한 성찰은 학생들의 태도 변화로까지 이어졌으며 환경문제에 대한 민감성과 책임감을 강화하는 계기가 되었다.

마지막으로, 프로그램의 5, 6차시 활동에서 의사소통 기능이 두드러지게 나타났다. 3학년 F 학생은 인터뷰에

서 “다른 사람과 이야기를 나누는 것이 문제를 해결하는데 도움이 된다.”라고 언급하였다. 이 학생은 의사소통이 다양한 해결 방법을 떠올리고 이견을 조율해 가는 과정에서 적절한 대안을 찾는 데 기여했다고 설명하였다. 학생들은 조별 활동이나 발표 과정에서 서로의 의견을 경청하고 협의하며 문제를 함께 해결하는 경험을 통해 의사소통의 가치를 깨달았다.

이러한 결과를 종합하면 프로그램에 참여한 학생들은 지역 하천의 환경문제를 해결하는 과정에서 비판적 사고, 성찰, 의사소통의 세 가지 기능을 적극적으로 활용하였다. 학생들은 주어진 지식을 단순히 수용하는 데 그치지 않고, 스스로 문제를 분석하고 자신의 경험을 되돌아보며 타인과의 소통을 통해 보다 나은 해결책을 모색하는 모습을 보였다. 기능 영역은 생태시민성을 실제 행동으로 연결하는 핵심 기제로 작용한다. 따라서 기능 영역에서의 역량 증진은 생태시민성의 발현에 중요한 토대를 이룬다.

### 4. 태도

생태시민성의 태도는 자신이 속한 환경문제에 대해 적극적으로 관심을 두고, 그 해결을 위해 책임감 있게 참여하려는 자세를 의미한다. 이는 생태시민으로서 자신의 책임과 의무를 다하기 위한 주도적이고 능동적인 마음이 집이다.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태도의 주요 하위 요소인 ‘사회 참여’와 ‘개인 행위 의사’를 중심으로 변화를 분석하였다.

먼저, 사회 참여는 프로그램의 6, 7차시에서 두드러지게 나타났다. 3학년 H 학생의 모습에서 사회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려는 변화를 확인할 수 있었다. 이 학생의 3차시 관찰일지에서 환경문제에 대한 인식은 있었지만, 구체적인 해결 방법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였다. 그러나 6차시 이후 작성한 관찰일지와 성찰일지에서는 문제 해결을 위한 구체적인 방안을 파악하고 이를 실천하려는 태도를 보였다. 이에 대한 심층 인터뷰에서 H 학생은 해결 방법을 배우기 전후 자신의 태도 변화를 명확하게 인식했으며 혼자 행동하는 것보다 협력하는 것이 더 큰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다고 하였다. 이는 사회 참여가 효과적으로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문제 해결에 대한 지식과 기능이 선행되어야 한다는 사실을 시사한다.

다음으로, 7차시 활동을 마무리한 후 개인 행위 의사라

는 태도의 변화를 확인할 수 있었다. 3학년 D 학생은 7차시 활동에 대한 성찰 일지를 통해 자신이 관심을 가진 환경문제에 대해 시민들에게 알리고 다른 환경문제까지 관심의 범위를 확장하겠다는 의지를 보였다. 인터뷰를 통해 D 학생은 이 프로그램을 계기로 주변 환경문제를 인식하였고, 문제 해결을 위해 자발적인 행동을 할 의향이 있다고 언급하였다. 또한 하천 생태계의 지속 가능성을 위해 스스로 실천 계획을 세우려는 의지를 보였다. 이는 단순한 행동 실천을 넘어 생태학적 지식 및 덕성 요소와도 밀접히 연결된 태도 변화로 해석된다. 3학년 A 학생 역시 프로그램 마지막 차시에서 유사한 반응을 보였다. 심층 인터뷰를 통해 A 학생은 생태적 가치와 윤리적 판단을 바탕으로 행동을 선택하고 실행하고자 하는 의욕을 내비쳤으며, 이는 개인 행위 의사 영역에서 내적 의지가 형성되었음을 보여준다.

전반적으로 프로그램에 참여한 다수의 학생은 환경문제 해결을 위한 적극적 참여 태도를 형성하였으며 프로그램 종료 이후에도 자신의 일상에서 환경문제를 발견하면 자발적으로 참여하겠다는 의사를 밝혔다. 이들은 부모의 도움을 받아 실천하거나 공공기관이나 시민들에게 제안하는 방식으로 문제 해결에 참여하려는 의지를 보였다. 또한 환경문제가 개인의 문제가 아닌 공동체의 문제라는 인식을 형성하였고, 그에 따라 협력적 행동의 중요성을 인식하였다. 하지만 학생들이 적극적으로 행동하기 위해서는 해결 방법에 대한 지식적 기반이 충분히 마련되어야 한다는 점도 발견하였다. 참여 학생들은 프로그램에서 제공된 지식 외에 다른 접근 방식을 유연하게 도출하는 데에는 제한을 보였다. 이는 향후 프로그램 설계 시 지식과 실천 간의 연계를 강화하고 다양한 사례를 제공할 필요성을 시사한다.

## V. 결론 및 제언

본 연구는 하천을 환경교육의 장으로 활용한 환경지리 프로그램이 초등학생의 생태시민성 함양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였다. 이를 위해 생태시민성의 핵심 영역인 덕성, 지식, 기능, 태도가 반영된 총 7차시의 프로그램을 설계하여 경기도 남양주시 S 초등학교의 환경지리 동아리 ‘푸름’의 3~5학년 학생을 대상으로 운영하였다. 학생들은 지역 기사 분석, 커뮤니티 매핑, 현장 답사, 아이디어

도출 및 실천 활동 등 일련의 과정을 통해 하천 환경문제를 주체적으로 해결하였다. 프로그램의 효과를 검증하기 위해 참여자 성찰일지, 교사 관찰일지, 심층 면담 자료를 질적으로 분석하였고 생태시민성 네 영역에서 다음과 같은 변화를 확인할 수 있었다.

‘덕성’ 영역에서 학생들의 도덕성이 개인적 관점을 넘어 공동체적·생태적 시각으로 확장되는 변화를 보였다. 학생들은 공공의 이익을 우선시하며 생명 존중과 정의의 가치를 인식하였다. 또한 하천 생태계 동식물의 고통에 공감하며 배려와 책임 있는 실천 의지를 드러냈다. 이러한 변화는 생태시민성의 핵심인 덕성이 교육적 활동을 통해 함양될 수 있음을 보여준다.

‘지식’ 영역에서 학생들은 생태학적 지식에 대해 전반적으로 높은 이해를 보였다. 하천과 주변 환경이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있음을 인식하고 작은 오염이 광범위하게 확산할 수 있다는 점을 깨달았다. 반면 정치적 지식에서는 학년별 차이가 뚜렷하게 나타났다. 3학년은 환경문제 해결을 위한 정치적 과정과 시민 참여의 의미를 이해하는데 어려움을 겪었다. 이에 비해, 5학년 학생은 사회과 학습 경험을 바탕으로 정치적 개념을 이해하고 문제 해결에 적용하는 모습을 보였다. 그러나 사례 수가 적어 일반화에는 주의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결과는 발달 수준에 따라 정치적 지식 관련 학습 효과가 달라짐을 보여주며 단계적 비계 설정과 학년에 적합한 교육 설계의 필요성을 시사한다.

‘기능’ 영역에서 참여자들은 하천 환경문제를 다루는 과정에서 비판적 사고, 성찰, 의사소통 능력을 적극적으로 발휘하였다. 학생들은 단순히 정보를 수용하는 데 그치지 않고 문제를 비판적으로 분석하고 다양한 대안을 평가하며 결론을 도출하였다. 또한 자신의 경험과 행동을 되돌아보며 환경에 대한 책임감을 자각했고 조별 활동과 협력을 통해 의견을 나누고 합리적 해결책을 모색하는 과정을 경험하였다. 이러한 변화는 학생들이 환경문제에 대한 책임감을 자각하고, 이를 캠페인 기획, 제안서 작성, 협력 활동과 같은 실천으로 옮긴 과정에서 드러나듯, 생태시민으로서의 역량이 행동으로 구체화한 상황을 보여준다.

‘태도’ 영역에서는 환경문제를 공동의 과제로 인식하고, 이를 해결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참여하려는 의지를 형성하였다. 사회 참여 측면에서는 협력적 행동의 중요성을 깨닫고 공동의 문제 해결에 동참하려는 태도를 보였

다. 개인 행위 의사 측면에서는 생태적 가치와 윤리적 판단에 근거해 자발적 실천을 선택하려는 내적 동기를 드러냈다. 학생들은 일상에서 환경문제에 관심을 기울이고 교내·외에서 홍보하거나 공공기관에 제안하는 등 다양한 방식으로 실천하려는 의지를 밝혔다. 이러한 변화는 생태시민으로서의 적극적이고 능동적인 태도가 학습을 통해 함양될 수 있음을 보여주며 향후 프로그램 설계 시 지식과 실천의 연계를 강화하고 다양한 사례를 제공할 필요성을 시사한다.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다음과 같은 제언을 도출하였다. 첫째, 본 프로그램은 초등학생의 발달 수준에 맞게 구조화된 환경 지리교육 모델이다. 하지만 학습자의 수준을 고려하여 차시 수, 활동 난이도, 학습 자료를 재구성하여 중·고등학교 등 다른 학교급에서도 활용할 수 있다. 둘째, 하천은 인문환경과 자연환경이 공존하는 교육 공간으로서 환경교육의 장으로 활용 가치가 크다. 학생들은 생활권 안에서 상대적으로 쉽게 접근할 수 있는 하천을 통해 자연과 인간 활동의 상호작용을 체험할 수 있다. 셋째, 정치적 지식은 초등 중학년에 다소 어려운 개념일 수 있다. 본 연구에서 3학년 학생들은 정치적 과정을 이해하는 데에 한계를 보였다. 따라서 내용 수준을 학년에 맞게 조절하거나 구체적인 사례 제시, 단계적 비계 제공 등을 통해 점진적으로 학습하도록 설계해야 한다. 넷째, 본 연구에서 사용한 생태시민성 분석 틀은 고등학생을 대상으로 개발된 것으로 초등학생의 변화를 세밀하게 포착하는데 한계가 있다. 추후 초등학교 학습자의 발달 단계를 반영한 분석 틀을 개발하여 보다 정교하게 프로그램을 설계하고 효과를 평가할 필요가 있다.

본 연구는 지역 하천을 매개로 한 환경지리 프로그램이 초등학생의 생태시민성을 함양하는 데 효과적임을 보여주었다. 생태시민성 함양에 대한 사회적 요구가 크고, 초등학생을 위한 검증된 환경교육 프로그램이 많지 않다는 점에서 본 연구가 기여하는 바가 있다. 다만 소규모 사례 연구라는 점, 특정 지역에 국한된 적용이라는 점에서 한계가 있으므로 일반화에는 신중함이 요구된다. 그러나 본 연구 프로그램의 구조와 교수·학습 전략은 다른 지역과 학년에서도 변형 및 적용이 가능하다는 점에서 확장 가능성을 지닌다. 따라서 향후 본 연구와 유사한 프로그램을 다양한 맥락에 적용하여 타당성을 공고히 하고, 한계를 보완한 후속 연구가 수행될 필요가 있다.

## 참고문헌

- 구순옥·남상준, 2019, “커뮤니티 매핑 기반 참여적 환경지도 제작활동 효과,” 한국지리환경교육학회지, 27(2), 131-145.
- 김민성·유수진, 2016, “목표기반시나리오를 활용한 환경교육 교수·학습 모듈의 개발과 적용,” 한국지역지리학회지, 22(2), 466-482.
- 김병연, 2011, “생태시민성 논의의 지리과 환경 교육적 함의,” 한국지리환경교육학회지, 19(2), 221-234.
- 김병연, 2012, “생태시민성과 지리과 환경교육,” 한국교원대학교 박사학위논문.
- 김소영·남상준, 2012, “생태시민성 개념의 탐색적 논의: 덕성과 기능 및 합의기제를 중심으로,” 환경교육, 25(1), 105-116.
- 김인호·김귀곤, 1998, “환경교육의 장에 대한 교사들의 인식에 관한 연구,” 환경교육학회지, 11(1), 195-216.
- 김정화, 2015, “생태발자국의 의미를 활용한 생태시민성 함양 환경교육 방안 연구,” 한국교원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김주연·이상원, 2017, “은평구의 지역사회 자원을 활용한 환경교육 프로그램 개발 및 적용,” 학습자중심교과교육연구, 17(5), 155-173.
- 김찬국, 2013, “생태시민성 논의와 기후변화교육,” 환경철학, 16, 35-60.
- 김희경·신지혜, 2012, “생태시민성 관점에서의 환경교과 분석,” 한국지리환경교육학회지, 21(1), 125-141.
- 박수경, 2021, “생태시민성 함양을 위한 중학교 영어과 환경 교육 프로그램 개발,” 한국교원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박순열, 2010, “생태시민성(ecological citizenship) 논의의 쟁점과 한국적 함의,” 환경사회학연구 ECO, 14(1), 167-194.
- 박순열, 2012, “기후변화와 호주의 사회·정치적 균열,” 공간과 사회, 22(3), 5-38.
- 박우용, 2020, “고등학교 기후변화 동아리 프로젝트 활동이 생태시민성 함양에 미치는 영향,” 서울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박현진·고현국·권동택, 2023, “생태전환교육에 관한 체계적 문헌 고찰,” 학습자중심교과교육연구, 23(4), 887-901.

- 방윤영·이다혜·문희수·정한나·안새롬, 2022, “생태시민성 기반 환경교육 교재 개발,” *환경교육*, 35(1), 37-54.
- 백순화·정인철, 2003, “문제중심학습을 위한 지리 교수·학습 모형의 설계와 적용,” *한국지리환경교육학회지*, 11(1), 3-41.
- 서우석·나승일·정철영·김수옥, 1999, “초등학교 환경교육 프로그램의 내용 분석,” *농업교육과 인적자원개발*, 31(3), 43-61.
- 서유환·권기욱·박범수·김정호·윤용한, 2014, “생태복원 하천의 유형별 생태적 특성 및 평가 연구,” *한국환경생태학회 학술대회지*, 2014(1), 53-54.
- 유기웅·정종원·김영성·김한별, 2018, 「질적 연구방법의 이해」, 파주: 박영Story.
- 이간용, 2021, “초등 예비교사의 생태시민성 고양 가능성 탐색,” *한국지리환경교육학회지*, 29(4), 1-16.
- 이민부·김정혁·최훈, 2014, “자연지리 답사를 통한 지역화 교육 프로그램의 개발과 운영-미호천 유역 하천 지형을 사례로,” *한국지형학회지*, 21(4), 53-67.
- 이재영, 2013, 「한국 환경교육의 흐름 3: 참여의 시대」, 공주: 공주대학교출판부.
- 이향유, 2010, “초등사회과 지역 환경교육의 구상과 프로그램 개발: 인천지역사례,” *경인교육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장진아·조수진, 2022, “참여적 시민 양성을 위한 장소기반 환경교육 탐색,” *한국지리환경교육학회지*, 30(3), 33-53.
- 환경부, 2002, 「체험환경교육의 이론과 실제」, 서울: 환경부.
- Angiel, J. and Janicki, M., 2010, Restoring the social value of rivers through education: The case of the Vistula river in Warsaw, *Miscellanea Geographica - Regional Studies on Development*, 14, 203-212.
- Barry, J., 1999, *Rethinking Green Politics: Nature, Virtue and Progress*, London: SAGE Publications Ltd.
- Barry, J., 2002, Vulnerability and virtue: democracy, dependency, and ecological stewardship, in Minter, B.A. and Taylor, B.P., eds., *Democracy and the Claims of Nature*, Lanham, MD: Rowman & Littlefield, 133-152.
- Desforges L., 2004, The formation of global citizenship: International non-governmental organisations in Britain, *Political Geography*, 23(5), 549-569.
- Dobson, A., 2003, *Citizenship and the Environment*, New York: Oxford University Press.
- Hayward, T., 2006, Ecological citizenship: Justice, rights and the virtue of resourcefulness, *Environmental Politics*, 15(3), 435-446.
- Jagers, S. and Hammar, H., 2009, Environmental taxation for good and for bad: The efficiency and legitimacy of Sweden's carbon tax, *Environmental Politics*, 18(2), 218-237.
- Karatekin, K. and Uysal, C., 2018, Ecological citizenship scale development study, *International Electronic Journal of Environmental Education*, 8(2), 82-104.
- Kim, M., 2019, Fostering environmental sensitivity by observing everyday environments, *Journal of Geography*, 118(4), 157-168.
- Melo-Escuihuela, C., 2008, Promoting ecological citizenship: Rights, duties and political agency, *ACME: An International Journal for Critical Geographies*, 7(2), 113-134.
- UNESCO, 1977, *Intergovernmental Conference on Environmental Education*, Tbilisi: UNESCO.
- Wolf, J., Brown, K., and Conway, D., 2009, Ecological citizenship and climate change: Perceptions and practice, *Environmental Politics*, 18(4), 503-521.
- Wooltorton, S., Poelina, A., and Collard, L., 2022, River relationships: For the love of rivers, *River Research and Applications*, 38(3), 393-403.
- 교신 : 김민성, 08826, 서울시 관악구 관악로 1, 서울대학교 지리교육과(이메일: geomskim@snu.ac.kr)
- Correspondence: Minsung Kim, 08826, 1 Gwanak-ro, Gwanak-gu, Seoul, South Korea, Department of Geography Education, Seoul National University (Email: geomskim@snu.ac.kr)
- 투고접수일: 2025년 11월 12일  
심사완료일: 2025년 12월 7일  
게재확정일: 2025년 12월 11일



# 도시화 단계 변화의 시공간 패턴 분석: 한국의 개별 도시권을 중심으로(1990-2020)

조대현\* · 박은수\*\* · 유예원\*\*\*

## Spatio-temporal Patterns of Urbanization Stages: Focusing on City-Regions in South Korea (1990-2020)

Daheon Cho\* · Eunsoo Park\*\* · Yewon Yoo\*\*\*

**요약 :** 본 연구는 한국의 도시화 단계를 개별 도시 수준에서 분석하기 위해 새로운 방식으로 공간 단위(중심과 주변)를 설정하고, 실증 분석을 실행하여 그 결과를 해석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한다. 1990~2020년간 10년 간격으로 71개 시에 해당하는 도시권을 분석한 결과, 한국의 도시화는 중심과 주변이 동반 성장하는 단계에서 2010년 이후 중심은 쇠퇴하지만 주변은 성장하는 단계로 이행하는 경향이 뚜렷하였다. 그 추세 속에서도 수도권은 중심 성장의 유지 성향이, 비수도권에서는 중심과 주변이 동반 쇠퇴 경향이 나타났다. 분석 기간 중 개별 도시권의 변화 경로를 살펴본 결과 이론적 모델의 단계를 따라 순차적으로 변화하는 경우도 있지만 특정 단계에의 고착, 역행, 건너뛰기 등 비선형적 패턴이 다수 관찰되어 이론 적용 상의 한계를 파악하였다. 전국적으로, 특히 수도권에서 기존의 중심에 인접한 주변에서의 성장이 두드러져 중심을 능가하는 증가세를 보였지만 경제 활동보다는 주거 기능이 강화된 특성을 보였다. 반면, 일부 인구 감소 도시권을 중심으로 중심이 회복되는 사례도 나타나 재도시화 혹은 컴팩트한 도시 축소로의 진전 가능성도 확인되었다. 본 연구는 한국 도시화 과정의 이질성과 역동성을 규명했다는 점에 의의가 있으며 도시화 단계의 변화에 대한 이론에 새로운 관점을 제시할 것으로 기대된다.

**주요어 :** 도시화, 도시권, 도시화 단계 모델, 공간 순환 모델, DEGURBA

**Abstract :** The primary aim of this study is to examine the urbanization stages of individual South Korean cities by introducing a new core-ring spatial framework and applying it to empirical analysis. An analysis of 71 city-regions at ten-year intervals from 1990 to 2020 reveals a shift from simultaneous growth in cores and rings to a post-2010 trend of core decline with continued ring growth. Within this trend, the Seoul Metropolitan Area tends to maintain core growth, while non-metropolitan regions increasingly show concurrent decline in both cores and rings. An analysis of the temporal trajectories of individual city-regions indicates that, while some follow the theoretical sequence of stages, many show nonlinear paths—such as stage lock in, reversal, or skipping stages—revealing limits in applying existing models. Nationwide, and especially in the Seoul Metropolitan Area, certain ring areas adjacent to established cores showed particularly strong growth that in some cases outpaced the cores; however, this expansion was driven more by residential development than by economic activity. In some population-declining cities, signs of core recovery appeared, suggesting a potential trend toward reurbanization or compact shrinkage. This study demonstrates the heterogeneity and dynamics of South Korea's urbanization process and provides new perspectives on theories of urbanization-stage transitions.

**Key Words :** Urbanization, City-region, Stages of urban development model, Spatial cycle model, DEGURBA

\*경북대학교 지리교육과 부교수(Associate Professor, Department of Geography Education, Kyungpook National University, dhcho@knu.ac.kr)

\*\*가톨릭관동대학교 지리교육과 학사과정(Undergraduate Student, Department of Geography Education, Catholic Kwandong University, esp2082@cku.ac.kr)

\*\*\*경북대학교 지리교육과 학사과정(Undergraduate Student, Department of Geography Education, Kyungpook National University, won478473@knu.ac.kr)

## I. 서론

도시화의 개념은 다양한 측면을 포함할 수 있지만 도시적 장소로의 이동에 의한 인구 집중은 기본적인 과정에 해당한다. 19세기 들어 본격화된 산업화와 함께 20세기를 거치며 전 세계적으로 도시화는 지배적인 흐름이 되었다. 서구에서는 20세기 초반부터 진행된 교외화를 통해 중심 도시로의 집중이 정제되거나 감소하기도 하였지만 교외의 성장으로 도시권의 인구는 지속적으로 성장하였다. 하지만 20세기 후반 이후 도시화의 양상은 지리적으로 상당히 이질적으로 나타나고 있다. 제3세계 국가들에서는 여전히 인구가 증가하는 도시화가 이어지며, 메가 시티(mega cities)로 불리는 거대도시가 나타나기도 하였다. 유럽 등 선진국에서는 여전히 성장하는 도시, 인구 감소가 있었다가 회복하는 도시, 인구 감소가 지속되는 도시 등 다양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관련하여 Geyer and Kontuly(1993)는 도시화 과정에서 도시 간에 성장률이 규모에 따라 달라져가는 차별적 도시화의 개념을 제시하기도 하였다. 국내에서도 이런 이질성은 나타나고 있는데, 국가통계포털에 의하면 국가 전체적으로 도시화율은 아직 감소하고 있지 않지만 수도권과 비수도권 간에는 상반된 흐름이 나타나고 있다.

이와 관련하여, 지난 수십 년간에 이루어진 도시화 과정을 분석하는 연구가 꾸준히 이루어지고 있다. 대체로 국가 전체적인 측면에서의 연구 보다는 개별 도시나 도시권에 대한 연구가 많은데 도시 간의 이질성을 포착할 수 있다는 점에서 바람직한 것으로 판단된다. 이론적 배경 측면에서 이 연구들은 20세기 후반에 활발했던 도시화(혹은 도시 발전) 단계 모델을 토대로 하고 있다. 즉 실제 도시들이 겪고 있는 도시화 과정이 이론적으로 제시된 도시화 과정과 어떤 관계에 있는지를 분석하고자 하였다. 예를 들어 도시 혹은 도시권을 기본적인 분석 단위로 하여, van den Berg 등에 의해 정리된 ‘도시 발전 모델’(van den Berg, 1982) 상의 변화 경로와 실제가 어떻게 다른지 비교하였다. 도시화가 가장 선행된 유럽을 중심으로 한 연구들에서 각 도시권에서의 변화 과정은 이론적으로 가정된 경로를 따르지 않는다는 지적이 보고되고 있다(Parr, 2012; Wolff, 2018; Gil-Alonso et al., 2021). 최근에는 일본이나 중국의 도시에 대한 사례도 유사한 관점으로 다루어지기 시작했다(Kanda et al., 2020; Gu and Sun, 2025). 국내에서도 도시화 단계에 대한 경험 연구가 없지 않지

만, 이론적 모델에 입각해 개별 도시 수준에서 중장기적인 변화 경로를 분석한 연구는 많지 않다. 특히 인구 감소 국면으로 접어드는 시점을 맞이하여 다양한 도시에 대해 개별 도시권 수준에서의 변화 경로가 어떤 패턴을 보이는지 연구할 필요성이 높다.

그런데, 도시화 과정에 대한 경험적 연구에서 제기되는 어려움 중의 하나는 분석을 위한 공간 단위 설정과 관계되어 있다. 도시화 과정에 대한 이론에서 도시화 단계의 파악은 중심과 주변이라는 단위 설정을 요한다. 주변은 통근이나 쇼핑 등의 측면에서 중심에 의존적인 범위로 파악되는데, 통상 일상생활권 혹은 기능적 도시지역(FUR) 등의 개념으로 포착된다. 중심과 주변의 범위나 경계를 구체적으로 무엇을 기준으로 할 것인가에 대해서는 여러 방안이 제시되고 있다(Parr, 2012). 우리나라에서는 시군 수준의 행정구역 경계를 사용해, 중심으로 볼 수 있는 도시(시)와 그 주변으로 구성된 지역을 단위로 연구되고 있다(임재현, 1999; 조해송·정광진, 2022).

하지만 분석 단위를 비교적 큰 단위로 설정하면 주어질 단위(즉, 시나 군) 전역이 중심이거나 주변으로 구분되어야 한다. 대도시 주변에서 진행되는 개발이 기존 도시의 미개발지에서 주로 일어나는 과정을 생각해보면 그 기존 도시를 모두 주변으로 설정하는 것은 불합리하다. 또한 우리나라 지방 도시들은 행정구역 확장이나 통합 등을 통해 과대경계의 성격이 강하고, 특히 중규모의 도시에서 경계를 넘는 통근이 대도시에 비해 저조함을 고려해 볼 때 시군 수준의 경계는 과도한 측면이 있다.

즉, 우리나라 도시들의 도시화 단계를 더 풍부하게 이해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유형의 지역이나 도시에 대한 고려가 필요하고, 이에 적절한 분석 공간 단위의 설정이 요구된다. 즉, 시군구 수준의 행정구역 경계에 기반한 중심-주변의 설정에 대한 대안적 검토가 필요하다. 중심과 주변은 절대적이기보다는 상대적 관계이므로 공간 상에서도 준거에 따라 그 경계가 달리 설정될 수 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최근 제시되는 새로운 도시 설정의 기준을 적용하는 것이 하나의 방안이 될 것으로 생각된다. 특히 2020년 UN 등 다수의 국제기구는 전세계적인 범위에서 도시화와 관련된 현황을 분석할 목적으로 “Degree of Urbanization (이하 DEGURBA라 한다)”로 알려진 도시 설정의 표준적 절차를 승인하여 공표한 바 있다(EU et al., 2021). 우리나라에서도 이에 대한 연구가 시작되고 있어(남상민 등, 2024) 이를 통한 도시화 단계 파악의 가능성을 검토해

볼 가치가 있다.

이런 배경 하에서 본 연구는 도시화 단계 모델을 이론적 배경으로 하여 우리나라에서 개별 도시권 수준에서 진행되고 있는 도시화 단계의 변화 과정을 실증 분석한 후 그 패턴이 드러내는 함의를 제시하는 것을 주목적으로 한다. 이를 위해 먼저 전통적인 도시화 단계 모델을 중심으로 이론적 배경과 관련 선행연구를 정리한다. 이 과정에서 도시화 단계를 실증 분석하기 위해 요구되는 공간 단위의 설정과 분석 방법 또한 집중적으로 검토된다. 이어, 분석 기간 동안 중심과 주변으로 규정될 수 있는 조건을 갖춘 지역을 연구 대상 지역으로 하여, 최근 30년의 기간 동안 도시화 단계의 변화 경로가 보이는 패턴을 분석한다. 분석의 결과는 이론적 논의 및 선행연구와 비교 검토하여 그 함의를 제시한다.

## II. 문헌 연구

### 1. 이론적 배경

본 연구의 핵심적인 이론적 배경은 도시화 단계 모델, 혹은 도시 발전 모델로 잘 알려진 일련의 논의들이다. 도시지리학 개론서(Pacione, 2009; 한국도시지리학회, 2020)에 포함되어 대학에서 가르쳐지고 있을 뿐 아니라 최근에도 관련 연구들이 이어지고 있다. 국내에서 이 이론의 정립 과정은 구동회(2018)에 의해 정리된 바 있다. 그 연구에 의하면 도시화 단계 모델의 핵심 기여자는 Hall, van den Berg, Klassen, Geyer and Kontuly 등으로 1970년대 초반부터 시작해 1980년대 초중반까지 10여 년에 걸쳐 이론으로 정립되어 왔다.

Hall, Klassen, van den Berg의 논의는 중심(도시)과 주변(지역)으로 구성된 대도시권을 중심으로 인구의 증가 및 감소, 집중 및 분산에 의해 변화가 일어나는 과정을 몇 단계로 구분하여 설명한다. 예를 들어 van den Berg의 모델에서는 이 도시권의 변화가 도시화(urbanization) → 교외화(suburbanization) → 탈도시화(disurbanization) → 재도시화(reurbanization)의 단계를 거친다고 본다. 1990년대에 제시된 Geyer and Kontuly(1993)의 논의는 시기에 따라 도시화를 주도하는 도시들이 규모에 따라 차별적임을 강조하며 중주도시단계 → 중도시단계 → 소도시단계와 같은 방식으로 구분하고 있다. Hall의 논의를

제외하면 이들 모델은 대체로 도시 변화의 순환성을 전제한다고 볼 수 있다(구동회, 2018). 즉, 도시는 집중적으로 성장했다가 분산, 감소를 거치지만 다시 집중, 성장하는 순환적 단계를 거친다고 보며, 따라서 해외 연구에서 이는 공간 주기 모델(Spatial Cycle Model, SCM)로 불리기도 한다. 이 연구에서도 아래에서는 편의상 SCM으로 칭하기로 한다.

일부 지역을 중심으로 이미 도시 인구의 감소 경향, 이른바 도시 축소(urban shrinkage)가 일어나고 있는 오늘날의 관점에서 볼 때 쇠퇴 혹은 인구 감소를 겪은 도시가 다시 성장하는 과정으로 이어지는지는 주목해야 할 부분이다. 따라서 최근에 이어지고 있는 경험적 연구들 역시 도시 변화가 이론적 모델에서 제시한 순서를 그대로 따르는지, 탈도시화는 재도시화로 이어지는지에 대해 관심을 두고 있다. 그 연구들을 종합해보면 이론에서 제시했던 경로를 따르는 경우도 있지만 그에서 벗어난 변화도 다양하게 나타나고 있다.

본 연구와 더 직결되는 SCM에 더 초점을 두어 살펴보면 이 순차적 단계를 구분하고 명명하는 방식 또한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있다(Parr, 2012). 교과서적으로 도시 변화는 4단계를 거치는데, 예를 들어 중심도시와 촌락으로 구성된 지역이 있는 경우에 ‘탈도시화’는 구체적으로 무엇을 의미하는지 혼란이 생길 수 있다는 것이다. 나아가, 각 단계마다 절대적/상대적으로 세분하여 ‘절대적 집중 도시화’, ‘상대적 분산탈도시화’와 같은 유형으로 구분된다. 절대적과 상대적의 구분은 중심에서의 인구 변화와 주변에서의 인구 변화가 상반되는 경우를 나타내지만, ‘절대적 분산탈도시화’와 같은 구분이 중심과 주변 모두의 인구 감소를 일컫는지 명확하지 못하다. 따라서 일부 연구자들은 성장과 감소, 집중과 분산을 직접적으로 사용하여, “집중형 성장”, “분산형 감소”와 같은 명칭의 사용을 제안하고 있다(Parr, 2012; Wolff, 2018).

### 2. 선행연구 동향

SCM과 관련된 선행연구의 동향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이 연구들은 대체로 SCM의 이론이나 방법론에 대한 비판 및 수정, 확장을 꾀하는 연구, SCM 모델을 토대로 경험적으로 분석한 후 현황을 파악하거나 이론과 비교하는 연구로 구분해 볼 수 있다.

먼저, 교과서적인 SCM에 대해 이론적, 방법론적, 경

험적인 측면에서 문제를 제기하는 연구가 이루어졌다. Nyström(1992)은 SCM에서 가정하는 순환에 대해 일찍부터 문제제기를 하였다. 특히 1980년대 북유럽을 근거로 재도시화 단계가 필연적인 것이 아니라 여러 가능성 중 하나일 뿐이라고 주장하였다. 더불어 중심과 주변의 경계 설정을 어떻게 할 것인지, 그리고 인구가동 등에 대한 고려 없이 인구변화만으로 도시화 단계를 판단할 수 있느냐와 같은 방법론적 이슈도 제기하였다. Parr(2012)의 경우 SCM에서 중심-주변의 공간 단위를 설정하기 위한 3가지 방안에 대해 살펴본 후, 중심과 주변의 인구 변화를 절대 인구 수로 하기보다는 변화율로 측정하고, 그에 따라 도시 변화 양상을 구분하는 대안적 방법을 제안하였다. 나아가 전통적인 SCM에서 전제하는 순차적, 순환적 단계 변화는 지켜지기 어려운 가정임을 비판하며, 다양한 방식의 변화 경로를 다루어야 함을 주장하였다.

SCM의 기본 아이디어는 수용하지만 오늘날의 상황에 적합하도록 개념과 분석 틀의 수정이 요구됨을 주장하고 실제 대안을 제안, 적용하는 연구들도 이루어졌다. Wolff(2018)는 전통적 SCM이 도시 축소라는 현대적 과제를 설명하는 데 한계가 있다고 보고, 전통적인 SCM(8단계)과 Cheshire(4단계) 모델을 결합한 '수정된 4단계 모델'(중심에 초점을 두어 성장과 쇠퇴, 집중과 분산을 조합, 4가지로 유형화)를 제안하였다. 그리고 이를 유럽의 도시화에 실제 적용하여 고전적 SCM 모델에서 벗어나는 변화가 많았다는 점, 그리고 도시 간에 성장과 축소, 집중과 분산에 있어 양극화 경향이 나타나는 점을 관찰하였다. Humer *et al.*(2022)은 SCM이 단핵 도시에만 유효하다고 비판하며, 다중심 도시 지역(PURs)이라는 공간구조 초점을 두어 SCM에서 가정하는 중심과 주변의 상반적인 순환은 깨지는 대신 도시권 전체가 동반 성장 혹은 쇠퇴하는 동시 도시화(syncurbanization) 현상이 나타나는 것으로 결론지었다.

다음으로 SCM을 기반으로 유럽, 일본, 중국, 한국 등을 대상으로 다양한 경험 연구가 수행되었으며 그 동향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먼저 Kim *et al.*(2007), Kanda *et al.*(2020), Kawabe and Watanabe(2021)은 일본의 도시들에 대해, 시기별로 도시화 단계의 유형을 분석하였다. Kim *et al.*(2007)은 1970년대까지 교외화가 지배적이었다가 1980년대 이후 탈도시화와 재도시화가 증가하는 거시적 흐름을 포착하였다. Kawabe and Watanabe(2021)는 격자 기반의 고밀 시가화구역, 즉 '상대적 인구 집중 구역

(RDID)'을 토대로 중심-주변을 설정, 2005년 이후 일본 도시들이 전반적으로 재도시화 단계의 '상대적 중심화'(즉, 전체 인구 감소 속에서 도심 집중) 경향으로 전환되었음을 파악하였다. Kanda *et al.*(2020)은 통근에 기반한 도시권을 설정하여, SCM이 가정한 순서에서는 벗어났지만 2000년을 기점으로 대도시는 도심 재집중 경향이, 중소도시는 교외의 축소에 의한 재도시화가 나타남을 보고하였다.

유럽을 대상으로 한 연구들에서, Wolff(2018)는 성장 도시 내에서는 중심화(영국, 독일)와 탈중심화(서/남유럽)가 동시에 나타나는 양극화가, 축소 도시들 내에서는 도심보다 배후지가 더 빨리 비워지면서 나타나는 중심화 경향이 뚜렷한 것으로 분석하였다. Dembski *et al.*(2021)은 재도시화에 초점을 두어 8개 유럽 대도시권에 SCM을 적용, 지역 간에 이질적인 경향을 관찰하였다. 즉 영국이나 독일은 도심 재집중 경향이 비교적 강하지만 프랑스는 여전히 교외 성장이 강한 특성을 보인다는 것이다. 또한, 성장하는 대도시권은 도심과 교외의 동반 성장의 패턴이, 탈산업화 도시권의 경우 도심은 집중, 교외는 쇠퇴 패턴이 나타남을 지적하면서, SCM의 단편적 속성만으로는 포괄되기 어려운 다양성을 강조하였다. Gil-Alonso *et al.*(2021)은 스페인 69개 FUA에 SCM을 적용한 후, 경제 위기, 주택 시장 등 외적 요인으로 인해 도시 궤적이 매우 이질적이고 파편화되어, SCM이 더 이상 유용하지 않음을 비판하였다.

중국을 연구한 Gu and Sun(2025)은 상하이로 사례로 177년 장기 시계열 분석을 통해 상하이는 SCM에서 '탈도시화' 단계를 건너뛰었으며, 전 과정이 압축적으로 진행되었음을 강조하였다. 또한 SCM이 가정하는 시장 논리보다 '정부 개입'과 '지역 간 이주민'이 단계 전환의 핵심 동력이었던 것으로 분석하였다. 우리나라에서는 임재현(1999)이 전국 50개 도시를 대상으로 1975~1985년 간에 대한 도시화 단계를 분석하여 대부분이 8단계 중 1, 2 단계에, 서울을 비롯해 10개 정도가 3단계에 해당하는 것으로 파악하였다. 조해송·정광진(2022)은 수도권 1기 신도시를 중심으로, 인접한 지역을 주변으로 설정하여 1990~2020년 간의 도시화 단계를 분석하여 도시간 이질성을 보고하였다. 남진 등(2015)은 중심과 주변의 범위를 대도시 경계로 국한하면서 중심은 대도시의 과거 핵심부, 그리고 나머지를 주변으로 설정하여 도시화 단계 변화를 1975~2010년까지 5년 간격으로 분석하였다.

표 1. SCM 기반의 경험 연구

연구자	연구 내용
Humer <i>et al.</i> (2022)	핀란드, 오스트리아, 네덜란드 FURs의 장기(1961-2011) 인구 변화에 SCM 적용 결과, 네덜란드(다중심 도시지역)에서 '동시 도시화' 현상 발견
Wolff(2018)	유럽 36개국 2,733개 기능적 도시지역(FURs)의 인구 데이터(1990-2010)에 수정 SCM 모델 적용, 유럽 도시들의 성장/축소에 따른 (탈)중심화 패턴을 경험적으로 분석
Kim <i>et al.</i> (2007)	일본 269개 도시권에 대해 1km <sup>2</sup> 격자 토대로 '중심부'(2,500명/km <sup>2</sup> 이상 기준)를 설정하고 SCM 단계를 적용하여 1970-2000년 일본 도시권 변화 분석.
Kawabe and Watanabe(2021)	상대적 인구 집중구역(RDID)을 '중심'으로 설정, SCM 단계를 적용하여 1995-2015년 일본 도시의 단계 변화 양상 분석
Dembski <i>et al.</i> (2021)	SCM을 기본 분석틀로 사용, 영국, 프랑스, 독일, 네덜란드 4개국, 8개 대도시권의 재도시화 현상에 초점을 두어 비교 분석
Gil-Alonso <i>et al.</i> (2021)	SCM(4단계)을 기준으로 스페인 69개 기능적 도시지역(FUA)의 중심도시-주변 인구 변화(2011-2019)를 분석, SCM과 비교
Gu and Sun(2025)	상하이를 사례로 177년(1843-2020)간 중심과 주변의 인구 변화를 분석, SCM 단계 적용하여 유사점과 차이점 분석
Kanda <i>et al.</i> (2020)	113개 도시 고용권(UEA)을 대상으로 중심과 교외의 인구 변화율 산포도(X축 중심, Y축 교외)를 분석, 일본의 도시 구조가 SCM를 따랐는지 검토
임재현(1999)	1975-1985년간 우리나라 50개 도시권(시를 중심으로, 인접지역을 주변으로 설정. 도농통합시의 경우 통합 전 시를 중심으로 통합적 주변 군을 주변으로 설정)을 대상으로 SCM의 단계 유형을 분석, 대부분의 도시들은 8단계 중 1, 2단계에 속하는 것으로 판단
남진 등(2015)	서울, 부산, 대구, 광주, 대전을 대상으로 시의 핵심부를 중심으로 시의 나머지를 주변으로 설정하여 1975-2010년間に 5년간의 도시화 단계 변화를 분석하고 이를 Geyer and Kontuly의 차별적 도시화 모델과 비교
조해송·정광진(2022)	수도권 1기 신도시를 중심으로, 그 주변 시를 주변으로 설정하여 1990-2020년간 5년 간격으로 도시화단계 분석하여 도시화 단계의 변화가 도시마다 달리 나타남을 분석

### III. 연구 방법

#### 1. 분석을 위한 공간 단위의 설정

전술한 바와 같이 개별 도시 수준에서 도시화 진행 단계를 파악하기 위해서는 중심과 주변으로 이루어진 공간 단위의 설정이 필요하다. 중심과 주변의 관계는 상대적이고, 따라서 공간적 스케일에 따라 다양한 수준을 생각해볼 수 있다. 이와 관련하여 Parr(2012)는 SCM을 위한 공간 단위 설정을 3가지 수준으로 제시한 바 있다. 먼저, 중심과 주변으로 구성된 구역의 최대 범위로 가장 보편적인 것은 기능적 도시 지역(Functional Urban Region, FUR)이다. 중심은 보통 도시 규모로 행정구역 등의 정치적 경계를 통해 정의되고, 주변은 통근 범위로 설정된다. 미국의 대도시 통계 지역(Metropolitan Statistical Area, MSA) 혹은 EU-OECD의 FUR(Dijkstra *et al.*, 2019) 등

이 이에 해당한다. 두 번째로는 확장된 도시(Extended City)를 최대 범위로 할 수 있다. 중심은 건조환경을 통해 시가화된 범위를, 주변부는 일상생활의 영향권으로 통상 FUR보다는 범위가 좁다. 마지막으로 물리적 도시(Built City, BC)를 최대 범위로 하는 경우이다. 중심과 주변 모두 시가화 구역 경계 내로 한정되는데, 중심은 도시 내에서 기능적, 정치적, 역사적 중요성을 지닌 핵심 구역, 나머지는 주변으로 설정하는 방식이다. 국내에서 있었던 선행연구 중에 남진 등(2015)의 연구에서 채택된 방법이다.

본 연구에서는 도시화의 단계를 FUR보다는 더 세밀하게 하면서도 통근이나 일상생활에서의 상호작용을 고려하여 범위를 설정하고자 하였다. 서론에서 지적한 바와 같이 중심과 주변을 구성하는 단위로 시군 경계를 사용하는 경우 개별 도시, 특히 지방 도시들의 도시화 단계 특성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할 가능성이 높다. 일반적으로 중심도시가 성장하는 과정에서 경계를 넘어 인근 도시에 새로운

‘신도시’가 개발될 때 그 지역은 ‘교외’로 인식되는 경향이 있다. 그런데, 시군 수준의 단위를 적용하면 이 새로운 도시지역을 포함하는 시 전역이 주변으로 설정될 수 있다. 이런 접근이 근거가 없는 것은 아니지만 주변으로 설정된 지역에 원래 있던 도시지역은 무시되거나 그 지역 자체를 중심으로 한 도시화 과정은 파악하지 못하게 된다.

또한 우리나라의 지방에 있는 도시들은 행정구역의 경계를 넘어 시가지가 팽창되거나 통근과 같은 의존적 관계를 보이지 않는 경우들이 많다. 우리나라의 많은 지방 도시는 행정구역이 통합되며 확대되는 변화를 겪었다. 1990년대 이후 부산이나 대구와 같은 대도시들은 시가지 팽창과 더불어 주변 행정구역을 병합하는 방식으로 경계를 확장하였다. 중규모의 도시(시) 역시, 주변의 촌락(군)과 분리되어 있다가 도농복합(도농통합) 시의 형태로 변모되었는데, 그 수가 수십 개(1995년에만 40개)에 달한다. 따라서, 비교적 좁은 시가지구역과 넓은 촌락으로 구성되는 지방 도시에 대해 시군 경계 단위로 중심과 주변을 설정하는 것은 불합리한 측면이 강하다.

이를 고려하여 본 연구에서는 Parr(2012)가 제시한 방안 중 2번째 유형에 가깝게 공간 단위를 설정하고자 한다. 도시화의 단계를 개별 ‘시’ 수준에서 파악하기 위해, 중심의 최대 범위는 시군 경계 내로 한정한다. 중심의 공간 범위를 설정하기 위한 구체적인 방법은 전술한 DEGURBA를 활용한다(EU et al., 2021). DEGURBA는 도시 설정의 기준이 국가 간에 상이한 문제를 해소하고자 지리적 시와 도시의 법정 경계 간의 불일치를 가능한 줄이기 위한 시도로 볼 수 있다. 구체적으로 DEGURBA는 고밀 주거지의 파악을 통해 취락의 유형을 City나 Town, 우리나라의 시와 같은 행정 단위로 유형화할 수 있는 방법을 제시하는데, 이 연구에서는 City를 규정하는 방안을 사용한다. 본 연구에서의 DEGURBA를 사용하는 것은 “도시”를 정의하기보다는 지리적 시에 보다 충실하여 중심을 설정하기 위한 것임을 밝혀둔다.

DEGURBA를 통한 City 설정은 다음과 같은 단계로 이루어진다. 먼저 인구수 그리드(1km<sup>2</sup> 셀) 데이터를 활용해, 인구밀도가 1,500명/km<sup>2</sup> 이상인 셀을 선택하고 그 셀들의 공간적 연속체를 파악한다. 그 연속체의 인구가 5만 명 이상인 경우 “도심(Urban center)”으로 명명한다. City는 이 도심을 포괄하는 실용적 공간 단위를 이용해 경계를 정하는데, 일반적으로 행정구역이나 통계구역 등을 사용하되, 원칙적으로 소규모 단위를 우선한다. 이때

특정 공간 단위가 City가 되는지 여부는 사용한 공간 단위의 인구 50%가 이 도심 내에 거주하는가로 판단한다. 즉, 사용한 소규모 공간 단위의 주민 50%가 도심 내에 포함된 단위는 “City”로 규정할 수 있다. 우리나라 읍면동과 같이 소규모의 단위를 사용하는 경우 같은 도심에 대해 조건을 충족하는 구역이 다수일 수 있고, 이때 적절한 처리 방식이 요구된다. 본 연구에서는 조건을 충족한 구역(읍면동)들의 공간적 연속체를 City, 즉 중심으로 파악하되, 이것이 시군의 경계를 넘지 않도록 하였다.

그런데, 이와 같은 방식에 따르면 중심(City)의 경계는 분석하는 기준 시점의 인구 분포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시계열적인 변화를 파악하기 위해 중심의 경계를 고정하고자 하였다. 우리나라는 지역에 따라 분석 시점 당시 City를 보유하고 있는 곳과 그렇지 않은 곳, 시간이 지나며 City를 새로 보유하고 되거나 사라지는 곳이 있다. 이를 고려하여, 분석 기간 중 City가 최초로 파악되는 시점의 공간 범위를 중심의 경계로 삼아 모든 시점에 고정적으로 사용하였으며, City가 한번도 존재하지 않았던 시군은 분석에서 제외하였다. 한편, 이 중심과 연계되는 주변은 중심의 외부 지역으로 규정하되 중심으로부터의 영향권 범위를 고려하였다. 영향권은 통근 거리를 기준으로 설정하였는데, 2024년 통근 근로자 통계(통계청, 2024)의 전국 평균 통근거리를 참조하여 17km로 적용하였다. 결과적으로 각 중심의 경계로부터 17km까지를 주변으로 설정하였는데, 하나의 비중심 지역은 둘 이상 중심의 주변으로 설정될 수 있다.

## 2. 데이터 처리 및 분석 방법

전국의 전체 167개 시군(특별시, 광역시, 특별자치시, 시, 군)을 대상으로, 앞서 살펴본 방식으로 분석 기간 중 City에 해당하는 중심을 포함했던 71개 시만을 선택하여 분석하였다. 분석을 위한 시간 범위는 격자 데이터의 구축 가능성과 수도권 1기 신도시 개발을 고려하여 1990년을 시작으로 2020년까지 30년으로 하였으며 10년 간격으로 도시화 단계를 파악하여 그 변화 양상을 구분하였다.

분석을 위한 최종 데이터는 1km<sup>2</sup> 해상도의 인구 격자인데, 이를 위해 2000년 이후는 읍면동별 센서스 및 통계청의 인구 격자 데이터(100m×100m)를 가공하여 사용하였다. 1990년의 경우 통계청의 격자 데이터가 부재하여 관

런 데이터를 종합 활용하여 추정하였다. 우선 EU에서 추진하고 있는 Global Human Settlement Layer(GHSL) 프로젝트의 인구 격자 데이터(European Commission, 2024)를 다운받아 검토하였다. GHSL 프로젝트는 전 세계를 대상으로 인공위성 영상 데이터 등을 바탕으로 토지피복, 인구, 건축물 등에 대한 정보를 다양한 크기의 격자 데이터로 배포하고 있다. GHSL이 지원하는 최고 해상도 데이터(100m×100m)를 사용해 셀에 포함된 인구를 1990년의 읍면동 단위로 합역 후 그 값을 인구센서스와 비교하였는데, 읍면동에 따라서 다소 차이를 보였다. 따라서, GHSL 각 셀별 인구가 해당 읍면동 인구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계산해 1990년 인구센서스 상의 인구(읍면동)를 셀 단위로 재배분하였고, 이를 다시 1km<sup>2</sup> 단위의 셀 단위로 합역하였다. 2000년 이후의 데이터 역시 읍면동 수준으로 집계하여 센서스와 비교하면 다소 차이가 있는데다 시점 간에 그 차이의 정도가 일정치 않았다. 따라서 기존 100미터 격자의 셀 인구가 해당 읍면동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참조해 센서스 인구(읍면동)를 배분한 후 1km<sup>2</sup> 단위로 합역하는 방식으로 통일성을 기하였다. 더 고려한 점은 시점마다 중심과 주변의 설정에 사용되는 읍면동 경계가 달라지므로 각 시점별 격자(100미터) 인구에 2020년의 읍면동 정보를 할당하여 활용하다는 것이다. 따라서 모든 시점 간에 2020년 기준의 읍면동 경계를 활용해 중심과 주변의 설정이 이루어졌다.

개별 도시권에 대한 도시화 단계는 중심과 주변에 포함되는 인구의 변화로 파악하였다. Klassen, van den Berg 등의 SCM 모델에서는 중심과 주변의 절대 인구 수 변화를 토대로 모두 4단계, 8가지 유형으로 단계를 구분하고 있다. 경험 연구 중 Kim *et al.*(2007), Kawabe and

Watanabe(2021)는 실제 분석에서 절대 인구 수 변화를 사용한 것으로 파악된다. 하지만 Parr(2012) 등은 절대 인구 수보다는 증감률이 대안적으로 사용가능함을 주장하였으며, Wolff(2018)는 실제 증감률을 사용해 분석하였다. 이 연구에서는 전술한 바와 같이 분석 기간 중 중심이 최초로 등장한 시점의 경계를 고정적으로 사용하되, 인구변화는 1990~2000년, 2000~2010년, 2010~2020년에 대해 절대 수와 증가율로 파악하여 비교하였다. 절대 인구 수 변화로 도시화 단계를 파악한 결과는 SSCM(Standardized SCM), 인구증감률로 도시화 단계를 파악한 결과는 ASCM(Alternative SCM)으로 표기한다. 우리나라 도시권에서의 경험적 변화를 SCM의 이론적 변화와 비교하기 위해 8가지 유형을 그대로 사용하였다. SSCM이나 Parr(2012)에서는 4단계 구분을 유지하고 있지만 이 연구에서는 국내 도시가 성장과 축소의 양극화를 겪고 있음에 초점을 두어 Wolff(2018)를 참조, 중심의 성장 및 쇠퇴, 도시권 내에서의 집중과 분산(절대 및 상대)의 조합을 통해 유형의 의미를 해석할 수 있는 형태로 제시하였다(표 3). 세부 유형은 중심과 주변의 인구 증감(률) 및 도시권 전체의 인구 증감(률)을 통해 결정된다. 절대집중은 주변은 감소하지만 중심이 성장하는 경우, 상대집중은 중심이 더 성장하는 경우, 절대분산은 중심은 감소하지만 주변이 성장하는 경우, 상대분산은 중심보다 주변이 더 성장하는 경우를 말한다. 집중과 분석에서 숫자 2는 1에 비해 그 정도가 더함을 의미한다. 이는 “절대적 분산형 탈도시화”와 같은 표현이 갖는 모호함이나, “교외화”와 같은 용어에서 교외가 무엇을 말하는지에 대한 논란을 줄이기 위함이기도 하다. 인구 수 변화를 나타내는 표기는 Pacione(2009) 및 Parr(2012)를 종합하여 가공, 정리한 것이다.

표 2 데이터 목록

구분	데이터원	공간단위	시점
통계청 인구 격자 통계	SGIS	1km, 100m	2000, 2010, 2020
GHS population grid (R2023)	GHSL	100m	1990
총인구	인구주택총조사(KOSIS)	시군, 읍면동	1990, 2000, 2010, 2020
연령별 인구, 외국인	인구주택총조사(KOSIS)	시군 읍면동	2000, 2020 2020
총주택 및 아파트	인구주택총조사(KOSIS)	시군 읍면동	2000, 2020 2020
사업체 및 총조사	경제총조사(KOSIS)	시군 읍면동	2000, 2020 2020
인구이동	국내인구이동통계(KOSIS)	시군	2000~2020

표 3. 도시화 단계 구분 방법

구분		SSCM(인구 수 증감 기준)				ASCM(인구 증감률 기준)			
		단계	중심	주변	도시권	단계	중심	주변	도시권
유형1	중심성장 & 절대집중2	도시화 (절대적)	++	-	+	집중&최종 성장(1)	+	-	$g=*$
			$C> R , G>0$				$c> r $		
유형2	중심성장 & 상대집중	도시화 (상대적)	++	+	+++	집중&최종 성장(2)	++	+	$g>0$
			$C>R, G>0$				$c>r$		
유형3	중심성장 & 상대분산	교외화 (상대적)	+	++	+++	분산&초기 성장(1)	+	++	$g>0$
			$C<R, G>0$				$c<r$		
유형4	중심쇠퇴 & 절대분산1	교외화 (절대적)	-	++	+	분산&초기 성장(2)	-	+	$g=*$
			$ C <R, G>0$				$ c <r$		
유형5	중심쇠퇴 & 절대분산2	탈도시화 (절대적)	--	+	-	분산&최종 쇠퇴(1)	--	+	$g=*$
			$ C >R, G<0$				$ c >r$		
유형6	중심쇠퇴 & 상대분산	탈도시화 (상대적)	--	-	---	분산&최종 쇠퇴(2)	--	-	$g<0$
			$ C > R , G<0$				$ c > r $		
유형7	중심쇠퇴 & 상대집중	재도시화 (상대적)	-	--	---	집중&초기 쇠퇴(1)	-	--	$g<0$
			$ C < R , G<0$				$ c < r $		
유형8	중심성장 & 절대집중1	재도시화 (절대적)	+	--	-	집중&초기 쇠퇴(2)	+	--	$g=*$
			$C< R , G<0$				$c< r $		

\* 표에서 +는 증가, -는 감소, C와 c는 중심의 인구 증감량 및 증감률, R과 r은 주변의 인구 증감량 및 증감률, G와 g는 도시권 전체의 인구 증감량 및 증감률을 나타낸다. ASCM의 도시권에 표기된 \*는 중심과 주변의 인구 분포에 따라 증가나 감소로 그 결과가 달라질 수 있음을 의미한다. +와 -의 개수는 증가량이나 증가율의 상대적인 크기를 의미한다. 예를 들어 ++는 +에 비해 더 큰 증가를 나타내며, -에 비해서는 감소를 상쇄하고도 남는 증가임을 말한다. 가능한 전통적 SCM과 부합하도록 두 시점 간 인구 변화가 미미한 경우에 대해서는 별도 고려하지 않았다.

#### IV. 분석 결과

##### 1. 시기별 도시화 단계의 패턴

중심과 주변의 절대 인구 수 변화와 인구 증감률을 사용해 시기별(1990~2000년, 2000~2010년, 2010~2020년)로 71개 도시권에 대한 도시화 단계 유형을 구분하였다(그림 1). 먼저, SSCM 기준의 결과를 보면, 전국적으로 2010년까지 가장 많은 유형은 유형3(중심과 주변 모두 성장하되 주변의 증가가 더 강한 중심성장 & 상대분산)(1990~2000년 50.7%, 2000~2010년 46.5%)이었다. 2010~2020년 간에 변화가 상대적으로 더 컸는데, 중심은 감소하지만 주변의 성장이 더 커 도시권의 총인구가 늘는 유형 4(중심쇠퇴 & 절대분산1)가 가장 많은 빈도(53.5%)를 차지하였다. 1990년대에 이미 전국적으로 도시화가 성숙 단계에 도달하면서 주변으로의 분산 경향이 나타났고, 2000년대 이후 그 정도가 더 강해졌다고 볼 수 있다. 특히, 중심의 성장을 동반하는 분산보다는 중심이 쇠퇴하는 분산은 도시권 내에서의 인구의 재배치를 시사한다. 전반적으로

유형3과 7(중심과 주변 모두 감소하되 주변의 감소가 더 큰 중심쇠퇴 & 상대집중)은 감소하고, 유형4와 5(중심의 감소가 주변의 증가를 초월하는 중심쇠퇴 & 절대분산2), 8(중심은 다시 성장하지만 주변은 감소하는 중심성장 & 절대집중1)의 비중이 늘어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ASCM을 SSCM과 비교해보면 전체적인 패턴은 거의 유사하게 나타나고 있다. 두 결과가 일치하는 도시권의 비중은 1990~2000년 71.8%, 2000~2010년 76.1%, 2010~2020년 78.9% 수준으로 나타났다. 두 방식 간에 차이를 보인 경우에서 가장 빈번한 사례를 살펴보면, SSCM의 유형3이 ASCM의 유형2로 구분되는 경우, SSCM의 유형5가 ASCM의 유형6(중심쇠퇴 & 상대분산)으로 구분되는 경우가 대부분을 차지하였다. 전자는 중심의 인구 증가가 주변에 비해 크지 않지만 증가율이 더 큰 경우이고, 후자는 중심의 인구 감소가 주변에 비해 크지 않지만 감소율이 더 큰 경우에 해당하는데, 후자에 비해 전자가 2배 이상 많다. 예를 들어 전자에 해당하는 경기도 양주의 경우, 2000~2010년에 중심은 7만4천, 주변은 13만 정도의 증가가 있었는데, 증가율로 나타내면 각각 약 222%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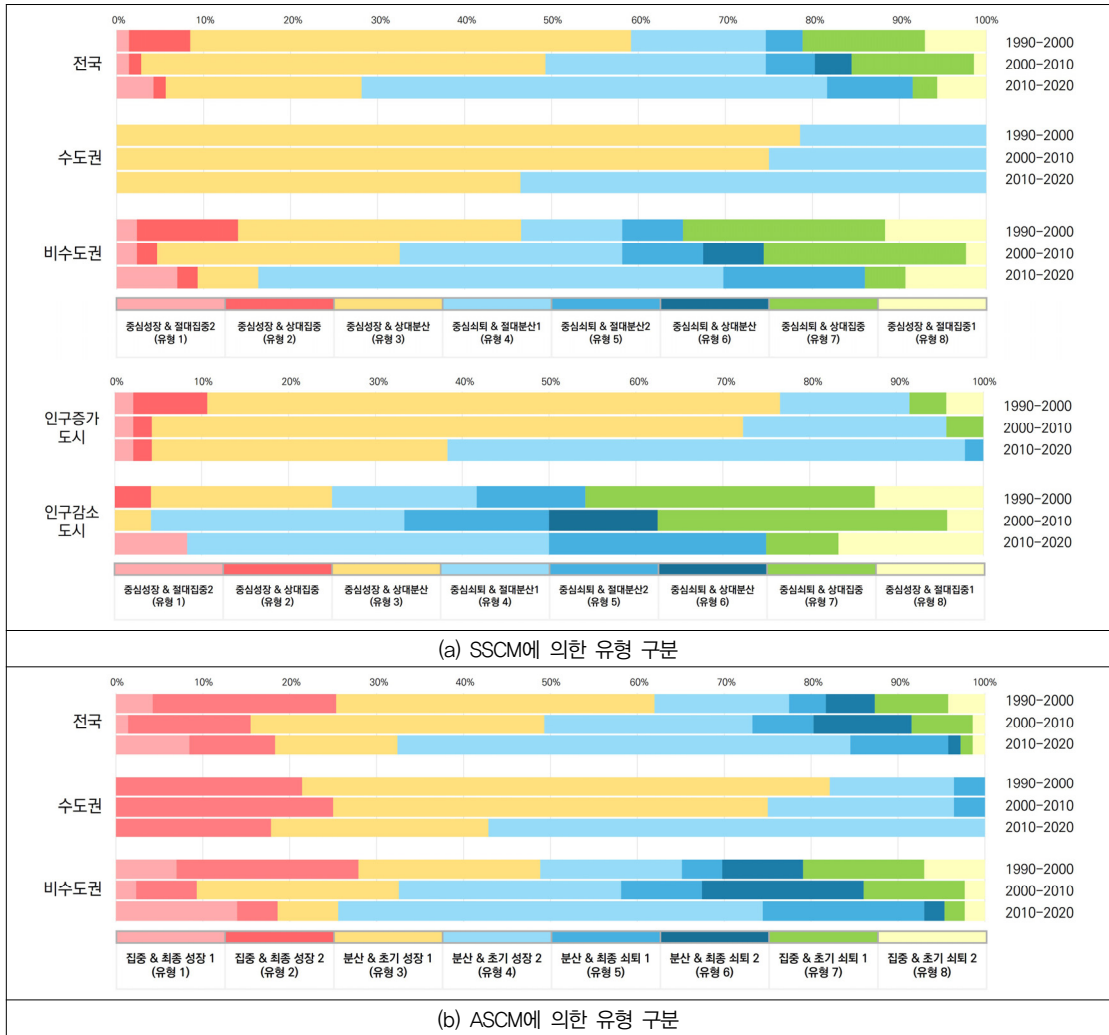


그림 1. 시기별 도시화 단계의 유형

24%에 해당한다. 이런 사유로 ASCM에서는 특히 수도권에 소재한 도시들이 유형3보다는 유형2로 분류되어 분산보다는 중심으로의 집중이 상대적으로 강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상 두 방법 간에 단계가 바뀌는 등의 심대한 차이는 없는 것으로 판단하여, 아래의 분석은 이해도가 높은 SSCM을 기준으로 정리하였다.

SSCM 기준으로 수도권에 위치한 도시들은 모두 유형3과 유형4 두 유형에만 해당하였다. 2010년까지는 유형3이 훨씬 많았지만(82.1%와 75.0%), 2010~2020년에는 유형4가 57.1%로 조금 더 많았다. 비수도권의 경우 가장 빈도가 높은 경우는 앞서와 동일하지만 비중이 크지 않다(1990~2000년 유형3 30.2%, 2000~2010년 유형3 27.9%,

2010~2020년 유형4 51.2%). 대신 유형5, 유형8, 유형1의 비중이 상대적으로 높아 비교적 다양한 유형을 보여준다.

수도권과 비수도권 간의 차이에 있어 성장하는 도시와 축소되는 도시 간의 비교를 위해 중심 도시를 포함하는 도시(시)의 인구 증감을 기준으로 유형의 변화를 살펴보았다. 인구가 성장하는 시에서는 중심과 주변이 함께 성장하는 유형3이 지배적이다가 유형4가 지배적으로 변모하여 전국이나 수도권과 유사한 패턴을 보였다. 인구가 감소하는 시에서는 2000~2010년까지 유형3에 비해 중심과 주변이 모두 쇠퇴하는 유형7의 비중이 가장 높다가 2010~2020년에 중심은 쇠퇴하지만 주변이 성장하는 유형4, 유형5, 유형8의 비중이 높아지고 있다. 1990~2000년에 중심

이 쇠퇴하는 도시가 63% 가량이었다가 2000~2010년에 정점(92%)에 달한 후 2010~2020년 간에 다소 회복하여, 중심이 다시 성장하는 유형의 도시가 25%까지로 늘었다. 시기별 도시화 단계를 공간적 분포에 초점을 두어 조금

더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그림 2). 1990~2000년에는 서울, 대구, 광주에 유형4, 부산은 유형5처럼 대도시의 중심이 쇠퇴하는 경향이 강했다. 그리고 그 대도시 주변으로 유형3이 넓게 군집을 이루고 있으며, 주변이 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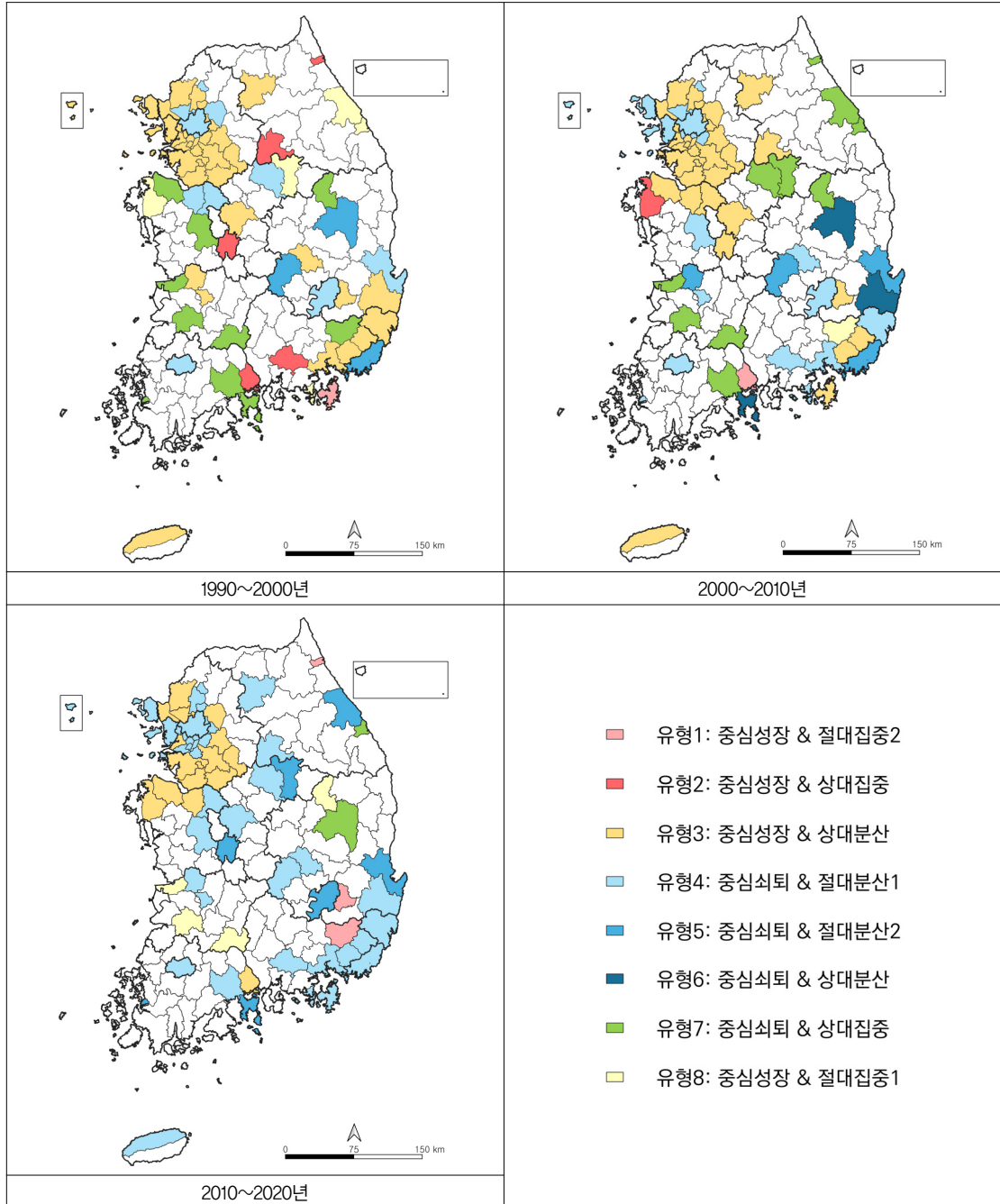


그림 2 시기별 도시화 단계(SSCM)의 분포 패턴

되지만 중심은 덜 쇠퇴하거나 성장하는 도시권은 흩어져 산재하는 모습이다. 2000~2010년에도 이런 패턴이 유지되면서도 주변은 성장을 유지하지만 중심은 쇠퇴하는 유형4가 대도시 주변(특히 부산)으로 더 확대되는 모습이다. 2010~2020년에는 유형4로 변모하는 도시권이 서울과 부산을 중심으로 군집을 이루며 더욱 확대되고 전국적으로도 연속된 도시권이 산재하는 등 지배적인 패턴을 이루고 있다. 그런 가운데, 수도권에서는 여전히 유형3에 해당하는 도시권이 안정적으로 유지되며 유형4에 해당하는 서울 및 주변의 도시권을 둘러싸는 모습을 유지하고 있다.

개별 도시권의 도시화 단계의 시점 간 변화를 중심과 주변의 증감에 초점을 두어 살펴본 결과는 다음과 같다. 먼저, 중심을 위주로 중심이 증가하는 경우와 감소하는 경우로만 구분해 살펴보면, 전국적으로 중심의 인구가 증가하는 도시권은 크게 감소하면서 줄어드는 도시권은 크게 늘었다. 중심의 인구가 감소하는 유형(유형4-유형7)이 33.8%(1990~2000)에서 66.2%(2010~2020)로 두 배가량 늘어났다. 반면, 주변을 위주로 주변이 증가하는 경우와 감소하는 경우로만 구분해 주변의 인구가 늘어나는 경향(유형2-유형5)은 강화되었는데, 1990~2000년 77.5%에서 2010~2020년 87.3%로 더 늘었다. 수도권에서는 전국과 경향성은 유사하면서 그 값은 더 컸다. 즉, 수도권에서 중심이 성장하는 도시는 82.1%에서 42.9%로 감소한 반면, 모든 도시권에서 주변은 지속적으로 성장해왔다. 비수도권 역시 전국과 유사한 패턴으로 중심이 성장하는 도시권은 크게 감소한 반면 주변이 성장한 경우는 그 비중이 늘었다.

중심과 주변을 함께 고려해 살펴보면 전국적으로 중심과 주변이 함께 증가하는 경우(유형2, 유형3)는 급감하고, 중심은 감소하지만 주변은 증가하는 경우(유형4, 유형5)

가 급증하였다(표 4). 수도권에서는 그 정도가 덜하고, 비수도권에서는 그 정도가 더 크다. 따라서 2010-2020년 71개 도시권에서 가장 빈도가 많은 경우는 중심은 감소하지만 주변은 증가하는 경우이다. 중심과 주변이 모두 감소하는 경우(유형6, 유형7)(동해, 안동)는 급감하였는데, 수도권에서는 아예 존재하지 않으며, 비수도권에서도 크게 줄었다. 대신 비수도권에서는 중심은 증가하지만 주변이 감소하는 경우(유형1, 유형8)는 7개 도시권(속초, 군산, 남원, 정읍, 경산, 영주, 밀양)으로 유지되고 있다.

## 2. 도시화 단계의 변화 경로

개별 도시의 입장에서 시간이 흐르면서 나타나는 도시화 단계의 변화 경로가 가진 특성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표 5). 도시권 간에 도시화 단계의 변화 경로는 상당히 다양하게 나타났는데, 1990~2000년 - 2000~2010년, 그리고 2000~2010년 - 2010~2020년 간에 단계가 변화하지 않고 그대로 유지한 경우가 가장 빈도가 높았다. 이어 시간이 흐르면서 도시화 단계가 이론적 모델에 제시한 순서대로 변화하는 경우와, 그런 패턴에서 벗어나는 경우가 엇비슷하게 많았다. 1990~2000년 - 2000~2010년 간에는 순차적인 변화보다는 단계적 변화 경로를 벗어난 경우가 조금 더 많았지만, 2000~2010년 - 2010~2020년 간에는 그 반대로 순차적 변화 경로를 따른 경우가 더 많아졌는데, 전 시기 단계 변화 없이 유지되는 도시권의 숫자가 줄어드는 대신 순차적 변화를 따르는 도시가 조금 더 늘었기 때문에 파악되었다.

가장 빈도가 높은 단계 유지의 특성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1990~2000년 - 2000~2010년 간 단계를 유지한 도

표 4. 중심-주변 유형별 도시화 단계 변화

구분		중심 증가	중심 감소	주변 증가	주변 감소	중심 증가 주변 증가	중심 감소 주변 감소	중심 증가 주변 감소	중심 감소 주변 증가
		전국	1990-2000	66.2	33.8	77.5	22.5	57.7	14.1
	2000-2010	50.7	49.3	78.9	21.1	47.9	18.3	2.8	31.0
	2010-2020	33.8	66.2	87.3	12.7	23.9	2.8	9.9	63.4
수도권	1990-2000	82.1	17.9	100.0	0.0	82.1	0.0	0.0	17.9
	2000-2010	75.0	25.0	100.0	0.0	75.0	0.0	0.0	25.0
	2010-2020	42.9	57.1	100.0	0.0	42.9	0.0	0.0	57.1
비수도권	1990-2000	55.8	44.2	62.8	37.2	41.9	23.3	14.0	20.9
	2000-2010	34.9	65.1	65.1	34.9	30.2	30.2	4.7	34.9
	2010-2020	27.9	72.1	79.1	20.9	11.6	4.7	16.3	67.4

표 5. 도시화 단계의 변화 경로

구분		1990~2000 - 2000~2010				2000~2010 - 2010~2020			
		전체	수도권	비수도권	인구감소 (00~20)	전체	수도권	비수도권	인구감소 (00~20)
단계 유지	합계	54.9	82.1	37.2	38.1	40.8	64.3	25.6	29.2
	유형3	36.6	67.9	16.3	0.0	18.3	42.9	2.3	0.0
	유형4	8.5	14.3	4.7	9.5	19.7	21.4	18.6	20.8
순차적 변화	합계	18.3	10.7	23.3	14.3	38.0	32.1	41.9	37.5
	유형1→유형2	0.0	0.0	0.0	0.0	0.0	0.0	0.0	0.0
	유형2→유형3	2.8	0.0	4.7	0.0	1.4	0.0	2.3	0.0
	유형3→유형4	11.3	10.7	11.6	4.8	25.4	32.1	20.9	4.2
	유형4→유형5	1.4	0.0	2.3	0.0	2.8	0.0	4.7	8.3
	유형5→유형6	1.4	0.0	2.3	4.8	0.0	0.0	0.0	0.0
	유형6→유형7	0.0	0.0	0.0	0.0	1.4	0.0	2.3	4.2
	유형7→유형8	1.4	0.0	2.3	4.8	5.6	0.0	9.3	16.7
	유형8→유형1	0.0	0.0	0.0	0.0	1.4	0.0	2.3	4.2
건너뛰기	합계	9.9	0.0	16.3	9.5	4.2	0.0	7.0	4.2
	1단계	4.2	0.0	7.0	4.8	2.8	0.0	4.7	0.0
	2단계 이상	5.6	0.0	9.3	4.8	1.4	0.0	2.3	4.2
역행		16.9	7.1	23.3	38.1	16.9	3.6	25.6	29.2
계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시권은 54.9%, 2000~2010년 - 2010~2020년 간 단계를 유지한 도시권은 40.8%로 나타나 최근에는 변화의 정도가 강해지는 경향을 보였다. 1990~2000년 - 2000~2010년에는 유형3이, 2000~2010년 - 2010~2020년에는 유형4에 해당하는 도시권이 더 많았다. 수도권에서는 단계를 유지하는 도시권이 64.3%로, 유형3이 훨씬 큰 비중을 차지하였다. 비수도권에 위치한 경우 지방의 중심도시나 그 주변에서는 일부 유형3이 유지되는 모습이지만 많은 경우는 중심 혹은 중심과 주변이 함께 인구가 감소하는 유형(유형4)으로 나타났다. 2000~2020년간 인구가 감소한 시의 도시권을 보면 단계 유지 도시 수나 유형이 비수도권과 유사하다. 동해는 중심과 주변이 함께 감소하는 단계를 2020년 이후 유지하고 있다. 30년간에 걸쳐 단계 변화가 없던 지역이 14곳으로 나타났는데, 13개 도시권은 수도권에 위치하였다. 서울, 과천, 동두천, 광주(광역시)가 30년간 유형4를 유지한 반면 나머지 10개 도시권은 모두 유형 3단계를 지속하였다. 따라서 서울을 제외한 수도권의 많은 도시들은 여전히 중심과 주변이 함께 안정적으로 성장하는 패턴이 지속적으로 나타났음을 알 수 있다.

이어, 시간이 흐르며 이론적 모델을 따라 순차적인 변화를 보인 경우(전체 도시권 중 1990~2000년 - 2000~

2010년 18.3%, 2000~2010년 - 2010~2020년 38%)를 살펴 보면 다음과 같다. 여기서는 유형3→유형4로 변화한 경우가 거의 대부분을 차지하였는데, 2000~2010년 - 2010~2020년에는 더 많은 도시가 해당해 주변에 비해 중심이 쇠퇴하는 단계로 진전됨을 보여주고 있다. 1990~2000년 - 2000~2010년에는 유형2→유형3으로의 변화가 다음으로 많았지만 그 수는 미미했고, 2000~2010년 - 2010~2020년에는 유형7→유형8, 유형4→유형5를 따르는 변화가 상대적으로 많았지만 절대적인 수는 역시 많지 않다. 2000~2020년간 인구가 감소한 시의 도시권만을 대상으로 하면 유형7→유형8로 변화한 도시권이 가장 많았다. 2000~2010년 - 2010~2020년에 유형7→유형8, 유형8→유형1로 순차적으로 변화하면서도 중심의 재성장이 나타난 곳이 전라북도 군산, 남원, 정읍, 경상북도 영주, 경상남도 밀양의 5개 지역으로 모두 인구 감소 시의 도시권이였다. 유형7→유형1로 변화된 곳을 포함하면 속초까지 6개 지역이다. 1990~2000년, 2000~2010년, 2010~2020년 세 시기에 있어 이론적 순서대로 진행된 도시는 안동(유형5→유형6→유형7), 원주(유형2→유형3→유형4), 밀양(유형7→유형8→유형1)으로 나타났다. 일부 단계를 뛰어넘는 경우를 포함하면 대전(유형2→유형3→유형5), 거

제(유형1→유형3→유형4)가 포함된다.

순차적 변화 경로만큼이나 경로에서 벗어난 도시들이 많았는데, 다음 단계를 뛰어넘는 경우보다는 거꾸로 역행하는 변화가 조금 더 많았다. 역행하는 경로를 따른 경우, 1990~2000년 - 2000~2010년에 중심이 성장하는 경우(남양주, 당진, 아산, 천안, 광양)와 여전히 쇠퇴하는 경우(강릉, 동해, 제천, 공주, 목포, 여수, 통영) 경우가 각기 절반씩을 차지했다. 남양주, 당진, 아산, 천안은 중심이 쇠퇴하다가 성장하는 과정으로 역행하였다. 2000~2010년 - 2010~2020년에는 고양, 세종, 경산을 제외하면 역행하였음에도 대부분 중심이 쇠퇴하는 경우에 해당하였다. 인구감소 시의 도시권에서 역행 비율이 높았는데, 모든 시점에서 중심이 쇠퇴하는 방향이었다. 단계를 뛰어넘는 경우는 그 수가 역행하는 경우에 비해 적는데, 분산되거나 중심이 쇠퇴하는 상황으로 변모하였다. 2000~2010년 - 2010~2020년에는 대전(유형3→유형5), 속초(유형7→유형1), 광양(유형1→유형3)만이 단계를 뛰어넘는 경우로 나타났다. 1990~2000년 - 2000~2010년의 서산, 2000~2010년 - 2010~2020년의 속초는 오히려 중심이 성장하는 단계로 변모하는 모습을 보였다. 이론적 경로에서 벗어나는 도시들은 대부분 비수도권에 위치하고, 개발 상황 등에 따라 상이한 경로를 보이고 있다.

### 3. 논의: 도시화 단계 변화의 함의

앞서 우리나라 도시권들의 시기별 도시화 단계, 그리고 개별 도시권의 도시화 단계 변화 경로가 보이는 패턴을 살펴보았다. 도시의 상황에 따라 이질적이면서도 전체적으로는 주요한 패턴 또한 관찰되었다. 시간이 흐르며 주변은 성장하지만 중심이 쇠퇴하는 경향으로 바뀌어 가고 있다는 점, 전반적인 추세와는 달리 중심이 다시 성장하는 도시권이 일부 파악되었다는 점, 도시화 단계의 변화 경로가 이론적 모델에서 제안된 순서를 따르는 경우도 있지만 변화가 없거나, 단계를 뛰어넘거나 역행하는 경우도 상당하다는 점이다. 이런 변화를 조금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고 그 함의를 논의하고자 한다.

먼저, 이미 살펴본 것처럼 도시화 단계의 변화에서 주변이 성장하는 도시의 비중이 2010~2020년에 87.3%에 달할 정도로 비율이 높아져 왔다. 즉, 기존 중심이 근접한 주변에서 개발이 되면서 인구가 늘어나는 경향이 전국적으로 주된 패턴이었다 할 수 있다. 관련하여 일본의 연구와 비교할 수 있는데, 2000년 이전에 이미 유형3이나 유

형4가 지배적이었다는 연구(Kim et al., 2007; Kanda et al., 2020), 혹은 2000~2005년에 유형4가 급증했다는 연구(Kawabe and Watanabe, 2021)가 있다. 그 이후에는 대도시에서의 중심 성장(유형1, 유형2), 중소 규모 도시에서의 재도시화(유형7, 유형8)가 지배적인 유형으로 변모한 것으로 분석하여 우리나라에 비해 앞서 단계가 진행되었던 것으로 생각된다.

전술한 것처럼 도시화 단계의 변화를 파악하기 위해 초기 시점, 즉 과거의 인구 분포를 토대로 중심과 주변을 설정, 이를 고정하여 분석하였으므로 차차주변이 성장하였더라도 여전히 주변에 속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그래서, 초기 시점을 기준으로 설정된 주변은 차후 시점을 기준으로 할 경우에도 여전히 주변으로 구분될지, 나아가 그런 곳은 어떤 성격을 가진 곳인지 파악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서 2020년의 인구 분포를 기준으로 분석 방법에서 제시한 방법으로 중심과 주변을 재설정하여 앞서 설정했던 중심 및 주변과 비교하였다. 그 결과 대부분의 도시권에서, 중심에 인접해 있던 주변이 2020년 기준으로는 중심에 속하는 곳들이 다수 등장하였다(그림 3). 즉, 과거 주변으로 구분되었던 지역 중 현재 인구 분포 기준으로는 더 이상 주변이 아니라 중심으로 구분되어야 할 곳이 많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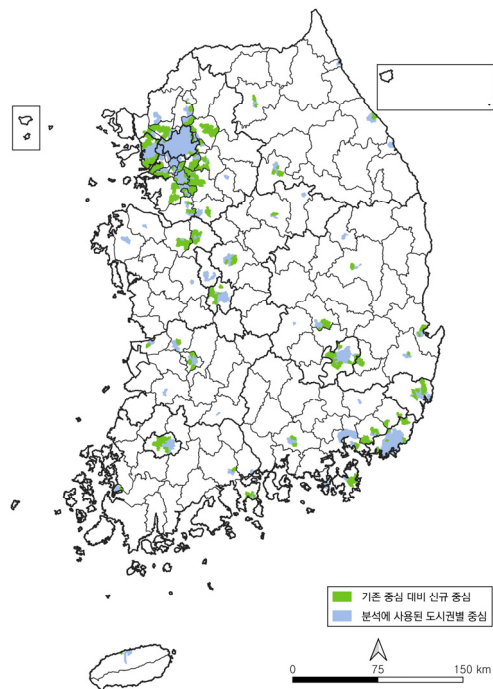


그림 3. 기존 중심 대비 2020년 기준 신규 중심

표 6. 2020년 기준 신규 중심으로 구분되는 지역의 특성

구분	기존 중심	기존 중심 대비 2020년 기준 신규 중심으로 구분되는 지역	기존 중심 대비 2020년 기준 신규 중심으로 구분되는 지역(수도권)
읍면동 수(개)	1,493	321	180
평균 인구(명)	24,403	31,810	32,247
30-59세 인구 비율(평균, %)	47.1	48.7	49.1
65세 이상 인구 비율(평균, %)	15.1	11.6	11.9
외국인 비율(평균, %)	4.5	2.9	3.4
아파트 비율(평균, %)	58.0	83.4	81.8
총인구 대비 사업체(평균, %)	14.9	9.8	9.9
총인구 대비 종사자(평균, %)	73.1	40.2	41.4

았다. 이 지역들의 특성을 몇 가지 지표를 통해 살펴보고자 한다.

기존의 도시권별 중심에 포함된 읍면동은 모두 1,493개였으며 총인구의 약 70%가 포함되었다(표 6). 기존의 중심에는 포함되지 않았지만, 2020년 인구 분포를 기준으로 할 경우 새로운 중심에 포함되는 동은 321개(수도권 180개)로 기존 중심에 포함된 읍면동 수 대비 약 22%, 그리고 2020년 기준으로 설정된 중심에 포함된 읍면동 수 대비 18%에 해당하였다. 인구 규모는 기존 중심 읍면동의 평균 인구 대비 약 32% 정도 더 많았으며, 30-59세 인구의 비율은 1.5%p 가량 더 높고, 65세 이상 인구 비율은 약 4%p 가량 낮았다. 아파트 비율은 25%p 가량이나 더 높았으며, 총인구 대비 사업체 비율은 5%p, 총인구 대비 종사자수는 약 33%p가 낮아 아파트 단지로 구성된 주거 지역의 성격이 강한 것으로 나타났다.

요컨대, 분산화가 시작되던 과거 기준으로 주변이었던 곳이 개발되면서 더 이상 주변으로 보기 어려운 지역이 여러 도시권, 특히 수도권을 중심으로 다수 등장하였다. 이 지역들은 경제 활동의 공간이기보다는 주거지역으로서

의 면모가 강했기 때문에 자족적인 중심으로 보기는 어려울 것으로 생각된다. SCM에서 고려하는 인구만을 토대로 한다면 이 지역들은 중심으로 구분되겠지만, 이는 ‘교외화’, 혹은 ‘교외’를 어떻게 규정할 것인가에 대한 논의로 연결된다. 교외의 규정은 생각보다 간단하지 않은데 (Forsyth, 2012; Airgood-Obyrky et al., 2021), 예를 들어 오래전에 개발된 교외를 현재에도 교외라고 규정할 수 있는지, 그렇다면 현 시점의 교외는 어디부터 어디까지인지, 그런 판단은 무엇을 기준으로 있는지, 과거 교외화가 진행되던 곳이 인구가 성장하면 어떻게 해석해야 하는지 등의 논점이 생겨난다. 이에 대해서는 추가 연구가 필요하다.

이어, 도시화 단계의 변화 경로가 이론적 모델과 유사한 경우도 있지만 상당히 다양한 모습을 보였다는 점을 살펴본다. 이는 관련 선행연구(Parr, 2012; Wolff, 2018; Kanda et al., 2020)와 마찬가지로 이론적 모델의 한계를 보여준다. 관련하여, 도시화 단계 변화 경로 유형별 도시권의 도시(시)가 가진 특성을 인구 및 주택, 종사자 변화와 연관지어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그림 4). 시군 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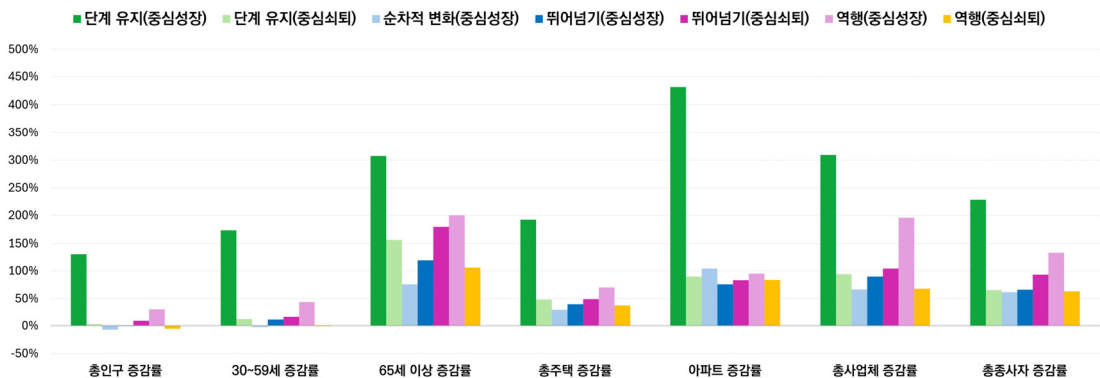


그림 4. 도시화 단계 변화 경로 유형별 특성

준에서 데이터 구득 가능성을 고려하여 2000~2020년간을 대상으로 하였으며, 도시화 단계의 변화 역시 2000~2010년 - 2010~2020년의 변화로 한정하였다. 도시화 단계의 변화 경로가 다양하긴 했으나 단계 유지의 경우 유형3(중심 성장)과 유형4(중심 쇠퇴)가 지배적이었고 순차적인 변화의 경우 유형3→유형4가 지배적이었다. 뛰어난기와 역행 경로의 경우 중심 성장과 중심 쇠퇴로 구분 가능해 모두 7개 변화 유형별로 특성을 비교하였다.

총인구, 총주택, 총사업체, 총종사자 등 대부분의 지표에서 중심과 주변이 함께 성장하는 단계 유지(유형3)에 속하는 도시권에서 가장 높은 성장률을 나타내었다. 이는 본 분석에 포함되지 않은 지역을 포함해 인구유출로 인해 감소를 겪고 있는 지역의 희생 덕분에 가능한 현상이다. 실제 유형3을 유지한 도시권의 도시(시)의 평균적인 순이동률(2000~2020)을 살펴보면 60.3%로 유형4를 유지한 도시권의 도시(시)의 평균 순이동률 -8.6%에 비해 크게 높다. 이는 특정 도시권이 다른 지역으로부터 지속적으로 인구 유입을 받을 때 중심 성장형 도시화 단계가 유지될 수 있음을 시사한다.

중심 쇠퇴형 단계 유지 도시권에서의 도시(시) 인구는 거의 정체되었으며, 65세 이상 인구, 총주택, 총종사자, 총사업체의 성장률은 비교적 낮았다. 순차적인 변화를 겪었던 도시는 대부분 중심이 쇠퇴하는 유형으로 변모해가는 과정이었으며 따라서 이미 중심이 쇠퇴하여 그 상태를 유지한 도시권(유형4)에 비해 조금 더 높은 성장률을 보였다. 변화 경로에서 벗어난 도시권 가운데 중심이 성장하는 방향으로 역행하는 도시권(고양, 경산)의 총인구 및 사업체, 종사자 성장률은 중심 성장 유지 도시를 제외하고 다음으로 높았으며, 주택도 비교적 높은 성장률을 기록하였다. 중심 성장형 단계로 건너뛴 경우(속초, 광양)는 중심 성장형 역행 도시와는 달리 전반적으로 성장률이 높지 않았는데, 도시 규모가 크지 않고, 중심에서의 일부 성장이 있기는 했지만 도시 전체적으로는 성장 여력이 부족했기 때문으로 판단된다.

마지막으로, 전체 추세와는 달리 중심이 다시 성장하는 일부 도시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앞서 본 것처럼, 도시화 단계를 순차적으로 진행한 도시권들, 특히 인구 감소가 있는 도시의 도시권에서 일부 중심이 재성장하는 사례가 나타났다. 이는 일본에서의 선행연구와 일맥상통하는 부분이다(Kanda *et al.*, 2020; Kawabe and Watanabe, 2021). 또한 인구 증가가 있는 도시에서도 숫자는 많지 않

았지만 중심이 성장하는 역행 변화를 보였다. 이들은 전체 도시권의 약 10%에 해당하였는데, 전통적인 SCM에서 특히 재도시화가 필수적인가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고 있는 상황에서 주목할 만한 부분이라 판단된다. 2010년 이후 중심이 재성장한 도시권의 특성을 파악해보면 중심에 포함된 지역의 주택 증가율이 도시 전체의 주택 증가율에 비해 훨씬 높다. 2010~2020년간 8개 도시(인구감소 도시 6곳, 인구증가 도시 2곳)의 평균 주택 증가율은 10%였던 반면 중심의 평균 주택 증가율은 52%에 달했다. 인구감소 도시만을 비교하더라도 각각 6.8%와 14.6%로 2배 이상 높았다. 군산이나 밀양의 도시재생사업, 경산의 택지개발사업, 고양의 도시개발사업 등 중심에서의 개발사업의 여파로 보이지만 이에 대해서는 추가 연구가 필요하다. 아무튼 이는 중소도시에서도 중심의 재성장이 가능하고, 컴팩트한 도시 축소의 가능성을 보여준 사례로 판단된다.

## V. 결론

본 연구는 1990년부터 2020년까지 지난 30년간 우리나라 개별 도시권을 대상으로 도시화 단계의 변화를 실증적으로 분석하였다. 국제기구에서 채택한 도시 설정의 기준을 차용하여, 인구 그리드를 활용해 시군별로 중심을 설정하고, 이 중심으로의 통근 범위를 고려하여 주변을 설정하였다. 분석 기간 중 “중심”을 포함하는 71개 도시권을 대상으로 하여 도시화 단계 변화에 대한 이론적 모델(SCM)을 토대로 10년 간격으로 도시화 단계가 변화하는 양상을 추적하였다. 주요한 분석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우리나라 도시권의 도시화 단계는 중심과 주변이 함께 성장하는 단계(유형3)에서 2010년 이후 중심은 쇠퇴하지만 주변은 아직 성장하는 단계(유형4)로 변모하였다. 수도권이나 인구성장 도시에서는 유형3이 압도적으로 많다가 2010~2020년에 유형4가 더 많아졌다. 비수도권 및 인구감소 도시에서는 더 다양한 유형이 존재하는데 유형3은 감소하고 유형4가 많아졌으며, 중심과 주변이 모두 쇠퇴하는 도시와 중심이 다시 성장하는 도시가 공존하였다. 중심이 감소하는 도시권이 수도권에서는 57%가량이나 비수도권에서는 72%에 달하며, 주변이 감소하는 도시권은 수도권에서는 없으나 비수도권에서는 21% 정도에 달해 수도권과 비수도권 간의 대비가 뚜렷하다.

둘째, 도시화 단계의 변화 경로를 추적한 결과 이론적 모델에서 제시된 단계를 따라 순차적으로 변모하는 도시도 상당수 있었지만, 단계 변화 없이 그대로 머물러 있거나 단계를 뛰어넘거나 역행하는 등 경로에서 벗어난 경우도 다수 나타났다. 단계를 유지하는 경우가 수도권을 중심으로 가장 많았는데, 유형3이 지배적이었다가 유형4가 약간 더 많아졌다. 이론적 모델의 단계를 따라 순차적으로 변화하는 경우가 다음으로 많았는데, 유형3→유형4로의 변화가 가장 빈번했다. 이런 가운데 2000년대 들어 인구가 감소한 시의 도시권에서는 중심이 다시 성장하는 단계로 나아간 도시가 5-6곳 등장하였다. 20%가량의 도시권은 역행과 뛰어넘기가 나타났으며 중심이 성장하는 방향과 쇠퇴하는 방향 모두 나타나 도시의 상황에 따라 다른 모습이었다.

셋째, 위 두 결과와 관련한 논의를 통해 우리나라 도시화 단계의 이질성과 역동성을 파악하였다. 전국적으로 도시권의 주변이 성장하는 경향이 강하게 나타나고 있는데, 경제활동의 공간이기보다는 아파트 증가가 뚜렷한 주거지역의 특성을 보이고 있다. 이 지역은 중심과 주변, 교외의 변화 등과 관련하여 향후 심도있는 연구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도시화 단계 변화 경로는 이론적 단계 변화와 상이할 뿐 아니라 도시권 간에 이질적인 다양성이 있음이 드러났다. 중심 혹은 도시권 전체가 성장을 지속하는 도시는 타지역으로부터의 인구 유입에 의해 지속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인구감소 도시들은 대부분 중심이 쇠퇴하는 단계에 있지만 도심재생사업이나 주택 공급사업을 통해 중심이 재성장할 수 있음을 파악하였다. 이는 재도시화 혹은 컴팩트한 도시 축소의 가능성을 보여주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 연구는 몇 가지 면에서 기존 연구와 차별성을 갖는다. 먼저, 국제적인 기준을 활용해 도시를 파악하여 중심을 설정하는 방안을 제안하였다. 이는 특히 국내의 지방 도시여건을 고려할 때 유효한 방안으로 판단된다. 또한 이론적인 도시화 단계 모델이 우리나라의 도시화 단계에 효과적으로 적용될 수 있는지 검토하였다. 다양한 형태의 단계 유지, 역행 및 뛰어넘기 등을 파악해 우리나라 도시화 단계 변화의 논점을 확장하였다. 여기에 더해 수도권과 비수도권, 인구성장 도시와 감소 도시 간의 차별적인 변화, 새로 성장한 주변지역, 중소도시에서 중심이 재성장하는 사례의 파악 등을 통해 우리나라 도시화의 이질성과 역동성을 드러내었다.

본 연구는 다음과 같은 한계와 추후 과제를 가진다. 먼저, 도시화 단계 분석을 위한 공간 단위 설정이 다양하게 있을 수 있지만 한가지 방식만을 적용하였다. 따라서 다양한 수준의 공간 단위 설정이 분석 결과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세밀한 연구가 필요하다. 공간 단위와 관련하여 추가적으로 이 연구에서는 시계열 분석의 일관성을 위해 중심의 경계를 초기 시점(최초 발생 시점)으로 고정하였다. 이는 도시 성장에 따른 중심 시가지의 물리적 확장을 온전히 반영하지 못해 중심의 쇠퇴를 일부 과대평가했을 가능성이 있다. 향후 연구에서는 가변적인 경계를 적용하는 것의 타당도를 평가할 필요가 있다. 더불어, 본 연구에서 파악된 바와 같이 새로 성장하는 주변부가 가지는 성격을 교외화 등의 논의와 연계해 심화 분석할 필요가 있다. 본 연구에서는 도시화 단계의 판별 기준으로 인구 지표에 집중하였다. 하지만 도시의 성장과 쇠퇴는 인구뿐만 아니라 도시 개발이나 고용 등 경제 활동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이다. 따라서 본 분석의 결과는 물론 도시화의 다양한 측면을 고려하여 새로운 관점의 이론과 실증 연구가 필요하다. 끝으로 도시화 단계 변화의 실태를 토대로 향후 도시 정책, 특히 도시 축소 국면에서의 정책적 대응 방안 마련을 위한 연구가 이루어져야 한다.

## 참고문헌

- 구동화, 2018, “도시발전단계에 관한 이론적 검토,” 국토지리학회지, 52(4), 481-497.
- 남상민, 2024, 「통계적 지역 분류체계 활용방안 연구」, 통계청 통계개발원.
- 남진·윤병훈·박관우, 2015, “도시성장단계평가를 통한 도시재생의 타당성 분석: 차별적 도시화 모델과 순환적 도시화 모델 적용,” 국토계획, 50(3), 153-177.
- 임재현, 1999, “우리나라의 도시별 도시화 단계,” 주택연구, 7(2), 139-164.
- 조해송·정광진, 2022, “도시성장단계 분석을 통한 1기 신도시 지역의 특성 분석: 1기 신도시가 속한 모도시의 인구, 가구, 주택 지표를 중심으로,” 국토계획, 57(4), 48-62.
- 통계청, 2024, 민관 데이터 가명결합 기반 「2024년 통근근로자 이동 특성」 분석 결과.
- 한국도시지리학회(편), 2020, 「도시지리학개론」, 법문사.

- 金 昶基, 大西 隆, 菅 正史, 2007, 人口減少と都市構造の変容に関する研究(Study on Depopulation and Transformation of Urban Structure), 都市計画論文集, 2007, 42(3), 835-840.
- 神田 兵庫, 磯田 弦, 中谷 友樹, 2020, 人口減少局面における日本の都市構造の変遷 (The Transition of Urban Structure in Japan in the Phase of Decreasing Population), 季刊地理学, 72, 91-106.
- Airgood-Obyrcki, W., Hanlon, B., and Rieger, S., 2021, Delineate the U.S. suburb: An examination of how different definitions of the suburbs matter, *Journal of Urban Affairs*, 43(9), 1263-1284.
- Dembski, S., Sykes, O., Couch, C., Desjardins, X., David, E., Osterhage, F., Siedentop, S., and Zimmermann, K., 2021, Reurbanisation and suburbia in Northwest Europe: A comparative perspective on spatial trends and policy approaches, *Progress in Planning*, 150, 100462.
- Dijkstra, L., Poelman, H., and Veneri, P., 2019, The EU-OECD definition of a functional urban area, OECD.
- European Commission, 2024, GHSL Data Package 2023, Publications Office of the European Union, Luxembourg.
- European Union, FAO, UN-Habitat, OECD, and The World Bank, 2021, Applying the Degree of Urbanisation: A Methodological Manual to Define Cities, Towns and Rural Areas for International Comparisons.
- Forsyth, A., 2012, Defining Suburbs, *Journal of Planning Literature*, 27(3), 270-281.
- Geyer, H. and Kontuly, T., 1993, A theoretical foundation for the concept of differential urbanization, *International Regional Science Review*, 15(2), 157-177.
- Gil-Alonso, E., López-Villanueva, C., Bayona-i-Carrasco, J., and Pujadas, I., 2021, Towards an even more Spatially Diversified city? New Metropolitan population trends in the Post-economic crisis Period, *Urban Science*, 5(2), 41.
- Gu, H. and Sun, B., 2025, The urban spatial change hypothesis revisited: A case study of Shanghai, *Cities*, 158, 105694.
- Humer, A., Cardoso, R.V., and Meijers, E., 2022, Breaking with the spatial-cycle model: the shift towards 'syncurbanization' in polycentric urban regions, *Regional Studies*, 56(1), 21-35.
- Kawabe, A. and Watanabe, S., 2021, An analysis on urban shrinkage trends of all Japanese cities by detecting relative densely inhabited districts - Changes in urban form of Japanese cities in an era of shrinking population, part 2, *Japan Architectural Review*, 4, 482-494.
- Nyström, J., 1992, The cyclical urbanization model: A critical analysis, *Geografiska Annaler, Series B, Human Geography*, 74(2), 133-144.
- Pacione, M., 2009, *Urban Geography: A Global Perspective*, Routledge.
- Parr, J.B., 2012, The spatial-cycle model(SCM) revisited, *Regional Studies*, 46, 217-228.
- van den Berg, L., Drewett, R., and Klaassen, L. H., Rossi, A., Vijverberg, C.H.T., 1982, *Urban Europe: A Study of Growth and Decline (Vol. 1)*, Oxford: Pergamon Press.
- Wolff, M., 2018, Understanding the role of centralization processes for cities - Evidence from a spatial perspective of urban Europe 1990-2010, *Cities*, 75, 20-29.
- 통계청, 국가통계포털, <https://kosis.kr>
- 통계청, 통계지리정보서비스(SGIS), <https://sgis.mods.go.kr>
- GHSL - Global Human Settlement Layer, <https://human-settlement.emergency.copernicus.eu>
- 교신 : 조대현, 41566, 대구광역시 북구 대학로 80, 경북대학교 사범대학 지리교육과  
(이메일: dhncho@knu.ac.kr)
- Correspondence: Daeheon Cho, 41566, 80 Daehak-ro, Buk-gu, Daegu, South Korea, Department of Geography Education, Kyungpook National University (Email: dhncho@knu.ac.kr)

투고접수일: 2025년 11월 29일

심사완료일: 2025년 12월 15일

게재확정일: 2025년 12월 25일



# 이미지 분할 모델을 활용한 연안지역 상권 추출 및 특성 연구\*

김영훈\*\* · 정병화\*\*\* · 송주환\*\*\*\*

## Coastal Commercial Area Extraction and Characteristics Study: Using Image Segmentation Model\*

Younghoon Kim\*\* · Byeonghwa Jeong\*\*\* · Juhwan Song\*\*\*\*

**요약 :** 본 연구는 연안 지역의 상권 경계를 설정하고, 그 특성을 분석하는 데 목적을 두고 있다. 기존 상권 관련 연구는 행정구역 경계를 중심으로 분석하는 경우가 많아 실제 상업 활동의 공간적 분포를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는 한계가 있다. 이에 본 연구는 지방행정 인허가데이터를 통해 점포 위치를 격자화 한 데이터를 기반으로 비지도 학습 기반 이미지 분할 모델을 활용하여 상권의 경계를 추출하였다. 연안 지역을 대상으로 분석한 결과, 총 482개의 연안 상권이 도출되었으며, 이들 상권은 대부분 대규모 항만이 인접한 도시 지역이나 연안 관광지 주변에서 집중적으로 분포하는 경향을 보였다. 상권별 업종 구성 비율을 바탕으로 K-means 군집 분석을 수행하여 연안 상권을 분류한 결과, 여가-일상적 소비 혼합 상권, 음식점 중심 상권, 지역 주민 생활서비스 상권, 식음료 소비 중심 상권의 4가지 유형으로 분류할 수 있었다. 지역별 개·폐업 현황 분석을 통해 폐업률과 개업 점포 생존율이 상권의 경쟁 강도와 안정성에 미치는 영향을 확인할 수 있었다. 폐업률이 높고 개업 점포 생존율이 낮은 상권은 경쟁 강도가 높았으며, 개업 점포 생존율이 높고 폐업률이 낮은 상권은 상대적으로 안정적인 구조를 보였다. 이러한 연구 결과는 연안 상권의 공간적 분포, 업종 구조, 지역 차이 등의 특성을 실증적으로 제시함으로써 지역 경제 활성화 및 상권 관리 전략 수립을 위한 기초 자료로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주요어 :** 연안, 상권, 이미지 분할 모델, K-means 군집 분석

**Abstract :** This study delineates commercial area boundaries in coastal regions and analyzes their spatial and industrial characteristics. To overcome the limitations of administrative boundary-based approaches, we apply an unsupervised image segmentation model to gridded store-location data derived from local administrative licensing records. The analysis identifies 482 coastal commercial areas, which are predominantly concentrated in urban areas adjacent to major ports and coastal tourist destinations. Based on industry composition ratios, K-means clustering classifies coastal commercial areas into four types: leisure-everyday consumption mixed areas, restaurant-dominated areas, resident-oriented service areas, and food-and-beverage-oriented areas. In addition, an analysis of business openings and closures reveals substantial regional variation in competitive intensity and structural stability, as indicated by differences in closure rates and survival rates of newly opened stores. These findings provide empirical evidence on the spatial structure and heterogeneity of coastal commercial areas and offer policy-relevant insights for regional economic revitalization and commercial area management.

**Key Words :** Coastal area, Commercial area, Image segmentation model, K-means clustering analysis

\*이 연구는 한국해양수산개발원(KMI)의 「2024년 우리바다 현장연구 지원사업」으로 진행되었음.

\*\*한국교원대학교 지리교육과 교수(Professor, Department of Geography, Korea National University of Education, [gis@knu.ac.kr](mailto:gis@knu.ac.kr))

\*\*\*토론토대학교 도시학연구소 박사후연구원(Post doctoral Fellow, School of Cities, The University of Toronto, [byung.gee@gmail.com](mailto:byung.gee@gmail.com))

\*\*\*\*한국교원대학교 지리교육과 박사과정(Doctoral Student, Department of Geography, Korea National University of Education, [bd0458@naver.com](mailto:bd0458@naver.com))

## I. 서론

### 1. 연구의 목적

연안 지역은 관광, 어업, 물류, 해양 자원 활용 등 다양한 경제 활동이 밀집된 지역으로, 이곳에서 이루어지는 경제 활동은 지역 주민의 생활 기반 형성과 지역 경제 활성화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 2022년 기준, 국내 연안 지역의 상권 매출액은 약 58조 200억 원에 달했으며, 이 중 해양관광 시장의 규모는 전체의 약 64.5%를 차지하는 것으로 추정된다(최일선 등, 2023). 이는 연안 지역에서 관광 상권의 경제적 비중이 크다는 것을 나타내지만, 연안 지역에서 살아가는 주민을 대상으로 하는 생활 상권 또한 지역 경제 활성화와 주민 생활의 안정성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

지역의 경제적 가치와 잠재력을 파악하기 위해서는 상업 활동이 이루어지는 공간인 상권을 정확히 이해하는 것이 중요하다. 상권은 점포들이 밀집되어 형성되는 공간적 단위로, 상업 관련 연구에서 기본적인 분석 단위로 활용된다. 상권은 점포의 개업과 폐업 등 다양한 요인에 의해 동적으로 변화하며, 행정구역 내에서도 특정 위치에 공간적으로 분포하기 때문에 이를 설정하는 명확하고 객관적인 기준이 요구된다. 그러나 기존의 상권 연구는 주로 행정구역 경계를 중심으로 이루어져, 상업 활동의 실제 공간적 분포 및 상권 간 경계를 명확히 정의하지 못하는 한계가 있다. 특히, 관광 상권과 생활 상권이 혼재된 지역에서 이들의 공간적 특성과 경계를 명확히 구분하지 못할 경우, 상권 분석의 정확성과 신뢰성이 크게 저하될 수 있다. 따라서 연안 지역의 경제 현황을 보다 정확히 분석하고, 관광 상권과 생활 상권의 경계를 명확히 구분하여 지역 활성화 전략을 수립하기 위해서는 보다 정교한

상권 경계 설정이 필요하다.

이러한 문제의식을 바탕으로, 본 연구에서는 연안 지역의 상권을 설정하는 객관적인 기준을 제시하기 위하여 비지도 학습 기반 이미지 분할 모델을 활용하고자 한다. 이를 통해 연안 지역의 상권 경계를 추출하고, 추출한 상권별 특성 분석을 통해 연안 지역 경제 활성화 및 상업 관련 의사결정을 지원하는 데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고 자 한다.

### 2. 연구의 내용과 방법

연구의 내용과 방법은 다음과 같다. 먼저 II장에서 관련된 선행연구들을 검토하고, 이미지 분할 모델을 활용하여 연안 상권을 설정한다. III장에서는 설정된 상권의 업종 구성 및 개·폐업 특성을 분석하여 지역별 특성을 확인하고, IV장에서 연구결과의 요약 및 결론을 제시한다.

연구 지역은 한국 전체 연안 지역으로, 연안관리법에서 규정하는 ‘연안육역’을 기준으로 하여 연안해역의 육지 쪽 경계선으로부터 500m 범위 안의 육지 지역(지정항만, 국가어항, 산업단지의 경우 1,000m)을 연구 대상으로 한다. 상권을 추출하기 위한 점포 정보는 지방행정 인허가 데이터개방 서비스에서 제공하는 전국 17개 시도, 228개 시군구 자치단체의 인허가 자료를 활용한다. 인허가 데이터에는 표 1과 같이 업소별로 사업장명과 소재지 주소를 확인할 수 있으며 해당 업소의 영업상태를 데이터 제공 시점 기준으로 영업이나 휴업 또는 폐업으로 구분하여 표시하고 있다. 인허가일자과 폐업일자를 통해 점포의 영업일수를 확인할 수 있는데, 본 연구에서 인허가일자는 개업일로 간주한다. 또한 업태구분명을 통해 세부 업종을 확인할 수 있으며, 각 점포의 x, y 좌표정보가 제공되기 때문에 정확한 위치를 파악할 수 있다. 해당 데이터는

표 1. 지방행정인허가 데이터의 주요 정보

컬럼명	설명
사업장명	인허가 받은 업소명
소재지주소	업소의 도로명 또는 지번 주소
영업상태	데이터 제공 시점 기준 영업/휴업/폐업 여부
인허가일자	인허가 신고일자(본 연구에서는 개업일로 간주)
폐업일자	폐업한 경우 폐업신고 일자
개방서비스명/업태구분명	업소의 업종
좌표정보	업소의 x, y 좌표값

표 2 연구데이터의 업종 정보

선정 업종명	인허가데이터 개방서비스명	업태구분명
공연장	공연장	
노래방	노래연습장업	
목욕탕	목욕장업	공동탕업, 찜질시설서비스영업, 한증막업, 목욕장업 기타
미용실	미용업	일반미용업, 피부미용업, 네일아트업, 메이크업업, 미용업 기타
세탁소	세탁업	일반세탁업, 운동화전문세탁업, 세탁업 기타
약국	약국	
영화관	영화상영관	
병원	의원	의원, 치과의원, 한의원
이발소	이용업	일반이용업, 이용업 기타
PC방	인터넷컴퓨터 게임시설제공업	
음식점	일반음식점	경양식, 기타, 김밥(도시락), 냉면집, 복어취급, 분식, 뷔페식, 식육(숯불구이), 외국음식전문점(인도,태국등), 이동조리, 일식, 중국식, 출장조리, 키즈카페, 탕류(보신용), 통닭(치킨), 한식, 횃집, 패밀리레스토랑, 패스트푸드
	휴게음식점	고속도로, 관광호텔, 극장, 기타 휴게음식점, 백화점, 유원지, 일반조리판매, 철도역구내, 키즈카페, 패스트푸드, 푸드트럭
주점	일반음식점	감성주점, 라이프카페, 정종/대포집/소주방, 호프/통닭
카페	일반음식점	카페, 전통찻집
	휴게음식점	다방, 떡카페, 전통찻집, 커피숍
제과점	제과점영업	제과점영업
	휴게음식점	과자점, 아이스크림
헬스장	체력단련장업	
편의점	휴게음식점	편의점

전체 36개 그룹 195개 업종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이 중소기업 상권을 확인할 수 있는 생활업종 관련 카테고리의 업종을 선정하였고, 이를 표 2와 같이 16개 업종으로 재분류하여 연구에 사용하였다. 분석 기간은 2023년 7월 1일부터 2024년 6월 30일까지로 설정하였으며, 전체 인허가 데이터 중 분석 기간 동안 개업, 영업 또는 폐업 이력이 존재하는 점포들을 추출하였다.

추출한 점포들로 상권 경계를 설정하는데에는 이미지 분할 모델을 사용하였다. 이미지를 픽셀 수준에서 분석하여 어떤 객체에 속하는지 파악할 수 있게 하는 이미지 분할 모델은 점포가 집중된 상업적 경계를 추출하는데 활용할 수 있다(Jeong et al., 2024). 전국 지자체에서 제공하는 소매업 점포들의 인허가 정보를 통하여 획득한 점포들의 위치정보를 격자망 데이터로 변환하여 이미지 분할을 진행한다. 이미지 분할의 결과는 상업 경계, 즉 상권으로 정의할 수 있으며 상권 경계 안에 속하는 점포들의 업

종 및 개업, 폐업 상태정보 들을 통하여 추출한 상권별 특성을 분석하고자 한다.

## II. 상권 영역 설정

### 1. 선행연구의 검토

상권 관련 연구는 상권의 분류와 영역 설정이라는 두 가지 주요 축을 중심으로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다. 상권의 특성을 구체화하기 위해 다양한 분류 기법에 대한 연구가 진행되고 있다. 정승영·도희섭(2011)은 서울시 29개 상권을 대상으로 상가 월세, 보증금, 통행자수 등 경제적 데이터를 활용하여 군집 분석을 실시하고, 이를 통해 상권을 3개의 군집으로 분류하였다. 김영재·박인권(2023)은 젠트리피케이션이 발생한 상권의 장소성을 파악하여

유형화하고 고유한 특성을 가진 ‘연극 상권’, ‘전통문화 상권’, ‘여성 미용 상권’, ‘고급 음식점 및 의료서비스 상권’, ‘트렌디 상권’으로 분류하였다. 이와 같은 상권 분류 관련 연구는 다양한 데이터를 활용하여 상권의 특성과 유형을 세분화하는 방법을 제시하고 있다.

상권 경계를 설정하는 연구는 상권 분석의 실질적 정확성을 높이는 데 중점을 둔다. 정대영 등(2009)은 대상 지역의 지척도를 기반으로 한 현장조사를 통해 상업지역의 데이터베이스를 직접 구축하여 상권을 설정하고 분석하였다. 이용익 등(2010)은 기존 원형 상권 설정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GIS와 도로 연결성을 활용하여 접근성이 고려된 현실성 있는 상권 경계를 설정하는 방법론을 제안하였다. 김호용 등(2012)은 공간통계학적 접근을 시도하여 도시 중심지의 경계를 설정하고, 중심지의 역할과 위상을 분석하였다. 최근에는 상업 지역 관련 데이터의 개방으로 인하여 상권 경계를 직접 설정하는 연구들이 진행되고 있다. 권필·유기운(2015)은 공시지가와 유동인구 데이터에 AMOEBA기법을 적용하여 상권의 경계를 확인하였다. 김도영(2019)은 지방행정인허가 데이터에서 제공하고 있는 상업시설의 인허가 정보 위치데이터를 기반으로 업체의 밀집도를 기준으로 수원시 내 상권 영역을 도출하였다. 박경태·김영훈(2022)은 소상공인 개별데이터와 GIS 기법을 활용하여 중소도시에 적합한 골목상권 영역 설정방법을 제안하였다. 이러한 상권 경계 설정에 대한 연구들은 현실적 접근성을 고려한 경계 도출을 통해 상권 분석의 신뢰성을 높이는 데 기여하였다.

연안 지역의 상권 관련 연구들도 다양한 분야에서 축적되고 있다. 최일선 등(2025)은 통신·카드 등 가명정보를 결합한 빅데이터를 활용하여 연안 어촌·해양관광 지역의 소비 형태와 상권 규모를 정량적으로 분석함으로써 해양관광이 연안 상권 매출과 시장 규모에 미치는 영향을 제시하였으며, 유예지·김주락(2024)은 양양 서핑 관광지를 사례로 관광객 증가에 따른 관광 상업시설 확대, 업종 구성 변화, 경관 변화를 젠트리피케이션 관점에서 분석하였다. 코로나19 이후 어촌관광 변화추이를 빅데이터로 분석한 최규철 등(2021)의 연구는 감염병 충격이 연안 관광 수요와 상권 변화에 미친 영향을 보여주었다.

선행연구 검토 결과 상권 관련 연구들은 여러 분야에서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으나, 상업 활동이 실제로 이루어지는 상업 경계에 대한 구체적인 정의 및 접근 시도는 상대적으로 아직 부족하였다. 상업 활동의 공간적 분포

에 따라 상권 경계를 명확히 설정하는 것은 상권 분석과 지역 경제 활성화 전략 수립에 있어 중요한 과제이다. 연안 지역에 대한 연구들에서는 관광이 상권과 지역경제에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는 점을 반복적으로 보여주지만, 대부분 특정 도시·관광지에 한정된 사례 연구라는 한계점이 나타난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연안 지역에서 상업 활동이 실제로 이루어지는 공간을 기반으로 상업 경계를 설정하여 연안 상권의 영역을 정의하고 특성을 분석하고자 한다. 이러한 분석은 연안 지역의 경제 활성화를 위한 정책 수립과 실무적 의사결정에 활용될 수 있는 기초 자료를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 2. 이미지 분할 모델

상권은 개별 점포의 집합적 분포와 공간적 연속성에 의해 형성된다. 기존 상권 연구에서는 변경 기반 원형 버퍼 또는 행정구역을 기준으로 상권을 정의하는 방식이 주로 활용되어 왔으나, 이러한 접근은 실제 상업 활동이 이루어지는 공간적 패턴의 불연속성과 경계의 모호성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는 한계를 가진다. 이미지 분할 모델은 상권 경계 설정에 있어 이러한 한계를 보완할 수 있는 방법으로, 공간을 격자 단위의 연속적인 패턴으로 인식하고 국지적 유사성과 전역적 구조를 동시에 학습할 수 있다는 장점을 가진다(Jeong *et al.*, 2023). 특히 본 연구에 사용한 비지도 이미지 분할 모델은 사전에 정의된 상권 라벨이나 경계 정보가 없는 상황에서도 입력 데이터 내부의 통계적 유사성과 공간적 연속성을 기반으로 영역을 자동으로 분리할 수 있다(Kim *et al.*, 2020), 이러한 특성은 상권을 고정된 범주에서 벗어나 발생과 확장 과정을 데이터 주도적으로 탐색할 수 있게 한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본 연구에서는 Kim *et al.*(2020) 및 Jeong *et al.*(2024)이 제안한 컴퓨터 비전 기반 비지도 이미지 분할 프레임워크를 확장하여 딥 앙상블 기법을 통합함으로써 상권 영역 설정의 안정성과 예측 정확도를 향상시키고자 하였다. 이 분석 방법에는 Kim *et al.*(2020)이 개발한 비지도 이미지 분할 딥 러닝 모델과 이를 보완하는 일련의 후처리 과정이 포함된다(Jeong *et al.*, 2024). 그림 1과 같이 해당 모델은 이미지 분할 모델이 전통적으로 사용하는 RGB 이미지 대신, 점포 수와 같은 속성정보를 벡터화한 그리드 행렬을 입력 데이터로 활용한다. 격자 단위로 집계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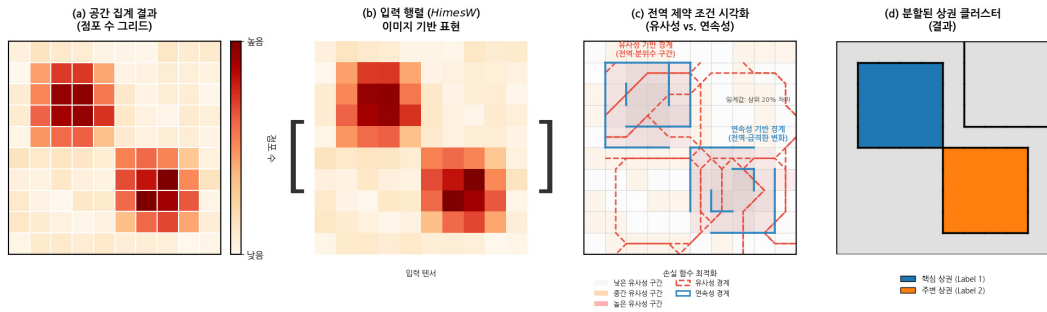


그림 1. 이미지 분할 모델의 상권 경계 설정 과정

점포 수 분포(그림 1.a)는 이미지 형태의 입력행렬로 변환되며(그림 1.b), 이때 각 그리드는 하나의 픽셀에 대응한다. 이후 모델은 그리드 간 속성 유사성과 공간적 연속성을 동시에 고려하는 손실 함수를 기반으로 학습을 수행한다. 점포 밀집도가 유사한 인접 그리드들은 동일한 클러스터로 묶이도록 유도되며, 반대로 인접 그리드 간 속성 값의 차이가 급격하게 나타나는 지점에서는 클러스터 분리가 허용된다(그림 1.c). 이러한 반복 학습 과정을 통해 점포 수 분포가 동질적이면서 공간적으로 연속된 영역은 하나의 상권 단위로 인식되고, 점포 수 분포가 급변하는 지점에서는 상권의 경계가 점진적으로 형성된다(그림 1.d). 이와 같은 학습 구조를 통해 이미지 분할 모델은 상권을 개별 점포의 단순 집합이 아닌, 공간적으로 연속된 상업 활동의 집적 영역으로 분류한다. 이는 상권 내부의 형태적 불규칙성과 경계의 점진적 변화까지 고려할 수 있다는 점에서 기존의 상권 영역 설정 방법들과 차별성을 가진다(Jeong *et al.*, 2025).

비지도 이미지 분할 모델을 학습하기 위해 본 연구에서는 먼저 48개 구역의 전처리된 행렬 데이터를 기반으로 학습 데이터 세트를 구축하였다. 결과 행렬의 크기가 상당히 커서 학습을 위한 딥러닝 모델에 직접 활용하기 어렵기 때문에, 행렬을 임의의 위치에서 특정 크기로 자르는 방식인 무작위 자르기(random cropping) 기법을 사용하여 GPU 메모리에 적합한 64x64 크기의 학습 데이터 세트를 생성하였다. 각 구역에서 300개의 부분 행렬을 추출한 뒤 이를 통합하여 모델 학습에 사용함으로써, 특정 지역에 편중되지 않은 공간적 패턴 학습이 가능하도록 하였다.

학습 데이터는 베이지안 최적화와 k-폴드 교차 검증(CV)을 활용하여 하이퍼파라미터 튜닝에 활용되었다.

베이지안 최적화는 제한된 반복 횟수 내에서 효율적으로 최적의 매개변수 조합을 탐색할 수 있는 확률론적 방법으로, 반복 횟수, 학습률, 연속성 가중치 간의 비선형적 상호작용을 고려하는 데 적합하다(arXiv). 또한 k-폴드 CV는 모델의 일반화 성능을 평가하고 과적합을 방지하기 위한 절차로 활용되었다. Kim *et al.*(2020)은 평균 교차 연합 점수(mIOU)를 통해 성능을 평가하였으나, 본 연구에서는 기준 데이터의 부재로 인해 평균화된 k-폴드 검증 손실 값을 대안적 성능 지표로 사용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반복 횟수, 학습률, 연속성 가중치를 주요 매개변수로 설정하였으며, 각 매개변수는 각각 1-10, 0.0005-0.1, 0.0005-100의 범위를 가졌다. K-폴드 CV의 값은 5로 설정하였으며, 베이지안 최적화는 10번 반복되었다. 실제 데이터를 사용할 수 없는 제약을 고려하여 평균 검증 손실 값을 하이퍼파라미터 튜닝 결과 평가 기준으로 사용하였다. 최적의 하이퍼파라미터 조합 및 각 모델의 최종 손실 값은 표 3에 제시되어 있다.

표 3. 각 모델의 최적 하이퍼파라미터 조합

모델 번호	반복	학습률	연속성	최종 손실
0	3	0.00417	6.63	8.26
1	8	0.00203	7.78	8.40
2	2	0.04783	5.10	12.47
3	6	0.00539	4.81	9.71
4	2	0.03414	10.00	11.69
5	7	0.00006	6.10	6.00
6	3	0.00246	4.07	7.77
7	4	0.00783	9.02	9.35
8	7	0.00319	1.95	8.97
9	2	0.00097	8.14	6.20

학습된 모델들은 48개 구역에서 초기 상권 후보 클러스터를 생성하였으며, 이후 클러스터 속성을 기반으로 응집형 군집 분석을 수행하여 상권 후보를 재구조화하였다. 소매업체 수와 클러스터 레이블 행렬을 결합하여 최종 상권 클러스터를 생성하였으며, 실루엣 점수를 활용하여 최적의 클러스터 수를 결정하였다. 이후, 각 구역에서 최종 상권 경계를 식별하기 위해 다수결 투표 방식을 적용하였다. 합산 행렬에서 값이 6 이상인 경우 상권으로 간주하였으며, 이를 통해 최종적으로 48개 구역에 대한 상권 경계를 설정하였다. 식별된 상권 경계는 GeoPackage(GPKG) 형식으로 저장하고, 최소 크기 기준을 적용하여 불필요한 영역을 제거하고 구역 간 중복되는 영역을 정리하였다. 그 결과 최종적으로 전국 6,636개의 상권을 분류하였다.

이미지 분할 기반 상권 경계의 타당성을 검증하기 위해, 부산광역시 일대를 사례 지역으로 선정하여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에서 정의하는 주요상권 경계와 비교하였다(그림 2). 그 결과, 본 연구의 상권 경계는 해운대해수욕장, 광안리해수욕장, 센텀시티 등 주요 상업 축을 따라 형

성된 주요상권과 높은 공간적 일치성을 보였다. 더불어 이미지 분할 모델은 주요상권 경계에 포함되지 않는 해안선 및 주거-상업 혼합 지역의 연속적 상업 공간까지도 포착하는 경향을 보인다. 이는 실제 점포의 분포 데이터 기반으로 경계를 설정하는 이미지 분할 모델의 장점을 반영하는 사례로, 본 연구의 상권 추출 결과가 기존 상권 체계와 일관성을 유지할 뿐만 아니라 보다 세밀한 공간 구조를 반영함을 나타낸다.

### 3. 연안의 정의

구분한 상권 경계 중 연안 지역의 상권 추출을 위하여 연안에 대한 정의를 실시하였다. 연안관리법에 따르면 “연안”이란 연안해양(沿岸海域)과 연안육역(沿岸陸域)으로 구성되어 있다. 연안육역이란 무인도서 지역과, 연안해양의 육지쪽 경계선을 기준으로 500m(항만, 국가어항, 산업단지 경우에는 1,000m) 이내의 육지지역을 말한다. 이에 따라 그림 3과 같이 해안선 경계를 기준으로 500m 범위의 지역에 대한 버퍼를 설정하였고, 항만과 용도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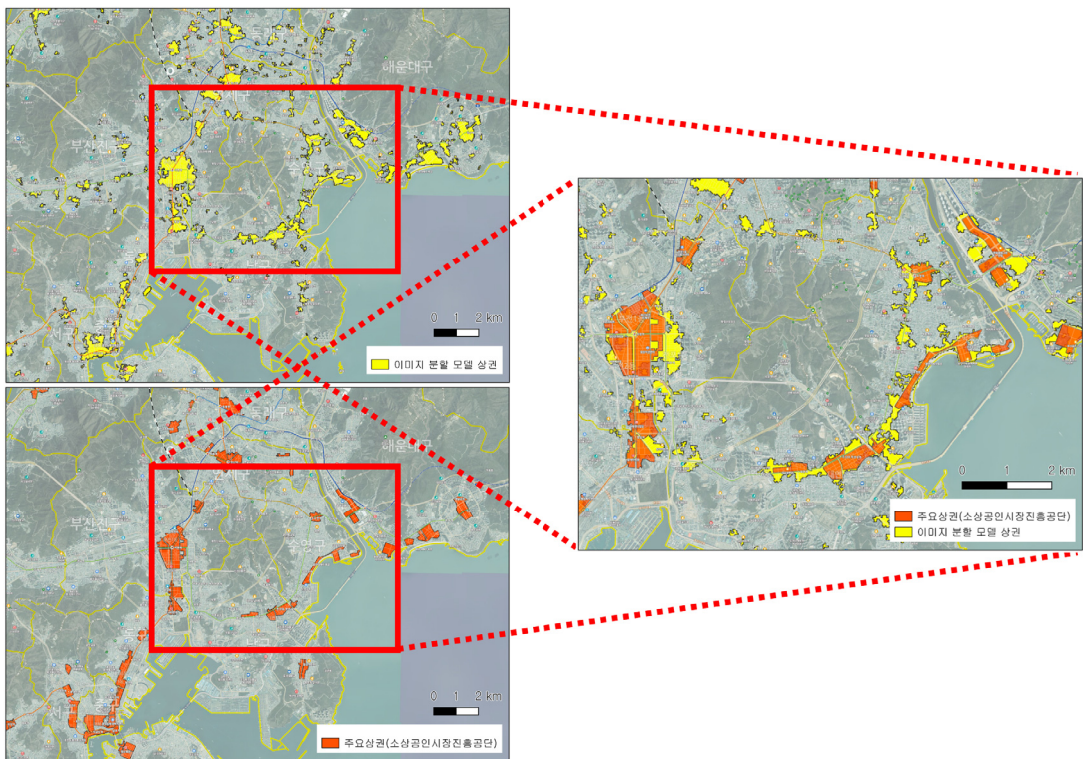


그림 2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주요상권과 이미지 분할 모델 기반 상권 경계의 공간적 비교(부산광역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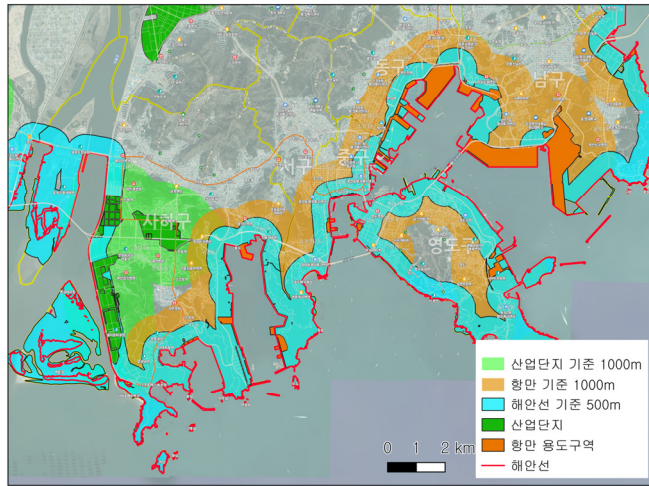


그림 3. 연안육역 영역 설정 기준(부산광역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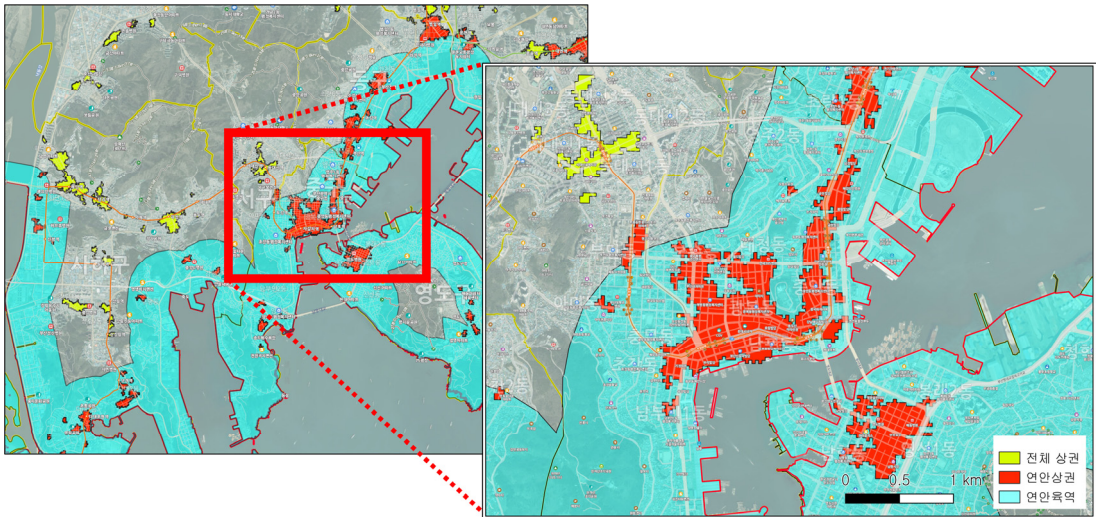


그림 4. 연안육역을 통한 연안 상권 설정(부산광역시)

역이 산업단지인 지역의 경우 1,000m 범위 지역에 대한 버퍼를 설정한 뒤 두 구간을 중첩하여 연안육역 범위를 그림 4와 같이 설정하였다. 이미지 분할 모델을 통하여 설정한 상권 경계 중 연안육역 범위 내에 위치한 경계들을 연안 상권으로 정의하였다.

#### 4. 지역별 연안 상권 현황

이미지 분할 모델을 통해 추출한 상권 경계를 연안육역 지역과 중첩한 결과, 총 11개 시도에서 전체 482개의 연

안 상권이 추출되었다. 지역별 연안 상권 현황은 표 4와 같다.

강원특별자치도에는 총 44개의 연안 상권이 분포하고 있으며, 이 중 속초시(19개)가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이는 속초시가 주요 관광지로서 많은 유동인구를 확보하고 있음을 시사한다. 강릉시(9개)와 동해시(10개)도 비교적 많은 상권을 보유하고 있는 반면, 삼척시(2개)와 양양군(4개)은 상대적으로 적은 상권을 보여 지역 내 상권 분포가 불균형하게 나타난다.

경기도는 총 21개의 연안 상권이 확인되었으며, 이 중

표 4. 지역별 연안 상권 현황

시도 (상권 개수)	시군구	연안상권 개수	시도	시군구	연안상권 개수
강원특별자치도 (44)	강릉시	9	울산광역시 (30)	남구	1
	동해시	10		동구	17
	삼척시	2		북구	11
	속초시	19		울주군	1
	양양군	4	인천광역시 (34)	강화군	2
경기도 (21)	김포시	1		남동구	4
	시흥시	14		동구	4
	안산시 단원구	2		서구	1
	평택시	3		연수구	13
	화성시	1		옹진군	1
경상남도 (80)	거제시	23		중구	9
	남해군	2	전라남도 (74)	강진군	1
	사천시	2		고흥군	2
	창원시 마산합포구	25		평양시	11
	창원시 성산구	1		목포시	18
	창원시 진해구	11		무안군	1
	통영시	16		여수시	33
경상북도 (29)	경주시	1		영광군	1
	영덕군	1		영암군	3
	울릉군	1		완도군	4
	울진군	6		전라북도 (10)	군산시
	포항시 남구	6	부안군		2
	포항시 북구	14	제주특별자치도 (35)	서귀포시	11
부산광역시 (114)	강서구	16		제주시	24
	기장군	5	충청남도 (11)	당진시	5
	남구	15		보령시	3
	동구	7		태안군	2
	사하구	20		홍성군	1
	서구	7			
	수영구	8			
	영도구	9			
	중구	5			
	해운대구	22			
총 합계					482

시흥시(14개)가 대부분을 차지하였다. 이는 수도권에 위치한 시흥시의 높은 인구 밀집도와 도시화 수준이 상권 형성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반면, 김포시, 안산시 단원구, 화성시 등은 각각 1~2개의 상권만 확인되어 연안 지역임에도 상권 형성이 제한적임을 보여준다. 이러한 현상은 지역의 연안 개발 수준이나 접근성의 차이와 관련이 있을 가능성이 높다.

경상남도에는 총 80개의 연안 상권이 분포하며, 지역 간 분포 차이가 뚜렷하게 나타났다. 창원시 마산합포구(25개)와 거제시(23개)는 두드러진 상권 밀집 지역으로 확인되었다. 이는 거제시가 조선업 중심의 산업도시로서 경제 활동이 활발하며, 창원시 마산합포구가 지역 내 상업 중심지로서 역할을 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반면, 남해군과 사천시는 각각 2개의 상권만 확인되어 상업적 활동

이 제한적인 지역으로 나타났다.

경상북도는 총 29개의 연안 상권이 분포하며, 포항시 북구(14개)와 포항시 남구(6개)가 주요 상권 지역으로 확인되었다. 이는 포항시가 철강 산업과 더불어 연안 상권 형성이 활발한 도시임을 나타낸다. 이에 비해 경주시, 영덕군, 울릉군 등은 각각 1개의 상권만 확인되어 연안 지역 간 상권 분포에서 큰 차이를 보이는데, 이러한 차이는 지역의 접근성 및 관광 자원의 부족과 관련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부산광역시에는 총 114개의 연안 상권이 확인되었으며, 이는 전국에서 가장 높은 상권 밀도를 나타낸다. 특히, 해운대구(22개)와 사하구(20개)는 주요 상권 중심지로 확인되었으며, 해운대구는 주요 관광지로서, 사하구는 대규모 주거 및 산업단지와의 연계성이 상권 형성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된다. 그 외에도 강서구(16개), 남구(15개) 등 다수의 구에서 상권이 비교적 균등하게 형성되어 도시 전역에서 상업 활동이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음을 보여준다.

울산광역시는 총 30개의 연안 상권이 분포하며, 동구(17개)와 북구(11개)가 주요 상권 지역으로 나타났다. 이는 산업단지와 항만 중심지로서 울산의 지역적 특성이 상권 형성에 영향을 미쳤음을 나타낸다. 인천광역시는 총 34개의 상권이 분포하며, 연수구(13개)와 중구(9개)가 주요 상권 지역으로 확인되었다. 이는 인천이 항구 도시로서 상업 활동이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음을 반영한다.

전라남도에는 총 74개의 연안 상권이 분포하며, 여수시(33개)와 목포시(18개)가 주요 상권 지역으로 확인되었다. 이는 두 지역이 관광 산업과 연계된 상업 활동의 중심지로 자리 잡고 있음을 보여준다. 반면, 강진군, 고흥군, 무안군 등은 각각 1~2개의 상권만 형성되어 있어 상권 형성이 미미한 지역으로 나타난다.

전라북도에는 총 10개의 연안 상권이 확인되었으며, 이 중 군산시(8개)가 대부분을 차지하였다. 이는 군산시가 연안 지역에서 주요 항만 도시로서 상업 활동이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음을 시사한다. 반면, 부안군(2개)은 상대적으로 적은 상권을 보유하고 있어 지역 내 상권 분포가 제한적임을 보여준다. 이러한 차이는 지역의 산업 구조, 인구 밀집도, 그리고 관광 자원의 활용 수준과 관련이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제주특별자치도는 총 35개의 연안 상권이 분포하며, 제주시(24개)가 주요 상권 밀집 지역으로 확인되었다. 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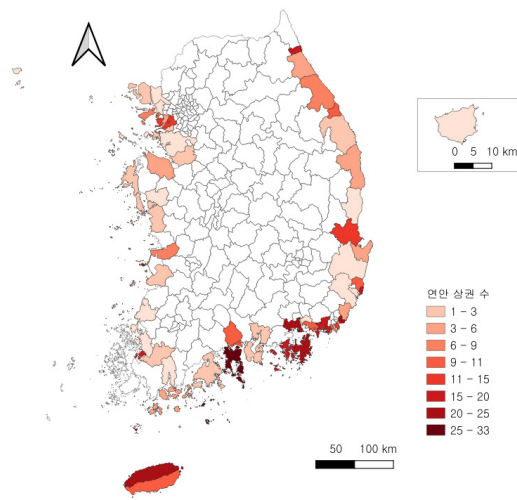


그림 5. 시군구별 연안 상권 분포

는 제주도가 관광 중심지로서 상업 활동이 활발하고, 특히 제주시가 공항 및 주요 관광지와의 연계성을 기반으로 상권 형성에 영향을 미쳤음을 시사한다. 서귀포시(11개)도 높은 상권 밀집을 보였으나, 제주시와 비교했을 때 상대적으로 낮은 수준으로 나타났다.

충청남도에서는 총 11개의 연안 상권이 분포하고 있으며, 당진시(5개)가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였다. 이는 당진시가 주요 산업 단지와 연계된 상업 활동의 중심지로서 기능하고 있음을 반영한다. 보령시(3개)는 관광지로서의 역할과 관련된 상권 분포를 보이며, 태안군(2개)과 홍성군(1개)은 상대적으로 상권이 적게 형성된 지역으로 나타났다.

지역별 연안 상권의 분포를 종합적으로 비교하면, 단순한 지역 차이를 넘어 연안 상권의 구조적 유형이 뚜렷하게 구분됨을 확인할 수 있다. 부산광역시와 인천광역시는 다수의 연안 상권이 연속적으로 분포하는 다핵적 상권 구조를 보이며, 이는 대규모 항만, 배후 주거지, 관광지가 중첩된 대도시형 연안 상권의 특징을 반영한다. 반면, 여수, 목포, 포항과 같은 중소 항만 도시는 특정 핵심 거점에 상권이 집중되는 거점 집중형 구조를 보이며, 항만과 관광지 주변을 중심으로 상업 활동이 밀집되는 양상이 두드러진다. 속초, 강릉, 제주와 같은 관광 중심 지역은 연안선을 따라 상권이 띠 모양으로 분포하는 관광 편중형 구조를 형성하며, 계절성과 관광 수요에 민감한 상업 공간의 특성이 반영된다. 이에 비해 남해군, 고흥군, 울릉군과 같

은 지역은 연안 상권의 수 자체가 매우 적고 공간적으로도 단절된 저밀·취약형 구조를 보이는데, 이는 인구 기반과 관광 수요가 모두 제한된 연안 지역의 구조적 한계를 반영한다. 이처럼 지역 간 연안 상권의 분포에는 뚜렷한 차이가 존재하였다. 상권 분포의 차이는 지역의 접근성, 경제 활동 수준, 및 연안 개발의 밀도와 연관되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러한 분석은 지역별 상권 개발 및 관리 전략 수립에 유용한 기초 자료로 활용될 수 있다.

### III. 상권 특성 분석

#### 1. 연안 상권의 업종 구성

482개 연안 상권을 대상으로 분석 기간인 2023년 7월부터 2024년 6월까지 상권 내 점포들의 업종 구성을 분석하였다. 영업 상태별로 분석을 실시하여 분석 기간 종료 시점까지 영업 상태를 유지한 점포들과, 분석 기간 동안 폐업한 점포들의 업종별 빈도 및 평균 영업일수를 각각 산정하였다. 평균 영업일수는 개별 점포가 개업 이후 시장에서 얼마나 오랫동안 생존했는지를 나타내는 지표로, 업종 및 상권의 안정성과 경쟁 구조를 간접적으로 반영한다. 영업 중인 점포들은 인허가일자(개업일)로부터 분석 기간 종료시점인 2024년 6월 30일까지, 폐업 점포들은 인허가일자(개업일)로부터 폐업일까지의 기간을 영업일수로 산정하여 업종별 평균값을 구하였다. 영업 중인 점포의 평균 영업일수는 현재까지 생존에 성공한 점포들의 누적 운영 기간을 의미하므로, 장기적으로 유지 가능한 수요 기반과 경쟁 우위를 확보한 점포들이 어느 정도 존재하는지를 보여준다. 반면, 폐업 점포의 평균 영업일수는 시장에 진입한 이후 경쟁에서 탈락하기까지 소요된 평균 기간을 나타내며, 이는 해당 업종이 얼마나 빠르게 구조조정과 도태 과정을 겪는지를 반영하는 지표이다. 따라서 영업 중 점포의 평균 영업일수가 폐업 점포보다 현저히 길게 나타나는 업종은 비교적 안정적인 시장 구조를 갖는 반면, 두 값의 차이가 작거나 폐업 점포의 평균 영업일수가 짧게 나타나는 업종은 경쟁 강도가 높고 생존 위험이 큰 구조를 갖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2024년 6월까지 연안 상권 내에서 영업 중인 점포들은 음식점, 미용실, 주점, 카페, 병원이 주요 업종으로 나타났다(표 5). 음식점은 영업 중인 점포 중 약 54%로 가장 높은

표 5. 연안상권 내 영업 중인 점포의 업종 구성

업종	점포 수	평균 영업일수
음식점	20,004	4,462
미용실	3,904	3,688
주점	3,030	4,497
카페	2,151	2,775
병원	2,082	6,022
노래방	1,788	6,423
약국	705	5,067
제과점	578	3,972
PC방	574	2,201
편의점	529	1,957
헬스장	417	2,644
이발소	299	7,814
세탁소	220	8,428
영화관	167	4,800
목욕탕	165	9,792
공연장	24	3,370
총합계	36,637	4,455

비중을 차지하였으며, 평균 영업일수 또한 4,461일로 비교적 길게 나타났다. 이는 음식점이 연안 지역 상권에서 핵심적인 업종으로 기능하며, 비교적 안정적인 운영 기반을 갖고 있음을 시사한다. 지역 주민의 일상적 수요에 기반한 업종인 미용실은 두 번째로 높은 비중을 보였으며, 평균 영업일수는 3,688일로 나타났다. 주점은 빈도는 상대적으로 낮지만 평균 영업일수는 4,497일로 길게 나타나, 특정 고객층을 대상으로 안정적인 운영이 이루어지고 있음을 보여준다. 반면 카페의 평균 영업일수는 2,775일로 비교적 짧은 기간 동안 운영되는 경향이 관찰되는데, 트렌드 변화와 경쟁에 민감한 업종 특성이 반영된 결과로 해석된다. 병원은 평균 영업일수 6,022일로 가장 길게 나타나 장기적인 안정성을 유지하며 운영되는 업종 특성을 보인다.

분석 기간 동안 연안 상권 내에서 폐업한 점포의 업종 분석 결과, 음식점, 카페, 미용실, 주점, 제과점이 주요 업종으로 나타났다(표 6). 음식점은 폐업 빈도가 가장 높았으며, 평균 영업일수는 2,085일로 비교적 짧게 나타나, 연안 상권 내에서 경쟁 강도와 변동성이 큰 업종임을 보여준다. 카페는 폐업 빈도에서 두 번째로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평균 영업일수는 2,199일로 음식점과 유사한 수준

표 6. 연안상권 내 폐업 점포의 업종 구성

업종	점포 수	평균 영업일수
음식점	2,023	2,085
카페	310	2,199
미용실	253	2,330
주점	209	3,057
제과점	100	1,248
PC방	83	2,305
편의점	51	1,891
노래방	43	6,308
병원	36	5,689
약국	25	4,536
이발소	18	4,408
세탁소	14	10,033
헬스장	14	2,420
목욕탕	11	9,336
영화관	6	2,519
공연장	1	2,097
총합계	3,197	2,347

을 보여 시장 포화와 경쟁 심화의 영향을 크게 받는 업종으로 해석된다. 제과점은 폐업 빈도는 상대적으로 낮았으나 평균 영업일수는 1,248일로 가장 짧아 상대적으로 경쟁력이 취약한 업종임을 확인할 수 있다.

음식점과 카페는 영업 중인 점포와 폐업 점포 모두에서 높은 빈도를 기록하여, 연안 지역 상권의 핵심 업종이자 높은 경쟁 강도로 인한 운영 리스크를 내포한 업종으로 해석된다. 반면, 미용실과 병원은 영업 중인 점포의 비중에 비해 폐업 빈도가 낮아, 상대적으로 안정적인 업종으로 평가된다. 편의점의 경우 다른 업종에 비해 평균 영업일수가 상대적으로 짧게 나타났는데, 이는 프랜차이즈 중심의 사업 구조로 인해 신규 창업이 용이하고 점포 간 경쟁이 치열하여 다른 업종에 비해 낮은 생존 가능성을 보이기 때문으로 해석할 수 있다.

표 7은 연안 상권 내에서 점포 수 상위 5위 이내에 포함된 업종의 빈도와 상권 내 업종의 순위에 따른 가중치를 보여준다. 점포 수 상위 5위 이내 포함 빈도는 특정 업종이 얼마나 많은 연안 상권에서 핵심 업종으로 반복적으로 등장했는지를 나타낸다. 순위 가중치( $W_j$ )는 특정 업종의 점포 수가 각 상권에서 얼마나 상위에 위치했는지를 종합적으로 반영하는 지표로, 각 상권에서 상위 5개 업종에 포함된 경우에 한하여 순위  $r$ 에 대해 순위 점수  $s_r (= 6 - r)$

표 7. 연안상권 내 점포 수 상위 5위 업종 빈도와 순위 가중치

업종	상위 5개 포함 빈도	순위 가중치
음식점	444	2173
미용실	333	1094
주점	276	789
카페	266	670
노래방	193	498
병원	162	410
편의점	69	170
PC방	76	145
약국	69	125
제과점	48	98
목욕탕	40	84
세탁소	36	63
이발소	27	48
영화관	8	27
헬스장	8	11
공연장	2	9

을 부여하고, 업종  $j$ 가  $r$ 위로 등장한 횟수  $n_{j,r}$ 을 가중합하여 산정하였다. 이 지표는 업종이 상권에서 얼마나 중심적으로 기능하는지를 나타낸다. 두 지표를 통해 연안 상권 전체적으로 어떤 업종이 광범위하게 분포하면서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하는지 대표성과 중요도를 평가할 수 있다.

$$W_j = \sum_{r=1}^5 s_r n_{j,r}$$

음식점은 상위 5위 업종에 포함된 횟수(빈도)가 444회, 순위 가중치에서도 2,173으로 가장 높은 값을 기록하였다. 이는 대부분의 연안 상권에서 음식점이 가장 보편적으로 분포하면서 기본적인 소비 구조를 구성하는 핵심 업종임을 의미한다. 미용실(빈도 333회, 가중치 1,094)과 주점(빈도 276회, 가중치 789), 카페(빈도 266회, 가중치 670)는 음식점 다음으로 높은 빈도와 가중치를 기록하였다. 이들 업종 역시 다수의 연안 상권에서 반복적으로 핵심 업종으로 나타나며, 연안 상권 전반에서 높은 대표성과 중요도를 갖는 업종으로 평가된다. 미용실은 지역 주민의 일상적 수요를 반영하는 업종이며, 주점과 카페는 연안 상권의 여가 및 관광적 성격을 반영하는 업종으로 해석된다. 노래방(빈도 193, 가중치 498)과 병원(빈도 162, 가중치 410)은 상위 업종들에 비해 상위 5위 빈도는 낮지

만, 포함될 경우 상대적으로 높은 순위 가중치를 기록한다. 이들 업종은 모든 상권에 필수적으로 존재하지는 않지만, 특정 상권에서는 중요한 기능을 수행하는 선택적 핵심 업종임을 의미한다. 병원은 생활 서비스 기반의 안정적인 업종, 노래방은 여가·관광 기능을 대표하는 업종으로 해석된다. 편의점, PC방, 약국, 제과점 이하의 업종들은 상위 5위 빈도와 순위 가중치가 급격히 감소하는데, 이들 업종이 연안 상권을 대표하는 보편적인 핵심 업종으로 기능하지는 않는다는 것을 시사한다. 따라서 지역적 특성이나 특정 소비 수요에 따라 선택적으로 부각되는 보조적 업종으로 해석할 수 있다.

업종 구성 비율은 상권별로 상이하게 나타나기 때문에 이를 활용하여 상권을 유형별로 분류할 수 있다. K-Means 군집 분석 기법을 활용하여 상권의 업종 구성 비율을 기반으로 연안 상권을 네 가지 유형으로 분류하였다. 각 상권의 업종별 점포 수를 집계한 후 전체 점포 수 대비 비율로 환산하고, 이를 표준화한 데이터를 이용하여 유클리드 거리 기준으로 업종 구성이 유사한 상권을 동일한 클러스터로 분류하였다. 군집 분석 결과 도출된 4개의 군집은 업종 구성 비율의 차이에 따라 구분되며, 이를 통해 각 상권 유형의 특성을 해석할 수 있다(표 8). Cluster 0은 음식점(44.7%), 주점(13.2%), 미용실(10.3%) 이 주요 업종으로 구성되어, 여가와 일상적 소비가 혼합된 상권 유형으로 해석된다. 이 유형의 상권은 음식점을 중심으로 여가 및 생활 서비스를 함께 제공하며, 관광객과 지역 주민 모두를 대상으로 하는 복합적인 소비 구조를 갖는다. Cluster 1은 상권 내 업종 분포가 음식점(83%)에 극도로 집중된 유형으로 나타나는데, 이는 음식 소비를 중심으로 특화된 단일 업종 상권으로 평가된다. 이러한 상권은 음식 소비에 특화된 공간 구조를 갖는 상권 유형으로 해

석된다. Cluster 2는 미용실(26.3%), 병원(10.3%), 음식점(28.4%)이 비교적 고르게 분포되어 있다. 이 유형은 의료 및 미용 서비스와 음식 소비가 균형을 이루는 생활밀착형 상권으로 해석된다. 지역 주민의 일상적 생활 서비스 수요를 충족하는 기능이 강조되며, 상권 내 안정적인 고객 기반이 뒷받침되는 지역적 특성을 반영한다. Cluster 3은 음식점(61.3%)을 중심으로 주점(7.1%), 카페(6.2%)가 함께 분포하는 유형으로, 식음료 소비를 중심으로 하면서도 여가와 사교 활동이 가능한 복합적인 소비 공간이 결합된 상권으로 해석된다.

## 2. 연안 상권의 지역별 개·폐업 현황

연안 상권 내 개별 점포들의 2023년도 7월 1일부터 2024년도 6월 30일까지 1년 간의 개업과 폐업 현황을 지역별로 살펴보았다. 지방행정인허가 데이터 상 점포들의 영업 상태는 표 9와 같이 4가지로 분류된다. 표 10은 지역별 연안 상권의 개·폐업 현황을 나타낸다. ‘총 영업’은 표 9의 ‘기존 영업’과 ‘개업 후 영업’을 합한 값이며, ‘총 개업’은 ‘개업 후 영업’과 ‘개업 후 폐업’을 합한 값이다. ‘총 폐업’은 ‘개업 후 폐업’과 ‘영업중 폐업’을 합한 값이고 ‘폐업율’의 경우 ‘총 폐업’을 ‘총 영업’과 ‘총 폐업’의 합으로 나누어 계산한다. ‘개업 점포 생존율’은 분석기간 동안 개업한 점포들이 폐업하지 않고 분석 종료 시점까지 영업 상태를 유지한 비율을 의미한다.

지역별로 연안 상권의 개·폐업 관련 지표를 살펴보면 강원특별자치도의 경우, 속초시와 양양군이 각각 97%와 100%의 개업 점포 생존율을 기록하며, 비교적 안정적인 상권을 형성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동해시와 삼척시는 폐업율이 각각 6%와 7%로, 상권 내 일부 점포가

표 8. K-Means 상권 유형 분류 업종 구성 비율

Cluster	PC방	공연장	노래방	목욕탕	미용실	병원	세탁소	약국
0	0.0218	0.0019	0.0539	0.0090	0.1034	0.0559	0.0134	0.0295
1	0.0026	0.0011	0.0220	0.0021	0.0175	0.0044	0.0029	0.0041
2	0.0167	0.0004	0.0235	0.0052	0.2625	0.1034	0.0153	0.0353
3	0.0168	0.0001	0.0413	0.0082	0.0867	0.0259	0.0065	0.0123

Cluster	영화관	음식점	이발소	제과점	주점	카페	편의점	헬스장
0	0.0035	0.4468	0.0163	0.0200	0.1315	0.0674	0.0164	0.0092
1	0.0010	0.8300	0.0011	0.0107	0.0274	0.0534	0.0189	0.0007
2	0.0149	0.2843	0.0213	0.0229	0.0527	0.0985	0.0310	0.0121
3	0.0017	0.6132	0.0083	0.0161	0.0709	0.0617	0.0220	0.0082

표 9. 점포 영업 상태 정의

영업 상태	개업 시기	폐업 시기	설명
기존 영업	2023.7.1. 이전	-	분석 기간 전부터 영업 중
개업 후 영업	2023.7.1. 이후	-	분석 기간 동안 개업하여 영업 중
개업 후 폐업	2023.7.1. 이후	2024.6.30. 이전	분석 기간 동안 개업 후 분석 기간 동안 폐업
영업 중 폐업	2023.7.1. 이전	2024.6.30. 이전	분석 기간 전부터 영업 중이었으나 분석 기간 동안 폐업

표 10. 지역별 연안 상권 개·폐업현황(1)

시도	시군구	총 영업	총 개업	개업 후 폐업	총 폐업	폐업율	개업 점포 생존율	점포 증감
강원특별자치도	강릉시	357	19	1	16	4%	95%	3
	동해시	558	37	2	33	6%	95%	4
	삼척시	26	1	0	2	7%	100%	-1
	속초시	991	71	2	57	5%	97%	14
	양양군	81	10	0	7	8%	100%	3
경기도	김포시	11	4	0	3	21%	100%	1
	시흥시	757	140	18	88	10%	87%	52
	안산시 단원구	7	0	0	0	0%	-	0
	평택시	321	35	1	24	7%	97%	11
경상남도	거제시	2252	128	7	163	7%	95%	-35
	남해군	28	5	0	2	7%	100%	3
	사천시	63	6	0	9	13%	100%	-3
	창원시 마산합포구	1962	137	52	178	8%	62%	-41
	창원시 성산구	39	0	0	1	3%	-	-1
	창원시 진해구	624	70	5	52	8%	93%	18
경상북도	통영시	1599	101	4	106	6%	96%	-5
	경주시	27	3	0	2	7%	100%	1
	영덕군	15	2	0	0	0%	100%	2
	울진군	187	9	1	10	5%	89%	-1
	포항시 남구	162	10	0	12	7%	100%	-2
부산광역시	포항시 북구	582	49	16	52	8%	67%	-3
	강서구	1222	195	15	150	11%	92%	45
	기장군	173	30	4	32	16%	87%	-2
	남구	2434	199	14	192	7%	93%	7
	동구	1553	97	11	106	6%	89%	-9
	사하구	1038	40	1	38	4%	98%	2
	서구	273	11	0	7	3%	100%	4
	수영구	1509	178	27	141	9%	85%	37
	영도구	897	45	1	52	5%	98%	-7
중구	2855	205	53	216	7%	74%	-11	
해운대구	2625	557	371	563	18%	33%	-6	

경쟁 환경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음을 시사한다. 경기도에서는 시흥시가 87%의 개업 점포 생존율과 12%의 폐업율을 기록하며, 활발한 상권 성장과 함께 경쟁이 존재하는 환경으로 평가된다. 그러나 김포시는 30%라는 높은 폐업

율을 보여, 해당 지역에서 상권의 안정성이 낮음을 보여 준다. 또한, 안산시 단원구는 신규 개업 및 폐업 활동이 없어 상권의 활동성이 제한적이다. 경상남도의 창원시 마산합포구는 개업 점포 생존율이 62%로 낮아 신규 진입 점포

가 생존하기 어려운 상권임을 나타내며, 폐업율 또한 9%로 나타나 상권의 경쟁 강도가 높은 것으로 분석된다.

반면, 통영시와 남해군은 개업 점포 생존율이 각각 96%와 100%로 나타나, 안정적인 상권 특성을 보였다. 부산광역시에서는 상권 간 차이가 뚜렷하게 나타났다. 해운대구는 개업 점포 생존율이 33%로 매우 낮고 폐업율은 19%로 높아, 포화 상태의 상권을 반영한다. 반면, 강서구는 개업 점포 생존율 92%와 폐업율 13%를 기록하며 비교적 안정적인 상권을 형성하고 있다. 인천광역시에서는 남동구와 연수구가 각각 91%와 96%의 개업 점포 생존율을 보였으나, 폐업율은 각각 10%와 12%로 나타나 상권의 안정성은 있으나 경쟁 압박이 존재하는 것으로 분석된다. 전라남도의 광양시와 여수시는 각각 76%와 85%의

개업 점포 생존율과 8%의 폐업율을 기록하며, 경쟁적인 상권 환경이 존재하는 지역으로 평가된다. 그러나 목포시는 개업 점포 생존율 89%와 폐업율 7%로 비교적 안정적인 상권으로 평가된다. 제주특별자치도의 서귀포시와 제주시는 각각 97%와 98%의 개업 점포 생존율을 기록하며, 낮은 폐업율(6%, 5%)과 함께 매우 안정적인 상권을 유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충청남도의 당진시는 개업 점포 생존율이 93%, 폐업율이 4%로 안정적인 상권 환경을 보여주며, 홍성군은 100%의 개업 점포 생존율과 11%의 폐업율로 신규 진입 상권은 안정적이지만, 기존 점포 간 경쟁이 다소 치열한 지역으로 평가된다.

지역별 개·폐업 지표를 종합적으로 비교하면, 연안 상권은 서로 다른 유형적 구조를 형성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표 11. 지역별 연안 상권 개·폐업현황(2)

시도	시군구	총 영업	총 개업	개업 후 폐업	총 폐업	폐업율	개업 점포 생존율	점포 증감
울산광역시	남구	41	5	1	5	11%	80%	0
	동구	1158	97	20	101	8%	79%	-4
	북구	249	13	0	18	7%	100%	-5
	울주군	17	1	0	0	0%	100%	1
인천광역시	강화군	2	0	0	0	0%	-	0
	남동구	1006	96	9	98	9%	91%	-2
	동구	130	5	0	5	4%	100%	0
	서구	73	5	0	8	10%	100%	-3
	연수구	487	48	2	59	11%	96%	-11
	옹진군	50	2	0	0	0%	100%	2
전라남도	종구	912	128	8	96	10%	94%	32
	강진군	20	1	0	2	9%	100%	-1
	고흥군	87	9	1	5	5%	89%	4
	광양시	410	37	9	33	7%	76%	4
	목포시	1872	160	18	139	7%	89%	21
	무안군	11	0	0	1	8%	-	-1
	여수시	1885	155	24	150	7%	85%	5
	영암군	64	4	0	9	12%	100%	-5
전라북도	완도군	195	5	0	4	2%	100%	1
	군산시	156	20	1	14	8%	95%	6
제주특별자치도	부안군	24	1	0	1	4%	100%	0
	서귀포시	1203	58	2	69	5%	97%	-11
충청남도	제주시	808	43	1	42	5%	98%	1
	당진시	390	29	2	15	4%	93%	14
	보령시	77	3	0	2	3%	100%	1
	태안군	34	2	0	3	8%	100%	-1
	홍성군	49	7	0	5	9%	100%	2

있다.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창원시 마산합포구와 같이 개업 점포 생존율이 낮고 폐업률이 높은 지역은 이미 포화 상태인 경쟁형 상권으로 해석할 수 있다. 이러한 상권은 활발한 신규 진입과 더불어 빠른 도태가 동시에 발생하는 구조를 보이는데, 관광 수요나 상업 집적도가 높은 지역에서 진입 장벽은 낮지만 생존을 위한 경쟁이 치열하게 나타나는 것을 의미한다. 반면, 강원도 속초시·양양군, 경상남도 통영시, 제주도(제주시, 서귀포시)와 같이 개업 점포 생존율이 높고 폐업률이 낮은 지역은 수요 기반이 안정적인 성장형 상권으로 분류할 수 있다. 이 지역들은 관광 수요 또는 지역 주민 기반의 수요가 일정 수준 유지되기 때문에 신규 점포의 정착 가능성이 높아 비교적 안정된 상권을 형성하고 있다. 경기도 시흥시, 인천광역시 남동구·연수구, 전라남도 여수시·광양시와 같이 개업 점포 유입은 많지만 폐업 점포도 일정 수준 존재하는 지역은 상권의 성장과 구조조정이 병행되는 동태적 상권으로 해석할 수 있다. 이처럼 연안 상권의 개·폐업 특성 차이는 단순히 지역에 따라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상권의 성숙도와 수요 기반, 관광 의존도 및 산업 구조에 따라 구분되는 구조적 유형의 차이와 연관되어 나타난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 IV. 요약 및 결론

본 연구에서는 지방행정 인허가 데이터와 비지도 학습 기반 이미지 분할 모델을 활용하여 연안 지역의 상권 경계를 실증적으로 도출하고, 이를 바탕으로 연안 지역 상권의 공간적 분포, 업종 구조, 지역별 개·폐업 특성을 분석하였다. 격자망 형태로 변환한 점포 위치 데이터를 이미지 분할 모델에 적용함으로써, 실제 상업 활동이 이루어지는 공간적 경계를 효과적으로 추출할 수 있었다. 그 결과 전국적으로 482개의 연안 상권이 도출되었으며, 이들 상권은 대체로 대규모 항만이 인접한 도시나 주요 연안 관광지를 중심으로 분포하는 경향을 보였다. 연안 상권을 구성하는 주요 업종은 음식점, 미용실, 주점, 카페, 병원 등으로 나타났으며, 각 상권의 업종 구성 비율에 따라 여가·일상적 소비 혼합 상권, 음식점 중심 상권, 지역 주민 생활서비스 상권, 식음료 소비 중심 상권의 4가지 유형으로 분류하였다. 또한 지역별 상권의 개·폐업 지표를 통해 연안 상권의 경쟁 강도와 안정성이 지역마다 다르게 나타나는 것을 확인하였다. 본 연구는 기존 상권 연구가 행정구역 단위에 의존해 왔

던 한계를 극복하고, 공간 데이터와 이미지 분할 기법을 결합하여 실제 상업 활동의 공간적 경계를 데이터 기반으로 추출하는 방법론을 제시하였다는 점에서 학술적 의의를 갖는다. 이는 상권을 추상적인 개념이 아닌 실증적인 공간 객체로 정의할 수 있는 분석 틀을 제공한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또한 연안이라는 특수한 공간적 맥락에서 상권의 업종 구조와 개·폐업 특성을 통합적으로 분석함으로써, 연안 상권의 구조적 특성과 유형을 규명하였다.

도출된 상권 경계는 행정구역과 다른 실제 상업 활동 기반 공간 단위로서, 관광 산업, 지역 상권, 도시재생 정책 등에 보다 정밀한 기초 자료로 활용될 수 있다는 점에서 정책적 함의를 가진다. 상권 유형에 대한 분석은 지역별로 차별화된 상권 관리 및 창업 지원 등의 전략 수립에 실증적인 근거를 제공할 수 있다. 최근 연구(김성환, 2024; 이동훈·여옥경, 2025)에 의하면 고령화, 저출생 및 수도권 집중으로 인한 지방 인구감소가 심각한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특히 연안 어촌과 도서 지역에서 고령인구 비율 증가가 두드러지고 있는 상황이다(김오석 등, 2024). 지방의 인구감소는 지역 소멸 위기로 이어지는데, 이에 대응하기 위한 지역 활성화 방안을 마련하는데 있어 연안 상권 분석은 앞으로 중요한 정책적 시사점을 제공할 것으로 판단된다.

본 연구는 2023년 하반기부터 2024년 상반기까지의 1년간의 인허가 데이터만 활용하였기 때문에, 상권의 장기적인 구조 변화와 경기 순환에 따른 동태를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 한계를 갖는다. 또한 상권의 업종 구성과 개·폐업 지표만으로 특성을 분석하였기 때문에, 매출, 유동 인구, 관광 수요 등 경제적·사회적 요인 등의 다양한 변인을 직접적으로 반영하지 못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 연구에서 활용한 지방행정 인허가 데이터와 이미지 분할 기반 상권 추출 방법론은 매년 누적되는 시계열 자료에 적용이 가능하다는 점에서 향후 장기적인 분석으로 확장될 수 있는 가능성을 가진다.

향후 연구에서는 분석기간을 확대하여 다년도 데이터를 통해 연안 상권의 변화를 시계열적으로 추적할 필요가 있다. 이를 통해 상권의 성장, 쇠퇴, 재편 과정을 보다 장기적인 관점에서 규명할 수 있을 것이다. 나아가 상권의 매출 자료, 인구 이동, 관광 통계 등의 자료를 결합할 경우, 연안 상권의 경제적 기능과 수요 기반을 보다 실증적으로 파악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이러한 분석은 연안 지역의 지속 가능한 경제 활성화 전략을 수립하고 적용하는데 중요한 근거를 제공할 수 있다.

## 참고문헌

- 권필·유기운, 2015, “AMOEBA 기법을 활용한 상권 경계 탐지,” *대한공간정보학회지*, 23(2), 11-16.
- 김성환, 2024, “지방 초광역권 인구이동 특성 및 권역 내 지방광역시로의 이동 결정 요인,” *한국지리학회지*, 13(1), 95-112.
- 김영재·박인권, 2023, “빅데이터를 활용한 젠트리피케이션 상권의 장소성 분류와 특성 분석-서울시 14개 주요상권을 중심으로,” *지역연구*, 39(1), 3-20.
- 김오석·정재현·조남욱·강승필, 2024, “한국의 도시 및 농산어촌 장래 고령인구 전망과 비교,” *한국지리학회지*, 13(4), 509-524.
- 김호용·김지숙·이성호, 2012, “도심경계설정을 위한 공간통계학적 접근,” *한국지리정보학회지*, 15(4), 42-54.
- 박경태·김영훈, 2022, “골목상권의 영역 설정과 유형 분류에 관한 연구: 청주시를 사례로,” *한국지도학회지*, 22(1), 69-83.
- 유예지·김주락, “해양레저관광에 의한 어촌의 젠트리피케이션 전개 양상과 지역주민 태도-양양 서핑 관광지를 사례로,” *대한지리학회지*, 59(1), 91-109.
- 이동훈·여옥경, 2025, “지방 소멸 대응을 위한 15분 생활권 기반의 지속가능한 도시 실증분석연구: 강원도를 사례로,” *한국지리학회지*, 14(2), 185-194.
- 이용익·홍성언·박수홍, 2010, “GIS와 도로연결성을 이용한 대형할인점 상권의 공간적 범위 설정 방법,” *한국공간정보학회지*, 18(1), 11-17.
- 정대영·손영기, 2009, “공간 자기상관기법을 이용한 근린상권의 공간특성 분석,” *한국지형공간정보학회지*, 7(1), 141-147.
- 정승영·도희섭, 2011, “서울시의 상권분류에 관한 연구,” *대한부동산학회지*, 29(2), 335-350.
- 최규철, 2021, “코로나19발생에 의한 어촌관광 변화추이 빅데이터 분석연구-거제시 다대어촌체험휴양마을 중심으로,” *KIDRS*, 6(3), 290-298.
- 최일선·이슬기·김예림, 2023, *KMI동향분석 제188호(2022년 연안지역 상권 매출액 58조원, 해양관광 시장규모 64.5%로 37조 4,400억원으로 추정)*, 부산: 한국해양수산개발원.
- 최일선·이슬기·김예림·김유리·윤현호, 2023, “가명정보 결합 빅데이터를 활용한 해양관광 소비와 여행·레저 모바일 접속 행태의 관계 분석,” *국토연구*, 126, 103-120.
- 해양수산부, 2025, 「연안관리법」(법률 제21065호), 부산: 해양수산부.
- Jeong, B., 2023, *An Integrated Deep Learning Model based on Retail, Residential and Footfall Changes data to Predict Retail Gentrification*, Ph.D. Dissertation, Department of Geography, University College London.
- Jeong, B., Allen, J., and Chapple, K., 2024, *A new commercial boundary dataset for metropolitan areas in the USA and Canada, built from open data. Scientific Data*, 11, 422.
- Jeong, B., Song, J., and Kim, Y., 2025, *An open retail boundary dataset for South Korea using open data and computer vision technique, Scientific Data*, 12, 622.
- Kim, W., Kanezaki, A., and Tanaka, M., 2020, *Unsupervised learning of image segmentation based on differentiable feature clustering, IEEE Transactions on Image Processing*, 29.
- 행정안전부 한국지역정보개발원 지방행정인허가데이터 개방시스템, <https://www.localdata.go.kr>
- arXiv, <https://arxiv.org/pdf/1807.02811>(Peter I. Frazier, 2018, “A tutorial on Bayesian optimization”)
- 교신 : 송주환, 28173, 충북 청주시 흥덕구 강내면 태성탑연로 250, 한국국원대학교 지리교육과(이메일: bd0458@naver.com)
- Correspondence: Juhwan Song, 28173, 250 Taeseong-tapyeon-ro, Gangnae-myeon, Heungdeok-gu, Cheongju-si, Chungcheongbuk-do, South Korea, Department of Geography Education, Korea National University of Education (Email: bd0458@naver.com)

투고접수일: 2025년 11월 30일  
 심사완료일: 2025년 12월 29일  
 게재확정일: 2025년 12월 30일

# ‘사선대’의 명소 형성 원인과 지속가능성

조성욱\*

## Causes of Attraction Place Formation and Sustainability of ‘Sasundae’

Sungwook Cho\*

**요약 :** 이 연구에서는 전북 임실군의 지역 명소인 ‘사선대(四仙臺)’가 명소로 떠오른 이유와 명소로 인식된 시점, 지속가능한 명소로 유지하기 위한 방안에 대해 살펴보았다. 이 연구에서 밝혀진 내용은, 첫째, 사선대는 오원천의 하천작용에 의해 형성된 동부의 급애와 하천의 유로변경 및 하중도 형성 등 하천작용에 의해 형성된 명소이다. 둘째, 사선대는 조선 중기 이후 선비들의 유람문화와 관련되어 명소로 인식되었을 것으로 추정된다. 셋째, 삼국시대의 역사 유적과 고려시대의 행정중심지, 조선시대의 역원 등 역사적 변화가 있었던 지역이다. 넷째, 오원천은 주변 지역 농업용수의 근원으로서 역할을 했다. 다섯째, 오원천에 의한 교통 장애를 극복하는 방법으로 나무터, 도로 교량, 철도 교량 등이 활용되었다. 여섯째, 사선대 종합관광지 조성 사업(1996-2005)에 의해서 인공제방이 축조되면서, 자연적인 사선대에서 인공적인 사선대로 변화했다. 일곱째, 사선대가 명소가 된 근원적인 요소인 하천 지형과 지리와 역사적인 측면의 인문환경 그리고 오원천의 수자원 이용 등을 중심으로 한 장소성을 살려야 지속가능한 관광명소로 유지될 수 있을 것이다.

**주요어 :** 사선대, 명소, 하천지형, 인문환경, 수자원, 장소성, 지속가능성

**Abstract :** This study discussed the causes of ‘Sasundae’ emerged as an attraction place, when it began to be recognized and ways to maintain it as a sustainable attraction place. The results of this study, first, Sasundae is a attraction formed by the fluvial landform, such as the cliff of the east formed by the river action of Owon Stream, abandoned channel by stream change and the formation of alluvial island. Second, it is presumed that Sasundae has emerged as an attraction place related to the travel culture of scholars after the middle of the Joseon-Dynasty. Third, there were historical remains and the administrative center and district change. Fourth, Owon Stream has served as a source of agricultural water in the surrounding area. Fifth, a ferry, a road bridge, and a railroad bridge were used as a way to overcome traffic obstacles caused by Owon Stream. Sixth, the artificial embankment was built by the Sasundae Comprehensive Tourist Site Creation Project (1996-2005), changing from a natural place to an artificial place. Seventh, it can be maintained as a sustainable tourist attraction only by utilizing the location centered on the river topography, geographic and historical human environment, and the use of water resources in Owon Stream, which are the fundamental elements of Saseondae becoming attractions. **Key Words :** Sasundae, Attraction place, River topography, Human environment, Water resource, Placeness, Sustainability

### I. 서론

사선대(四仙臺)는 전북특별자치도 임실군 관촌면에

북쪽에서 남쪽으로 통과하는 오원천(섬진강의 상류 부분)에 형성된 관광 명소로서, 오원천 동쪽 관촌면 덕천리와 서쪽 관촌리의 경계 지역에 하천에 의해 형성된 평탄

\*전북대학교 지리교육과 교수(Professor, Department of Geography Education, Jeonbuk National University, chossww@jbnu.ac.kr)

지이다.<sup>1)</sup> 현재 사선대에는 체육시설(축구장, 테니스장, 농구장 등)과 관광시설(사선루, 잔디광장, 조각공원 등), 체험시설(임실군 청소년수련원, 목재문화 체험장 등) 등이 조성되어, 임실군뿐만 아니라 전북 주민들의 휴식장으로 활용되고 있다.

그러나 1996년부터 시작된 사선대 종합관광지 조성 사업에 의해서 오원천에 인공제방이 축조되어 홍수로부터 안전성이 확보되고, 주민 편의시설의 구축으로 이용 편리성은 높아졌으나, 자연조건에서 유래하는 사선대 본래의 의미와 명소(名所)<sup>2)</sup>로서의 매력을 유지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는 의문이 있다.

특정 장소가 다른 지역과는 다른 ‘차이(difference)’를 가질 때 해당 지역은 관광지로서 지위를 얻게 된다(Kearns and Philo, 1993). 특정 장소가 관광지 또는 관광명소로 인식되었다는 것은 그 장소가 다른 장소와는 다른 특이성이 있다는 것을 의미하고, 그 차이를 최대한 살려 나가는 것이 그 장소의 관광지로서 지속가능성을 유지할 수 있게 한다. 따라서 사선대의 개발에서도 개발로 인하여 지역 고

유의 특성을 상실하고, 획일적이고 인위적으로 만들어진 장소 즉, 장소의 특성이 사라지는 무장소성(placelessness)의 장소(Relph, 1976)가 되는 것을 경계해야 한다.

사람들은 특정 지역 또는 장소에 대해서 장소감(sense of place)을 느끼는데, 장소감은 개인의 장소에 대한 감정, 태도, 행동을 의미한다(Shamai, 1991). 장소는 텅빈 공간에 개인의 경험과 감정이 합쳐져서 만들어지기 때문에, 장소는 사회적으로 만들어진 공간이다(Tuan, 1977). 장소감은 구체적 수준에서 인지적, 정의적, 행동적 영역으로 분류할 수 있다(김민성·윤옥경, 2013:20). 장소는 인간의 사유(thought)와 감정(feeling)과 같은 인간의 경험과 연결되어 무의미했던 물리적 공간이 친밀한 장소로 다가오고, 낯선 추상적 공간(abstract space)이 의미 있는 구체적 장소(concrete place)로 나타날 때 장소성이 형성되고 그 지역에 대한 느낌 즉, 장소감을 가지게 된다(임은진, 2011:109). 장소에 대해 가지는 장소감의 수준은 5단계(피상적 → 부분적 → 개인적 → 기원적 → 문화적 장소감)로 구분할 수 있는데(Hay, 1998), 사선대가 일반적인



그림 1. 임실군 관촌면 사선대의 위치



그림 2 사선대의 안내도와 전경

\* 오른쪽 사진(아주경제, 2022).

관광지가 아닌 장소의 특이성을 살리고, 방문객이 애정을 느끼는 장소가 되기 위해서는 아름다운 경치나 편의시설에 의한 편리성에 대한 감정만을 가진 ‘피상적 장소감’ 단계에서, 정기적으로 방문하는 사람들이 느끼는 좀 더 깊은 수준의 장소감(‘부분적 장소감’ 이상의 수준)에 이를 수 있도록 세심한 지역개발 방안 마련이 필요하다. 사선대의 지역개발이 ‘피상적 장소감’ 수준에 머문다면 방문자들은 일회성 방문에 그치겠지만, ‘부분적 장소감’ 이상을 형성할 수 있다면 정기적 방문자가 될 수 있을 것이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다른 지역과는 차별화된 사선대의 특성을 살리는 지역개발 및 발전 방안이 강구되어야 한다.

이 연구에서는 사선대의 범위를 동쪽의 급애와 오원천에 의해 형성된 백사장(모래톱) 그리고 구하도를 포함하는 오원천 유역으로 설정하고, 넓은 의미의 사선대 지역은 상류의 방수리에서 하류의 대리까지의 하천 유역을 포함하는 지역으로 설정한다. 그리고 사선대가 명소로 등장한 자연환경적 요인과 인문환경적 특징, 명소로 인식되기 시작한 시기 그리고 지속가능한 명소로 유지하기 위한 방안에 대해 살펴보고자 한다. 이를 바탕으로 사선대가 일회성 방문지가 아닌 지속적 방문지로 인식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 보고자 한다(그림 1, 그림 2).

## II. 사선대의 형성 과정과 오원천의 역할

### 1. 오원천과 사선대

섬진강은 전북 진안군 백운면 신암리 데미샘(850m)에

서 발원하여, 진안군 백운면과 마령면까지 북서진하다가 마이산에서 발원한 은천과 합류하고, 성수면에서 남서쪽 방향으로 갑입곡류하면서 흘러 임실군 관촌면 방수리에 다다른다. 이후 성미산(동)과 공수봉(서) 사이의 좁은 지역(협곡)을 지나, 사선대 유역의 평탄지를 형성하고, 신평면의 대리를 거쳐 섬진강댐(옥정호)을 지나 전남 광양과 경남 하동의 경계를 따라 남해로 유입된다(212km)(그림 3). 이 중 사선대가 위치하는 오원천(烏院川)은 임실군 관촌면 방수리 ~ 신평면 원천리 구간(12.7km)을 의미하고, 섬진강 분류 중 상류에 해당한다(임실군지 4권, 2020:48).

‘오원(烏院)’이라는 하천명은 사선대의 전설에 등장하는 까마귀(烏)와 오원천의 서쪽(관촌면사무소 지역)에 위치했던 조선시대 역원(驛院)에서 유래했다. 오원역(烏院驛)은 조선 초기 삼례역도(參禮驛道, 한양-통영 노선)에 속한 역원이었으며, 삼례 - 전주 - 오원역(관촌면) - 오수역(오수면) - 남원을 연결하였다. 오원이라는 지명은 1914년 오천면(烏川面)의 면명으로 도입되기도 했다.

오원천은 사선대 북쪽에서부터 관촌면 방수리의 평탄지, 성미산(430.5m)과 공수봉(367.3m) 사이의 협곡, 사선대가 위치하는 덕천리와 관촌리의 평탄지, 대리 북동쪽에서의 방향 전환, 신평면 대리와 창인리(터지내)의 평탄지 등으로 좁은 협곡과 넓은 평탄지를 교차하면서 흐른다. 이 중 사선대 평탄지는 상류의 주천마을(배나드리)과 하류의 사선대로 구성된다. 즉, 사선대는 오원천의 물이 공수봉과 성미산의 협곡을 지나 평탄지를 만나 하천의 에너지가 방출되면서 퇴적물이 쌓인 퇴적 지형에 해당한다. 그러나 오원천 동쪽 성미산의 산줄기를 따라 약 35m 정도의 급애(절벽)가 형성되어 있는 것을 고려하면, 과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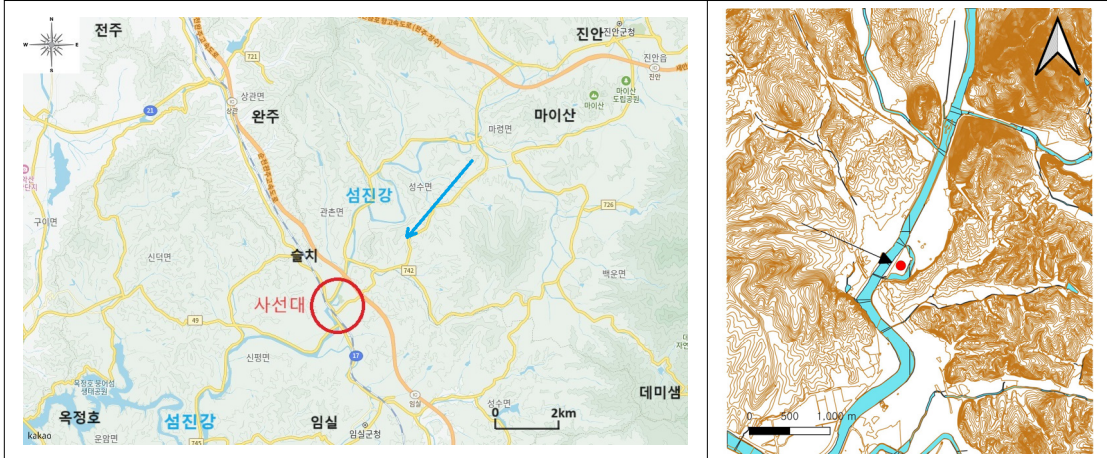


그림 3. 섬진강의 흐름과 사선대의 위치

\* 왼쪽(카카오맵), 오른쪽(수치지도).



그림 4. 사선대의 지형 조건과 주변 지점별 해발고도

에는 하천이 동쪽으로 흐르면서 공격사면에서 침식이 이루어졌던 시기가 있었던 것으로 추정되며, 당시에는 현재의 하천 흐름과는 달랐던 것으로 보인다. 즉, 동쪽 덕천리의 급에는 현재가 아닌 과거 하천 지형의 흔적이다(그림 4).

오원천은 성미산과 공수봉 사이의 협곡을 지나 사선대 평탄지가 나타나면서 갑자기 하천수의 흐름 에너지가 약

화하여 하천의 분기(分岐)가 나타나고, 분기된 하천 사이에 모래톱(하중도, 河中島)과 범람원이 형성되는 지형적 특성을 보인다. 이후 하방침식이 진행되면서 범람원 지역이었던 주천마을 지역은 하안단구로 발전하여 마을이 들어서서 농업활동이 이루어지고, 그 하류에 형성된 백사장은 관광지역인 사선대가 되었다. 즉, 명소로서 사선대는 하천의 분기에 의해 하천 중간에 형성된 백사장(활



그림 5. 사선대 주변의 지형단면도

동지역)과 동쪽의 절벽(경관지역)이 어우러져 형성된 것으로, 물과 모래, 급애 경관이 어우러져 주민들의 휴식장소로 인식되고 이용되었다.

관촌면의 남북방향(북북동 ~ 남남서 방향)으로 흐르는 오원천을 경계로 동쪽(덕천리)은 급애를 형성하고, 서쪽(관촌리)은 완경사를 이룬다. 오원천이 해발 215m인 데 비하여, 동쪽 급애의 상부에 위치하는 운서정이 250m, 서쪽의 관촌중학교가 239m 지점에 위치한다.

오원천이 성미산과 공수봉의 협곡(해발고도 221m)에서 사선대의 평탄 지역을 지나 하류의 신평면 대리 산지를 만나 하천의 방향이 남동쪽으로 바뀌는 지점(215m)까지의 사선대 구역에서는 직선거리 약 2.4km에 고도차이가 6m로 경사가 아주 완만하다(경사각 0.25%). 오원천의 동쪽은 하천의 공격사면으로 추정되는 급애를 이루는데(해발고도 250m), 급애 위에 운서정이 위치해 있으며, 사선대 백사장은 해발 218m에 해당한다. 현재 관촌면사무소 남쪽의 버스 터미널 지역 등은 오원천의 홍수 때 범람 구역에 해당한다(220m 선)(그림 5).

## 2. 사선대의 형성 과정

사선대 지역(북쪽의 주천마을 + 남쪽의 평탄 지역)은 오원천이 성미산과 공수봉의 좁은 협곡을 통과한 후 넓은 지역으로 퍼지는 평탄지역이다. 그러나 동쪽에 하천에 의한 흔적지형으로 남아있는 급애를 고려하면, 오원천은 몇 차례의 유로변경과 그에 따른 지형변화가 있었을 것으로 추정된다.

여기에서는 이곳의 지형 조건이 큰 변화를 겪은 시점(급애, 하중도, 구하도 형성)을 중심으로 오원천의 유로변화를 3단계로 추정해 본다(그림 6). 먼저 1단계(급애 형성 시기)는 오원천이 주천마을 방향(동쪽)으로 흘렀던 시기로, 당시에 운서정 방향에 하천의 공격사면이 형성되고, 서쪽의 관촌면 지역은 활주사면이 형성되었던 시기가 있었던 것으로 추정된다. 즉, 성미산과 공수봉의 좁은



그림 6. 사선대의 유로변경 추정(3단계)

협곡을 통과한 오원천의 물줄기는 동쪽인 주천마을 방향(성미산 남쪽 부분)으로 흐르다가 암석층을 만나 굽이치면서 이곳에 급애를 형성한 것으로 보인다(공격사면). 반면 당시 서쪽의 관촌리 지역은 활주사면으로 완경사를 이루었던 것으로 추정되는데, 당시 사선대 부근은 서쪽 관촌면 지역과 연결된 하천 연변의 활주사면이었을 것이다. 당시 오원천은 하방침식이 주로 이루어졌고, 사선대 지역은 현재와 같이 평탄 지역이 아니라 동쪽에 갑입곡류하천이 흐르는 협곡 지역이었으며, 이 시기에 해발 250m에서 220m까지 하방침식이 진행되었을 것으로 추정된다.

2단계(하중도 형성 시기)는 사선대 지역이 하방침식에 의해 전체적으로 평탄화되어 오원천의 유로가 자유롭게 흐르던 시기로, 하상이 낮아져 운서정의 절벽은 흔적 지형으로 남았으며, 하방침식에 의해 하천의 수위가 더 낮아져서 주천마을은 홍수 때만 물이 침범하는 범람원이 되었고, 오원천은 하방침식보다는 측방침식이 주로 일어났던 시기로 추정된다. 이 시기에는 사선대 유역의 해발고도가 220m 정도까지 낮아진 상태에서 사선대 지역 내에서 동서로 유로가 다양하게 자유곡류를 하던 시기로 추정된다. 하천의 흐름은 동쪽에서 서쪽으로 이동되고, 주천(舟川, 배나드리) 마을 지역은 범람원에서 홍수 때도 안전한 하안단구로 안정화되고, 마을이 정착된 것으로 추정된다. 당시 현재 사선대 모래톱 지역은 하천 서쪽의 활주사면의 일부였지만, 이후 사선대 유역 내에서 하천의 경사도가 낮아지고 물의 흐름이 분산되어 알아지면서, 분기된 물의 흐름 중간에 하중도가 형성되었다. 그 시기에 오원천의 본류는 주천마을 부근에서는 서쪽으로 흐르다가, 사선대 부근에서는 동쪽으로 S자 모양으로 자유곡류(권혁재, 2006:90)를 했던 것으로 추정된다.

3단계(구하도 형성 시기)는 1996년 이후 사선대를 개발하면서 오원천에 인공제방을 축조하여, 홍수 때에 범람지역이었던 사선대의 하중도가 홍수로부터 안전하게 되고, 오원천 본류의 흐름을 직선화하면서, 동쪽 물길보다는 서쪽 물길이 주류가 되어 곡류하던 하천의 흐름이 직선으로 변화했다. 즉, 서쪽의 직선 물길이 본류가 되고, 동쪽의 원래 본류는 구하도(舊河道)로 남게 되었다. 본류가 직선화되면서 동쪽 절벽 아래로 흐르던 물줄기는 사선교 남쪽의 보(주천보, 1983년)에 의해서 수량을 조정하는 오원천의 지류로 남게 되었다. 지류(구하도)의 상류 입수구와 하류 출수구의 고도차이는 5.06m로 완만하다(김정문, 2009). 관광지로써 이용되는 주민들의 친수공간은 하

천제방으로 단절된 오원천의 본류가 아닌 동쪽 구하도 연변으로 좁혀졌다.

이와 같이 상류의 성미산과 공수봉의 협곡을 통과한 오원천은 처음에는 현재의 주천마을 쪽으로 흘러 주천마을 지역은 하천의 공격사면(급애) ⇒ 범람원 ⇒ 하안단구(윤순옥 등, 2014:225)로 변하면서 마을이 정착된 것으로 추정된다. 그리고 하류에 위치하는 사선대 지역은 활주사면 ⇒ 여러 갈래의 하천 분기 ⇒ 하중도 형성 ⇒ 인공적인 보와 인공제방으로 인하여 홍수로부터 안전한 지역이 되었다. 사선대가 명소가 된 시점은 2단계 시점으로, 과거 오원천에 의해 침식되어 형성되었던 동쪽의 절벽 그리고 성미산과 공수봉의 경관, 오원천에 의해 형성된 하중도의 모래톱 등 오원천의 수변 공간이 결합된 자연적인 명소가 된 것으로 보인다. 이 시기 오원천의 본류는 사선대 구간에서 절벽 아래로 흘렀을 것으로 추정된다(현재 구하도).

구하도(舊河道, abandoned channel)는 과거에는 하천의 유수가 흘렀으나, 현재는 유수가 거의 흐르지 않는 물길을 의미한다(이광률, 2011:305; 신승원 등, 2016). 구하도는 주로 하천 상류 지역에서 나타나는 갑입곡류하천의 곡류절단에 의한 경우, 하천 하류에서 넓은 범람원에서 하천의 분기에 의한 경우, 빙하나 홍수 등의 영향으로 대규모 범람이 발생하여 유로가 변경되는 경우 등으로 형성된다(이광률, 2011:305). 그리고 인위적인 요인에 의한 구하도는 하도와 범람원의 토지를 이용하기 위하여 곡류하는 하천의 유로를 직선으로 바꾸고, 하도 양안에 제방을 쌓는 하도 직강화 사업을 통하여 곡류 및 망류 하도가 인위적으로 절단되어 구하도로 변화하는 경우도 있다.

관촌 사선대의 경우 공수봉과 성미산 사이의 협곡을 통과한 유수가 사선대 지역에서 갑자기 폭이 넓어지면서 퇴적이 나타나는 지역이다. 그 결과 분지 내에서 하천의 분류현상이 나타나고, 분류(分流)된 하천의 중간에 나타나는 모래톱(bar)(그림 7)에 의해 사선대가 형성되었으나, 1996년부터 시행된 사선대 종합개발계획에 의한 인공제방의 축조에 의해 구하도가 되었다. 즉, 현재의 사선대 구하도는 원래는 본류였으나, 인공적인 제방으로 인하여 구하도가 되었다.

1996년 인공제방이 축조되면서 원래 주민들에게 명소로 인식되었던, 모래톱의 경관은 사라지고, 인공제방에 의해서 홍수로부터 보호되는 안전한 휴식공간으로 변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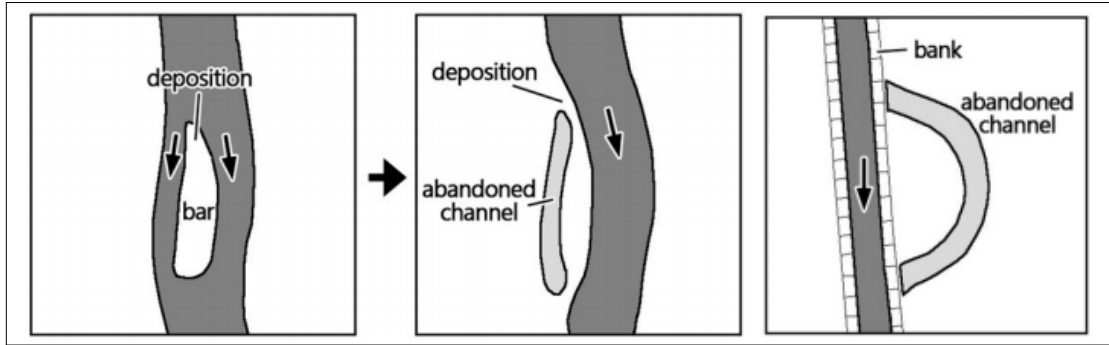


그림 7. 분류에 의한 구하도 형성과정

출처 : 이광률, 2011:307.

했다. 즉, 급애와 주변경관에서는 변화가 없으나, 모래톱으로 형성된 하중도의 특성은 사라진 것이다(그림 8).

### III. 사선대의 명소 인식과 인문환경의 역할

#### 1. 사선대의 명소 인식 시기

사선대에 관한 전설은 3개가 전해져오고 있는데(임실군지 3권, 2020:322; 임실군, 1982), 첫째는 약 2천여 년 전 진안 마이산(馬耳山 687.4m, 진안군 마령면)의 두 신선과 임실 운수산(雲水山 413.1m, 임실군 임실읍과 신평면 경계)의 두 신선이 강기슭에서 아름다운 풍경을 즐기고 있는데, 까마귀 떼와 함께 하늘에서 네 선녀들이 내려와 신선들을 호위하여 어디론가 사라졌다. 이후 해마다 이맘때가 되면 선남선녀들이 내려와서 놀았기 때문에 이곳을 사선대라 하고, 까마귀가 놀던 이 강을 오원강(烏院江)이라고 불렀다는 전설이다. 이 전설에서는 섬진강시발점의 하나인 마이산과 임실현의 별칭인 '운수(雲水)'가 등장하고, 사선대(네 선녀)와 오원천(까마귀)의 어원이 등장하고 있다. 그러나 2천여 년 전이라는 것은 오래 전이라는 의미일 뿐 큰 의미는 없는 것으로 보이고, 운수산이 등장하는 것으로 보아 임실로 현치가 이동된 이후인 조선시대 이후의 전설로 추정된다.

두 번째는 조선시대 정조(재위 1776~1800) 때 주천마을에 살던 이달효(李達孝, 호는 湖山)와 임실현감 이도재(李道在, 전주판관, 남원부사 등 네 사람이 막역한 사이로 오원강에 배를 띄워놓고 자주 즐겼는데, 이 네 사람은

비슷한 연배의 노년으로 마치 네 명의 신선과도 같아서 그들이 놀던 곳을 사선대라 부르게 되었다는 전설이다. 이 전설에서는 시기가 18세기 후반 조선시대라는 점, 오원강이라는 지명이 이미 존재했었고, 사선대 지명에 관해서 이야기하고 있다는 점, 이 지역의 선비와 주변의 전주, 임실, 남원의 수령 등이 등장하고 있어서, 사선대가 이 지역과 연결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세 번째는 1675년 전후 임실현감이었던 신계징(申啓澄, 1632~?, 1675년 임실현감 역임)이 코바위 근처의 절경을 보고 사선대라 불렀다는 전설이다(임실군, 2019:121).

이상의 전설들을 토대로 사선대가 지역의 명소로 인식된 시점을 추정해 보면, 조선시대 중기 이후(이달효, 신계징) 사선대가 명소로 인식된 것으로 보인다. 즉, 관촌 사선대는 조선시대 중기 이후 선비들의 유람장소로 이용되기 시작하면서 명소로 인식되었을 것으로 추정된다. 운서정 방향의 급애, 성미산과 공수산의 경관, 모래톱과 완만한 하천 흐름으로 뱃놀이에 적합한 조건들이 결합되어 명소로 인식되었던 것으로 보인다.

#### 2. 사선대 지역의 인문환경

사선대 주변에는 서쪽에 관촌면 면사무소 소재지(관촌리)와 함께 오원천의 상류에 장계무림(長提茂林, 1700년대 조성, 방수리), 성미산성(삼국시대), 방현산성, 방미산성 그리고 동부에 운서정(1928년), 남부에 영벽정(1935년), 전라선 철교(1931년), 17호 국도(오원교, 1911년), 사선문(1987년) 등이 있다. 1987년부터 사선문화제 행사의 하나로 사선녀 선발 전국대회가 이어지고 있으며, 1999년부터는 소총제와 사선문화제를 통합하여 매년 10월 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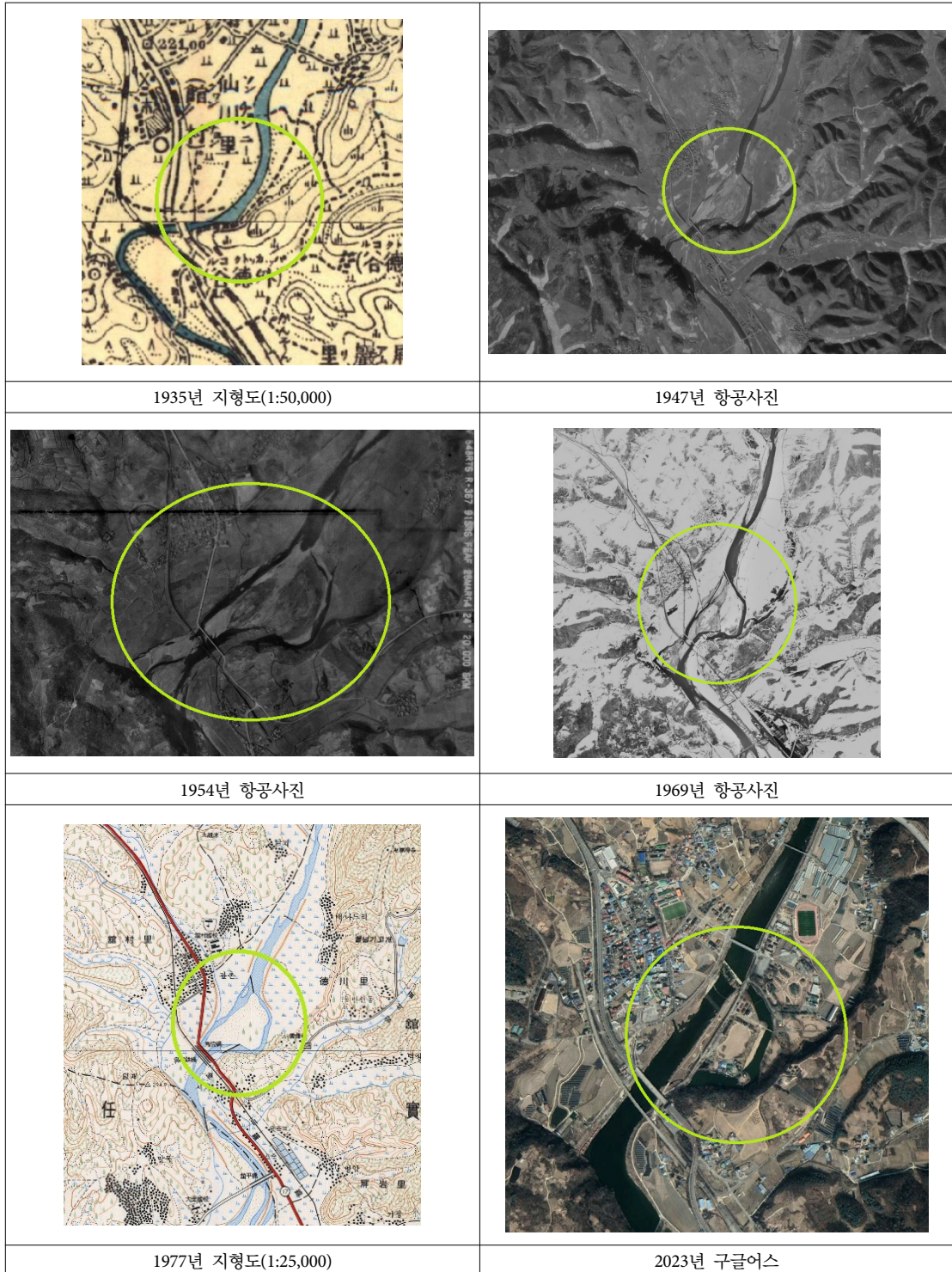


그림 8. 사선대의 최근 변화

출처 : 국토지리정보원(지형도, 항공사진), 구글어스.

실군민의 날 행사가 개최되고 있다. 그러나 사선대는 문화재청이 지정한 호남명승 39곳(2021년 기준)에는 포함되지 않았다(문화재청; 이의한, 2023).

사선대라는 지명은 도교의 신선사상(神仙思想)과 관련된 지명인데, 전국적으로 '사선대'라는 지명은 5곳이 있다(노재현 등, 2011:68). 충북 단양군 대강면 사인암리(운선구곡), 전북 무주군 부남면 대소리, 경남 거창군 북상면 월성리, 경남 남해군 상주면(금산 16경), 전북 임실군 관촌면 관촌리의 사선대 등이다. 사선(四仙)은 4명의 신선 또는 선녀를 의미하고, '대(臺)'는 절벽과 함께 주변의 경관을 의미한다. 즉, 사선대라는 지명이 나타나는 곳의 공통점은 하천과 함께 급애 또는 바위가 있는데, 관촌 사선대의 경우 오원천 주변의 급애와 하천에 의해 형성된 백사장이 지역의 특징으로 작용하였다.

사선대는 전주에서 남원으로 연결되는 도로변에 위치하며(국도 17호선 동쪽), 과거 오원천의 하천작용에 의해 형성된 급애와 모래톱이 형성되어 있고, 35m의 급애 위에는 운서정이 위치하고, 북쪽에는 성미산(430.5m)과 공수봉(367.3m)으로 둘러싸인 평탄지이다. 음식점 및 휴식 시설과 함께, 뱃놀이 장소, 겨울철 스케이트장으로 활용되는 등 물과 관련한 장소의 특성이 있는 관광지이다.

관촌면은 1914년 행정구역 개편 때에 상북면<sup>3)</sup>과 하북면<sup>4)</sup>을 통합하여, 오원천의 이름을 따서 오천면이라고 하고(유재영, 1993:433; 임실군지 4권, 2020:315), 오천면의 중심지는 상북면 선천리가 되었다. 그리고 1935년 행정구역 개편 때에 하천명(오원천)에서 유래한 오천면에서 역원 기능을 했던 관촌의 이름을 따서 면명을 관촌면(館村面)으로 변경했다. 즉, 자연조건 유래 지명(오원천)에서 인공적인 시설물(관촌역) 유래로 지명이 바뀐 것이다. 오원천 서쪽의 관촌리는 원 취락(오원역) ⇒ 1914년 이전 상북면의 중심지 ⇒ 1914년 오천면의 중심지 ⇒ 국도(17호)와 전라선 철도역 통과 ⇒ 1935년 오천면에서 관촌면으로 변경 ⇒ 시기마을에서 관촌으로 시장이동 ⇒ 시가지 남쪽 확장(과거 침수 지역이었던 터미널 부근) ⇒ 제방 축조로 변화했다.

조선 초기부터 임실군 관내에는 오원역과 갈담역 등 2개의 역명이 있었다(임실군지 1권, 2020:190). 오원역은 삼례역도(參禮驛道) 13개 역에 속해 있었는데, 삼례역-만마동-슬치-오원역-오원천-마치-오수역-울현-남원(남쪽 노선)으로 이어지는 통영로에 속했다. 즉, 조선시대 한양과 전라도를 연결하는 2개의 노선(한양-통

영, 한양-해남-제주) 중 오원역은 한양-통영을 잇는 노선상에 위치해 있었다. 그리고 지류노선으로 남서쪽으로 오원역-임실-갈담역-순창-옥과-동북현(남서쪽 노선)으로 이어지는 노선의 분기점에 해당한다(김중혁, 2017:78). 오원역은 북쪽의 삼례역과 남쪽의 남원역을 연결하는 중간에 위치하는 역으로, 슬치(전주~임실 경계, 270m)와 오원천을 넘는 지점으로 중요한 위치였다.

오원천 동쪽은 관촌면 덕천리 지역인데(주천마을, 시기마을 등), 오원천 동쪽 지역 중 구하도를 경계로 사선대 일대만 관촌리에 속한다. 이러한 행정경계는 하천의 유로변경에 따른 것으로 보이는데, 즉, 현재의 사선대 구하도가 오원천의 본류였을 가능성을 보여준다(그림 9).

그리고 진안, 신평, 관촌의 중간 지점인 덕천리 시기(市基) 마을에 장터가 있었으나, 17호 국도(1911년) 및 철교 건설(1931년)과 함께 관촌리로 시장이 이동하였는데, 이것은 교량 건설로 인한 이동 편리 때문으로 추정된다. 시기마을은 대리보를 통해서 신평면 대리로 이동하는 통로이며, 49번 지방도로 진안으로 연결되고, 관촌역(병암리)과 관촌면(관촌리) 소재지의 중간에 위치하며, 오원천의 도강 지점이기도 했다. 시기마을에는 일제강점기 사용되었던 빙고(氷庫) 2개가 남아있으며, 1975년 농촌취락 구조사업과 17호 국도 및 전라선 철도 노선의 영향으로 오원천 주변에서 동쪽의 구릉지로 마을이 이전되었다. 이와 같이 시기마을은 시장과 도강 지점, 도로와 철도 통과로 인한 마을 이동(1975년) 등의 변화가 일어났다.

1931년에 개설된 전라선의 관촌역은 관촌리가 아닌 남쪽 약 1.5km의 병암리에 개설되었는데, 그 이유는 슬치터널과 오원철교 그리고 전주-남원, 진안-정읍으로 연결되는 교차지점을 고려했을 가능성이 있다. 즉, 관촌면의 면사무소와 시장, 버스터미널은 관촌리에 위치하지만, 관촌역은 서쪽으로 신평면과 운암면 및 정읍 방향과 연결되고(운암제, 1928년 완공), 49번 지방도를 통하여 동쪽의 진안 마령 방면과 연결되며, 17번 국도를 통하여 남북방향으로 전주-임실-남원과 연결되는 교통의 중심 지점인 병암리에 입지시킨 것으로 관촌면의 중심지 이동까지를 고려했을 가능성이 있다. 관촌면은 시장기능(덕천리 시기마을), 역원기능(관촌리), 철도교통(병암리) 등으로 기능이 분산되어 있었으나, 현재는 오원역의 기능은 없어졌지만, 관촌리가 면사무소, 시장, 도로 교통 기능 등 관촌면의 중심성을 유지하고 있다.

사선대가 위치하는 임실군 관촌면 지역에는 삼국시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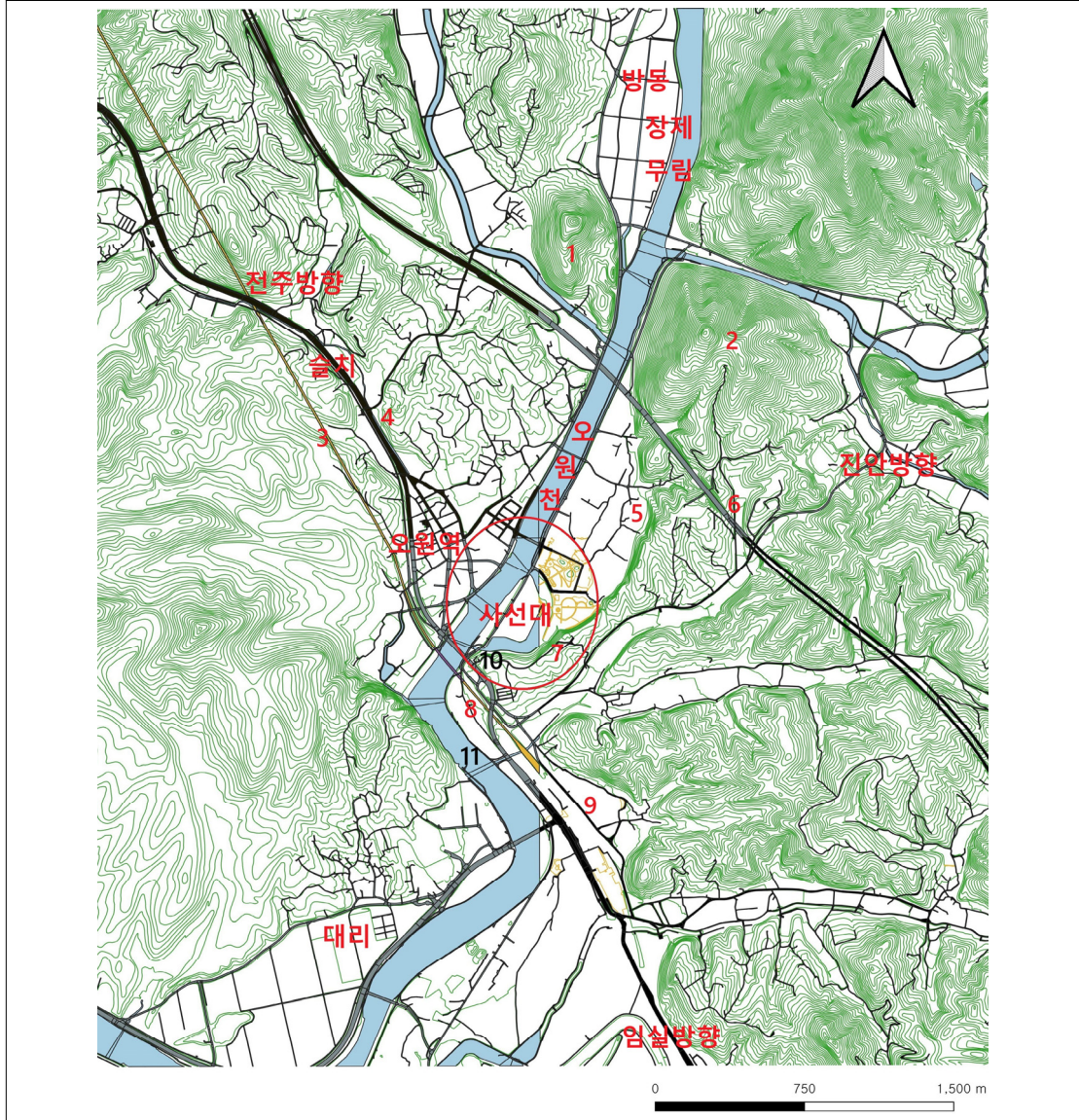


그림 9. 사선대와 주변의 주요 지점들

\* 지도 : 국토지리정보원, 수치지도

\*\* 지도 내부 번호 : 1(공수봉), 2(성미산), 3(전라선 철도), 4(국도 17호), 5(주천마을), 6(고속도로 완주-순천), 7(운서정), 8(시기마을), 9(관촌역), 10(이십리보), 11(대리보)

에 축조된 각산성(角山城, 백제)으로 추정되는 성미산성<sup>3)</sup>과 배미산성(방미산성), 그리고 오원천을 사이에 두고 서북쪽 공수봉의 방현산성 그리고 남쪽의 대리산성(신평면 대리) 등 주변에 4개의 산성이 있다(임실군지 1권, 2020:119). 이러한 산성의 밀집 분포는 삼진강의 상류에 해당하는 사선대 지역이 삼국시대 서쪽 평야 지역인

정읍지역과 동쪽 산지 지역인 진안지역을 연결하는 주요 지점이었을 것으로 추정된다(전영래, 1996).

현재 임실군은 조선시대 초기인 1409년 임실현, 구고현, 취인부곡, 양등량지소 등 4개 고을을 임실현으로 통합하고(임실군지 1권, 2020:175), 1413년 치소를 관촌면 방수리 방동마을(김정호의 대동지지)에서 현재의 임실

읍(용요산 아래, 491.4m)으로 이전하였다. 이러한 입실현의 현치 이동은 입실현과 구고현의 통합에 따라 두 현의 중간지점으로 현치를 이동한 것으로 보인다(전중환, 2024). 즉, 관촌면(방수리 방수마을)은 고려시대까지 입실현의 중심지였고, 조선시대 이후에는 전주에서 남원으로 이어지는 도로상에 위치하는 역원(오원역)이 위치했던 지역이었다.

### 3. 오원천과 주민 생활의 관계

오원천은 조선시대 지역주민들에게 농업용수의 공급처이면서, 동시에 이동의 장애물이었다. 오원천은 주변 지역 농업용수로서 중요한 역할을 했는데, 조선시대 이전 입실현의 현치로 추정되는 관촌면 방수리 방동마을에는 조선시대에 축조된 농업용 수로와 방수림 용도로 조성된 장제무림이 있다. 그리고 하류에는 조선시대 수리시설인 대리보(1483년, 신평면 대리 일대 공급)와 사선대 부근의 이십리보(1508년, 형제보, 오원천 동쪽의 병암리 일대 공급) 등 오원천의 물을 활용한 농업용 수리시설이 축조되었다(조성욱, 2018).

또한 현대에는 사선대의 상류인 방수리에 보를 축조하여 이 물을 전주시의 상수도(1973년~2017년)로 이용했다. 오원천은 섬진강 유역이고, 전주시 지역은 만경강 유역인데, 유역변경을 통해서 전주시의 상수도<sup>6)</sup>로 이용한 것이다(전라일보, 2022년 6월 9일자; 환경부).

오원천은 이동에 장애가 되어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 나루터가 존재했는데, 나루터는 덕천리 배나드리(주천마을)와 시기마을에 있었다. 시기마을은 남원방면에서 오원역으로 가기 위한 가장 짧은 지점이면서 시장이 있던 마을이었으나, 1900년대 이후에는 자동차 교량(1911년)과 철도교(1931년)가 건설되면서 시장기능은 관촌리로 이전되었고, 나루터 기능도 사라졌다.

또한 주천(배나드리) 마을은 ‘배나드리’라는 지명과 함께, ‘가마바위’ 전설이 있어서 어느 시기에 도강지점(나루터)으로 이용되었을 것으로 추정된다(임실군지 3권, 2020:324). 가마바위 전설에 따르면 옛날에는 지금의 관촌면 소재지 일대에 큰 강이 흐르고 있었고, 성미산(城米山)을 끼고 흐르는 강의 어귀에 배나드리라는 나루터 마을이 있었다. 어느 날 새색시가 가마를 타고 강물을 건너려고 하는데, 가마꾼들이 거북의 등에 잘못 올랐고, 거북이 놀라서 새색시가 강물에 빠져 죽었다. 나루터 옆에 거

북이 형상을 한 자리에 묘를 써주었는데, 강물이 점차 줄어들어 지금의 관촌(현 면소재지)이 형성되었다는 전설이다.

이 전설에서 배나드리 마을이 나루터 취락이었다는 점, 관촌리 쪽으로 물이 흘렀다는 점, 물이 줄어들어 오원천 서쪽(관촌리)에 마을이 형성되기 시작했다는 점인데, 이것은 하천의 유로변경을 알려주는 내용이다. 그리고 전주~남원 간의 이동에서 오원천을 건너기 위해서는 시기마을~오원역이 더 짧은 거리인데, 상류에 위치하는 배나드리가 도강 지점으로 이용되었다는 것은 입실의 현치가 방동마을에 있었던 조선시대 이전의 나루터였을 가능성이 있다. 주천마을은 나루터에서 시작하여 현재는 농업을 주로 하는 마을이 되었고, 주천보와 오원천 제방(1983년) 그리고 관촌리와 주천마을을 연결하는 주천교(1980년)로 관촌리와 연결되고 있다(임실군지 4권, 2020:324).

현재 오원천을 도강하는 교량은 북쪽 상류로부터 좌산교(진안군 성수면 좌산리 방면), 순천-완주 고속도로(전주-남원), 주천교(주천마을 방면), 사선교(사선대 방면), 오원교(전주-남원 간 17호 국도, 현재의 4차선은 2007년), 철도교(전라선, 과거 상관역-관촌역, 관촌역은 1931년, 전라선 완전 개통은 1937년)가 있다.

배나드리 마을의 전설은 조선시대 이전이고, 오원역이 설치된 것은 조선시대 초기, 농업용수로 활용했던 대리보(1483년)와 이십리보(1508년)의 축조 시기는 조선 전기이다. 그리고 1910년대 이후 전주와 남원을 연결하는 17호 국도(1911년), 전라선 철도(1931년), 운서정(1928년)과 영벽정(1935년)이 축조되었다. 그러나 본격적으로 일반인들이 사선대를 방문하기 시작한 시점은 17호 국도에 의한 버스 교통(1910년대)과 철도 교통(1931년 관촌역 개설)에 의한 교통 조건의 변화 이후로 보인다.

## IV. 지역개발에 따른 사선대의 의미 변화와 지속가능한 방안

### 1. 사선대의 지역개발과 의미 변화

사선대는 1985년 국민관광지로 지정되고, ‘사선대 관광지 개발 기본계획’(전라북도, 1991)이 수립되어, 사선대 국민관광지 개발(유원지: 27,742평, 공원: 44,164평)이

계획되었다(임실군, 1993). 개발계획의 기본구상은 첫째 지역특화 관광요소(형태적, 시설적, 계획적 요소) 도입으로 이용권역의 광역화와 목적형 관광지, 둘째 일일 및 주말 휴양지, 셋째 향토 및 문화예술 행사 개최지, 넷째 전주권 관광객의 유치, 다섯째 연계개발로 방수리 지구(휴양소풍), 관촌도시지역(숙박, 위락시설), 회봉온천지구(종합휴양, 숙박시설) 그리고 오원천변 정비사업과 연계한 산책로 및 휴식공간 조성이었다. 개발 내용은 부지매입과 함께 기반시설(부지조성, 상하수도, 도로, 전기 및 통신시설), 건축공사(여관, 수영장, 휴게소, 전망대, 옥외집회장, 야외공연장, 유희시설), 조경공사(식재, 옥외시설비) 등이 계획되었다(총 130억원).

이후에 수립된 사선대 종합관광지 조성사업(1996-2005)에 의해서 오원천 하류 부분인 사선대 서쪽 하천변에 인공제방이 축조되면서, 자연적인 사선대에서 인공적인 사선대로 변화했다. 이와 함께 주변의 성미산성 복원사업(2000-2013), 사선대 공원 내 체육시설 정비 및 확충, 청소년수련원과 연계, 사계절 관광지화, 가족 및 청소년 레포츠 단지로 활성화 계획인 관촌 스포츠파크 건설(2007-2016) 등이 계획되었고, 주변에 관촌 문화마을 조성사업(2002-2005) 등이 추진되었다. 사선대 종합개발 지역의 총면적은 330,012m<sup>2</sup>이고, 이중 관광지 조성 면적이 166,000m<sup>2</sup>(50.3%), 조각공원 51,400m<sup>2</sup>(15.6%), 공원지역 112,612m<sup>2</sup>(34.1%)이다. 해발고도는 220m 미만이 전체의 97.1%를 차지한다(김정문, 2009:78).

현재 사선대 종합관광지에는 체육시설, 체험시설, 관광시설과 함께, 운서정(1928년), 국제조각공원(1996년), 사선루(2001년) 등이 있다. 그리고 사선대 관광지역은 하중도 부분과 주변 지역으로 구분할 수 있는데, 하중도 부분에는 전통정원 조성을 목표로 하는 사선문화공간과 체육공간(사선루, 축구장, 농구장, 테니스장)이 배치되고(임실군, 2009), 주변 지역에는 기존 수림과 함께 다목적 잔디광장, 조각공원, 청소년수련관(2004년), 임실 목재문화체험장(2017년), 미니골프장을 조성하고 있다(그림 10). 또한 절벽 부분에는 가침박달나무 군락지(천연기념물 387호, 관촌면 덕천리 산 37), 산개나리 군락지(천연기념물 388호, 관촌면 덕천리 산 36번지)가 있다.

현재 사선대는 인공제방의 구축으로 홍수로부터 안전한 지역이 되었지만, 하중도(사선대)의 양쪽 물길 중 한 쪽이 인공제방으로 막히게 되고(분류), 주천보에 통제되는 구하도만이 수변공간을 제공하게 되어, 사선대의 본



그림 10. 사선대에 조성된 시설들

래 기능인 하천 연변의 수변공간으로서의 기능이 축소되었다. 사선대는 여름뿐 아니라 겨울에는 전주의 덕진연못과 함께 스케이트장으로 이용했다는 점을 고려하면, 사선대에서 가장 중요한 요소는 하천(물)과 모래사장 그리고 경관으로는 급애와 성미산으로 볼 수 있다.

사선대 개발계획에서는 경관 포인트를 하천과 절벽에 두고, 영벽정 - 운서정 - 성미산 - 공수봉으로 이어지는 파노라믹한 경관을 주시하고 있다(김정문, 2009). 그리고 사선대의 아이덴티티(identity)를 신선사상, 도교사상을 중심으로 한 사선 문화의 상징 공간과 전통정원 조성 개념을 도입하고 있는데, 이보다 더 중요한 요소는 사선대는 하천에 의해 형성된 자연공원이고, 하천과 수변공간이 핵심 요소가 되어야 할 것이다.

## 2. 사선대의 지속가능성 유지 방안

임실군의 장기 종합개발계획 마련을 위한 설문조사에서는 임실을 대표하는 상징적인 장소나 시설로 사선대(34.9%), 옥정호(18.9%), 오수의견공원(18.3%), 점침강(11.1%)이 선정되었다(임실군, 2006:105). 이와 같이 임실군민들은 임실군 지역에서 상징적인 장소로 사선대를 가장 의미 있게 인식하고 있다(표 1).

사선대는 원래 하천지형의 특성(하천의 공격사면에 형성된 절벽, 유로변경에 의한 하중도와 백사장)에 의해서 형성된 물과 관련된 명소로 부각되었으나(뱃놀이, 스케이트

장, 백사장), 1996년부터 시작된 개발계획에 의해서 오원천에 직선으로 인공제방을 축조하고, 공원시설이 조성되면서 원래의 성격을 벗어나서, 일반적인 휴식처로 변화했다.

사선대가 다른 지역과는 다른 특수성이 존재하는 명소 그리고 피상적 장소감 수준에서 부분적 장소감 수준 이상으로 발전하여(Hay, 1998) 지속적인 명소로 유지되기 위해서는, 이 지역의 형성 과정에서 나타난 급애와 하천지형 등의 자연조건을 살리고, 주변의 성미산과 공수봉의 경관 및 역사적 특성, 수자원으로써 오원천 주변 지역민과의 관계 등이 통합된 개념으로 사선대를 개발할 필요가

있다(그림 11).

사선대가 지역 고유의 특성을 살리지 못하고, 단지 주민의 휴식처로서 다른 지역과 똑같은 개념으로 지역개발이 이루어질 경우, 어디에나 존재하는 휴식 공간이라는 인식 밖에 형성되지 않아 피상적인 장소감에 머물 가능성이 높다. 따라서 사선대가 특징적이면서 지속가능한 명소로 유지되기 위해서는 명소가 된 본래의 특성 즉, 하천에 의해서 형성된 공격사면(절벽)과 하중도 그리고 수변공간의 특성을 살리는 개발이 되어야 한다. 그리고 주변 지역의 인문환경, 수자원을 중심으로 한 지역주민과의 관계를 종합적으

표 1. 임실군 12개 읍면별 임실을 대표하는 장소나 시설 인식

읍면별	1위	2위	3위	4위
관촌면	사선대(82.0)	섬진강(5.3)	옥정호(3.8)	소창사(3.8)
신평면	사선대(59.6)	섬진강(15.8)	옥정호(14.0)	임실호국원(5.3)
임실읍	사선대(49.7)	옥정호(19.7)	섬진강(9.8)	호국원(7.3)
신태면	사선대(42.0)	옥정호(32.0)	필봉(10.0)	섬진강(8.0)
청웅면	사선대(36.4)	옥정호(25.5)	섬진강(10.9)	필봉농악전수관(9.1)
성수면	소창사(26.7)	사선대(26.7)	성수산휴양림(21.7)	옥정호(13.3)
운암면	옥정호(74.2)	사선대(12.9)	섬진강(6.5)	필봉(3.2)
오수면	오수의견공원(71.5)	사선대(10.5)	옥정호(9.3)	섬진강(4.7)
삼계면	오수의견공원(33.9)	성수산휴양림(19.6)	사선대(17.9)	옥정호(16.1)
덕지면	섬진강(45.8)	옥정호(27.1)	사선대(10.4)	회문산(6.3)
강진면	섬진강(36.9)	필봉(21.5)	옥정호(15.4)	사선대(10.8)
지사면	오수의견공원(57.1)	옥정호(12.2)	섬진강(10.2)	사선대(10.2)

출처 : 임실군, 2006, 임실군 장기 종합특화 발전계획(2006-2015).

\* 괄호 안의 숫자는 읍면별 %를 나타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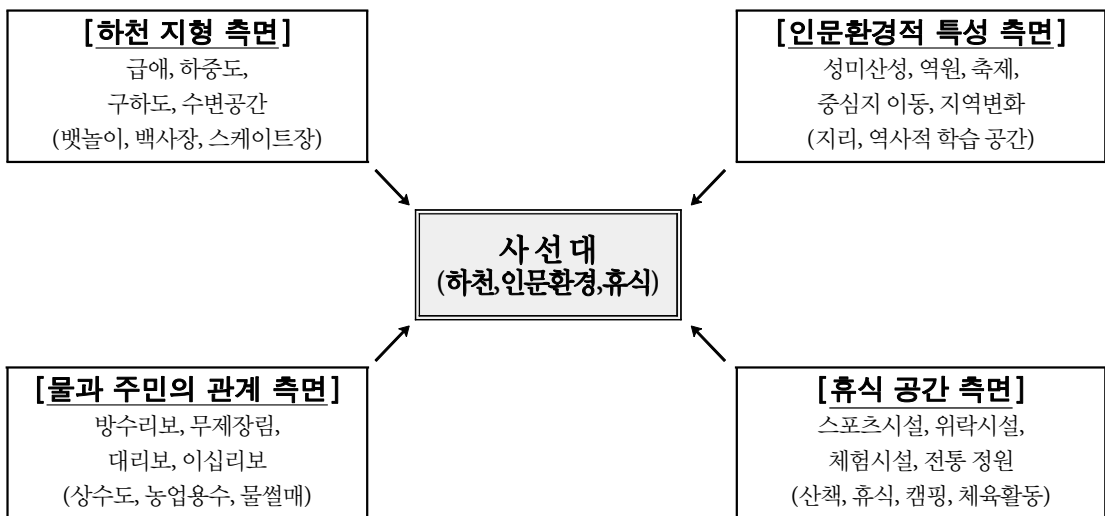


그림 11. 사선대 개발의 주요 개념

로 인식시켜 줄수 있는 지역개발이 이루어질 때, 일회성의 휴식 공간이 아닌 방문자의 장소감을 형성하여 지속가능한 명소로서 의미를 부여받게 될 것이다. 또한 국도 17호 노선(전주~남원)으로 연결되면서 물이 명소의 근원이 되는 전주 덕진연못 - 관촌 사선대 - 남원 광한루를 연결하는 물 이용 중심의 큰 개념을 고려해 볼 수도 있을 것이다.

## V. 결론

이 연구에서는 전북특별자치도 임실군의 사선대가 명소로 등장한 자연환경적 요인과 인문환경적 특징, 명소로 인식되기 시작한 시기 그리고 지속가능한 명소로 유지하기 위한 방안에 대해 살펴보았다.

이 연구에서 밝혀진 내용을 정리하면, 첫째, 사선대는 오원천의 하천작용에 의해 형성된 동부의 급애와 하천의 유로변경에 의해 형성된 모래톱 등 하천지형에 의해 형성된 명소이다. 사선대 지역은 하천의 유로변경 등 지속적인 하천지형의 변화가 있었던 지역이다.

둘째, 사선대가 명소로 부각된 것은 조선시대 중기 이후 선비들의 유람문화와 관련되었을 것으로 추정된다. 그리고 일반인들의 방문이 본격적으로 이루어진 시점은 자동차 교통과 전라선 철도 개통으로 인한 접근성이 개선된 이후로 추정된다.

셋째, 사선대 지역은 주변 경관 요소가 되는 성미산성, 방현산성, 방미산성, 대리산성 등의 역사적 유적과 방수리 중심의 고려시대 행정중심지, 조선시대 역원, 지역 중심지 변화 등 지리 및 역사적 변화가 있었던 지역이다.

넷째, 사선대를 형성한 오원천은 주변 지역주민들의 농업용수의 근원으로 역할을 했다. 상류 방수리에는 방수리보와 장제무림, 하류에는 조선시대 수리시설인 대리보와 이십리보 등 오원천은 지역주민들의 농업용수의 근원 역할을 했고, 최근까지 전주와 임실의 상수도로 활용되고 있다.

다섯째, 오원천의 교통 장애를 극복하는 방법으로 나루터(배나드리), 오원교(국도 17호선), 철도교(전라선 철도) 등이 활용되었다. 오원천의 도강지점으로는 덕천리 배나드리(주천)와 시기마을이었으며, 현재는 좌산교, 순천-완주고속도로, 주천교, 사선교, 오원교, 철도교 등으로 연결되고 있다.

여섯째, 사선대 종합관광지 조성사업(1996-2005)에 의

해서 인공제방이 축조되면서, 자연적인 사선대에서 인공적인 사선대로 변화했다. 이후 지역개발은 사선대 본래의 의미보다는, 스포츠파크 건설 등과 같이 스포츠와 휴식 장소, 청소년 교육 장소 중심으로 개발이 이루어지고 있어서, 하천에 의해 형성된 사선대 본래의 특징을 살리지 못하고 있다.

일곱째, 사선대를 전통 정원이나 스포츠 장소, 휴식 장소의 개념으로 개발할 경우, 하천 주변 평탄한 지역 어디에나 있는 보편적인 시민들의 휴식처로 인식되어, 사선대만의 특색있는 명소로 살리기 어렵다. 사선대는 하천에 의하여 만들어진 하천 지형이라는 특징과 주변의 인문환경 그리고 물을 중심으로 한 지역주민과의 관계 측면을 살릴 수 있을 때, 고유한 특색을 갖춘 지속가능한 명소로 유지될 수 있을 것이다.

이상과 같이 사선대가 명소로서 지속가능성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사선대가 명소가 된 근원적인 요소인 하천 지형을 살리는 지역개발이 이루어져야 한다. 즉, 사선대를 형성한 급애와 하중도(백사장) 그리고 구하도 등의 자연조건과 오원천의 물 자원과 지역 주민과의 관계, 역사와 지리적 측면을 중심으로 한 인문환경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개발이 이루어져야, 방문자들의 피상적인 장소감이 아닌 더 높은 단계의 장소감을 형성할 수 있고, 이것은 일회성 방문지가 아닌 지속가능한 명소로 유지될 수 있을 것이다.

## 註

- 1) 관촌면 관촌리 222번지 및 덕천리 462번지 일대: 35° 40' 16"N, 127° 16' 15"E.
- 2) 명소(名所, 경치가 고적, 산물 따위로 널리 알려진 곳), 명승(名勝, 경치가 좋기로 이름난 곳); Naver 국어사전.
- 3) 상북면(현재 관촌면의 서쪽 지역 : 선천리, 금성리, 덕천리, 도봉리, 병암리, 슬치리, 용산리)
- 4) 하북면(현재 관촌면의 동쪽 지역 : 방수리, 방현리, 복흥리, 상월리, 신천리, 운수리, 회봉리)
- 5) 전라북도 지방기념물 100호.
- 6) 1973년 방수리에 취입보 설치, 2017년까지 전주시의 상수도로 1일 최대 4만 톤을 공급했음.

## 참고문헌

- 권혁재, 2006, 「지형학(제4판)」, 파주: 법문사.
- 김민성·윤옥경, 2013, “장소감 측정도구의 개발과 적용: 초등학교의 성별 차이를 사례로,” 한국지리환경교육학회지, 21(2), 17-28.
- 김정문, 2009, “사선대 관광지 재조성 계획,” 휴양 및 경관연구, 3(1), 77-84.
- 김종혁, 2017, 「일제시기 한국 철도망의 확산과 지역구조의 변동」, 서울: 선인.
- 김종혁, 2018, “땅길과 물길의 근대적 변화와 지역사회,” 쌀·삶·문명연구, 창간호, 81-98.
- 노재현·박주성·심우경, 2011, “‘신선(神仙)’을 지명소(地名素)로 하는 바위명의 유형과 입지,” 한국전통조경학회지, 29(3), 61-77.
- 신승원·정대교·최정현, 2016, “태백 구문소 구하도 퇴적단면의 연대측정을 통한 하도(황지천)의 유로 변화 연구,” 지질학회지, 52(1), 51-56.
- 유재영, 1993, 「전북전래지명총람」, 서울: 민음사.
- 윤순옥 등 10인 옮김, 2014, 「지형학 원리(제3판)」, 서울: 시그마프레스(Huggett, R. J., 2011, *Fundamentals of Geomorphology*(Third Edition), Routledge).
- 이광률, 2011, “우리나라의 구하도 유형과 분포 특성,” 대한지리학회지, 46(3), 304-318.
- 이의한, 2023, “호남지방에 분포하는 명승의 유형과 특징,” 한국지리학회지, 12(1), 149-160.
- 임실군, 1982, 「내고장 전통문화」.
- 임실군, 1993, 「임실군 지역종합개발계획(1994-2003)」.
- 임실군, 2006, 「임실군 장기 종합특화 발전계획(2006-2015)」.
- 임실군, 2009, 「관촌스포츠파크 기본계획수립 및 타당성 연구」.
- 임실군, 2019, 「임실 문화유산 이야기」.
- 임실군지 편찬위원회, 2020, 「임실군지」(1권: 임실의 역사, 3권: 생활과 민속, 4권: 자연지리 및 인문지리), 전주: 신아출판사.
- 임은진, 2011, “장소에 기반한 자아 정체성 교육,” 한국지리환경교육학회지, 19(2), 107-121.
- 전라북도, 1991.4, 「사선대 관광지 개발기본계획」.
- 전영래, 1996, 「백촌강에서 대야성까지」, 전주: 신아출판사.
- 전종한, 2024, “조선시대 읍치(邑治)의 이설(移設) 사례로 본 입지적 지향,” 대한지리학회지, 59(6), 719-736.
- 조성욱, 2018, “조선시대 수리시설에서 ‘설보’의 지리적 의미,” 한국지리학회지, 7(2), 165-180.
- Hay, R., 1998, Sense of place in developmental context, *Journal of Environmental Psychology*, 18(1), 5-29.
- Kearns, G. and Philo, C.(eds.), 1993, *Selling Places: The City as Cultural Capital, Past and Present*, Pergamon.
- Relph, E., 1976, *Place and Placelessness*, Pion, London(김덕현·김현주·심승희 역, 2005, 「장소와 장소상실」, 서울: 논형).
- Shamai, S., 1991, Sense of place: An empirical measurement, *Geoforum*, 22(3), 347-358.
- Tuan, Y-F, 1977, *Space and Place: The Perspective of Experience*, University of Minnesota Press, Minneapolis, MN.
- 구글어스, <https://earth.google.com/>
- 국토지리정보원, 국토정보플랫폼 국토정보맵, <http://map.ngii.go.kr/ms/map/>(관촌면 항공사진; 1947년, 1954년, 1969년).
- 국토지리정보원, 수치지도(도면번호 : 임실 35706021, 35706022, 35706031, 35706032)
- 문화재청, [www.cha.go.kr](http://www.cha.go.kr)(명소)
- 아주경제, 2022년 11월 29일자, “임실 사선대·오수외견 관광지, 문체부 열린관광지 선정”
- 전라일보, 2022년 6월 9일자, “천년고을 방수리”
- 카카오맵, <https://map.kakao.com/>
- 환경부, <https://www.me.go.kr/>(상수도보호구역지정현황)
- Naver 국어사전 : <https://ko.dict.naver.com/>
- 교신 : 조성욱, 54896, 전북특별자치도 전주시 덕진구 백제대로 567, 전북대학교 사범대학 지리교육과 (이메일: chossww@jbnu.ac.kr)
- Correspondence: Sungwook Cho, 54896, 567 Baekje-daero, Deokjin-gu, Jeonju-si, Jeonbuk-do, Korea, Department of Geography Education, Jeonbuk National University (Email: chossww@jbnu.ac.kr)

투고접수일: 2025년 11월 3일  
심사완료일: 2025년 12월 12일  
게재확정일: 2025년 12월 15일



## 서평

## 한국 최초의 지리학술지 「지리」의 서지

최원희\*

## I. 서론

필자는 2000년대 초에 현대한국지리학사(現代韓國地理學史)에 관한 자료들을 살펴보다가 다음과 같은 3건의 자료들을 접한 바 있다:

**자료 1**: “각 대학에서의 연구활동은 각 학과에서 학술잡지(學術雜誌)의 발간 ... 등으로서 알 수 있다. 학술잡지의 발간에 있어서 특기할 사항은 우리나라에서 ‘지리(地理)’라는 제자(題字)가 붙은 최초의 잡지가 대한지리학회(大韓地理學會)보다도 앞서 서울대학교 사범대학 지리과에서 학생 중심으로 출판되었다는 사실이다. …… 각 대학 및 대학원에서 발간되고 있는 학술잡지는 다음과 같다(창간연도순): ○ 서울대학교 사범대학, <지리(地理)>, 1959년 창간, 2호로 중단상태. ○ 이화여자대학교 사범대학, <녹우회보(綠友會報)>, 1959년 창간, 1975년까지 17호 출간”(정장호, 1976:44·47)<sup>1)</sup>

**자료 2**: “한국 최초의 지리학회지: 한국에서 체제를 갖춘 정식학회지가 출현한 것은 물론 1963년 대한지리학회지 제1호이다. … 그러나, 학회지의 체제나 질에 상관없이 한국 최초의 지리학회지를 논지한다면 그것은 대한지리학회 회지가 아니라 서울대학교 사범대학 학생 중심의 지리학회지가 그 효시이다. 활자화된 잡지로는 이것이 한국 최초로서 1959년 1월에 간행되었고, 내용은 논설, 답사보고서, 학내소식, 졸업생 명단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제명(題名)은 「지리」이고, 국판 57쪽의 빈약한 내용이었으나, 대한지리학회 회지가 간행된 시점보다 4년이 앞선 학회지란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이 잡지는 제2호를 1962년에 프린트물로 내고 절판되었으나, 4×6배판 102

쪽으로서 내용의 짜임새도 한결 높은 수준이었다.”(형기주, 1995:2)

**자료 3**: “대한지리학회는 1945년 처음 창립총회를 갖고 시작되었으나, 공식적인 학술지는 1963년에 발간되었다. 그러나, 대학에서는 학과 중심으로 최초의 학술지를 창간하였다. 「지리」 제1권 제1호는 1959년 서울대학교 사범대학 지리학회에서 출간하였다. 그리고 제2호가 1962년에 속간되었으나, 더 계속되지 못했다. 「지리학보」는 1962년 서울대학교 문리과대학 지리학과에서 제1집이 출간되었다. 이 두 학회지가 비록 대학사회에서 시작되었다가 그 당시 계속되지 못했지만, 교수와 대학원생, 재학생의 논문과 현장 답사기를 게재한 최초의 학술지였다.”(이찬·이기석, 2002:11)

필자는 위와 같은 내용 중에서 “서울대학교 사범대학 지리학회(서울大學校 師範大學 地理學會)가 1959년에 발행한 「지리」 제1권 제1호는 ‘한국 최초의 지리학술잡지(地理學術雜誌)·지리학회지(地理學會誌)·지리학술지(地理學術誌)’이다. 「지리」 제1권 제1호 및 제2호 모두는 1963년에 대한지리학회가 그의 학회지, 「지리학(地理學)」을 창간하기에 앞서 발행되었다. 또한, 「지리」 제2호는 1962년에 속간되었으나, 이후 절판되었다”는 사실에 주목하고, 「지리」 제1권 제1호 및 제2호의 서지(書誌)를 파악해 볼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다.

한편, “「지리」 제1권 제1호가 ‘한국 최초의 지리학술잡지·지리학회지·지리학술지’이다”라는 사실에서 「지리」 제1권 제1호의 의미를 ‘한국 최초의 지리학술잡지’ 또는 ‘한국 최초의 지리학회지’로 규정하기보다는 ‘한국 최초

\*국립공주대학교 지리교육과 명예교수(Emeritus Professor, Department of Geography Education, Kongju National University, [cwh@kongju.ac.kr](mailto:cwh@kongju.ac.kr))

의 지리학술지'로 규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했는데, 이는 지리학술지의 개념에 지리학술잡지 및 지리학회지의 개념이 대부분 포함되어 있다고 보았기 때문이다.

위와 같은 판단에 따라, 필자는 「지리」제1권 제1호 및 제2호와 이들의 발행 전후에 발행된 지리학술지들의 소재(所在)를 추적했는데, 그 결과, 1963년에 대한지리학회 학회지, 「지리학」을 발행하기 이전인 1959년과 1962년에 서울대학교 사범대학 지리학회와 각각 순서대로 발행한 「지리」제1권 제1호 및 제2호를 비롯하여 1962년에 당시 서울대학교 문리과대학 지리학과(서울大學校 文理科大學 地理學科: 현재의 서울대학교 사회과학대학 지리학과)가 발행한 「지리학보」1집, 그리고 1963년 「지리학」 발행 이후인 1966년에 당시 서울대학교 문리과대학 지리학과가 발행한 「지리학보」제3호 등을 2년여의 우여곡절 끝에 원본이나 파일 형태로 입수할 수 있었다.<sup>2)</sup>

필자는 위와 같은 지리학술지들의 입수과정에서 정장호(1976:47), 형기주(1995:2) 및 이찬·이기석(2002:11)이 기존에 확인한 바와 같이 1959년에 창간된 「지리」제1권 제1호보다 발행시기가 앞서는 지리학술지는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을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었다.

또한, 필자는 「지리」제1권 제1호 및 제2호와 「지리학보」1집 및 제3호의 서지를 세부적으로 분석한 선행연구를 학술연구정보서비스(<https://www.riss.kr/>), 「한국지리논문목록: 1945~1980」(이기석·윤정숙, 1982), 「한국지리논문목록: 1981~1985」(이기석·한주연, 1988), 「한국지리논문목록: 1986~1990」(이기석·김영현, 1993) 등에서 찾았으나, 전술한 바와 같이 「지리」제1권 제1호 및 제2호의 서지를 1개 단락 정도의 문장으로 소개한 정장호(1976:47), 형기주(1995:2) 및 이찬·이기석(2002:11)의 연구 이외에는 해당 선행연구가 전혀 없고, 「한국지리논문목록: 1945~1980」(이기석·윤정숙, 1982)에 「지리」제1권 제1호 및 제2호와 「지리학보」1집 및 제3호에 게재된 논문·단보·답사보고의 일부 목록만 수록되어 있음을 확인했다.

이에 따라, 필자는 「지리」제1권 제1호 및 제2호와 「지리학보」1집 및 제3호의 서지를 세부적으로 분석하는 것이 시급하다고 판단했다. 그러나, 「지리학보」1집 및 제3호의 경우 「지리학보」1집은 원본을 입수했으나, 「지리학보」제3호는 서울대학교 중앙도서관 수원보존서고에 소장되어 있는 한 권의 원본의 일부에 한하여 스마트폰 촬영 파일의 입수만 가능해서, 「지리」제1권 제1호 및 제2호의 서지 연구는 가능하나, 「지리학보」1집 및 제3호의 서

지 연구는 「지리학보」1집에 한하여 제한적으로만 가능하다고 판단했다.

이에, 본고에서는 우선 1959년에 발행되어 '한국 최초의 지리학술지'로 간주되는 「지리」제1권 제1호(이하, 「지리」제1권 제1호(1959)')로 칭함)와 「지리」제1권 제1호에 이어서 1962년에 발행된 「지리」제2호(이하, 「지리」제2호(1962)')로 칭함)를 대상으로 그들의 서지를 발행경과, 발행주체, 성격, 편집위원회, 인쇄시기·발행 시기·권호, 인쇄유형·판형(判型)·지질(紙質), 표지 디자인·내지 편집형태, 내용구성, 소장자·현재상태, 편집후기·개략서지(概略書誌)·서적광고, 발행의의·영향 등의 측면에서 분석하고자 한다.

위와 같은 분석의 결과는 현대한국지리학사에서 현대 한국 지리학 초창기의 지리학술지의 창간 및 발행 내역을 구체화하는데 기여할 것이고, 더 나아가서 1950년대 후반 당시 한국 지리학의 교육·연구의 동향 및 수준을 파악하는 계기가 될 것이다.

## II. 「지리」제1권 제1호(1959) 및 제2호(1962)의 서지

### 1. 「지리」제1권 제1호(1959)의 서지

서울대학교 사범대학 지리학회가 발행한 「지리」제1권 제1호(1959)는 앞표지(국문표지)·뒤표지(영문표지), 내지 56쪽, 부록 지도 1매 및 뒤표지 이면 편집후기·개략서지로 구성되어 있는데, 이들을 통해서 발행경과, 발행주체, 성격, 편집위원회, 인쇄시기·발행시기·권호, 인쇄유형·판형·지질, 편집형태, 내용구성, 소장자·현재상태, 편집후기·개략서지·서적광고, 발행 의의·영향 등을 분석하면, 다음과 같다.

#### 1) 「지리」제1권 제1호(1959)의 발행경과

「지리」제1권 제1호(1959)의 발행경과는 논설(論說)<sup>3)</sup>에 앞서 게재된 최복현(崔福鉉) 교수<sup>4)</sup>의 '답사계획에 대하여'(1~2쪽)와 뒤표지 이면의 '편집후기'를 통해서 알 수 있는데, '답사계획에 대하여'는 창간사 및 권두언 격에 해당된다.

우선, 최복현 교수의 '답사계획에 대하여'에서 발행경과 관련 내용을 보면, "지리과 창설 이후 10년 만에 연보

(年報) 형태의 ‘지리과 기관지’를 발간하는데, 이에 는 주로 매년 실시하는 답사보고를 수록하고, 재학생과 졸업생과의 연결(유대)을 도모하기 위해 지리과내 소식과 졸업생 동정을 함께 수록하여 궁극적으로는 이 잡지가 학계에 귀중한 존재가 되도록 성장, 발전시켜야, 즉 한국지리학계에 기여하도록 성장시켜야 한다.”고 기술하고 있다. 또한, ‘편집후기’에서 발행경과 관련 내용을 보면, “처음 계획했던바 그대로를 이루지 못한 채 서투른 편집이 아닐 수 없다. 앞으로 매년 연말이면, ... 우리들의 노작(勞作)의 결과가 ... 과거 1년을 반영해 줄줄로 믿는다.”고 기술하고 있다. 이러한 내용을 바탕으로 「지리」 제1권 제1호(1959)의 발행경과를 정리하면, “「지리」 제1권 제1호(1959)는 ‘연보 형태의 지리과 기관지’이면서 동시에 ‘한국지리학계에 기여하는 잡지’여야 한다”는 것이다.

한편, 「지리」 제1권 제1호(1959)에 게재된 ‘서울대학교 사범대학 지리학회 회칙 및 임원(서울大學校 師範大學

地理學會 會則 及 任員)(이하,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학회 회칙’ 또는 ‘회칙’으로 약칭함)(51~52쪽)에 의하면, 본회는 ‘서울대학교 사범대학 지리학회’라 칭하고(제1장 총칙 제1조), 지리과 및 지리교육에 관한 학술연구 및 회원상호간의 친목 도모를 목적으로 하고(제1장 총칙 제2조), 그리고 학술연구, 강연회 및 연구발표회, 회보발간 등의 사업을 한다(제3장 사업 제4조)고 규정하고, 그에 준하는 학회활동을 통해서 지리학회지 형태의 지리학술지, 「지리」 제1권 제1호(1959)를 발간한 것으로 보인다.

## 2) 「지리」제1권 제1호(1959)의 발행주체

「지리」 제1권 제1호(1959)의 발행주체(발행인)는 앞표지(국문표지) 하단과 뒤표지(영문표지) 이면 개략서지에 ‘서울대학교 사범대학 지리학회(서울大學校 師範大學 地理學會)<sup>5)</sup>로 표기되어 있고, 뒤표지 하단에 ‘Geographic Institute of Educational College Seoul University’로 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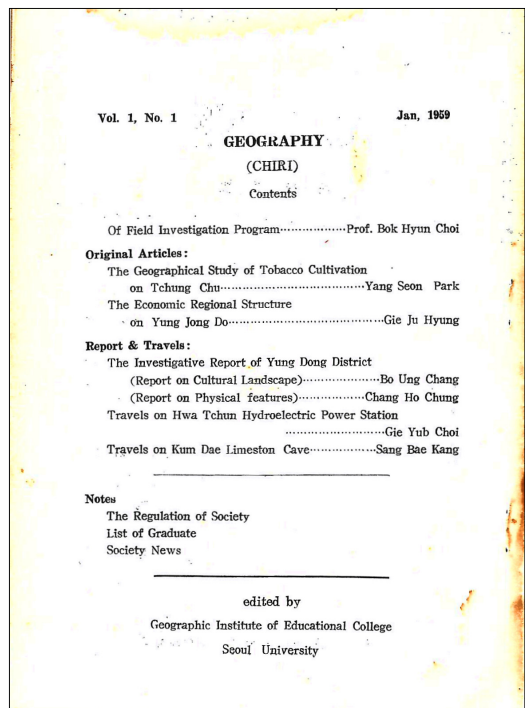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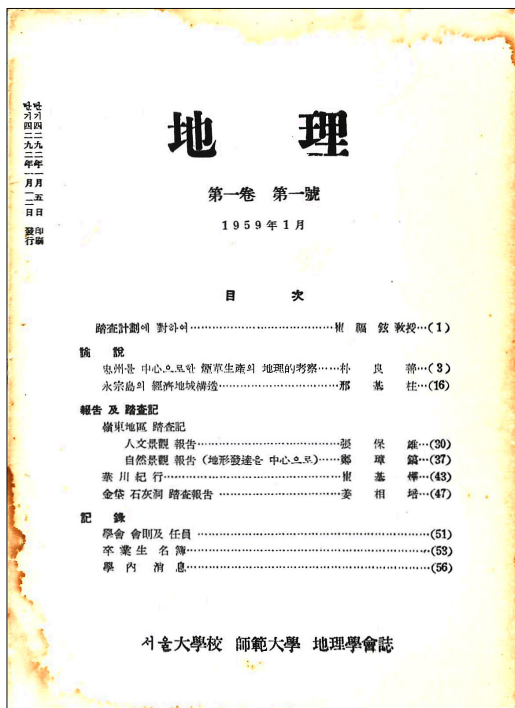


그림 1. 한국 최초의 지리학술지인 「지리」제1권 제1호(1959)의 국문표지(좌) 및 영문표지(우)

출처 : (좌)서울대학교 사범대학 지리학회, 1959:앞표지. (우)서울대학교 사범대학 지리학회, 1959:뒤표지.

\* 「지리」 제1권 제1호(1959)가 ‘한국 최초의 지리학술지’라는 것은 ‘한국에서 최초로 창간된 지리학술지’이면서 ‘한국에서 최초로 발행된 지리학술지’임을 의미한다. 이기석 명예교수(서울대학교 사범대학 지리교육과)는 「지리」제1권 제1호(1959) 두권을 소장하고 있는데, 그림의 「지리」제1권 제1호(1959)는 그 중의 하나이다.

기되어 있다. 서울대학교 사범대학 지리학회는 ‘서울대학교 사범대학 지리학회 회칙 및 임원’의 ‘제2장 회원’의 ‘제3조 제1~3항’에 근거하여 본대학 지리과 재학전원(在學全員), 본대학 지리학 교수 및 강사(고문) 그리고 본대학 졸업생(명예회원)으로 구성되었는데, 이들 3자 중 핵심적 발행주체는 본대학 지리과 재학전원, 즉 ‘본대학 지리과 재학생’이다.

### 3) 「지리」제1권 제1호(1959)의 성격

「지리」제1권 제1호(1959)는 서울대학교 사범대학 지리학회가 ‘서울대학교 사범대학 지리학회 회칙 제4조(사업) 제3항(회보 발간)’에 의거하여 발행한 ‘지리학회지 형식의 지리학술지’이면서 동시에 권두사 격의 ‘답사계획에 대하여’(1~2쪽)의 서두에서 당시 최복현 교수가 언급한 바와 같이 ‘지리과 잡지(地理科雜誌)’로서 ‘지리과 기관지(地理科機關誌)’의 성격도 갖고 있었다.

부연하면, 「지리」제1권 제1호(1959)는 기본적으로는 서울대학교 사범대학 지리학회가 발행한 ‘학회지 형식의 지리학술지’, 즉 ‘지리학회지’였으면서 부차적으로는 서울대학교 사범대학 지리과의 ‘지리과 기관지’였던 것으로 간주된다.

이와 관련하여 더 부연하면, 「지리」제1권 제1호(1959)가 “기본적으로 ‘지리학회지’였다.”는 것은 발행주체(발행인)가 회칙과 임원 조직을 갖춘 서울대학교 사범대학 지리학회로서 ‘논설’을 주요 내용으로 하면서 학회지 체제를 갖추고 있다는 점에 근거한 것이고, 그리고 “부차적으로 ‘지리과 기관지’였다.”는 것은 권두사 격의 ‘답사계획에 대하여’의 언급 외에 ‘보고 및 답사기’와 ‘졸업생 명부 및 학내 소식’이 함께 게재되어 있다는 점에 근거한 것이다.

### 4) 「지리」제1권 제1호(1959)의 편집위원회

「지리」제1권 제1호(1959)에는 ‘편집위원회 조직’과 ‘편집위원 명단’은 별도로 명기되어 있지 않다.

### 5) 「지리」제1권 제1호(1959)의 인쇄시기·발행시기·권호

「지리」제1권 제1호(1959)의 인쇄시기 및 발행시기는 앞표지의 좌측 상부와 뒤표지 이면의 개략서지에 각각 순서대로 1959년 1월 5일과 1959년 1월 12일로 표기되어 있다. 또한, 「지리」제1권 제1호(1959)의 인쇄에 앞서 실제

적 편집작업은 발행 직전 해인 1958년 연말이었던 것으로 추정되는데, 이는 뒤표지 이면의 편집후기의 “앞으로도 매년 연말이면 이와 같은 우리들 노작(勞作)의 결과가 거울처럼 과거 1년을 반영해 줄줄로 믿는다.”라는 내용으로 추정할 수 있다.

「지리」제1권 제1호(1959) 표기에서 ‘권’은 1년간 2건 이상의 ‘호’를 발행한다는 의미임을 감안하면, 「지리」창간 당시 발행주체들이 1년에 2건 이상의 호를 발행하고자 했던 것으로 추정할 수 있다. 그러나, 「지리」제1권에서 제1호 이외의 다른 호는 더 이상 발행되지 않았다.

### 6) 「지리」제1권 제1호(1959)의 인쇄유형·판형·지질

「지리」제1권 제1호(1959)의 인쇄유형은 활판인쇄본(活版印刷本)이다. 「지리」제1권 제1호(1959)의 규격(規格)을 판형으로 보면 국판(菊判: 148×210mm)으로 되어 있는데, 이는 당시 일본의 人文地理學會(인문지리학회)가 발행하고 있던 학회지 「人文地理(인문지리)」 및 미국의 American Geographical Society가 발행하던 「Geographical Review」의 규격 판형인 국판을 주로 참고한 것으로 추정된다. 「지리」제1권 제1호(1959)의 지질을 보면, 앞표지(국문표지) 및 뒤표지(영문표지)는 두터운 스노우지(snow紙)를, 그리고 내지(內紙)는 얇은 스노우지를 각각 사용하고 있다.

### 7) 「지리」제1권 제1호(1959)의 표지 디자인·내지 편집형태

「지리」제1권 제1호(1959)의 앞·뒤 표지 디자인 및 내지 편집형태도 판형과 마찬가지로 당시 人文地理學會가 발행하고 있던 학회지 「人文地理」, 미국의 American Geographical Society가 발행하던 「Geographical Review」를 주로 참조했을 것으로 추정된다.

### 8) 「지리」제1권 제1호(1959)의 내용구성

「지리」제1권 제1호(1959)의 내용은 앞표지에 기재된 목차를 통해서 보면, ‘답사계획에 대하여’ 이외에 논설 2편, 보고 및 답사기 4편 및 기록 3편으로 구성되어 있다. 내용별 필자는 지리과 내외의 교수, 대학원생(석사과정) 및 학부생으로 다양하게 구성되어 있다.

#### (1) 답사계획에 대하여

‘답사계획에 대하여’는 학과 주임교수로 추정되는 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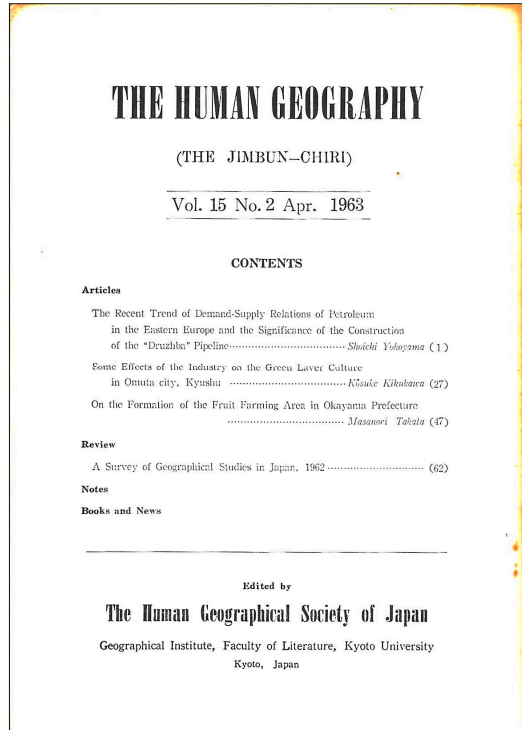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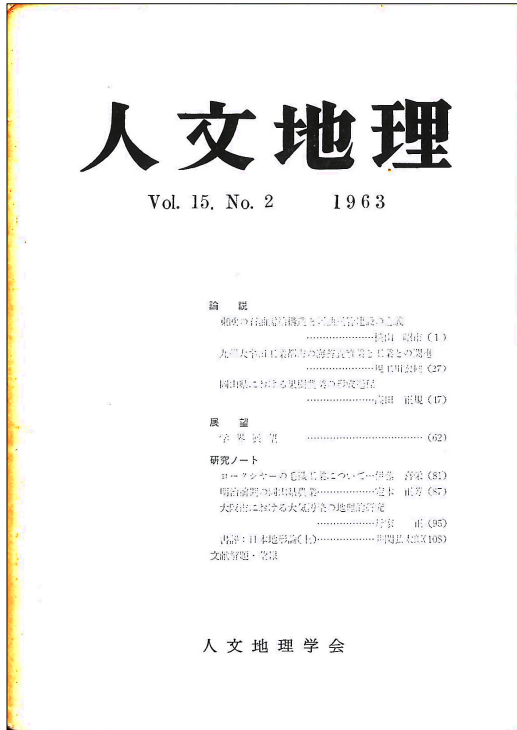


그림 2 「지리」제1권 제1호(1959)의 발행에 주로 참조한 것으로 추정되는 「人文地理」근접 권호(Vol.15, No.2, 1963년 4월)의 일문표지(좌) 및 영문표지(우)

출처 : (좌)人文地理學會, 1963:앞표지. (우)人文地理學會, 1963:뒤표지.

\* 전술한 바와 같이 「지리」제1권 제1호(1959)의 규격 판형(국판)과 앞·뒤 표지 디자인 및 내지 편집형태는 당시 일본의 人文地理學會가 발행하던 「人文地理」의 그것들을 주로 참조한 것으로 추정된다. 「지리」제1권 제1호의 창간은 1959년에 이루어졌으나, 필자가 접한 「人文地理」 가운데 1959년에 가장 근접(近接)한 것은 Vol.15, No.2(1963년 4월)이다. 그림의 「人文地理」는 「지리」의 창간 시기인 1959년보다 4년 늦은 근접 권호(Vol.15, No.2, 1963년 4월)이나, 필자가 알기에 1959년 직전에 발행된 「人文地理」도 그림의 「人文地理」근접 권호와 규격 판형, 표지 디자인 및 내지 편집형태 등이 거의 동일하다. 그림의 「人文地理」Vol.15, No.2(1963년 4월)는 필자의 소장본이다.

복현 교수가 작성한 창간사 격의 내용에 해당되는 것인데, 그의 주요 내용을 압축하면, “「지리」는 답사보고서(답사결과 수록 연보), 지리과 기관지 및 한국 지리학계에 기여하는 지리과 잡지의 역할을 하기 바란다”는 것이다.

한편, ‘답사계획에 대하여’가 “서울대학교 사범대학 지리과 학생들이 주축이 되어 조직한 ‘서울대학교 사범대학 지리학회’가 그의 ‘회칙’에 의거하여 학회지 「지리」를 창간한다.”는 언급을 중심으로 하지 않고, 회칙에서 다소 벗어나서 ‘답사계획 및 답사보고’를 중심으로 언급하고 있는데, 이는 지리학회를 만든 학생들의 의도에서 다소 벗어난 것으로 보인다. 부연하면, 이는 「지리」제1권 제1호(1959)가 회칙과 내용구성에서 전반적으로 ‘지리학회지’ 형태의 지리학술지로서의 성격과 체제를 명확히 하

고 있고, 「지리」제2호(1962)가 ‘지리학술지’로서의 성격과 체제를 보다 더 명확히 하고 있는 점에서 보면 더욱 그렇다.

## (2) 논설

‘논설’은 “총주를 중심으로 한 연초생산의 지리적 고찰”(3년 박양선(林良善)) 및 “영중도의 경제지역구조”(대학원 형기주(邢基柱))의 총 2편이 게재되어 있는데, 이들은 모두 논설의 ‘일반적 구성 형식’으로서 ‘서론·본론·결론 및 영문요약’을 갖추고 있고, 논설 2편 중 영중도의 경제지역구조’는 대학원 석사과정생이 작성했다는 특이성이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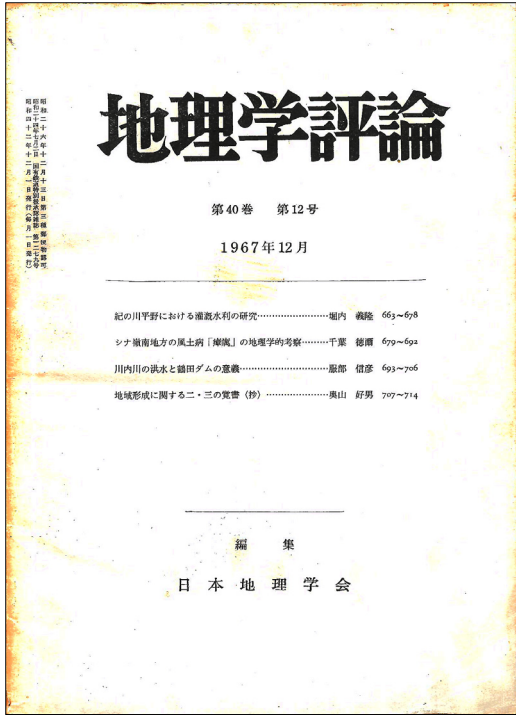


그림 3. 「지리」제1권 제1호(1959) 및 제2호의 발행에 참조한 것으로 추정되는 「地理學評論」근접권호(제40권 제12호, 1967년)의 일문표지

출처 : 日本地理學會, 1967:앞표지.

\* 전술한 바와 같이 「지리」제1권 제1호(1959) 및 제2호(1962)의 앞·뒤 표지 디자인 및 내지 편집형태는 당시 일본의 人文地理學會가 발행하던 「人文地理」의 그것들 이외에 日本地理學會가 당시 발행하던 「地理學評論」의 그것들도 많이 참조한 것으로 추정되고, 「지리」제2호(1962)의 판형인 사륙배판은 「地理學評論」의 그것을 전적으로 참조한 것으로 추정된다. 그림의 「地理學評論」은 「지리」의 창간 시기인 1959년 및 속간 시기인 1962년보다 각각 수년씩 늦은 근접 권호(제40권 제12호, 1967년 12월)이나, 필자가 알기에 1959년 및 1962년 직전에 발행된 「地理學評論」도 그림의 「地理學評論」근접 권호와 표지 및 내지 형태가 거의 동일하다. 그림의 「地理學評論」제40권 제12호(1967)는 필자의 소장본이다.

**(3) 보고 및 답사기**

‘보고 및 답사기’는 “영동지구 답사기: 인문경관 보고”(4년 장보웅(張保雄)), “영동지구 답사기: 자연경관 보고”(4년 정장호(鄭璋鎬)), “화천기행”(1년 최기엽(崔基燁)) 및 “금대 석회동 답사보고”(2년 강상배(姜相培))의 총 4편이 수록되어 있는데, 이들은 모두 강원도 영동 및 영서 지방 일대의 답사보고서이다.

**(4) 기록**

‘기록’은 ‘학회 회칙 및 임원’, ‘졸업생 명부’ 및 ‘학내 소식’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각각의 주요 내용을 개관하면 다음과 같다.

**① 학회 회칙 및 임원**

「지리」제1권 제1호(1959)에 게재된 ‘학회 회칙 및 임원(51~52쪽)’ 중 ‘회칙’은 ‘총 8장 17조’로 구성되어 있는데, 총 8장은 제1장 총칙(명칭, 목적), 제2장 회원(구성), 제3장 사업(학술연구, 강연회 및 연구발표회, 회보발간 등), 제4장 임원(회장, 부회장, 부장), 제5장 선거(회장 및 부회장은 추천에 의한 직접선거, 부장은 추천에 의한 인준), 제6장 집회(정기총회, 임시총회, 월례회, 임원회), 제7장 재정(회비, 입회금, 보조금) 및 제8장 부칙(회칙 개정)으로 구체화되어 있다.

또한, ‘학회 회칙 및 임원’ 중 ‘임원’에는 고문, 회장, 부회장, 부장 및 명예회원의 명단이 기재되어 있는데, 문화부장 1명을 제외한 나머지 임원 전원이 학부 3학년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를 구체적으로 보면, 다음과 같다.:

고문: 본대학 지리과 교수 및 강사, 회장: 유준영(劉俊永, 3년), 부회장: 임한수(林漢洙, 3년)·이현영(李賢英, 3년), 부장: 총무부 채영석(蔡永錫, 3년)·문화부 이수문(李秀文, 2년)·연구부 조동우(趙東羽, 3년)·도서부 권혁재(權赫在, 3년),<sup>6)</sup> 명예회원: 본대학 지리과 졸업생<sup>7)</sup>

**② 졸업생 명부**

‘졸업생 명부’(53~55쪽)에는 1948년(4281년) 졸업 제2회부터 1958년 졸업 제12회까지 총 134명의 회별 졸업생수와 명단 및 소속 직장·대학원명이 기재되어 있다. 1948년 졸업 제2회는 서울대학교 졸업회수인데, 이는 사범대학 지리과 졸업회수로는 제1회에 해당된다.

**③ 학내 소식**

「지리」제1권 제1호(1959)에 ‘학내 소식’(56쪽)으로 표기되어 있으나, 실제의 내용은 ‘학과 소식’이다. ‘학내 소식’의 위 부분에서는 1958년(4291년)의 제1학기 및 제2학기의 과내행사를 소개하고 있는데, 주로 답사 실시, 답사보고회, 신입생 환영행사, 과내외체육행사 등에 관한 것이다. 학내소식(56쪽) 중 아래 부분에는 “1958년에 와서 김상호(金相昊) 교수가 저술한 「지리학개론(地理學概論)」과 최복현 교수가 번역한 「경제지리(經濟地理)」가 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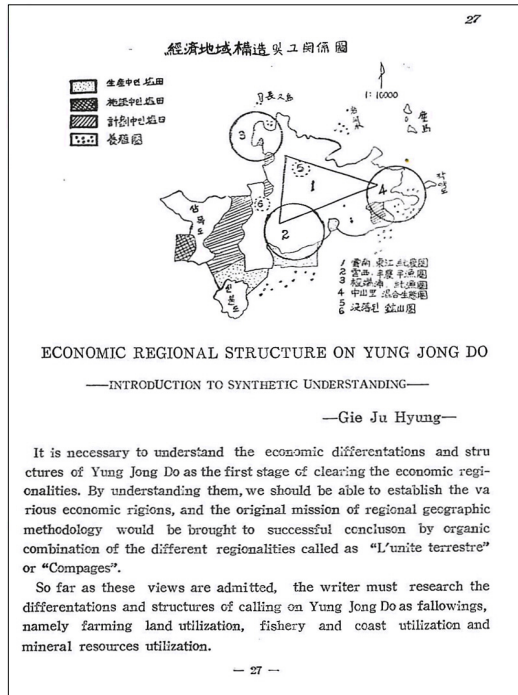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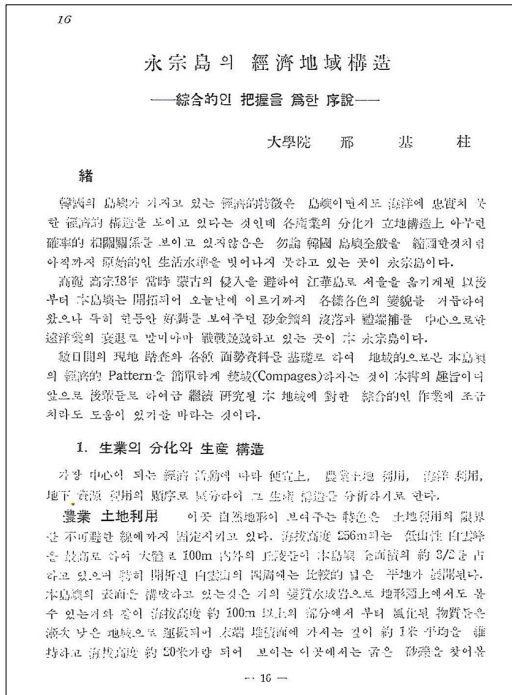


그림 4. 「지리」제1권 제1호(1959)에 게재된 형기주의 논설, “영종도의 경제지역구조: 종합적인 파악을 위한 서설”(일부)

출처 : 서울대학교 사범대학 지리학회, 1959:16·27.

\* 그림의 좌측은 논설의 ‘첫째 쪽’이고, 우측은 논설의 ‘영문요약’ 중 일부가 게재된 쪽이다. 형기주의 논설에서는 영종도 지역의 생업(生業)의 분포와 생산구조 및 경제활동에 의한 지역설정에 관해서 밝히고 있다. 논설에는 4개의 그림, 1개의 표 및 영문요약(2쪽 반)이 첨부되어 있고, 학술지의 말미에 별도로 부록 지도 1매(수기(手記)로 그린 ‘영종도 1:50,000 지형도’)가 첨부되어 있다. 이 논설은 부록 지도 1매를 제외하면, 총 15쪽 분량으로 작성되어 있다. 위 논설의 작성자 ‘형기주’는 당시 서울대학교 대학원 지리학과 석사과정에 재학중이었고, 후일 프랑스 파리 I 대학교(Université de Paris I)에서 박사학위 취득을 취득했고(1982년), 동국대학교 사범대학 지리교육과 교수를 역임했다.

성되어 나왔다.”고 소개하고 있고, 이지호(李智皓) 교수의 기존 간행본인 「세계지리통계(世界地理統計)」의 증보 계획을 소개하고 있다. 「학내소식」(56쪽) 중 맨아래 부분에 “학기초에는 본학회가 그간 활동하고 연구하였던 각양각색의 내용을 발표하는 보고회 및 전시회를 가질 예정이다.”라고 기록하고 있다.<sup>8)</sup>

9) 「지리」제1권 제1호(1959)의 소장자·현재상태

「지리」제1권 제1호(1959)는 이기석 명예교수가 두권을, 그리고 민흥기 전 교장(경기고등학교(京畿高等學校))이 한권을 각각 소장하고 있다.

이기석 명예교수가 소장하고 있는 「지리」제1권 제1호(1959) 두권 중 하나가 그림 1의 것인데, 이의 앞표지와 제1쪽 사이의 백지간지에 ‘4292. 4. 28. 재기’라는 사인

(signature) 형태의 자필서명(自筆署名)과 원형도장(圓形圖章)의 적색날인(赤色捺印)이 있는데, 이로 보아 이 서책의 최초 소장자는 황재기 명예교수(黃載機, 1935~2017, 서울대학교 사범대학 지리교육과)로 추정된다. 황재기 명예교수의 자필서명에서 4292는 ‘단기 4292년’을 의미하는 것인데, 이는 서기로는 1959년으로, 「지리」제1권 제1호의 간행년도에 해당된다.

이기석 명예교수가 소장하고 있는 「지리」제1권 제1호(1959) 두권 중 다른 하나에는 앞표지 우측 상단부에 청색의 증정인(贈呈印)이 날인되어 있고, 앞표지와 제1쪽 사이의 백지간지(白紙間紙)의 우측에는 ‘徐明源先生(서명원 선생)<sup>9)</sup>’이라는 수령자의 성명과 존칭이 표기되어 있다. 이로 보아서 이 「지리」제1권 제1호(1959)는 발행인인 서울대학교 사범대학 지리학회가 서명원 선생에게 증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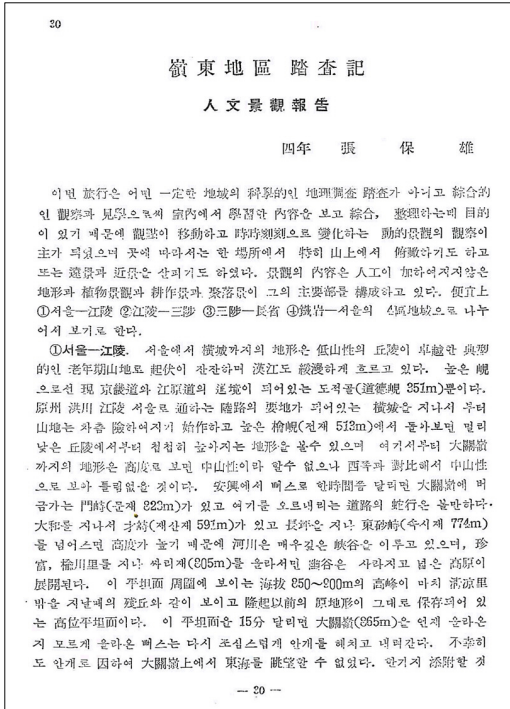


그림 5. 「지리」제1권 제1호(1959)에 게재된 장보용의 보고 및 답사기, “영동지구 답사기: 인문경관 보고”(일부)

출처: 서울대학교 사범대학 지리학회, 1959:30.  
 \* 장보용의 ‘영동지구 답사기: 인문경관 보고’는 1958년 10월 17~21일의 기간에 이지호 교수 인솔로 강원도 영동지방의 강릉·대관령·삼척·통리·황지·철암 일대를 답사한 보고서인데, 인문경관의 특성을 중심으로 비교적 상세히 기술한 것이다. 작성자인 장보용(1936~2025)은 후일 일본 히로시마대학(廣島大學)에서 박사학위를 취득했고(1982년), 전남대학교 사회과학대학 지리학과 등의 교수를 역임했다.

하려고 했으나 사정에 의해서 못했던 것으로 추정된다. 「지리」제1권 제1호(1959)는 학술연구정보서비스(<https://www.riss.kr/>)에서 전혀 검색되지 않고, 서울대학교 사범대학 지리교육과에서도 소장 여부가 확인되지 않고 있다. 「지리」제1권 제1호(1959)의 현재 상태는 이기석 명예 교수 소장본 두 권의 경우 모두 비교적 양호한 편이고, 민흥기 전 교장 소장본의 경우도 비교적 양호한 편이다.

10) 「지리」제1권 제1호(1959)의 편집후기·개략서지·서적광고

(1) 편집후기·개략서지

「지리」제1권 제1호(1959)의 뒤표지 이면의 위 부분에

는 ‘편집후기’가 있는데, 이에는 학회지 편집과 관련된 몇 가지 소회(所懷), 희망 등이 쓰였다. 편집후기의 주요 내용을 전재(轉載)하면, 다음과 같다:

“처음 계획했던바 그대로를 이루지 못한 채 서투른 편집이 아닐 수 없다. 우리들은 이제부터 오펜되었던 자신을 솔직히 개방할 기회를 가졌고, 이것을 발 바춤하여<sup>10)</sup> 우리 학회는 자랄 수 있는 것이다. 앞으로도 매년 연말이면 이와 같은 우리들 노작(勞作)의 결과가 거울처럼 과거 1년을 반영해 줄줄로 믿는다. 예정했던 지면(紙面)과 촉박한 시일관계로 애써 집필해 주신 옥고(玉稿)를 부득이 남기게 된 고충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라며 ……”

「지리」제1권 제1호(1959)의 뒤표지 이면의 아래 부분에는 직사각형 안에 표기된 ‘개략서지’가 있는데, 이에는 제호(題號: 지리(地理)), 인쇄 연월일(단기 4292년(1959년)1월 5일) 및 발행 연월일(단기 4292년 1월 12일), 발행인(서울대학교 사범대학 지리학회), 인쇄소(민중서관 공무국(民衆書館 工務局)) 등이 기재되어 있다. 인쇄 및 발행 연월일은 앞표지의 좌측 상단부에도 기재되어 있다.

(2) 서적광고

「지리」제1권 제1호(1959)의 ‘보고 및 답사기’ 2건의 끝부분(46·50쪽)에는 당시 서울대학교 사범대학 지리과 재직 교수 2인이 출간한 지리학 서적 2권의 광고가 직사각형 안에 게재되어 있는데, 하나는 김상호 교수가 저술한 「지리학개론」이고, 다른 하나는 최복현 교수가 번역한 「경제지리」이다.

「지리」제1권 제1호(1959)의 ‘학내소식’(56쪽) 중 아래 부분에는 「지리학개론」 및 「경제지리」에 대해서 소개되어 있는데, 「지리학개론」에 대해서는 “「지리학개론」은 한국지리학계에서 처음 이루어진 본연(本然)의 지리서라고 볼 수 있으며, 특히 대학 지리과를 처음 입학한 초학자(初學者)들에게는 종합적인 파악에 큰 도움이 있으리라 믿는다.”라고, 그리고 「경제지리」에 대해서는 “「경제지리」는 오래전부터 미국의 유명한 지리학 교재일 뿐만 아니라 전세계에 걸친 각 부분의 경제실태(자원면)를 직업별로 자세하게 취급하였으므로 Encyclopaedia란 호평까지 듣고 있다. 수년간의 노력과 열(熱)로 무려 600여 페이지나 되는 방대한 저서가 드디어 번역이 이루어진 것이다.”라고 각각 소개되어 있다.<sup>11)</sup>

이외에도, 「지리」제1권 제1호(1959)의 ‘학내소식’(5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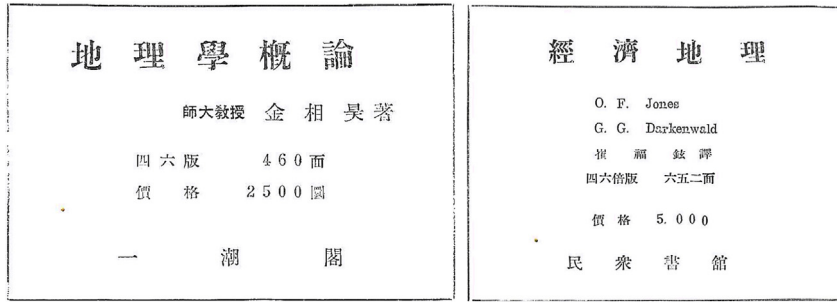


그림 6. 「지리」제1권 제1호(1959)에 게재된 ‘서적 광고’: 「지리학개론」·「경제지리」

출처 : (좌)서울대학교 사범대학 지리학회, 1959:46. (우)서울대학교 사범대학 지리학회, 1959:50.

\* (좌)그림의 김상호의 「지리학개론」은 1958년에 일조각(一潮閣)에서 간행된 초판이다. (우)최복현의 번역서, 「경제지리」는 1958년에 서울대학교번역총서로 민중서관(民衆書館)에서 초판이 간행되었다. 「경제지리」의 원저는 Jones and Darkenwald가 1954년에 뉴욕의 The Macmillan Company에서 간행한 「Economic Geography」(Revised Edition)인데, 이 원저의 초판은 1941년에 간행되었다(Jones and Darkenwald, 1954, 최복현 역, 1958).

쪽) 중 아래 부분에는 이지호 교수의 기존 간행본인 「세계지리통계」에 관해서 “신년도에 들어와서 기대할만한 것으로는 이지호 교수 저 「세계지리통계」가 보다 풍부한 내용과 새로운 자료를 가지고 증보(增補)될 것이며 ……” 라고 소개하고 있다.

### 11) 「지리」제1권 제1호(1959)의 발행의의·영향

정장호(1976:44·47)에 의하면, 서울대학교 사범대학 지리과에서 학생 중심으로 출판된 「지리」제1권 제1호(1959)는 ‘한국 최초의 지리학술지’로서 1963년에 대한지리학회가 창간한 학회지 「지리학」보다도 앞서서 한국에서 창간시기가 가장 빨랐다. 또한, 「지리」제2호(1962)의 ‘편집 후기’의 첫째 쪽(101쪽)에는 ‘한국 유일(唯一)의 「지리」로서’라는 자구가 나오는데, 이는 「지리」제2호(1962)가 발행될 때까지도 「지리」가 ‘한국 유일의 지리학술지’였음을 의미한다. 여기에 더하여, 필자의 여러 해에 걸친 조사에서도 한국에서 해방 이후 「지리」제1권 제1호(1959)보다 앞서 발행된 지리학술지는 현재까지는 더 이상 없었다. 이와 같은 세 가지 사항들에 의거하면, 「지리」제1권 제1호(1959)는 ‘한국에서 1945년 해방 이후 최초로 발행된 지리학술지’, 즉 ‘한국 최초의 지리학술지’로 간주된다. 부연하면, 「지리」제1권 제1호(1959)는 ‘한국 최초의 지리학술지’인데, 여기서 ‘한국 최초의 지리학술지’는 ‘한국에서 최초로 창간된 지리학술지’이면서 ‘한국에서 최초로 발행된 지리학술지’를 의미한다.

한편, 전술한 바와 같이 ‘한국에서 체제를 갖춘 최초

의 지리학회지’는 「지리학」제1호(1963)이지만, 체제나 질에 상관없이 ‘한국 최초의 지리학회지’를 지목한다면 그것은 「지리학」제1호(1963)가 아니라 「지리」제1권 제1호(1959)이다(형기주, 1995:2).

「지리」제1권 제1호(1959)는 1945년 창립된 대한지리학회가 1963년에 학회지, 「지리학」을 창간하는데 결정적 자극제 역할을 했을 것으로 추정된다. 이에 더하여, 「지리」제1권 제1호(1959)는 1958년 설립된 서울대학교 문리과대학 지리학과 학생회가 1962년에 「지리학보」1집을 창간하는 데에도 적지 않은 영향을 끼쳤을 것으로 추정된다.

## 2. 「지리」제2호(1962)의 서지

서울대학교 사범대학 지리학회가 발행한 「지리」제2호(1959)는 앞표지(국문표지)·뒤표지(영문표지), 내지 102쪽 및 편집후기로 구성되어 있는데, 이들을 통해서 발행경과, 발행주체, 성격, 편집위원회, 인쇄시기·발행시기·권호, 인쇄유형·판형·지질, 표지 디자인·내지 편집형태, 내용구성, 소장자·현재상태, 편집후기·개략서지·서적광고, 발행의의·영향 등을 세부적으로 보면, 다음과 같다.

### 1) 「지리」제2호(1962)의 발행경과

서울대학교 사범대학 지리학회가 1959년에 「지리」제1권 제1호를 발행한 이래 3년이 지난 1962년에 제2호를 발행했으나, 1963년 이후 더 이상 속간하지 못했다. 이는 전

술한 바와 같이 정장호(1976:47)의 언급(“서울대학교 사범대학의「지리」는 1959년에 창간되어 창간 시기가 가장 빨랐으나, 2호로 중단 상태에 있다.”), 형기주(1995:2)의 언급(“학회지의 체제나 질에 상관없이 ‘한국 최초의 지리 학회지’를 논지한다면 1959년에 서울대학교 사범대학 지리과에서 발행된 지리학회지「지리」인데, 이는 1962년에 제2호를 프린트물로 내고 절판되었다.”) 및 이찬·이기석(2002:11)의 언급(“『지리』제1권 제1호는 1959년 서울대학교 사범대학 지리학회에서 출간하였다. 그리고, 제2호가 1962년에 속간되었으나, 더 계속되지 못했다.”)으로 확인하고, 그리고 필자가 최근 수년간에 걸쳐서 여러 방면으로 확인한 결과이다.

1963년 이후「지리」의 발행 중단 이유로는 여러 가지가 있었겠지만, 우선 학회 내적으로는 “졸업생 선배들에게 발행 경비 보조를 요청하고 인쇄가 아닌 프린트본으로 발행할 만큼 발행 비용 확보가 어려웠던 것”(편집 후기, 101쪽), 즉 “졸업생 선배를 찾아다닐 정도로 자금 문제가

고난했던 것”(“학회지의 장래를 위한 제언”, 94쪽), 양질의 논문 원고 확보가 어려웠던 것 등의 문제들이 있었을 것이고, 그리고 학회 외적으로는 지리과 소속 교수 및 학생들이 대한지리학회의 학술활동에 참여하고, 특히 일부 교수들이 1963년의「지리학」 창간에 종사하면서 서울대학교 사범대학 지리학회 기능 및 대한지리학회 기능이 부분적으로 중복된 것,「지리」 및 「지리학」 기능이 부분적으로 중복된 것 등의 문제들이 있었을 것이다.<sup>12)</sup> 이와 관련해서 부연하면, 1963년의 대한지리학회지, 「지리학」의 창간은 역설적으로 1963년 이후「지리」의 발행 중단을 촉진하는 주요한 요인의 하나로 작용했을 것으로 추정된다. 즉, 당시 서울대학교 사범대학 지리과의 소속 교수진이 수적으로 얼마 안되는 상황에서 대부분이 대한지리학회 회원으로서 대한지리학회의 학술활동 및 학회지「지리학」 창간에 직·간접적으로 활발히 관여했고, 학생들도 대한지리학회의 준회원으로서 학술활동에 참여하면서 서울대학교 사범대학 지리학회의 학술활동이 위축됐고, 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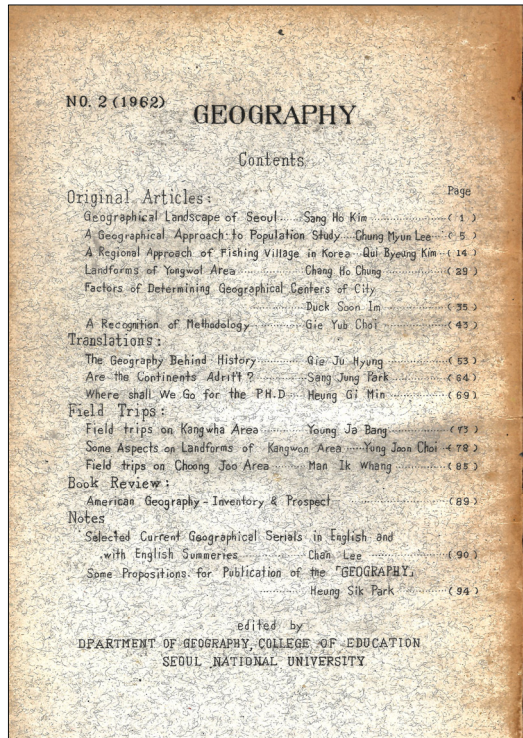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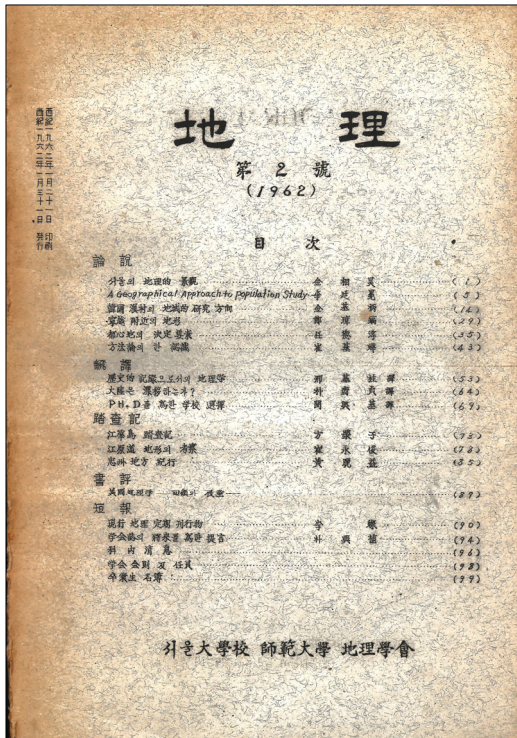


그림 7. 한국에서 두 번째로 발행된 지리학술지인 「지리」제2호(1962)의 국문표지(좌) 및 영문표지(우)

출처 : (좌)서울대학교 사범대학 지리학회, 1962:앞표지. (우)서울대학교 사범대학 지리학회, 1962: 뒤표지.

\* 「지리」제2호(1962)는 「지리」제1권 제1호(1959)에 이어서 ‘한국에서 두 번째로 발행된 지리학술지’로 간주된다. 그림의 「지리」제2호(1962)는 민흥기 전 교장(경기고등학교)의 소장본인데, 내지의 건조화(乾燥化)가 많이 진행된 상태이다.

울대학교 사범대학 지리학회와 대한지리학회의 부분적 기능 중복과 「지리」와 「지리학」의 부분적 기능 중복으로 인해서 결국 서울대학교 사범대학 지리학회의 존속이 어려웠을 것이고, 그에 따라 학회지 「지리」의 속간 발행도 어려웠을 것으로 추정된다.

## 2) 「지리」제2호(1962)의 발행주체

「지리」제2호(1962)의 발행주체, 즉 발행인은 앞표지(국문표지) 하단에 ‘서울대학교 사범대학 지리학회(서울大學校 師範大學 地理學會)’로 표기되어 있고, ‘뒤표지(영문표지) 하단에 ‘DEPARTMENT OF GEOGRAPHY, COLLEGE OF EDUCATION SEOUL NATIONAL UNIVERSITY’로 표기되어 있는데,<sup>13)</sup> ‘뒤표지 하단의 영문표기는 ‘서울대학교 사범대학 지리과’에 준하는 것이다. 이는 「지리」제1권 제1호(1959)의 ‘Geographic Institute of Educational College Seoul University’와 다른 것인데, 이와 같이 ‘서울대학교 사범대학 지리학회’의 영문표기가 본래의 ‘Geographic Institute of Educational College Seoul University’에서 ‘서울대학교 사범대학 지리과’에 준하는 ‘DEPARTMENT OF GEOGRAPHY, COLLEGE OF EDUCATION SEOUL NATIONAL UNIVERSITY’로 변경된 이유는 단순한 오표기(誤記)이거나 학술지 발행

경험의 일침함에 기인한 것으로 추정된다.

한편, ‘서울대학교 사범대학 지리학회’의 조직과 명칭은 「지리」제2호(1962)의 차호(次號)가 속간되지 않는 상황에서도 이후에도 계속 존속했던 것으로 보이는데, 이는 1968년 12월 10일자로 발행된 「사대 지리학회 소식(The News Letter of Geographic Institute of Educational College Seoul National University)」제8호가 여전히 발행주체를 ‘서울대학교 사범대학 지리학회’로 명기하고, 제호를 ‘사대 지리학회 소식’으로 표기하고 있는 데서 잘 드러난다. 「사대 지리학회 소식」은 서울대학교 사범대학 지리학회가 1968년 이전에 창간한 학회보(學會報)로서 ‘한국 최초의 지리학회보’로 추정된다.<sup>14)</sup>

## 3) 「지리」제2호(1962)의 성격

「지리」제2호(1962)는 「지리」제1권 제1호(1959)와 같이 기본적으로 서울대학교 사범대학 지리학회가 발행한 ‘지리학회지 형태의 지리학술지’로서의 성격을, 그리고 부차적으로 서울대학교 사범대학 지리학회가 발행한 ‘지리과 기관지’로서의 성격을 그대로 유지하고 있다.

부연하면, 서울대학교 사범대학 지리학회는 국내 지리학계의 중심적 위치에 있어서 충실한 학회지를 내놓는 것은 본학회는 물론 한국 지리학계의 발전을 위해서 필요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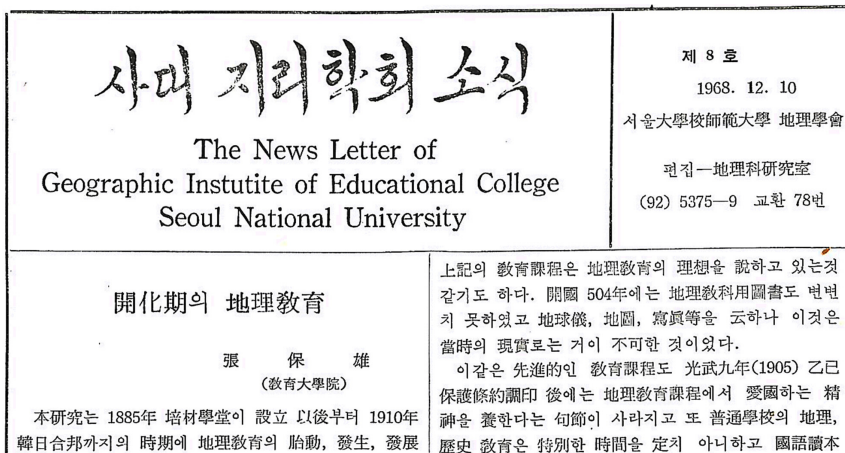


그림 8. 「사대 지리학회 소식」제8호(1968)(일부)

출처 : 서울대학교 사범대학 지리학회, 1968:1.

\* 「지리」제2호(1962)의 발행이 중단된 1963년 이후에도 서울대학교 사범대학 지리학회를 여전히 ‘사대 지리학회’로 약칭하고, ‘지리학회’ 부분의 영문 명칭을 「지리」제1권 제1호(1959)와 같이 여전히 ‘Geographic Institute’로 표기하고 있다. 이는 「지리」제2호(1962)가 ‘지리학회’ 부분의 영문 명칭을 ‘지리과’라는 의미의 ‘DEPARTMENT OF GEOGRAPHY’로 표기하고 있는 것과 다른 양상이다. 그림의 「사대 지리학회 소식」제8호(1968)는 이기석 명예교수의 소장본이다.

다는 임무의 중대함을 인식하고, 이에 따라 「지리」제2호(1962)는 내용적으로 전문적 학술지로서 범한국적, 나아가서 범세계적 무대에서 가치있고 우수한 학술지를 지향하면서(‘학회지의 장래를 위한 제언’, 94쪽) 부수적으로 답사보고, 과내 소식 및 졸업생 동태도 다루고자 하였다.

한편, 「지리」제2호(1962)는 「지리」제1권 제1호(1959)에 비해서 ‘지리학회지’의 성격을 강화한 것으로 보이는데, 이는 ‘논설’의 수가 기존의 2개에서 6개로 증가됐고, ‘번역’ 및 ‘서평’이 새로이 추가되어 각각 순서대로 3건 및 1건 게재됐고, 그리고 기존의 ‘기록 3건(학회 회칙 및 임원, 졸업생 명부, 학내 소식)’이 ‘단보(短報)’로 개칭되면서 ‘학회지 관련 내용물 2건(‘현행 지리 정기 간행물’, ‘학회지의 장래를 위한 제언’)이 추가된 데서 알 수 있다. 다른 한편, 「지리」제2호(1962)는 「지리」제1권 제1호(1959)에 비해서 지리과 잡지로서 지리과 기관지의 성격은 축소한 것으로 보이는데, 이는 기존의 기록 3건을 유지하면서도 답사기의 수가 기존의 4건에서 3건으로 감소된 데서 알 수 있다.

#### 4) 「지리」제2호(1962)의 편집위원회

「지리」제1권 제1호(1959)의 경우 ‘편집위원회 조직 및 명단’은 별도로 명기되어 있지 않았다. 이와 달리, 「지리」제2호(1962)의 경우 편집위원회 조직 및 명단이 편집후기의 끝부분(102쪽)에 제시되어 있는데, 편집위원회 조직은 편집위원 대표 1명 및 편집위원 6명으로 구성되어 있고, 그들의 명단이 기재되어 있는데, 이를 구체적으로 보면, 다음과 같다.:

편집위원 대표 민흥기(閔興基, 3년), 편집위원 이병설(李炳奩, 4년)·이기석(李琦錫, 3년)<sup>15)</sup>·송상석(宋常石, 3년)·최학준(崔學俊, 2년)·박항남(朴恒男, 2년)·방영자(方榮子, 1년)

#### 5) 「지리」제2호(1962)의 인쇄시기·발행시기·권호

「지리」제1권 제1호가 1959년에 발행되었는데, 차호인 「지리」제2호는 3년이 지난 1962년에 지연해서 발행되었다. 「지리」제2호(1962)의 인쇄시기 및 발행시기는 앞표지의 좌측 상부에 각각 순서대로 1962년 1월 21일과 1962년 1월 31일로 표기되어 있다.

「지리」제2호의 권호 표기를 보면, 창간호의 ‘제1권 제1호’와 달리 ‘권’ 표기 없이 ‘제2호’로 표기 방식이 달라져 있는데, 이는 1년간 2건 이상의 호를 발행한다는 창간 당시의 계획이 수정됐음을 의미하는 것으로 추정된다. 이와 같은

권호 표기 방식 변경에 따른 발행 건수 축소의 가장 큰 원인은 ‘편집후기’(101~102쪽)의 첫째쪽에서 드러나는 바와 같이 발행 비용 증당의 어려움이었을 것으로 추정된다.

#### 6) 「지리」제2호(1962)의 인쇄유형·판형·지질

「지리」제2호(1962)는 필경(筆耕)에 의한 등사본(謄寫本)으로 되어 있는데, 규격을 판형으로 보면 사륙배판(188×257mm)에 준하는 판형(175×253mm)이다.<sup>16)</sup> 이는 「지리」제1권 제1호(1959)의 판형인 국판(148×210mm)을 대폭 확대한 것인데, 이는 당시 日本地理學會(일본지리학회)가 발행하던 「地理學評論(지리학평론)」의 판형인 사륙배판을 주로 참조하여 발전적으로 보완한 것으로 추정된다.

「지리」제2호(1962)의 지질을 보면, 국문표지(앞표지) 및 영문표지(뒤표지)는 회색의 두터운 재생용지(再生用紙)를 사용하고, 내지는 갱지(更紙)<sup>17)</sup>를 사용하고 있다. 이러한 「지리」제2호(1962)의 인쇄유형 및 지질은 「지리」제1권 제1호(1959)가 활판에 스노우지를 사용한 점을 감안하면 상당히 낮아진 것이다. 이와 같이 「지리」제2호(1962)의 인쇄유형 및 지질이 낮아진 가장 큰 원인은 편집후기의 첫째 쪽에서 드러나는 바와 같이 발행 비용 증당의 어려움이었을 것으로 추정된다.

#### 7) 「지리」제2호(1962)의 표지 디자인 및 내지 편집형태

「지리」제2호(1962)의 표지 디자인 및 내지 편집형태는 「지리」제1권 제1호(1959)의 그것들을 전반적으로 유지하고 있다.

#### 8) 「지리」제2호(1962)의 내용구성

「지리」제2호(1959)의 내용은 앞표지에 기재된 목차를 통해서 보면, 논설 6편, 번역 3편, 답사기 3편, 서평 1편 및 단보 5편으로 구성되어 있다. 내용별 필자는 지리과 내외 교수, 대학원생(석사과정) 및 학부생으로 다양하게 구성되어 있다.

「지리」제2호(1959)의 경우 「지리」제1권 제1호(1959)에 비해서 ‘논설’의 수가 2개에서 6개로 증가됐고, ‘번역’ 및 ‘서평’이 새로이 추가되어 각각 순서대로 3건 및 1건 게재됐고, 그리고 「지리」제1권 제1호(1959)의 ‘기록 3건(학회 회칙 및 임원, 졸업생 명부, 학내 소식)’이 ‘단보’로 개칭되면서 ‘학회지 관련 내용물 2건(‘현행 지리 정기 간행물’,

‘화희지의 장래를 위한 제언’)이 추가되었다. 또한, 「지리」제2호(1959)의 경우 「지리」제1권 제1호(1959)에 비해서 ‘답사기’의 수가 4건에서 3건으로 감소했다.

(1) 논설

‘논설’은 “서울의 지리적 경관”(본과 주임교수 김상호), “A Geographical Approach to Population Study”(4회 졸업 경희대학교 교수 Lee, Chung Myun(이정면·李廷冕)), “한국 어촌의 지역적 연구방향”(불명(不明) 김기병(金基炳)), “영월 부근의 지형”(12회 졸업 대학원 재학중 성신여중 교사 정장호), “도심지의 결정요소”(4학년 임덕순(任德淳)) 및 “방법론의 한 인식”(4학년 최기엽(崔基燁))의 총 6편으로 구성되어 있다.<sup>18)</sup>

「지리」제2호(1962)의 경우 「지리」제1권 제1호(1959)에 비해서 전반적으로 서론·본론·결론 및 영문요약으로 구

성된 논설의 일반적 형식을 강화하고 있다. 특히, 「지리」제1권 제1호(1959)가 지리과 학부생 및 대학원생 중심으로 발행되었던 데 비해 「지리」제2호(1959)는 지리과 내외의 교수들이 논설, 서평 및 단보의 작성자로 참여하고 있다. 「지리」제2호(1959)가 「지리」제1권 제1호(1959) 발행 이후 3년이 지연되어 발행되었지만, 교수들이 원고를 제공하면서 지리학회 형태의 지리학술지로서 질적 향상은 물론 그의 위상을 제고하는 계기가 되었던 것으로 판단된다.

부연하면, 제1권 제1호(1959)에는 교수가 작성한 논설이 게재되지 않았으나, 「지리」제2호(1962)에는 논설 총 6편 중 2편이 당시 교수가 작성한 것이었는데, 김상호(지리과 교수)의 “서울의 지리적 경관”과 이정면(4회 졸업, 경희대 교수)의 “A Geographical Approach to Population Study”가 그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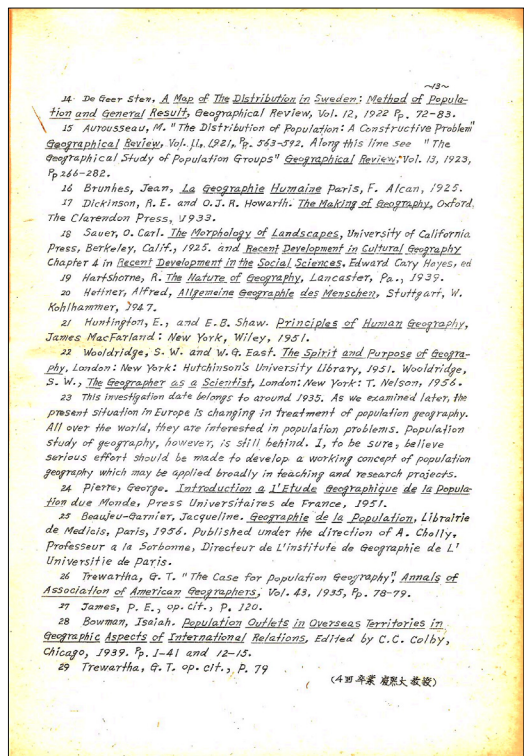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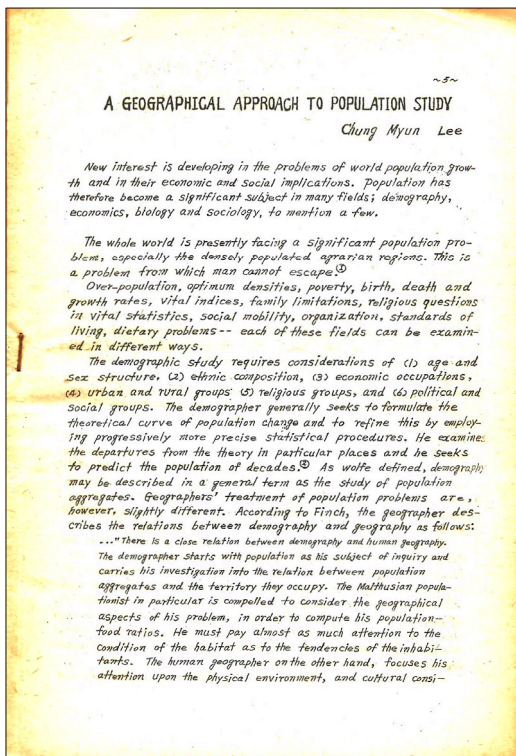


그림 9. 「지리」제2호(1962)에 게재된 이정면의 논설, “A Geographical Approach to Population Study”(일부)

출처 : 서울대학교 사범대학 지리학회, 1962:5:13.

\* 그림의 좌측은 논설의 첫체쪽으로 서론과 본론의 일부가 기입되어 있고, 우측은 논설의 끝쪽으로 미주(尾註)의 일부가 기입되어 있다. 논설은 9쪽 분량으로 전체가 영문으로 작성되어 있는데, 본문은 서론, 본론 및 요약·결론의 구조로 구성되어 있고, 29개의 미주가 제시되어 있다. 작성자, 이정면(1925~2021)은 미국 미시간대학교(University of Michigan, Ann Arbor)에서 박사학위를 취득했고(1961년), 경희대학교 문리과대학 지리학과 및 미국 유타대학교(University of Utah) 지리학과 교수를 역임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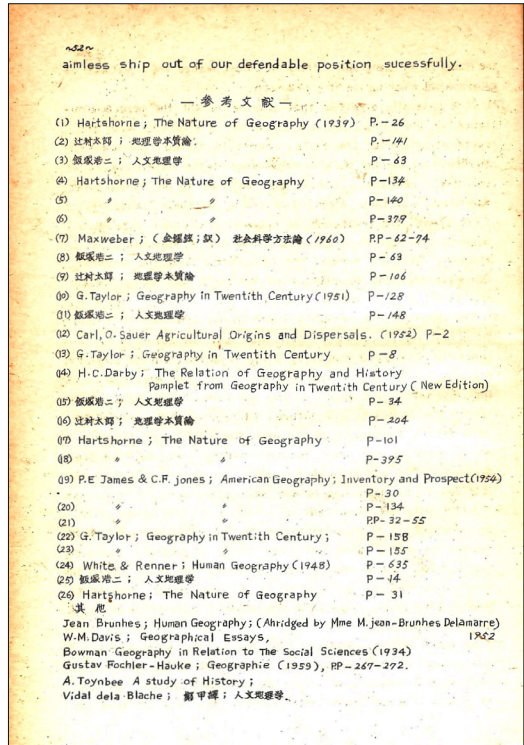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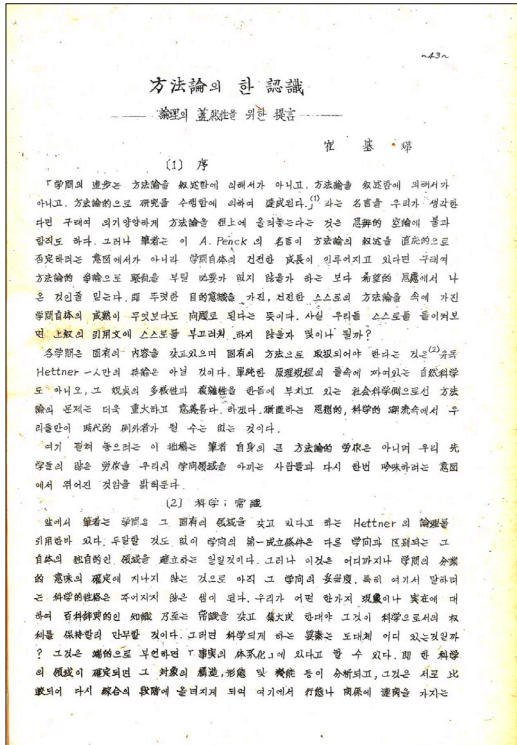


그림 10. 「지리」제2호(1962)에 게재된 최기엽의 논설, “방법론의 한 인식: 논리의 개연성을 위한 제언”(일부)

출처 : 서울대학교 사범대학 지리학회, 1962:43·52.

\* 그림의 좌측은 논설의 첫째쪽으로 서문과 본문의 일부이고, 우측은 끝쪽으로 영문요약 일부 및 참고문헌이다. 작성자, ‘최기엽’은 후일 경희대학교에서 박사학위를 취득했고(1987년), 성신여자대학교 사회과학대학 지리학과 교수를 역임했다.

(2) 번역

‘번역’은 ‘역사적 기록으로서의 지리학’(10회 졸업 성신여고 교사 형기주), “대륙은 표이하는가?”(14회 졸업 박상정(朴尙貞) 및 “PH.D를 위한 학교 선택”(3학년 민흥기(閔興基))의 3편으로 구성되어 있다.

(3) 답사기

‘답사기’는 “강화도 답사기”(1학년 방영자(方榮子)), “강원도 지형의 고찰”(2학년 최영준(崔永俊) 및 “충주 지방 기행”(3학년 황만익(黃晩逸)<sup>19)</sup>의 3편으로 구성되어 있다.

(4) 서평

‘서평’은 “제임스·존즈: 미국지리학-회고와 전망.”(본과 교수 이찬(李燦)의 1편으로 구성되어 있다.

(5) 단보

‘단보’는 “현행 지리정기간행물: 주로 영문 및 영문초록

이 있는 것”(본과 교수 이찬), “학회지의 장래를 위한 제언”(3년 지리학회 회장 박흥식(朴興植)), ‘과내소식’, ‘학회 회칙 및 임원’ 및 ‘졸업생 명부’의 5편으로 구성되어 있다. 단보는 학술적 측면과 비학술적 측면의 2가지로 구성되어 있는데, “현행 지리정기간행물: 주로 영문 및 영문초록이 있는 것” 1편이 학술적 측면의 단보에 해당되고, 나머지 4편은 비학술적 측면의 단보에 해당된다. 단보 5편의 내역을 개관하면, 다음과 같다.

④ 현행 지리 정기간행물: 주로 영문 및 영문초록이 있는 것

작성자, ‘이찬’은 “현행 지리 정기 간행물: 주로 영문 및 영문초록이 있는 것”(90~93쪽)에서 Chauncy D. Harris가 편집한 「Annotated World List of Selected Current Geographical Serials in English」(Chicago University, 1960)와 John K. Wright 및 Elizabeth T. Platt가 공편(共編)한 「Aids to Geographical Research」(American Geographical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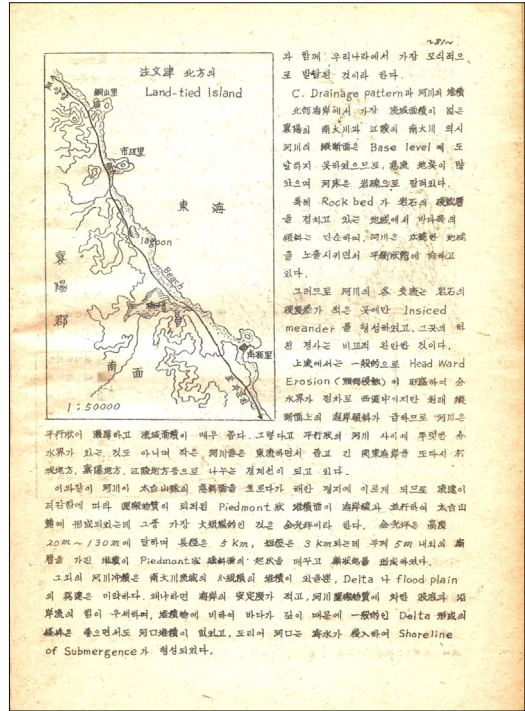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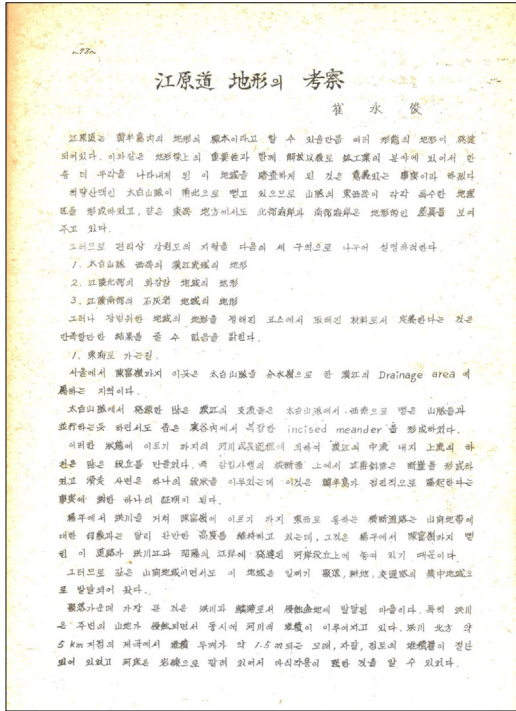


그림 11. 「지리」제2호(1962)에 게재된 최영준의 답사기, “강원도 지형의 고찰”(일부)

출처 : 서울대학교 사범대학 지리학회, 1962:78~81.

\* 그림의 위쪽 좌측은 답사기의 첫째 쪽이고, 위쪽 우측과 아래쪽 좌측은 답사기의 본문 일부이다. 그리고, 아래쪽 우측은 답사기의 끝 쪽이다. 총 8쪽 분량의 답사기 형식이지만, 가설-검증-일반화의 내용으로 구성된 거의 논설 수준으로 작성되어 있다. 작성자, 최영준(1941~2019)은 후일 미국 루이지애나주립대학교(Louisiana State University)에서 박사학위를 취득했고(1982년), 고려대학교 사범대학 지리교육과 교수를 역임했다.

Society, 1951, 3rd ed.)에 수록된 미국, 영국, 독일 및 일본의 지리 정기 간행물 중 주로 영문 및 영문초록이 있는 것 23종을 추출하여 각 간행물의 서지를 개략적으로 소개하고 있다.

② 학회지의 장래를 위한 제언

작성자 ‘박홍식’은 서울대학교 사범대학 지리학회 회장으로서 “학회지의 장래를 위한 제언”(94~95쪽)에서 몇 가지 제언을 하고 있는데, 이의 주요 내용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sup>20)</sup>

“서울대학교 사범대학 지리학회는 국내 지리학계의 중심적 위치에 있어서 충실한 학회지를 내놓는 것은 본학회는 물론 한국 지리학계의 발전을 위해서 필요하다. 학회지, 「지리」는 내용적으로 전문적 학술지로서 범한국적, 나아가서 범세계적 무대에서 가치있고 우수한 학술지를 지향하면서 부수적으로 답사보고, 과내 소식 및 졸업생

동태도 다루는 것이 바람직하다. 갈망 속에 탄생했던 「지리」창간호 이후, 그의 속간이 중단된 제일 이유는 자금 문제였는데, 이로 인해 당초의 인쇄 계획이 변경되었다. 자금 문제의 타개를 위해선 ‘(가칭)사대지리학회지운영회’를 조직하여 출판회비징수액·범위를 결정하고, 재학생들로부터 회지대(會誌代)를 늘려 받기를 제안한다.”

③ 과내 소식

‘과내 소식’(96~97쪽)은 1961년도 제1·2학기에 관한 것인데, 주요 내역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제1학기에는 신입생 환영회 및 학회임원 개선(改選)의 2건에 관한 내용이 기록되어 있고, 그리고 제2학기에는 외원 교구(外援教具) 인수, 추계답사, 답사발표회 및 최복현 교수 환송회, 환등회(幻燈會), 수요음악감상회, 학회임원 이동 및 졸업생 환송회의 7건에 관한 내용이 기록되어 있다.<sup>21)</sup>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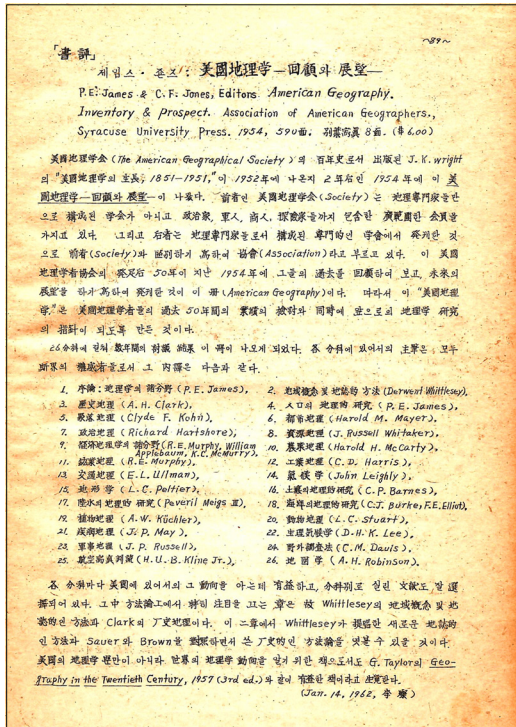


그림 12. 「지리」제2호(1962)에 게재된 이찬의 서평, “제임스·존스: 미국지리학-회고와 전망-”

출처 : 서울대학교 사범대학 지리학회, 1962:89.

\* 그림은 서평의 전문(全文)이다. 서평은 미국지리학회(Association of American Geographers)가 1954년에 시러큐스대학출판부(Syracuse University Press)를 통해서 간행한 「American Geography: Inventory & Prospect」을 대상으로 한 것인데, 이 저술은 James and Jones가 편집한 것이다. 작성자, 이찬(1923~2003)은 루이지애나주립대학교(Louisiana State University)에서 박사학위를 취득했고(1960년), 서울대학교 사범대학 지리교육과 및 사회과학대학 지리학과 교수와 대한민국학술원 회원을 역임했다.

④ 학회 회칙 및 임원

「지리」제2호(1962)에는 서울대학교 사범대학 지리학회의 ‘회칙’(98쪽)이 게재되어 있는데, 「지리」제1권 제1호(1959)에 게재된 것과 동일한 총 8장 17조로 구성되어 있다.

또한, 「지리」제2호(1962)에는 서울대학교 사범대학 지리학회의 임원으로서 고문, 회장, 부회장, 부장 및 명예회원의 명단이 기재되어 있는데, 임원 전원이 학부 3학년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를 구체적으로 보면, 다음과 같다(98쪽):

고문: 본대학 지리과 교수 및 강사, 회장: 박흥식(3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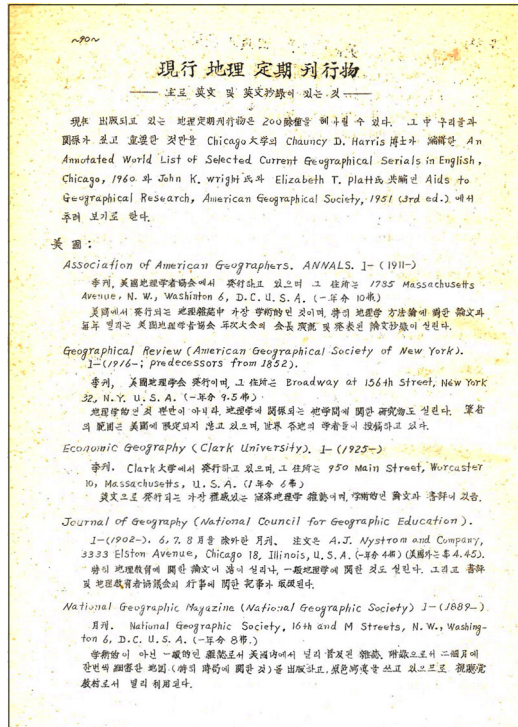


그림 13. 이찬의 단보, “현행 지리 정기 간행물: 주로 영문 및 영문초록이 있는 것”(일부)

출처 : 서울대학교 사범대학 지리학회, 1962:90.

\* 그림은 단보의 첫째쪽이다. 단보의 주요 내용은 미국, 영국, 독일 및 일본의 현행 지리 정기 간행물 23종의 개략적 서지에 관한 것인데, 이를 구체적으로 보면, “미국: 「Annals」(Association of American Geographers), 「Geographical Review」(American Geographical Society of New York), 「Economic Geography」(Clark University) 등 12종/ 영국: 「Geographical Journal」(Royal Geographical Society), 「Geography」(Geographical Association) 등 6종/ 독일: 「Die Erde」(Zeitschrift der Gesellschaft für Erdkunde zu Berlin), 「Erdkunde」(Archiv für wissenschaftliche Geographie) 등 3종/ 일본: 「地理學評論」(Geographical Review of Japan)(日本地理學會) 및 「人文地理」(Human Geography)(人文地理學會) 2종 등”이다.

부회장: 안성수(安性洙, 3년)·이수임(李壽任, 3년), 부장: 총무부 김문현(金文鉉, 3년)·문화부 박찬혁(朴贊赫, 3년)·연구부 이기석(3년)·도서부 송상식(3년), 명예회원: 본대학 지리과 졸업생

⑤ 졸업생 명부

졸업생 명부에는 1948년 서울대학교 졸업 제2회(사범대학 지리과 졸업 1회)부터 1962년 서울대학교 졸업 예

정 제16회(사범대학 지리과 졸업 예정 15회)까지 총 226명의 회별 졸업생 수와 명단 및 소속직장·대학원명이 게재되어 있다.

### 9) 「지리」제2호(1962)의 소장자·현재상태

「지리」제2호(1962)는 이기석 명예교수와 민흥기 전 교장이 각각 한권씩 소장하고 있다. 이기석 명예교수 소장본은 국문표지(앞표지)에 ‘팔역문고(八域文庫)’ 장서인(藏書印)이 찍혀 있는데, ‘팔역(八域)’은 이지호(1919~1986) 교수의 아호(雅號)이어서 본래 이지호 교수가 소장했던 것으로 추정된다.

한편, 학술연구정보서비스(<https://www.riss.kr>)에서 「지리」제2호의 소장처를 찾기 위해 「지리」를 입력하여 검색하면, 전술한 바와 같이 검색하면 우측에 관심학술지 명칭은 「지리(地理)」, 발행기관은 「서울대학교 사범대학 지리학회」, 발행연도는 「19uu」,<sup>22)</sup> 간기(刊期)는 「간행빈도 불명」, 소장기관은 「서울대학교 중앙도서관·연세대학교 학술문화처 도서관」 등으로 표기되어 있고, 그리고 검색하면 좌측에 「1962(1)」이 표기되어 있는데, 이러한 표기들로 보아서 서울대학교 중앙도서관·연세대학교 학술문화처 도서관 두 곳에 소장된 학술지, 「지리」는 서울대학교 사범대학 지리학회가 1962년에 1회에 걸쳐 발행한 것으로 추정된다.

이와 관련하여, 필자가 학술연구정보서비스(<https://www.riss.kr>)를 통해서 서울대학교 중앙도서관·연세대학교 학술문화처 도서관 두 곳에 위에서 검색된 학술지, 「지리」의 열람, 대출 또는 복사의 가능 여부를 문의했으나, 서울대학교 중앙도서관의 경우 대출, 열람 및 복사가 모두 불가능하다고, 그리고 연세대학교 학술문화처 도서관의 경우 논설 6건, 번역 3건, 답사기 3건, 단보 2건 등 원문(原文)의 부분적 복사를 요청할 수 있는데, 복사본의 해상도가 매우 낮아서 문장의 식별이 거의 어려운 상태라고 답신이 왔다.

이외에도, 전술한 바와 같이 필자가 서울대학교 사범대학 지리교육과의 서고에서 「지리」제2호를 찾은 바 있으나, 「지리」제1권 제1호와 마찬가지로 소장되어 있지 않았다.

「지리」제2호(1962)의 현재상태를 보면, 이기석 명예교수 및 민흥기 전 교장의 소장본 모두 국문표지 및 영문표지는 어느 정도 원형을 유지하고 있으나, ‘책등’은 심하게 훼손되어 있고, 갱지로 된 내지가 극도로 건조화되어 책을 펼치면 지면 일부가 훼손될 정도로 노후 정도가 심한 상태인데, 이는 「지리」제1권 제1호(1959)가 스노우지

를 사용한 활판인 것과 달리 「지리」제2호(1962)는 ‘갱지를 사용한 등사본’인데다가 발행된지 66년이 경과하고 있기 때문으로 보인다.

### 10) 「지리」제2호(1962)의 편집후기·개략서지·서적광고

#### (1) 편집후기·개략서지

「지리」제2호(1962)의 목차에는 표기되어 있지 않으나, 학회지의 끝부분(101~102쪽)에 총 2쪽 분량의 편집후기가 게재되어 있는데, 그의 주요 내용을 전제하면, 다음과 같다.<sup>23)</sup>

“학회지를 속간하고자 할 때마다 원고는 쇠도했으나, 졸업생들의 경비 찬조에 도움을 받아야 할 정도로 재정이 어려워 인쇄 계획을 프린트로 바꾸지 않을 수 없었다. 한국 유일의 지리학회지로서 명실공히 「지리」의 수준을 높이고자 노력했으므로 「지리」는 앞으로 학계에 많은 자극을 주리라 믿는다.”

「지리」제2호(1962)에는 「지리」 제1권 제1호(1959)와 달리 뒤표지 이면에 박스 형태의 개략서지는 게재되어 있지 않다. 단, 앞표지의 좌측 상단부에 인쇄 연월일(1962년 1월 21일) 및 발행 연월일(1962년 1월 31일)이 기재되어 있다.

#### (2) 서적광고

「지리」제2호(1959)의 경우 최영준의 답사기, “강원도 지형의 고찰”의 끝부분(84쪽) 및 이찬의 단보, “현행 지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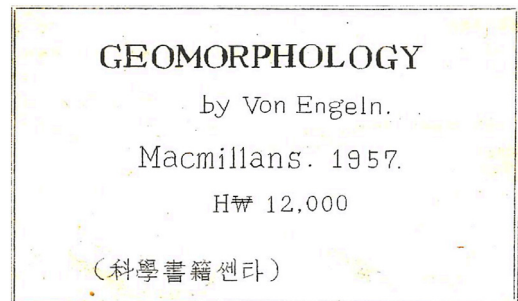


그림 14. 「지리」제2호(1962)에 게재된 서적 광고, 「GEOMORPHOLOGY」

출처 : 서울대학교 사범대학 지리학회, 1962:84.

\* 학술연구정보서비스(<https://www.riss.kr>)에 의하면, 위 광고에서 서적의 원명(原名)은 ‘GEOMORPHOLOGY: SYSTEMATIC AND REGIONAL’이고, 저자의 원명은 O. D. von Engelmann이다. 이 서적의 초판은 1940년대 초(1942년경)에 New York의 The Macmillan Company에서 655쪽 분량으로 간행된 것으로 추정된다.

정기 간행물: 주로 영문 및 영문초록이 있는 것”의 끝부분(93쪽)에는 각각 순서대로 서적 2권의 광고가 직사각형 안에 게재되어 있는데, 하나는 von Engel이 저술한 「GEOMORPHOLOGY」이고, 다른 하나는 김상호 교수가 저술한 「지리학개론」이다.

11) 「지리, 제2호(1962)의 발행의 영향

「지리, 제1권 제1호(1959)가 ‘한국 최초의 지리학술지’로서 ‘한국에서 최초로 창간된 지리학술지’이면서 ‘한국에서 최초로 발행된 지리학술지’였다면, 그에 이어 속간된 「지리, 제2호(1962)는 ‘한국에서 두 번째로 발행된 지리학술지’였다. 이러한 「지리, 제2호(1962)는 「지리, 제1권 제1호(1959)와 같이 학회 회칙 및 조직 방식, 학회지 표지 디자인 및 내지 편집형태 등에 있어서 나름대로는 당시 구미와 일본에서 발행되던 주요 지리학회지들의 영향을 크게 받은 ‘지리학회지’의 형태를 취하고 있었다. 특히, 「지리, 제2호(1962)는 ‘학회지의 장래를 위한 제안’(94쪽)에서 내용적으로 전문적 학술지로서 범한국적, 나아가서 범세계적 무대에서 가치있고 우수한 학술지를 지향

할 것을 제안했다.

「지리」의 발행주체(발행인)는 「지리, 제1권 제1호(1959)의 실제적 창간 작업이 이루어진 1958년부터 「지리, 제2호(1962)가 발행된 1962년까지 4년여에 걸친 비교적 단기간에 그 어떤 형태의 지리학술지도 존재하지 않는 상황에서 ‘지리학회지 형태의 지리학술지’를 한국 최초로 발행하면서 ‘지리학회의 조직 및 운영 방식’, 그리고 ‘학회 차원의 지리학 연구 체계’를 시행착오를 거듭하면서도 처음으로 터득하고 일정 수준까지 정립했던 것으로 판단된다. 이러한 성과는 당시 존재하던 대한지리학회가 1945년 창립 이래 여전히 학회지를 창간하지 못하고 있던 시점이어서 그 의의가 매우 크다고 할 수 있다. 이런 가운데, “1963년에 대한지리학회가 체제나 질을 갖춘 정식학회지로서 「지리학」을 창간”(형기주, 1995:2)하면서 「지리」는 체제와 질에서 「지리학」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다소 미흡한 것으로 치부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술한 바와 같이 어떤 형태의 지리학술지도 존재하지 않는 상황에서 “「지리학」이 간행된 시점보다 4년이나 앞서”(형기주, 1995:2) “「지리학회지 형태의 지리학술지’를 한국 최초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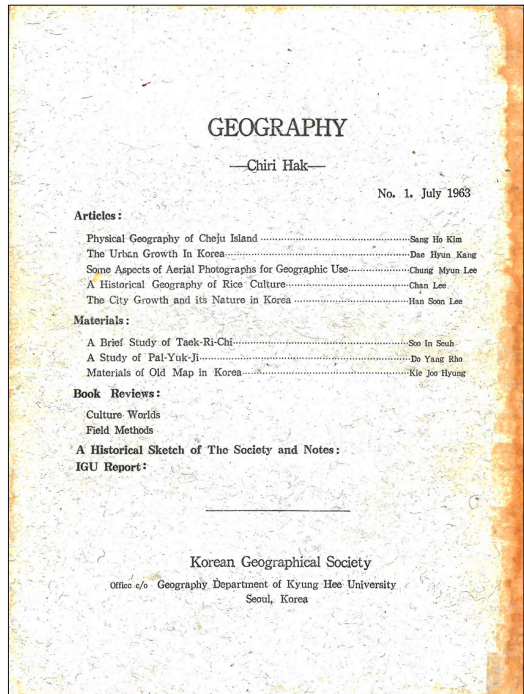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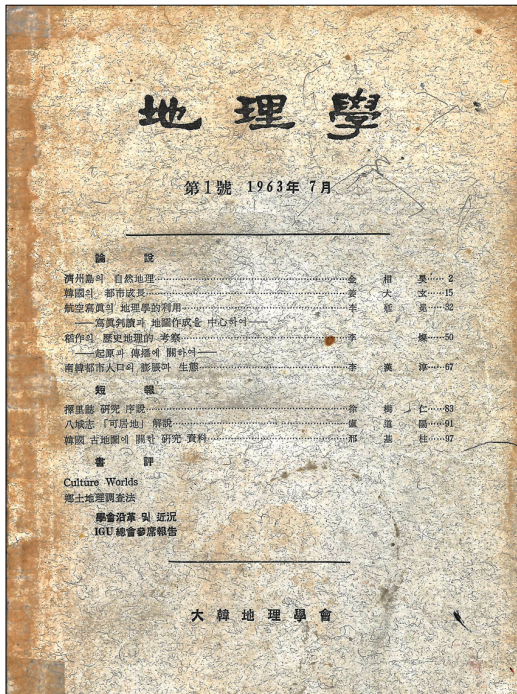


그림 15. 「지리, 제1권 제1호(1959)·제2호(1962)의 영향을 크게 받은 것으로 추정되는 「지리학, 제1호(1963)의 국문표지(좌) 및 영문표지(우) 출처 : (좌)대한지리학회, 1963:앞표지. (우)대한지리학회, 1963:뒤표지.

\* 그림의 「지리학, 제1호(1963)는 필자의 소장본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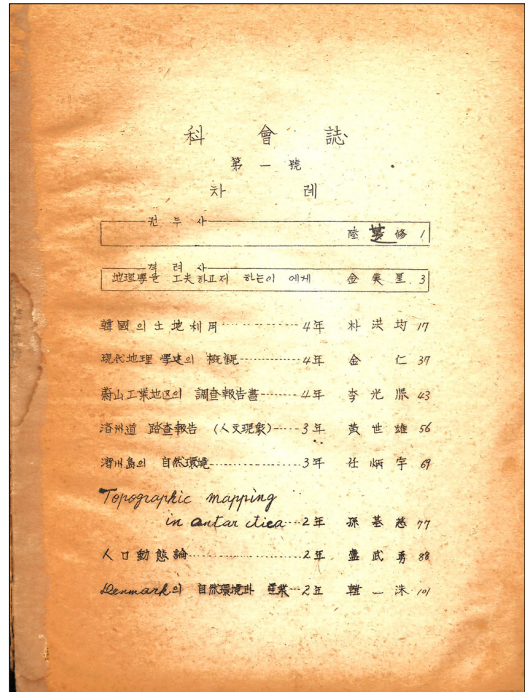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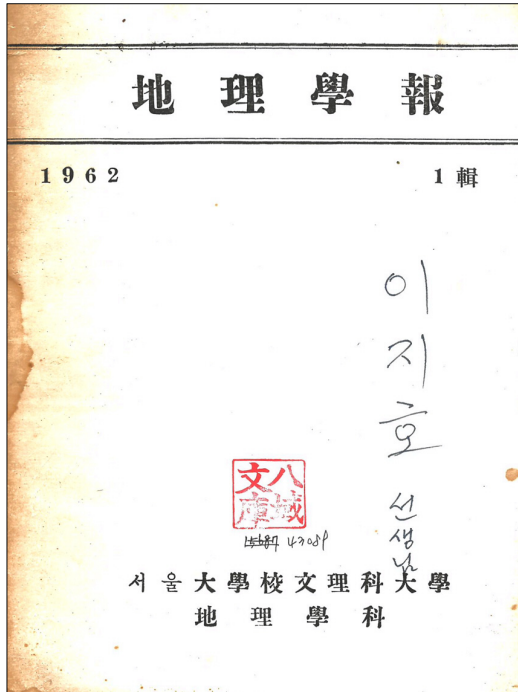


그림 16. 「지리학보」1집(1962)의 국문표지(좌) 및 차례(우)

출처 : (좌)서울대학교 문리과대학 지리학과, 1962:앞표지. (우)서울대학교 문리과대학 지리학과, 1962:차례.

\* (좌)「지리학보」1집은 ‘한국에서 두 번째로 창간된 지리학술지’이면서 ‘한국에서 세 번째로 발행된 지리학술지’로 간주된다. 그림의 「지리학보」1집은 이기석 명예교수 소장본인데, 국문표지에 ‘이지호 선생님’이라는 수기(手記)와 ‘팔역문고(八域文庫)’라는 장서인이 있는 것으로 보아 본래 증정본 수령자인 이지호 명예교수가 소장하고 있었던 것으로 추정된다. 「지리학보」1집은 뒤표지에 영문표지가 작성되어 있지 않다. 「지리학보」1집은 이기석 명예교수 소장본 이외에 손정렬 교수(서울대학교 사회과학대학 지리학과)가 1부 소장하고 있는데, 이는 본래 김인 명예교수(金仁, 서울대학교 사회과학대학 지리학과)가 소장하고 있던 것이다. 현재 「지리학보」는 1집 이외에 ‘제3호’가 서울대학교 중앙도서관 수원보존서고에만 한권 소장되어 있다. (우)차례에는 ‘권두사’와 ‘격려사’가 있는데, 권두사는 육지수(陸芝修, 1907~1967)가, 그리고 격려사는 김경성(金庚星, 1918~1978)이 각각 작성한 것이다. 또한, 차례에는 김인의 “현대지리학사의 개관” 등 논문·단보·답사보고 총 8편의 목록이 수록되어 있다.<sup>24)</sup>

발행했다”는 사실은 변치 않는다.

「지리」제1권 제1호(1959)에 이은 「지리」제2호(1962)의 발행은 1945년 창립 이래 아직 학회지가 없던 대한지리학회가 1963년에 그의 학회지로서 「지리학」을 창간하는데 있어서 학회지의 국문 및 영문 제호, 규격 판형, 국문 및 영문 표지 디자인, 내지 편집형태, 편집규정 등에 전적인 영향을 끼쳤을 것으로 추정되는데, 이는 「지리학」제1호(1963)의 국문 및 영문 제호, 규격 판형, 국문 및 영문 표지 디자인, 내지 편집형태, 편집규정 등이 「지리」제1권 제1호(1959) 및 제2호(1962)의 그것들과 거의 유사하거나 동일한 데서 알 수 있다.

또한, 「지리」제1권 제1호(1959)에 이은 「지리」제2호(1962)의 발행은 1962년에 당시 서울대학교 문리과대학

지리학과 학생들의 과회지(科會誌) 형태의 「지리학보」1집을 발행하는 데에도 직접적 영향을 끼쳤던 것으로 추정된다. 「지리학보」1집<sup>25)</sup>은 「지리」제2호(1962)에 이어서 ‘한국에서 세 번째로 발행된 지리학술지’로서<sup>26)</sup> 「지리」제1권 제1호(1959) 및 제2호(1962)와 더불어 1963년의 「지리학」창간을 촉진했던 것으로 추정된다.

### III. 요약 및 제언

#### 1. 요약

서울대학교 사범대학 지리학회가 발행한 「지리」제1권

제1호(1959) 및 제2호(1962)는 각각 순서대로 ‘한국 최초의 지리학술지’ 및 ‘한국에서 두 번째로 발행된 지리학술지’로서 현대한국지리학사에서 매우 귀중한 존재이다. 그간「지리」제1권 제1호(1959) 및 제2호(1962)의 경우 제1권 제1호(1959)를 기준으로 보면 간행된 지 66년이 경과하고 있지만, 그들의 서지에 관해서는 어떤 구체적 조사·보고도 되어 있지 않은 가운데 실물 사진조차도 공개되어 있지 않은 상태였다.

이에, 본고에서는 「지리」제1권 제1호(1959) 및 제2호(1962)의 서지를 발행경과, 발행주체, 성격, 편집위원회, 인쇄시기·발행시기·권호, 인쇄유형·판형·지질, 표지 디자인·내지 편집형태, 내용구성, 소장자·현재상태, 편집 후기·개략서지·서적광고, 발행의의·영향 등을 중심으로 고찰하고, 표지 등의 일부 내역을 그림으로 공개하고자 했다.

「지리」제1권 제1호(1959)는 ‘한국 최초의 지리학술지’ 이면서도 그의 발행주체, 편집체제, 내용구성 등이 당시로서는 매우 준수하여 한국 현대지리학의 초창기에 매우 큰 기여를 한 것으로 판단되고, 「지리」제2호(1962)는 「지리」제1권 제1호(1959)에 비해 인쇄 수준이 프린트본으로 저하된 것을 제외하고는 「지리」제1권 제1호(1959)와 동일한 양상을 유지하면서 지리학술지로서의 성격을 대폭 강화했고, 규격을 국판에서 사륙배판으로 발전적으로 확대하여 지리학술지로서 갖출 것은 대부분 갖추었던 것으로 판단된다.

특히, 서울대학교 사범대학 지리학회는 「지리」제2호(1962)의 속간 발행에 즈음해서 국내 지리학계의 중심적 위치에 있는 서울대학교 사범대학 지리학회가 충실한 학회지를 내놓는 것은 본학회는 물론 한국 지리학계의 발전을 위해서 필요하다고 전제하고 범한국적, 나아가서 범세계적 무대에서 가치있고 우수한 학술지를 지향하면서 전문적 학술지로서의 면모를 갖추고자 노력했다.

「지리」제1권 제1호(1959) 및 제2호(1962)는 지리학술지로서 특히, 지리학회지의 형태를 취하고 있었는데, 이는 학회지의 국문 및 영문 제호, 앞·뒤 표지 디자인 및 내지 편집형태, 회칙, 편집규정 등에 있어서 당시 일본과 구미에서 발행되던 주요 지리학회지들, 특히 일본에서 발행되던 「인문지리」 및 「지리학평론」의 영향을 크게 받은 것으로 판단된다.

한국에서 체제를 갖춘 정식의 지리학회지가 출현한 것은 물론 1963년에 대한지리학회가 발행한 「지리학」제1호

이다. 그러나, 학회지의 체제나 질에 상관없이 한국 최초의 지리학회지를 논한다면, 그것은 「지리학」제1호가 아니라 서울대학교 사범대학 지리학회가 1959년 간행한 「지리」제1권 제1호이다(형기주, 1995:2).

「지리」제1권 제1호(1959) 및 제2호(1962)의 발행은 1963년에 대한지리학회에 그의 학회지로서 「지리학」을 창간하는 것을 촉진하고, 학회지 「지리학」의 국문 및 영문 제호, 앞·뒤 표지 디자인 및 내지 편집형태, 편집규정 등에 전적인 영향을 끼쳤을 것으로 추정된다. 이와 관련하여 역설적이지만 1963년의 「지리학」 창간은 1963년 이후 「지리」의 발행 중단을 결정적으로 촉진했을 것으로 추정된다.

「지리」제1권 제1호(1959) 및 제2호(1962)의 발행은 1962년 당시 서울대학교 문리과대학 지리학과 학생회가 과회지 형태의 학술지 「지리학보」 집을 발행하는데 크게 영향을 끼쳤을 것이다. 「지리학보」 집은 「지리」제1권 제1호(1959) 및 제2호(1962)와 함께 1963년 「지리학」의 창간을 촉진했을 것이다.

서울대학교 사범대학 지리학회는 「지리」제1권 제1호(1959) 및 「지리」제2호(1962)를 발행할 즈음에 학회보 형태의 「사대 지리학회 소식」을 창간했는데, 이는 1969년에 대한지리학회에 「지리학회보」를 창간하도록 자극하고, 「지리학회보」의 편집형태 등에 전형적인 선례가 되었던 것으로 추정된다. 「사대 지리학회 소식」은 「지리학회보」보다 앞서 창간되어 ‘한국 최초의 지리학회보’로 추정된다.

1945년 창립된 대한지리학회에 회원(會員) 수의 과소(寡少), 재정 능력의 빈약 등과 같은 내적 사정 및 사회적 불안, 경제적 빈곤 등과 같은 외적 사정에 의해서 아직 학회지와 학회보를 창간하지 못하고 있을 때, 서울대학교 사범대학 지리학회에 회칙과 그에 따른 조직을 갖추고 학회지로서 「지리」를 1959년에 창간하고, 그리고 학회보로서 「사대 지리학회 소식」을 1950년대 말~1960년대 전반(前半)의 기간에 창간했는데, 이는 참으로 경이로운 일로서 현대한국지리학사상 그 의미가 매우 크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서울대학교 사범대학 지리학회의 「지리」가 학회 내외의 여러 부정적 요인에 의해서 1962년의 제2호 발행을 끝으로 더 이상 속간되지 못한 것은 매우 안타까운 일이다. 필자는 1959년에 창간된 「지리」가 1963년 대한지리학회지, 「지리학」 창간에, 그리고 1968년 이전에 창간된 「사대 지리학회 소식」이 1969년 대한지리학회보, 「지리학회보」 창간에 각각 마중물과 밑알이 되었을 것이라고 본다.

## 2. 제언

본고에서는 「지리」제1권 제1호(1959) 및 「지리」제2호(1962)의 서지를 개관적으로 고찰했으므로 차후 논설을 비롯해서 단보, 보고, 답사기, 번역, 서평 등의 게재 내용을 구체적으로 분석할 필요가 있는데, 이는 특히 두 권의 「지리」에 게재된 논설, 단보, 답사기, 서평 등의 개별 내용들의 대부분이 계통지리학 및 지역지리학의 세부 분야별로 ‘한국 최초의 것’에 해당되고, 1950년대 후반 당시 한국 지리학의 교육·연구의 동향 및 수준을 반영하고 있기 때문이다.

1945년 해방후 1946년에 ‘한국 최초의 지리계열 학과’로 서울대학교 사범대학 지리교육과가 설립되고, 그 과의 학부 학생들이 중심이 되어 ‘한국 최초의 지리학회’로 서울대학교 사범대학 지리학회를 창립하고, 그리고 그 학회가 1959년에 ‘한국 최초의 지리학술지’로 「지리」를 창간하고, 1950년대 말~1960년대 전반의 기간에 ‘한국 최초의 지리학회보’로 ‘사대 지리학회 소식’을 창간한 것은 해방 후 현대한국지리학사에서 매우 중요한 부분이다. 다가오는 2029년은 ‘한국 최초의 지리학술지’로 간주되는 「지리」제1권 제1호(1959)가 발행된지 70주년이 되는 해이므로 그 즈음에 「지리」제1권 제1호(1959)의 발행을 기념하는 조출한 자리라도 마련되길 바란다.<sup>27)</sup>

끝으로, 1945년 해방 이후 현대한국지리학사의 개략적 내역은 그간 「한국의 지리학과 지리학자」(제29차 세계지리학회 조직위원회, 2001), 「현대한국지리학사」(오홍석, 2004), 「대한지리학회70년사: 1945~2015」(대한지리학회, 2016) 등을 통해서 상당 부분 드러나 있지만, 본고에서 보는 바와 같이 미시적으로는 아직 미진한 부분이 적지 않은 것으로 판단된다.<sup>28)</sup> 따라서, 이제는 한국의 지리학자들이 현대한국지리학사의 미시적 부분에 대해서 보다 많은 관심을 갖기를 바란다.<sup>29)</sup> 이는 1945년 해방을 현대한국지리학사의 기점(起點)으로 설정해도 이미 80여년이 지나고 있어서 대학도서관, 지리학과·지리교육과, 지리학자 등이 소장하던 많은 관련 자료들이 빠르게 훼손되거나 폐기되고 있고,<sup>30)</sup> 현대한국지리학의 여명기에 학부 및 대학원을 다니고 교육자 및 연구자로 활동했던 분들이 최근 들어 타계하고 있기 때문이다.

## 註

- 1) 정장호(1976:44·47)는 1975년 당시 각 대학 및 대학원에서 발간되고 있는 학술잡지의 내역을 창간연도순으로 구체적으로 제시하는 가운데 “서울대학교 사범대학 지리과에서 「지리」가 창간된 해와 같은 1959년에 이화여자대학교 사범대학 사회생활과에서 「녹우회보」가 창간되었고, 1975년까지 17호가 출간되었다”고 언급하고 있는데, 필자는 “당시 이화여자대학교 사범대학 사회생활과는 지리, 역사 및 일반사회의 3개 전공으로 구성되어 있었고, 그에 따라 「녹우회보」 창간호에 지리, 역사 및 일반사회의 3개 분야의 연구물들이 함께 게재되어 있었을 것”으로 추정했다. 이를 근거로 본고에서는 1959년 「녹우회보」창간호를 ‘지리학술지’로 간주하지 않고, ‘사회과 학술지’로 간주했다. 필자의 위와 같은 추정적 간주를 확인할 수 있는 현존의 유력·유일 자료인 「한국지리논문목록」(이기석·윤정숙, 1982:1-64)에서 「녹우회보」 창간호에 게재된 지리 분야 논문을 검색한 결과, 「녹우회보」 창간호에 지리 분야 논문으로 “자연환경과 인생”(조경자, 1959:113-122) 및 “제주도지리조사보고”(홍금자, 1959:5-24)의 단 2편만이 게재되어 있었다. 이로 미루보면, 「녹우회보」 창간호에는 지리 분야 논문 2편 이외에 역사 및 일반사회 분야의 논문들이 여럿 게재되어 있었을 것이다. 위와 같은 상황들과 관련하여 필자가 「녹우회보」 창간호(1959)를 직접 입수하여 확인하고자 학술연구정보서비스(<https://www.riss.kr/>)에서 「녹우회보」 창간호(1959)를 소장한 여러 대학도서관들에 앞표지, 차례 등의 부분 복사를 요청했으나 입수가 불가능했고, 2025년 7월 초 이화여자대학교 사범대학 사회생활과 이영민 교수에게 학과, 연구실 등에 소장되어 있는지 문의했으나 소장되어 있지 않다는 전갈이 온 바 있다.
- 2) 「지리」제2호(1962)의 경우 「지리」제1권 제1호(1959)와 달리 본래 권 표기가 없다. 「지리학보」 1집 표기 중 ‘1집’ 표기는 앞표지(국문표지)에 일반적인 경우와 같이 ‘제1집’으로 표기되어 있지 않고 ‘1집’으로 표기된 것을 그대로 따른 것이다. 「지리학보」 제3호 표기 중 ‘제3호’ 표기는 앞표지(국문표지)에 ‘1집’ 표기에 이어서 ‘3집’ 또는 ‘제3집’으로

- 표기되어 있지 않고 '제3호'로 표기된 것을 그대로 따른 것이다. 또한, 「지리」제1권 제1호(1959) 및 제2호(1962)와 「지리학보」1집은 원본(책자)을 구했고, 「지리학보」제3호는 일부 쪽수(총 38쪽 중 11쪽)의 스마트폰 촬영본(jpg 파일)을 구했다.
- 3) '논설'은 현재 일반적으로 지칭하는 '논문(論文)'을 의미한다.
  - 4) 최복현(1906~1979)은 일본 히로시마고등사범학교(廣島高等師範學校) 문과를 졸업했고(1931년), 서울대학교 사범대학 지리과 교수, 서울시교육감 등을 역임했다.
  - 5) 앞표지(국문표지) 하단부에는 본래 '서울대학교 사범대학 지리학회지(서울大學校 師範大學 地理學會誌)'라고 표기되어 있는데, 이는 '서울대학교 사범대학 지리학회(서울大學校 師範大學 地理學會)'의 오기(誤記)로 추정된다. 이러한 추정은 「지리」제1권 제1호(1959)의 뒤표지(영문표지) 하단부에 '서울대학교 사범대학 지리학회'의 영문 표기가 'Geographic Institute of Educational College Seoul University'로 정상적으로 표기되어 있고, 「지리」제2호(1962)의 앞표지 하단부에 '서울대학교 사범대학 지리학회(서울大學校 師範大學 地理學會)'라고 수정하여 표기되어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서울대학교 사범대학 지리학회지'라는 자구가 오기가 아니라면, 이는 지리학술지(지리학회지)를 국내에서 처음 발행하면서 관련 경험의 부족에 기인한 것으로 추정된다.
  - 6) 임한수(1935~1992)는 경희대학교에서 박사학위를 취득했고(1984년), 성신여자대학교 사회과학대학 지리학과 교수를 역임했다. 이현영(1938~2023)은 이화여자대학교에서 박사학위를 취득했고(1985년), 건국대학교 이과대학 지리학과 교수를 역임했다. 그리고, 권혁재는 루이지애나주립대학교(Louisiana State University)에서 박사학위를 취득했고(1969년), 고려대학교 사범대학 지리교육과 교수를 역임했다.
  - 7) 본고에서 인적사항은 고이병설교수유고논집간행위원회(1997), 대한지리학회(1987; 2008; 2009; 2016), 오홍석(2004), 대한지리학회(<https://www.kgeography.or.kr/>) 등의 자료를 참조했다.
  - 8) 김상호(1918~2002)는 후일 서울대학교에서 박사학위를 취득했고(1967년), 서울대학교 사범대학 지리교육과 및 사회과학대학 지리학과 교수를 역임했다. 이지호(1919~1986)는 일본 릿쇼대학(입정대학) 고등사범부 지리역사과를 졸업했고(1944년), 서울대학교 사범대학 지리과 교수를 역임했다.
  - 9) 「지리」제1권 제1호(1959)의 증정본 수령자로 추정되는 '서명원'은 「지리」제1권 제1호(1959) 간행 당시 서울대학교 사범대학 교육학과에 재직하고 있던 '서명원 교수'를 지칭하는 것으로 추정된다. 서명원(1919~2006)은 1955~1977년간 서울대학교 사범대학 교육학과에 재직하면서 부총장, 교무처장, 사범대학 학장 등을 역임했고, 이후 숙명여자대학교, 충남대학교 및 경원대학교 총장, 문교부장관, 학술원 회원 등을 역임했다(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 <https://encykorea.aks.ac.kr/>).
  - 10) '발 바춤하여'에서 '발 바춤'의 의미를 여러 국어사전에서 찾자 했으나, 그 의미를 파악하지 못했는데, 오자(誤字)·탈자(脫字)가 아니라면, 문맥으로 보아 '바탕으로'의 의미로 추정된다.
  - 11) 인용문의 일부 자구는 현재의 국어 어법에 맞게 수정했다.
  - 12) '1963년 이후 「지리」의 발행 중단 이유' 중 발행 비용 및 양질의 논문 원고 확보의 어려움은 1964년 이후 대한지리학회지, 「지리학」의 지연 발간에도 그대로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대한지리학회(2016: 110)에 따르면, 1963년에 제1호가 발간된 「지리학」은 1966년에 제2호가, 그리고 1968년에 제3권 1호가 각각 발간되었는데, 이러한 지연 발간은 발행 비용 및 양질의 논문 원고 확보의 어려움이 주요한 원인이었을 것으로 추정된다. 이와 관련하여 대한지리학회(2016: 110)는 “곤란한 가운데 애로를 극복해 가면서 학회지를 창간하였으나, 당시 사정은 매년 학회지를 간행할 수 있는 사정이 못되었다. …… 특히, 발행 비용 확보를 위해서 당시 과학기술처의 지원을 받거나 출판사(교육출판사, 동아출판사)를 발행처로 하기도 했다.”라고 기술하고 있다. 당시 발행주체(발행인)가 누구이든 학회지를 발간하는데 발행 비용 및 논문 원고 확보의 문제가 매우 극심했던 것으로 추정된다.
  - 13) '서울대학교 사범대학 지리학회'의 영문 표기 중 'DEPARTMENT OF GEOGRAPHY'가 실제로는 'DPARTMENT OF GEOGRAPHY'로 표기되어, 'DEPARTMENT' 표기 중 앞의 'E'가 누락되어 있

는데, 이는 오기로 추정된다.

- 14) 「사대 지리학회 소식」제8호(1968)는 사륙배판(四六倍判: 188×257mm)에 준하는 판형(192×262mm) 및 활판인쇄본으로 총 4쪽 분량이며, 편집자는 '지리과연구실'로 되어 있는데, 1~3쪽에 "개화기의 지리교육"(교육대학원 장보웅(張保雄), 1~2)과 "H.S.G.P.의 단원 4 공업을 읽고"(대광중고등학교 교사 박성호(朴成鎬), 2~3)와 같은 단보 2편 및 "Monsoon Asia(H. Robinson, 1966, MacDonalld & Evans Ltd.)(창덕여자중고등학교 교사 박상정(朴商貞), 3)와 같은 서평 1편이 게재되어 있고, 3~4쪽에 과내 소식, 졸업생 소식 및 학계 소식이 게재되어 있어서 이 소식지가 단순한 학회 소식지가 아니라 학교 현장에 지리교육에 관한 전문적 지식과 교수-학습 자료를 제공하는 기능과 서울대학교 사범대학 지리과 및 지리학회, 대한지리학회의 소식지로서의 기능을 동시에 가진 학회보였거나 1963년 이후 「지리」의 발행 중단에 따른 대안으로 지리학회지 기능과 학회 소식지 기능을 동시에 가진 학회보였던 것으로 추정된다.
- 부연하면, 「사대 지리학회 소식」은 제8호가 1968년에 발행된 것으로 보아, 「지리」제1권 제1호(1959) 및 제2호(1962)의 발행 직후에 정규(定規)의 지리학회지로서 「지리」의 성격을 강화하면서 소홀해지던 현장지리교육 자료를 소개하고 「지리」에서 학회 소식 내용을 빼내어 담기 위해서 창간되었거나 또는 1963년 「지리」의 발행 중단 직후에 「지리」의 축소판 대체학술지(縮小版 代替學術誌)로 발행되었던 것으로 추정된다. 「사대 지리학회 소식」의 정확한 창간년도, 발행주기 및 중간년도는 현재로선 알기 어려우나, 1968년 12월에 제8호가 발행된 것으로 보아 1960년대 초반이나 중반에 년간 또는 반년간으로 발행되었던 것으로 추정된다. 「사대 지리학회 소식」의 발행은 서울대학교 사범대학 지리학회가 일반적 학회로서 갖추어야 할 2개의 기본적 발행지로서 학회지와 학회보를 모두 다 갖추는 계기가 되었던 것으로 보인다. 1968년 이전에 창간된 「사대 지리학회 소식」은 대한지리학회가 「지리학회보」를 1969년에 창간한 것을 감안하면, 「한국 최초의 지리학회보」로 추정된다. 「사대 지리학회 소식」은 1969년에 대한지리학회가 학회보로서 「지리학회보」(제1권 제1호)를 창간

하도록 자극하고, 「지리학회보」의 체제와 형태에 전형적인 선례(先例)가 되었던 것으로 추정되는데, 이는 「지리학회보」가 「사대 지리학회 소식」보다 여러 해 늦게 창간된 가운데 「지리학회보」의 창간취지, 규격, 분량, 내용구성 등이 「사대 지리학회 소식」의 그것들과 거의 유사하거나 동일하기 때문이다. 특히, 「지리학회보」의 창간취지는 당시 대한지리학회장 강석오(姜錫午)의 창간사(創刊辭)에 잘 드러나 있는데, "학회지 「지리학」이 지리학 연구경향, 지리사조, 자연, 인문지리의 조사연구, 지리교육 등에 관한 학문적 체계를 유지하기 위해 간행되는 것에 대해 「지리학회보」는 초등학교, 중등학교 교사를 상대로 하여 변동교재, 지리학계 소식 등을 적시에 전하는 것을 목적으로 간행한다."가 그것이다. 이러한 「지리학회보」의 창간취지는 「사대 지리학회 소식」의 그것과 거의 동일한 것이다.

- 15) 이병설(1938~1996)은 후일 일본 도쿄도립대학(東京都立大學)에서 박사학위를 취득했고(1976년), 서울대학교 사범대학 지리교육과 교수를 역임했다. 이기석은 후일 미국 미네소타대학교(University of Minnesota)에서 박사학위를 취득했고(1977년), 이화여자대학교 사범대학 사회생활학과 및 서울대학교 사범대학 지리교육과 교수를 역임했으며, 현재 '대한민국학술원 회원'이다.
- 16) 형기주(1995:2)는 「지리」제2호(1962)의 판형을 '4×6배판'이라고 기술하고 있다.
- 17) '갱지'는 지면(紙面)이 좀 거칠고 품질이 낮은 종이로 주로 신문지와 시험지로 쓴다. '프린트본'은 필경, 즉 원지(原紙)에 글을 써서 등사한 것이다.
- 18) 정장호(1936~2019)는 당시 서울대학교 대학원 지리학과 석사과정에 재학중이었는데, 후일 같은 대학원에서 석사학위를 취득했고(1962년), 수도여자사범대학(세종대학교의 전신) 및 강원대학교 사범대학 지리교육과 교수를 각각 역임했다. 임덕순(1939~2010)은 후일 서울대학교에서 박사학위를 취득했고(1985), 충북대학교 사범대학 지리교육과 교수 등을 역임했다.
- 19) '황만익'은 후일 미국 테네시대학교(University of Tennessee)에서 박사학위를 취득했고(1982년), 건국대학교 이과대학 지리학과 및 서울대학교 사범대학 지리교육과 교수를 역임했다.

- 20) 원문의 일부 자구를 문맥 연결을 위해서 수정했다.
- 21) 과내 소식 중 ‘외원교구 인수’는 Peabody팀의 원 조계획에 따른 외원교구를 인수한 것이었고, ‘답사발표회 및 최복현 교수 환송회’ 중 최복현 교수 환송회는 최복현 교수가 서울 중앙중고등학교 교장으로 전출하는 데에 따라 열린 것이었고, 그리고 환송회는 세계일주를 마친 김찬삼(金燦三) 선배를 초청한 것이었다.
- 22) 발행연도가 ‘19uu’로 표기되어 있는데, 이는 발행연도가 ‘불명(不明)’임을 의미한다.
- 23) 원문의 일부 자구를 문맥 연결을 위해서 수정했다.
- 24) ‘육지수’는 경북대학교에서 박사학위를 취득했고(1964년), 학술원 회원을 역임했다. ‘김경성’은 미국 일리노이주립대학교(Illinois State University)에서 석사학위를 취득했다(1956년). ‘김인’은 후일 미국 노스캐롤라이나대학교(University of North Carolina, Chapel Hill)에서 박사학위를 취득했고(1972년), 서울대학교 사회과학대학 지리학과 교수를 역임했다.
- 25) 「지리학보」1집(1962)의 경우 뒤표지 이면에 개략서지가 없어서 별도의 발행주체(발행인) 표기는 없으나, 앞표지(국문표지) 하단부의 ‘서울대학교 문리과대학 지리학과’ 표기를 통해서, 그리고 앞표지 다음 쪽의 ‘차례’ 상단에 명기된 ‘과회지(科會誌)’ 표기를 통해서 발행주체가 서울대학교 문리과대학 지리학과 학생회임을 알 수 있다. 또한, 보다 구체적으로는 ‘권두사’에 있는 “문리대 지리학과 학생들은 평소 자기들이 생각해 온 것을 우선 한번 모두어 사회의 비판을 받으려고 이 책자를 편찬(編纂)하게 된 것이다. 이 책자는 학생들의 손으로 된 것이기 때문에 미비한 점이 많을 것이다”라는 내용을 통해서 발행주체가 지리학과 학생회임을 알 수 있다.
- 필자가 최근까지 조사한 바에 의하면, 「지리학보」는 1962년에 발행된 ‘1집’과 1966년에 발행된 ‘제3호’의 두개 호만 실물 원본이 드러나 있고, 다른 권호는 실물 및 기록 두 측면 모두에서 전혀 드러나지 않고 있다. 「지리학보」1집은 현재 이기석 명예교수와 손정렬 교수(서울대학교 사회과학대학 지리학과)가 각 1부씩 소장하고 있는데, 이기석 명예교수 소장본은 내지의 지질 건조화가 상당히 진행되어 있고, 손정렬 교수 소장본은 손정렬 교수의 전

언에 의하면 본래 김인 명예교수(서울대학교 사회과학대학 지리학과)가 소장하던 것이었다. 「지리학보」1집의 경우 이기석 명예교수 소장본에 따르면, 앞의 국문표지는 활판인쇄로 되어 있고, 내지는 필경에 의한 등사본이며, 그리고 내지는 차례 1쪽 이외에 총 104쪽 분량에 권두사 및 격려사와 논문·단보·답사보고서 총 8편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지리학보」제3호는 학술연구정보서비스(<https://www.riss.kr>)를 통해서 보면, 서울대학교 중앙도서관 수원보존서고에 1부가 보관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손정렬 교수에 의하면, 서울대학교 중앙도서관 홈페이지(<https://lib.snu.ac.kr/>)에서 「지리학보」제3호는 일반검색으로는 ‘발행연도 미상(19uu)’의 「지리학보」로 나오지만, 학내에서의 상세정보검색으로는 ‘1966년에 간행된 「지리학보」 3집’으로 되어 있다. 손정렬 교수에 의하면, 수원보존서고에 소장되어 있는 「지리학보」제3호는 대출불가 상태여서 열람하면서 사진 촬영만 가능했다. 손정렬 교수가 촬영한 사진에 의하면, 수원보존서고에 있는 「지리학보」제3호의 보존 상태는 비교적 양호한 것으로 추정되는데, 표지 및 내지 전체가 활판인쇄본으로, 전체적으로는 표지, 편집후기 및 서지를 제외하고 총 38쪽 분량으로 되어 있고, 세부적으로는 목차, 발간사, 논문·단보·답사보고서(총 6편, 총 36쪽), 부록(졸업논문 목록, 졸업생 명단)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지리학보」제3호의 호 표기는 ‘제3호’ 이외에 ‘Vol.3’(앞부분 내표지)과 ‘통권3호’(마지막 쪽 하단부의 개략서지)로도 하고 있다. 「지리학보」1집의 분량이 총 104쪽이었는데, 「지리학보」제3호(1966)의 분량이 총 38쪽으로 대폭 감소된 것을 감안하면, 당시 발행비용 확보 및 원고 수집에 상당한 어려움이 있었을 것으로 추정된다.

- 26) 「지리」제1권 제1호(1959)·제2호(1962) 및 「지리학보」1집(1962)의 창간 내지 발행 사항을 상술하면, 「지리」제1권 제1호(1959)는 ‘한국 최초의 지리학술지’로서 ‘한국에서 최초로 창간된 지리학술지’이면서 ‘한국에서 최초로 발행된 지리학술지’로, 「지리」제2호(1962)는 ‘한국에서 두 번째로 발행된 지리학술지’로, 그리고 「지리학보」1집(1962)은 ‘한국에서 두 번째로 창간된 지리학술지’이면서 ‘한국에서 세 번째로 발행된 지리학술지’로 각각 간주된

다. 이러한 사항에 덧붙여서 지리학술지의 범주에 1963년에 창간된 대한지리학회지, 「지리학」제1호를 포함해서 견준다면, 「지리학」제1호는 ‘한국에서 세 번째로 창간된 지리학술지’이면서 ‘한국에서 네 번째로 발행된 지리학술지’로 간주된다. 「지리」제2호와 「지리학보」1집이 모두 1962년에 발행되었는데, 「지리」제2호는 ‘한국에서 두 번째로 발행된 지리학술지’로, 그리고 「지리학보」1집은 ‘한국에서 세 번째로 발행된 지리학술지’로 각각 간주하는 것은, 「지리」제2호의 발행시기가 1962년 1월 31일로 명기되어 있고, 그리고 「지리학보」1집의 발행시기가 1962년 11월 15일~1962년 12월 말일로 추정되기 때문이다. 「지리학보」1집의 경우 학술지의 발행시기가 앞표지에 기재된 ‘1962’ 이외에는 없고, 답사보고(학술보고)인 “제주도의 자연환경: 학술보고의 일부”(임병우, 69-76)의 말미에 ‘11월 15일 서울에서’, 그리고 단보인 “Denmark의 자연환경과 산업”(한일수, 101-104)의 말미에 ‘1962년 10월 30일’이라는 표기에 근거해서 1962년 11월 15일~1962년 12월 말일 기간 중 발행되었을 것으로 추정한 것이다.

- 27) ‘한국 최초의 지리학술지’, 「지리」의 창간 및 발행에 직·간접적으로 관여했던 교수, 대학원생 및 학부생은 후일 대부분 한국의 지리학과 지리교육의 발전에 크게 기여했다. 당시 최복현, 김상호, 이지호, 이찬, 이정면 등의 교수는 해방 이후 1980년대에 이르는 시기에 현대 한국 지리학의 1세대로서 한국의 지리학과 지리교육 발전의 초석을 놓았고, 이들 교수들이 학부와 대학원(석사과정)에서 가르친 형기주, 정장호, 장보용, 최기엽, 임한수, 권혁재, 이현영, 임덕순, 이병설, 최영준, 이기석, 황만익 등은 현대 한국 지리학의 2세대로서 대부분 국내·외 대학에서 지리학 박사학위를 취득하고 1970년대~2000년대의 기간에 대학에 재직하면서 한국의 지리학과 지리교육을 선진국 수준으로 발전시키는데 주도적 역할을 했다. 현대 한국 지리학의 2세대로서 민흥기 등은 중등학교 지리교육 현장에서 한국 지리교육의 발전을 견인했다. 「지리」의 창간 및 발행 당시 교수들은 강의실에서 지리학과 지리교육의 교수 차원에서 더 나아가서 학부생이 중심이 되어 지리화회를 조직하게 하고, 그 학회가 학술활동을 통해서 학회지와 학회보를 발행하도록 지도하여 당시 학부생들이 후일 한국의 지리학과 지리교육의 중추적 인물들이 되는 계기를 마련했다고 볼 수 있다. 「지리」의 창간 및 발행에 직·간접적으로 관여했던 교수들은 이미 전부 타계했고, 당시 대학원생 및 학부생이던 이들도 3분의 2 정도는 이미 타계했다. 「지리」의 창간 및 발행에 직·간접적으로 관여했던 인물들의 공로를 기리고, 그들의 노고를 위로하는 자리가 마련되기를 바란다.
- 28) 현대한국지리학사의 미시적 내역은 노도양·이정면(1963), 권혁재(1976), 정장호(1976), 김영성(1989), 형기주(1995; 2005a; 2005b; 2006a; 2006b; 2006c; 2007), 박관섭(1996), 이찬(1996) 등을 통해서 어느 정도는 드러나 있다.
- 29) 이기석 명예교수는 최근 필자 등에게 수차례 ‘현대한국지리학사 연구’의 시급성과 필요성을 언급한 바 있다. 그는 다수의 현대한국지리학사 자료들을 소장하고 있는데, 그가 2014년에 발표한 “흔돈기 지리학자 정갑(鄭甲, 1904~1988) 교수의 생애와 활동”은 그의 현대한국지리학사 연구의 전형적 사례이다.
- 30) 부연하면, 본고에서 개관한 「지리」제1권 제1호(1959) 및 제2호(1962)와 「지리학보」1집(1962) 및 제3호(1966)의 경우 현재 1~3권씩만 잔존해 있고, 그 중 일부는 극도로 훼손되어 있다. 관련 예를 하나 더 들면, 정갑이 해방 직후 번역해서 출간한 「인문지리학(人文地理學)」(Blache, 1922, 정갑 역, 1948) 및 「자연지리학(自然地理學)」(Davis, 1902, 정갑 역, 1949)의 경우도 실견(實見)이 가능한 원본은 극소수에 불과한 것으로 추정된다.

## 참고문헌

- 고이병설교수유고노집간행위원회, 1997, 「한국 기후 연구의 여명」, 고이병설교수유고노집, 서울: 도서출판 진우.
- 권혁재, 1976, “지리학”, 「한국현대문화사대계 II: 학술·사상·종교사」, 고려대학교 민족문화연구소, 191-235.
- 김영성, 1989, “한국 지리계 학과의 성장” 지리학연구, 14, 31-50.
- 노도양·이정면, 1963, “학회연혁 및 근황”, 지리학, 1, 114-115.

- 대한지리학회, 1969, 「대한지리학회보」, 제1권 제1호.
- 대한지리학회, 1987, 「대한지리학회 회원명부」.
- 대한지리학회, 2008, 「대한지리학회 회원명부」.
- 대한지리학회, 2009, 「대한지리학회 회원명부」.
- 대한지리학회, 2016, 「대한지리학회70년사: 1945~2015」, 서울: 푸른길.
- 박관섭, 1996, “해방전의 지리교육계를 회고하며,” 대한지리학회보, 50, 1-2.
- 서울대학교 문리과대학 지리학과, 1962, 「지리학보」, 1집.
- 서울대학교 문리과대학 지리학과, 1966, 「지리학보」, 제3호.
- 서울대학교 사범대학 지리학회, 1959, 「지리」, 제1권 제1호.
- 서울대학교 사범대학 지리학회, 1962, 「지리」, 제2호.
- 서울대학교 사범대학 지리학회, 1968, 「사대 지리학회 소식」, 제8호.
- 오홍석, 2004, 「현대한국지리학사」, 서울: 북메이트.
- 이기석, 2014, “혼돈기 지리학자 정갑(鄭甲, 1904~1988) 교수의 생애와 활동,” 지리교육논집, 58, 47-73.
- 이기석·윤정숙, 1982, 「한국지리논문목록: 1945~1980」, 서울: 보진재.
- 이기석·한주연, 1988, 「한국지리논문목록: 1981~1985」, 서울: 보진재.
- 이기석·김영현, 1993, 「한국지리논문목록: 1986~1990」, 서울: 백산출판사.
- 이찬, 1965, “한국지리학사,” 「한국문화사대계 III: 과학·기술사」, 고려대학교 민족문화연구소, 681-734.
- 이찬, 1996, “대한지리학회 반세기의 회고와 전망,” 대한지리학회지, 31(2), 102-105.
- 이찬·이기석, 2002, “I. 인문지리학 연구 개요,” 「한국의 학술 연구: 인문지리학」, 인문·사회과학편 제3집, 대한민국학술원, 3-15.
- 정장호, 1976, “지리교육,” 지리학, 13, 41-49.
- 제29차 세계지리학회대회 조직위원회, 2001, 「한국의 지리학과 지리학자」, 서울: 한올아카데미.
- 형기주, 1995, “신세기를 향한 대한지리학회: 역사의 뒷무대,” 대한지리학회보, 48, 1-3.
- 형기주, 2005a, “숫자로 본 대한지리학회 60년,” 대한지리학회보, 88, 8.
- 형기주, 2005b, “잊을 수 없는 사람들,” 대한지리학회보, 88, 1-5.
- 형기주, 2006a, “잊을 수 없는 일들(1): 한국의 지리학계, 1945~1969년,” 대한지리학회보, 90, 1-7.
- 형기주, 2006b, “잊을 수 없는 일들(2): 한국의 지리학계, 1945~1969년,” 대한지리학회보, 91, 1-6.
- 형기주, 2006c, “잊을 수 없는 일들(3): 한국의 지리학계, 1970년대,” 대한지리학회보, 92, 1-9.
- 형기주, 2007, “잊을 수 없는 일들(4): 한국의 지리학계, 1980년대,” 대한지리학회보, 94, 1-8.
- 人文地理學會, 1963, 「人文地理」, Vol.15, No.2.
- 日本地理學會, 1967, 「地理學評論」, 第40卷 第12号.
- Blache, Paul Vidal de La, 1922, Principes de Géographie Humaine publiés d'après les manuscrits de l'auteur par Emmanuel de Martonne, Paris: Librairie Armand Colin(정갑 역, 1948, 「인문지리학」, 서울: 연교사).
- Davis, W. M., 1902, Elementary Physical Geography, Boston: Ginn(정갑 역, 1949, 「자연지리학」, 서울: 아문각).
- James, P. E. and Jones, C. F., 1954, American Geography: Inventory & Prospect, Association of American Geographers, Syracuse: Syracuse University Press.
- Jones, C. F. and Darkenwald, G. G., 1954, Economic Geography, Revised Edition, New York: The Macmillan Company(최복현 역, 1958, 「경제지리」, 서울: 일조각).
- 대한지리학회, <https://www.kgeography.or.kr/>
- 서울대학교 중앙도서관, <https://lib.snu.ac.kr/>
- 학술연구정보서비스, <https://www.riss.kr/>
-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 <https://encykorea.aks.ac.kr/>

# 한국지리학회정관

2011년 6월 18일 제정  
2011년 12월 10일 개정  
2012년 5월 12일 개정  
2012년 12월 15일 개정  
2019년 5월 18일 개정  
2021년 5월 29일 개정

## 제1장 총칙

**제1조(명칭)** 본회는 “한국지리학회(The Association of Korean Geographers)”라 한다.

**제2조(사무소)** 본 학회는 사무소를 서울특별시에 둔다.

**제3조(목적)** 본회는 지리학 및 지리교육의 학술활동을 통한 지리학 분야의 발전과 회원 상호간의 친목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4조(사업)** 본회는 제3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사업을 한다.

1. 한국의 국토·지역, 세계 국가 및 지역의 인문·자연환경에 대한 조사 및 연구
2. 국내 및 국제 학술발표, 논문발표, 지역 답사, 강연회 등의 개최
3. 국내 및 국제 학회지, 학회보 및 기타 연구물의 간행
4. 국내외의 유관 학회, 국가 기관 및 조직, 연구소, 기타 학술 및 조사 연구 단체와의 교류 및 협력
5. 지리교육의 발전을 위한 교육 및 연구 등을 포함한 제반 사업
6. 기타 본회의 목적에 부합하는 학술 연구, 조사 및 비영리 사업

## 제2장 회원

**제5조(회원의 종류)** 본회의 회원은 정회원 단체회원, 명예회원으로 구성한다.

**제6조(정회원)**

1. 정회원은 대학, 연구소, 초·중·고등학교 등, 지리학, 지리교육, 관련
2. 분야에서 학문을 전공했거나 그와 동등한 자격을 갖추고 있는 자로서 이사회 의 입회 승인을 받은 이로 한다.
3. 정회원은 매년 소정의 회비를 납부하여야 한다.
4. 정회원은 회원으로서의 기본적인 권리 이외에 의결권, 선거권과 피선거권을 갖는다.

5. 정회원은 본인의 의사에 따라서 평생회원이 될 수 있으며, 소정의 평생회비를 납부하여야 하며, 평생회비는 수차례에 걸쳐 분할 납부할 수 있다.

**제7조(단체회원)**

1. 단체회원은 본회의 목적에 찬성하는 법인, 기관 및 단체로서 이사회의 입회 승인을 받은 단체로 한다.
2. 단체회원은 매년 소정의 회비를 납부하여야 한다.
3. 단체회원은 선거권과 피선거권을 갖지 아니한다.
4. 단체회원은 단체의 의사에 따라서 평생회원이 될 수 있으며, 소정의 평생회비를 납부하여야 하며, 평생회비는 수차례에 걸쳐 분할 납부할 수 있다.

**제8조(명예회원)**

1. 명예회원은 본회의 발전에 크게 이바지하거나 이바지할 것으로 인정되는 자연인, 법인, 기관 및 단체로서 이사회의 추대를 받은 이로 한다.
2. 명예회원은 선거권과 피선거권을 갖지 아니한다.

**제9조(제명)** 본회의 회칙을 위반하거나 명예를 손상시킨 회원은 이사회의 의결로 제명할 수 있다.

**제10조(자격정지)** 최근 회비를 2년 이상 연속 체납한 회원은 회원자격이 일시 정지되며, 회비를 납부한 때부터 자격이 회복된다.

**제11조(표창)** 본회는 본회의 발전 또는 지리학, 지리교육의 발전에 공적이 있는 자에게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표창할 수 있다.

## 제3장 임원 및 조직

**제12조(임원)** 본회의 임원은 다음과 같다.

1. 회장: 1인
2. 부회장: 5인 이내
3. 상임이사: 20명 이내
4. 이사: 50명 이내
5. 감사: 2인 이내
6. 부장 및 차장: 16명 이내

### 제13조(회장과 부회장)

1. 회장은 임기 만료 6개월 이전에 총회에서 선출하고, 부회장은 회장이 임명한다.
2. 회장은 본회를 대표하고, 회무를 총괄한다.
3. 부회장은 회장을 보좌하고, 회장 유고시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14조(상임이사와 이사)

1. 상임이사와 이사는 회장이 임명한다.
2. 상임이사는 본회의 주요 업무에 대한 집행을 담당한다.
3. 상임이사와 이사는 이사회에 참석하여 본회의 주요 업무를 심의 및 의결한다.
4. 상임이사와 이사는 이사회비를 납부해야 한다.

### 제15조(감사)

1. 감사는 임기 만료 6개월 이전에 총회에서 선출한다.
2. 감사의 직무는 다음 각호와 같다.
  - ① 본회의 회계를 감사하는 일
  - ② 기타 본회의 운영과 그 업무에 관하여 조사하는 일
  - ③ 제1호와 제2호에 관련한 사항을 총회에 보고하고, 불합리한 사항이 있을 시에는 시정조치를 요구하는 일

### 제16조(집행부서)

1. 본회의 업무를 집행하기 위하여 다음의 부서를 둔다.
  - ① 총무: 일반 행정, 사무, 회계 및 기획 업무 총괄
  - ② 편집: 학회지, 학회보 및 기타 연구물의 간행
  - ③ 학술: 학술대회 및 기타 학술행사의 진행
  - ④ 홍보: 학회보의 발간 및 학회활동의 홍보, 학술단체와의 교류 협력
2. 회장은 상임이사 중에서 각 부를 담당할 이사를 복수로 임명할 수 있다.
3. 회장은 각 부를 담당할 부장 1명과 차장 2명 이상을 임명할 수 있다.
4. 총무부에는 상근 사무직을 둘 수 있다.

### 제17조(임원의 임기)

1. 임원의 임기는 2년을 원칙으로 하며, 필요에 따라 연임할 수 있다. 단, 본 조항은 2013년 6월 18일부터 적용한다.

### 제18조(고문)

1. 회장은 이사회의 인준을 얻어 약간 명의의 고문을 추대할 수 있다.
2. 고문은 본회의 운영에 관한 자문에 응하고, 이사회에 참석하여 의견을 표명할 수 있다.

### 제19조(학회지 편집위원회)

1. 학회지 편집위원회는 위원장, 부위원장, 약간명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 ① 위원장은 학문적 업적이 뛰어난 회원 중에서 회장이

임명하며, 이사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위원장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편집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 ② 부위원장은 편집담당 상임이사 중에서 위원장에 의해 위촉되며, 위원장을 보조하여 편집위원회의 실무를 집행한다.

- ③ 위원은 위원장이 추천하여 회장이 임명하며, 편집담당 상임이사는 당연직 위원이 된다.

2. 편집위원회는 본회 학술출판물의 편집에 관한 사항을 심의 및 의결한다. 단, 학회지의 투고규정 및 발간체제를 변경할 경우에는 이사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20조(특별위원회) 본회는 약간 수의 특별위원회를 둘 수 있으며, 이의 구성은 이사회에서 결정한다.

### 제21조(부설기관)

1. 본회는 학술진흥과 교육 및 연구 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해 부설 기관을 둘 수 있으며, 부설 기관의 장은 회장이 임명한다.

## 제4장 총회 및 이사회

### 제22조(총회)

1. 총회는 정기총회와 임시총회로 나눈다.
2. 정기총회는 매년 2/4분기 중에 개최하며, 회장이 이를 소집한다.
3. 임시총회는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할 때 회장이 이를 소집한다.
  - ①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 ② 이사회 구성 인원의 과반수가 회의 목적을 제시하여 소집을 요구할 때
  - ③ 정회원의 10분의 1 이상이 회의 목적을 제시하여 소집을 요구할 때

### 제23조(총회의 성립 및 의결)

1. 총회는 정회원 5분의 1 이상 참석으로 성립되며, 출석 회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2. 총회는 다음과 같은 사항을 심의 및 의결한다.
  - ① 회장, 감사의 선출
  - ② 정관의 변경
  - ③ 기타 주요 사항

### 제24조(이사회)

1. 이사회는 회장, 부회장, 상임이사 및 이사로 구성되며,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할 때 회장이 이를 소집한다.
  - ①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 ② 이사회 구성 인원의 3분의 1 이상이 회의 목적을 제시하여 요구할 때

2. 이사회는 이사회 구성인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성립하고, 출석인원 과반수로 의결한다.
3. 이사회는 예산 및 결산의 승인을 포함하여 본회 업무에 관한 주요 사항을 심의 및 의결한다.
4. 집행부서의 부장 및 차장은 이사회에 참석하여 의견을 개진할 수 있다.

#### 제25조(상임이사회)

1. 상임이사회는 회장, 부회장 및 상임이사로 구성되며, 회장이 이를 소집한다.
2. 상임이사회는 상임이사회 구성인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성립하고, 출석 과반수로 의결한다.
3. 상임이사회는 본회의 통상 업무와 총회 및 이사회에서 의결된 사항의 집행 및 이에 관련된 사항을 결정한다.
4. 상임이사회는 이사회의 사전 위임에 의하여 또는 부득이한 경우 이사회의 기능을 대행할 수 있다. 단 사전 위임이 아닌 경우에는 반드시 이사회의 추인을 받아야 한다.
5. 집행부서의 부장 및 차장은 상임이사회에 참석하여 의견을 개진할 수 있다.

## 제5장 재산 및 회계

#### 제26조(재산)

1. 본회의 재산은 기본재산과 보통재산으로 구분한다.
2.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재산은 기본재산으로 하고, 기본재산 이외의 재산은 보통재산으로 한다.
  - ① 설립시 기본재산으로 출연한 재산

② 기부에 의하거나 기타 무상으로 취득한 재산, 단, 기부 목적에 비추어 기본 재산으로 하기 곤란한 것은 예외로 한다.

③ 보통재산 중에서 총회에서 기본재산으로 편입한 것을 의결한 재산

3. 단체의 존속기간 동안 재산에 관하여 해당 사항을 원칙으로 한다.

① 단체 자신의 계산과 명의로 수익과 재산을 독립적으로 소유·관리할 것

② 단체의 수익을 구성원에게 분배하지 아니할 것

#### 제27조(운영경비)

1. 본회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는 기본재산의 과실, 회원의 입회비 및 회비, 사업 수익금 및 기타 수입금으로 조달한다.
2. 입회비와 회비는 이사회에서 정한다.

제28조(회계연도) 본회의 회계연도는 1월 1일부터 당해 12월 31일까지로 한다.

## 부 칙

1. 본 정관에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관례에 따른다.
2. 본 정관의 시행에 필요한 세칙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따로 정한다.
3. 본 정관의 개정은 이사회 및 총회의 의결을 거친다.
4. 본 정관 제정 당시 본회 임원 및 회원은 자동적으로 본 정관 하에 등록된 것으로 본다.
5. 본 규정은 공포한 날(2011년 6월 18일)부터 시행한다.

# 한국지리학회 연구윤리규정

2011년 6월 18일 제정

## 제1장 총 칙

**제1조 (목적)** 이 지침은 한국지리학회의 연구윤리 및 진실성을 확보하는 데 필요한 역할과 책임에 관하여 기본적인 원칙과 방향을 제시함으로써 한국지리학회는 물론 회원 개인의 윤리성을 높이는 데 그 목적이 있다.

**제2조 (적용대상 및 범위)** 이 지침은 한국지리학회와 관련된 연구를 수행하는 연구자와 한국지리학회 발간학술지의 저자, 편집위원, 심사위원을 대상으로 한다.

**제3조 (연구부정행위의 범위)** 이 지침에서 제시하는 연구부정행위(이하 “부정행위”라 한다)는 연구의 제안, 연구의 수행, 연구 결과의 보고 및 발표 등에서 행하여진 위조·변조·표절·부당한 논문저자 표시, 중복연구, 이중논문 게재 행위 등을 말하며 다음 각 호와 같다.

1. “위조”는 존재하지 않는 데이터 또는 연구결과 등을 허위로 만들어내는 행위를 말한다.
2. “변조”는 연구 자료·장비·과정 등을 인위적으로 조작하거나 데이터를 임의로 변형·삭제함으로써 연구내용 또는 결과를 왜곡하는 행위를 말한다.
3. “표절”이라 함은 타인의 아이디어, 연구내용·결과 등을 정당한 승인 또는 인용 없이 도용하는 행위를 말한다.
4. “부당한 논문저자 표시”는 연구내용 또는 결과에 대하여 과학적·기술적 공헌 또는 기여를 한 사람에게 정당한 이유 없이 논문저자 자격을 부여하지 않거나, 과학적·기술적 공헌 또는 기여를 하지 않은 자에게 감사의 표시 또는 예우 등을 이유로 논문저자 자격을 부여하는 행위를 말한다.
5. “중복연구” 및 “이중논문게재”는 동일한 내용의 연구로 두 개 이상의 연구과제를 수행하거나 두 개 이상의 학술지에 동일한 연구결과를 발표한 행위를 말한다.
6. 위의 각 호 이외에 과학기술계에서 통상적으로 용인되는 범위를 심각하게 벗어난 행위 등 본인 또는 타인의 부정행위 혐의에 대한 조사를 고의로 방해하거나 제보자에게 위해를 가하는 행위
7. 1~6항의 규정에 의한 부정행위 외에도 자체적인 조사 또는 예방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부정행위를 포함한다.

## 제2장 연구논문 관리 윤리규정

**제4조 (저자가 지켜야 할 윤리적 의무)**

1. 저자는 연구의 내용과 그 중요성에 대하여 객관적으로 정확하게 기술하여야 하고, 통계적 이유가 없는 경우에는 연구의 결과를 임의로 제외하거나 첨가하지 말아야 한다. 또한 이전에 출판된 자신의 연구물(게재 예정이거나 심사 중인 연구물 포함)을 새로운 연구물인 것처럼 출판(투고)하거나 출판을 시도하지 않는다.
2. 연구논문에는 학술적으로 충분한 가치가 있는 결론과 뒷받침할 수 있는 종합적인 논거가 포괄적으로 포함되어 있어야 한다. 이미 발표한 논문과 동일한 결론을 주장하는 연구논문을 투고하는 경우에는 새로운 논거에 중대한 학술적인 가치가 있어야만 한다.
3. 공개된 학술자료를 인용할 경우에는 정확하게 기술하도록 노력하여야 하고, 상식에 속하는 자료가 아닌 경우에는 반드시 그 출처를 명백하게 밝혀야 한다.
4. 보고되는 연구에 학술적으로 중요한 기여를 하였고 결과에 대하여 책임과 공적을 함께 공유할 모든 연구자는 공저자가 되어야 한다.
5. 연구논문에 다른 연구자의 결과에 대하여 비판적인 입장을 명백하게 밝히는 것은 가능하지만 개인적인 비난은 절대 허용되지 않는다.
6. 저자는 논문의 심사 과정에서 제시된 편집위원과 심사자의 의견을 호의적인 태도로 수용하여 논문에 반영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하여야 하고, 이들의 의견에 동의하지 않을 경우에는 그 근거와 이유를 상세하게 적어서 편집위원에게 알려야 한다.

**제5조 (편집위원이 지켜야 할 윤리적 의무)**

1. 편집위원은 저자의 인격과 학자적 독립성을 존중해야 한다.
2. 편집위원은 학술지에 게재할 목적으로 투고된 논문은 오로지 논문의 질적 수준과 투고 규정을 근거로 공평하게 취급하여야 한다.
3. 편집위원은 투고된 논문의 평가를 전공 분야에 대하여 전문적인 지식과 공정한 판단 능력을 가진 심사위원에게 의뢰해야 한다.
4. 편집위원은 투고된 논문의 게재 여부를 결정하는 모든

책임을 진다.

5. 편집위원은 투고된 논문의 게재가 결정될 때까지는 심사자 이외의 사람에게 투고된 논문의 내용을 절대 공개하지 말아야 한다.

### 제6조 (심사위원 지켜야 할 윤리적 의무)

1. 심사자는 학술지의 편집위원이 의뢰하는 논문을 심사 규정이 정한 기간 내에 성실하게 심사하여 학술 발전에 기여할 의무를 가지고 있다.
2. 심사자는 높은 수준의 과학적, 학술적 기준을 적절하게 유지하면서 논문에 포함된 실험과 이론의 내용, 결과의 해석, 설명의 질을 객관적으로 심사하여야 한다. 완벽하게 검증되지 않은 개인의 학술적 신념이나 가정에 근거한 심사는 옳지 않으며, 자신의 연구나 저자와의 개인적인 친분 관계를 떠나 공정하게 심사하도록 최선의 노력을 하여야 한다.
3. 심사자는 전문 지식인으로서의 저자의 인격과 독립성을 존중하여야 한다. 편집위원에게 보내는 심사의견서는 논문에 대한 자신의 판단과 보완이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부분과 그 이유를 상세하게 설명하여야 한다. 심사의견서는 정중하고 부드러운 표현으로 작성하여야 하며, 저자에 대한 모욕 및 비하 표현은 절대 삼가한다.
4. 심사자는 심사를 의뢰한 논문에 대한 비밀을 보장하여야 한다. 논문에 대하여 특별한 조언을 받기 위해 서가 아니라면 논문을 다른 사람에게 보여주거나 그 내용에 대하여 다른 사람과 논의하는 것도 바람직하지 않다. 다른 사람의 조언을 받아서 심사의견서를 작성할 경우에는 그 사실을 편집위원장에게 알려야 한다. 논문이 게재된 학술지가 출판되기 전에는 저자의 동의 없이 논문의 내용을 인용해서는 안된다.
5. 심사자는 논문의 내용과 관련된 중요한 연구가 정확하게 인용되어 있는가에 세심한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심사하는 논문의 내용이 이미 학술지에 공개된 다른 논문과 매우 유사할 경우에는 편집위원장에게 그 사실을 상세하게 알려주어야 한다.

## 제 3 장 연구윤리규정 시행 지침

제7조 (연구윤리규정 서약) 한국지리학회 신규 회원은 본 연구윤리규정을 준수하기로 서약해야 한다. 기존 회원은 윤리규정의 발효 시 연구윤리규정을 준수하기로 서약한 것으로 간주한다.

제8조 (연구윤리규정 위반 보고) 학회의 회원, 편집위원, 심사위원은 다른 회원이 연구윤리규정을 위반한 것을 인지할 경우 그 회원으로 하여금 윤리규정을 환기시킴으로써 문제를 바로잡도록 노력해야 한다. 그러나 문제가 바로잡히지 않거나 명백한 윤리규정 위반 사례가 드러날 경우에는 학회에 신고할 수 있다. 학회 윤리위원회는 문제를 학회에 보고한 회원의 신원을 외부에 공개해서는 안 된다.

### 제9조 (윤리위원회 구성)

1. 연구윤리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학회 내에 윤리위원회를 둔다.
2. 윤리위원회는 5인 이상, 1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되며, 위원은 부회장, 상임이사, 편집위원장, 학술위원장, 사무총장, 이사 중에서 회장이 임명한다.
3. 위원장은 부회장 중에서 회장이 임명하며, 부위원장 및 간사는 윤리위원회에서 호선한다.
4. 연구의 특성과 부정행위의 규모·범위 등을 고려하여 당해 사안에 대하여 5인 이상, 10인 이내의 자문위원을 둘 수 있으며, 다음 각 호와 같이 포함되어야 한다.
  - ① 해당 연구분야의 전문가 50% 이상
  - ② 해당 연구기관 소속이 아닌 외부인 20% 이상

### 제10조 (조사와 결과 보고)

1. 부정행위가 신고되면 학회는 윤리위원회를 구성하여 제보일로부터 30일 내에 조사를 실시한다.
2. 윤리위원회는 제보자와 피조사자에게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하며 이의제기 및 변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당사자가 이에 응하지 않을 경우 이의가 없는 것으로 간주한다.
3. 윤리위원회는 조사가 진행되는 과정에 제보자가 불이익, 압력 또는 위해 등을 받지 않도록 보호해야 하며, 이에 필요한 시책을 마련해야 한다. 또한 윤리위원회는 조사가 완료될 때까지 피조사자의 명예나 권리가 침해되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한다.
4. 윤리위원회는 조사의 결과와 내용을 조사 시작 30일 이내에 회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5. 조사의 결과보고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반드시 포함되어야 한다.
  - ① 제보의 내용
  - ② 조사의 대상이 된 부정행위
  - ③ 조사위원회의 조사 위원명단
  - ④ 조사과정 및 판단의 근거
  - ⑤ 허위 제보자와 윤리규정 위반 피조사자 징계 건의 여부

**제11조 (조사결과 보고에 대한 후속 조치)**

1. 회장은 조사내용·결과 및 그에 따른 판정의 합리성과 타당성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윤리위원회에 추가적인 조사의 실시 또는 조사와 관련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2. 한국지리학회회는 판정결과에 근거하여 후속 조치를 취하고 이를 제보자와 피조사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3. 윤리위원회의 징계 건의가 있을 경우, 회장은 이사회를 소집하여 징계 여부 및 징계 내용을 최종적으로 결정한다. 윤리규정을 위반했다고 판정된 회원에 대해서는 경고, 회원자격 정지 내지 박탈 등의 징계를

할 수 있으며, 이 조치를 다른 기관이나 개인에게 알릴 수 있다.

**제12조 (기타)** 이 지침에 없는 사항은 한국지리학회 이사회에서 논의하여 결정한다.

**부 칙**

1. 본 규정은 2011년 6월 18일부터 시행한다.

# 한국지리학회지 편집규정

2011년 7월 16일 제정  
2012년 12월 15일 개정  
2015년 11월 13일 개정  
2019년 11월 30일 개정  
2020년 12월 15일 개정  
2021년 12월 14일 개정  
2024년 2월 1일 개정

## 제1장 총 칙

**제1조 (규정의 목적)** 이 규정은 한국지리학회(이하 '본 학회'라 한다)가 정기적으로 발간하는 “한국지리학회지(Journal of the Association of Korean Geographers)”(이하 '학회지'라 한다)의 편집 및 발행에 관한 제반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편집위원회)** 본 규정에 정한 사항을 집행하고 기타 학회지 관련 사항을 심의, 의결하기 위해 본 학회 내에 한국지리학회 학회지(한국지리학회지) 편집위원회(이하 위원회)를 둔다.

## 제2장 편집위원회

**제3조 (구성)**

- 1) 편집위원회는 지리학 및 관련 학문 등을 전공한 박사 학위 소지자로서 이 분야의 권위자로 구성한다.
- 2) 위원회의 정원은 덕망과 연구업적과 지역분포를 고려하여 10명 내외로 한다.
- 3) 위원장은 학회장이 임명한다.
- 4) 편집부장은 위원 가운데 위원장의 추천으로 학회장이 임명하여 위원장을 보좌하여 편집위원회의 실무를 집행한다.
- 5) 위원장, 편집부장, 편집차장,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연임할 수 있다.

**제4조 (의무, 권한)**

- 1) 위원회는 본 학회에서 발간하는 학회지의 내용구성, 투고논문 심사위원 선정, 심사결과에 대한 평가, 투고자와 심사자 간의 의견교환, 중재, 최종게재여부 판정, 게재순, 학회지 발행부수와 전자간행형식, 심사료 및 투고료 결정의 권한을 갖는다.
- 2) 편집회의는 위원장 또는 위원 1/3 이상의 요청으로 소집하며, 과반수 출석과 출석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3) 위원은 위원회 활동과 관련하여 취득한 회원의 개인 정보를 외부로 유출하여서는 안된다.

## 제3장 학회지 투고

**제5조 (투고 자격)**

- 1) 투고자는 원칙적으로 한국지리학회의 회원에 한한다. 단 본 학회에 기여하는 바가 큰 논문의 경우에는 비회원일지라도 투고할 수 있다.

**제6조 (투고의 종류 및 양)**

- 1) 투고의 종류는 지리학 등의 분야의 논문, 단보, 비평, 서평 등으로 한다.
- 2) 논문은 다른 간행물에 발표되지 않은 논문이어야 하며, 본 학회에서 발표된 논문 중 우수한 것을 우선적으로 채택한다.

**제7조 (논문 접수)**

- 1) 논문은 편집위원회에서 수시로 접수하며, 접수 마감일은 학회지 발간일 1개월 전을 원칙으로 한다. 단, 투고된 논문의 양이 많을 경우 편집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다음호에 순연하여 게재할 수 있다.
- 2) 투고접수일은 투고논문의 편집위원회 접수일로 한다.
- 3) 논문은 본 규정의 투고논문작성지침(제5장)에 맞게 작성한 파일과 관련 서류를 한국지리학회지 온라인 논문투고시스템을 통하여 제출한다.

**제8조 (심사료 및 게재료)**

- 1) 투고자는 논문 제출 시 투고신청서와 함께 소정의 심사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논문심사 후 게재가 확정된 후에는 소정의 기본게재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 2) 논문 인쇄 페이지수가 12페이지를 초과하면 1페이지마다 소정의 초과게재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또한 특수인쇄가 필요한 경우 실경비를 투고자가 부담하여야 한다.
- 3) 별쇄본의 경우 투고자가 요청할 경우에 한하여 실경비를 부담하는 조건으로 발행할 수 있다.
- 4) 심사료, 기본게재료, 초과게재료 등에 대해서는 편집위원회에서 결정한다.

## 제 4장 투고 논문의 심사

### 제9조 (심사위원 선정)

- 1) 심사위원은 심사하려는 논문과의 전공 일치도 및 연구업적과 지역 형평성을 고려하여 편집위원회에서 선정, 위촉한다.
- 2) 1차 심사의 심사위원은 3인을 위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 제10조 (투고논문의 심사)

- 1) 학회지에 게재하려는 논문은 소정의 심사를 거쳐야 한다. 단, 자료, 비평, 서평은 편집위원회의 판단에 따라 게재 여부를 결정한다.
- 2) 편집위원회는 접수된 논문을 1차로 심사 의뢰하여 그 심사결과를 토대로 게재 여부를 결정한다. 게재 여부 판정이나 이후 과정은 편집위원회의 결정에 의해 진행된다. 심사판정은 아래 표와 같다.

1차 심사			게재 여부 판정
심사결과(1)	심사결과(2)	심사결과(3)	
게재 가/ 수정 후 게재 가	게재 가/ 수정 후 게재 가	게재 가/ 수정 후 게재 가 수정 후 재심/ 게재 불가	(수정 후) 게재 가
수정 후 재심	수정 후 재심/ 게재 불가	게재 가/ 수정 후 게재 가 수정 후 재심/ 게재 불가	수정 후 재심
게재 불가	게재 불가	게재 가/ 수정 후 게재 가 수정 후 재심/ 게재 불가	게재 불가

- 3) 논문심사의 판정은 연구논문인 경우 '게재 가', '수정 후 게재 가', '수정 후 재심', '게재 불가' 등 4가지의 정성적인 평가를 한다.
  - (1) 1차 심사에서 '수정 후 재심'으로 심사결과가 나온 논문은 편집위원회가 통보한 기한 내에 2차 심사를 청구할 수 있으며, 기한 내에 2차 심사를 청구하지 않은 논문은 편집위원회에서 '게재 불가'로 최종 결정할 수 있다.
  - (2) 1차 심사에서 '수정 후 재심'을 통보 받고 정해진 기한 내에 2차 심사를 청구한 논문이 연이어 '수정 후 재심'으로 평가 받으면, 편집위원회는 해당 논문을 '게재 불가'로 최종 결정한다.
- 4) 심사결과에 대하여 심사자와 투고자 간의 이의가 있을 경우 편집위원회에서 그 내용을 토론하여 게재 여부를 최종 결정한다.
- 5) 논문심사의 기준은 주제의 적절성과 참신성, 연구방법의 타당성, 논문전개의 논리성, 연구결과의 기여도, 논문작성지침의 준수여부 등으로 구분하여 평가하며,

심사를 맡은 심사위원은 세부지적 및 수정을 요구할 수 있으며 또한 '게재 불가' 판정 시에는 판정의 근거를 구체적으로 제시하여야 한다.

- 6) 심사과정에서 필자와 심사위원은 공개하지 않으며 편집위원회를 통해서만 의견을 개진할 수 있다.

## 제 5장 투고논문작성지침

제11조 (논문의 구성) 논문은 다음과 같이 구성함을 원칙으로 한다.

- 1) 국문: 논문제목, 저자명, 소속, 직위(저자정보)
- 2) 영문: 논문제목, 저자명, 소속, 직위(저자정보)
- 3) 국문요약과 주요어
- 4) 영문요약(Abstract)과 주요어(Key Words)
- 5) 본문
- 6) 미주
- 7) 감사의 글
- 8) 참고문헌
- 9) 부록

단, 감사의 글과 부록은 필요 시에만 표기한다.

제12조 (논문의 작성 및 편집) 논문은 한글 또는 외국어(영어·불어·독어·스페인어·일어·중국어 등)를 사용하여 작성할 수 있다. 국문 논문의 경우 원고는 가급적 한글로 작성한다. 논문의 분량은 학회지 인쇄본을 기준으로 12 페이지 이내를 원칙으로 한다.

- 1) 국문: 논문제목, 저자명, 소속, 직위(저자정보)를 아래의 순서로 표기한다.
  - (1) 국문제목은 한글 사용을 원칙으로 하며 가운데 정렬시킨다. 단, 부득이한 경우 한글(한자)을 병행 표기한다.
  - (2) 저자명은 주연구자, 부연구자, 보조연구자 등의 순서로 표기하며 · 으로 구분한다.
  - (3) 저자의 소속과 직위(저자정보)는 각주(footnote)로 처리할 수 있도록 원고 1쪽 하단에 국문과 영문으로 기재하며, 이메일 주소를 말미에 기재한다. 그리고 연구비의 출처를 밝힐 경우에는 저자의 소속 앞에 기재한다.  
예. 한국대학교 지리교육과 부교수(Associate Professor, Department of Geography Education, Hankook National University, hongkildong@hnu.ac.kr)
- 2) 영문: 논문제목, 저자명을 아래의 순서로 표기한다.
  - (1) 영문제목은 가운데 정렬시킨다. 영문제목은 전치사와 접속사를 제외하고 대문자로 시작한다.

- (2) 영문 저자명은 가운데 정렬시키며, 저자명은 이름-성 순으로 작성한다.
- 3) 국문요약과 주요어
- (1) 요약문은 400자 내외로 작성하고 5개 내외의 주요어를 첨부한다.
- (2) 요약문 내용은 연구목적, 연구내용 및 연구결과를 본문의 문장과 중복되지 않고 뚜렷하게 작성한다.
- 4) 영문요약(Abstract)과 영문주요어(Key Words)
- (1) 영문요약 분량은 200 단어 내외로 작성하고 영문주요어를 제시한다.
- (2) 영문요약에서 약어의 사용은 처음에는 원래의 용어를 사용하고 괄호 안에 약어를 쓴다. 그 다음부터는 약어를 사용하며 모든 글자를 대문자로 표기한다.
- 5) 본문
- (1) 논문 항목의 순서는 아라비아 숫자로 다음과 같이 기재한다.
- I.
- 1.
- 1)
- (1)
- ①
- (2) 그림, 지도, 사진, 그래프 작성
- 그림, 지도, 사진, 그래프는 구분하지 않고 그림으로 통일하며 그림의 일련번호와 제목은 그림 아래 중앙에 정렬시킨다(예: 그림 1. 지리학 연구방법론의 모형). 그림은 파일로 저장해서 제출함을 원칙으로 하며, 원본에 직접 삽입함을 원칙으로 한다. 단, 파일 제출이 용이하지 않을 시에는 선명한 원본을 제출하여야 한다. 여러 그림이 한 묶음이 될 경우 각 그림마다 a), b), c) 등의 기호를 넣고 제목에 설명을 붙인다.
- 출처 예. 출처 : 홍길동, 2022.
- 주석 예. \* 해당 연구자료는 ...
- (\*와 글자를 한 칸 띄워준다.)
- (3) 표 작성
- 표는 본문에 직접 삽입한다. 표의 일련번호와 제목은 표의 상단 중앙에 기재한다(예: 표 1. 지리학분류). 표 내용에 대한 주기사항은 표 밑 좌측에 기재한다.
- 6) 미주
- (1) 논문의 각 쪽의 하단에 기재되는 각주는 허용하지 않고, 본문 다음에 일괄 작성한다.

- (2) 주는 해당하는 문장 또는 용어의 끝에 반괄호의 일련번호로 표시한다(예: ... 지도투영법<sup>1)</sup>에 의하면 ...).
- 7) 감사의 글
- (1) 연구자가 특별히 표시하고자 하는 대상에 대해 감사의 글을 기재한다.
- 8) 참고문헌
- (1) 아래 편집규정 제13조 참고문헌 표기법을 참조한다.
- 9) 교신저자(Corresponding author)에 대한 기재 내용은 논문의 마지막 부분에 '교신'이라고 적고, 저자 이름, 우편번호, 주소, 소속, 이메일 주소 순으로 한글과 영문으로 병기한다.
- 예. 교신 : 홍길동, 08826, 서울시 관악구 관악로 1, 한국대학교 지리교육과(이메일: hongkildong@hnu.ac.kr)  
Correspondence: Kildong Hong, 08826, 1 Gwanak-ro, Gwanak-gu, Seoul, South Korea, Department of Geography Education, Hankook National University (Email: hongkildong@hnu.ac.kr)

### 제13조 (참고문헌 표기법)

- 1) 본문에서 인용이나 괄호 안의 표기
- (1) 문장 시작에 인용 표시:  
김창환(2015)에 의하면...
- (2) 문장 중간 혹은 끝에 인용 표시:  
최근 연구(Langran and Chrisman, 1999:102; 이기석·민태정, 2001)에 의하면...  
...을 받아들이고 있다(최원희, 2012).  
인용문의 문장이 끝나도 마침표는 괄호(참고문헌의 정보)가 끝난 후에 찍는다. 괄호 안에는 보기처럼 발표년 순으로 저자, 연도를 쉼표로 분리하여 표시하고, 쪽수는 연도 다음에 콜론(:)을 표시하고 기재한다.
- (3) 2명의 저자: 외국어 문헌이면 "and"로, 한글 문헌이 포함되면 "·"로 표시한다.  
Kraak and Ormeling(1996)에 의하면...  
최성길·장호(2008:10)에 의하면...
- (4) 3명 이상의 저자: 외국어 문헌이면 "et al."로, 한국 문헌은 "등"으로 표기한다.  
...라고 밝히고 있다(Robinson et al., 1995:286-291; 김종욱 등, 2008).  
논문 뒤의 참고문헌 목록에는 이름을 모두 표기한다.
- (5) 여러 저작을 괄호 안에 소개: 여러 저자의 저작을 소개할 경우 발표년 그리고 알파벳 순으로 배열하고 세미콜론(; )으로 분리한다. 동일 저자의 것은 연도순으로 배열하고 세미콜론으로 분리한다.

… 연구가 있다(Muehrcke, 1998; Dutton, 1999; Murphy et al., 2016).

(6) 재인용

① 재인용한 문헌에서 특정 연구자의 견해를 강조해서 인용하는 경우

예. Rimmer(2002, McGee, 2009에서 재인용)에 따르면 ...

② 특정 연구자의 견해를 강조하지 않고 문장 끝에서 재인용하는 경우는 (원저자, 연도, 인용자, 연도 재인용) 같이 작성한다.

예. ... 현상이라고 알려져 있다(Rimmer, 2002, McGee, 2009에서 재인용).

\* 인용 문헌이 여러 개이면서 동시에 재인용 문헌이 포함된 경우는 인용 문헌 저자, 연도; 재인용 문헌 원저자, 연도, 인용자, 연도 재인용) 같이 작성한다.

예. 도시의 내부 요인 또는 지역(local) 요인만을 주로 고려하였다고 비판된다(Dick and Rimmer, 1998; Rimmer, 2002, McGee, 2009에서 재인용).

(7) 번역본

① 문장 끝에서 인용할 경우 (원저자, 연도, 역자 역, 연도)로 작성한다.

예. 공산국가의 등장 등과 같은 다양한 스케일에서의 지정학적 질서 재편이 이루어졌다 (Venier, 2004; Rüger, 2007; Clark, 2012, 이재만 역, 2019; Gerwarth, 2016, 최파일 역, 2018).

② 문장 내에서 인용할 경우 원저자(연도, 역자 역, 연도)로 작성한다.

예. Deleuze(1968, 김상환 역, 2004)에 따르면

2) 참고문헌 목록 표기

참고문헌 목록에는 논문에 언급된 것을 빠짐 없이 실는다. 참고문헌의 나열은 국문 문헌, 동양어 문헌, 그 외 외국어 문헌의 순으로 그리고 국문과 동양어 문헌은 저자 성의 한글 자모음 순으로 그리고 외국어 문헌의 경우 저자 성의 알파벳 순으로 실는다.

(1) 저널의 논문 (Journal Article)

① 국내 및 동양어 문헌

박철웅, 2012, “국가 교육과정 개정에서 지리교육의 현재와 문제점,” 한국지리학회지, 1(1), 11-17.

② 외국어 문헌

Ullman, E.L., 1953, Human geography and area research, *Annals of the Association of American Geographers*, 43(1), 54-66.

(2) 출판 단행본(Book)

① 국내 및 동양어 문헌

본문에서 단행본은 「」로 처리한다.

김상호, 1958, 「지리학」, 서울: 대학교재출판사.

옥한석·서태열, 2009, 「세계화 시대의 한국지리 읽기」, 서울: 한울아카데미.

② 외국어 문헌

Abler, R., Adams, J.S., and Gould, P., 1971, *Spatial Organization: The Geographer's View of the World*, Englewood Cliffs, NJ: Prentice-Hall.

Marshall, T., 2016, *Prisoners of Geography: Ten Maps That Explain Everything about the World*, London: Elliot & Thompson.

\* 번역본 인용 시 원저를 먼저 작성하고 뒤에 번역본을 작성한다.

예. Clark, C., 2012, *The Sleepwalkers: How Europe Went to War in 1914*, London: Penguin(이재만 역, 2019, 「몽유병자들: 1914년 유럽은 어떻게 전쟁에 이르게 되었는가」, 서울: 책과함께).

(3) 편집된 책에 실린 논문이나 장 (An article or chapter in an edited book)

Richardson, D.E. and Muller, J.C., 1991, Rule selection for small-scale map generalization, in Buttenfield, B.P. and McMaster, R.B., eds., *Map Generalization: Making Rules for Knowledge Representation*, Essex, U.K.: Longman Scientific and Technical, 136-149.

(4) 학위 논문 (Doctoral dissertations and master's theses)

① 국내 및 동양어 문헌

남상준, 1992, “한국 근대학교의 지리교육에 관한 연구,” 서울대학교 박사학위논문.

② 외국어 문헌

Palmer, R.E., 2014, Analysis of the Spatial Thinking of College Students in Traditional and Web-facilitated Introductory Geography

Courses Using Aerial Photography and Geovisualization Technology, Unpublished Ph.D. Dissertation, Department of Geography, Arizona State University.

- (5) 학회 발표 논문 (Proceedings of meetings and symposia)
- ① 국내 및 동양어 문헌  
김창환, 2011, “한국 지오파크 동향과 지역간 연계 협력 방안: 접경지역 로컬푸드 연계협력을 사례로.” 한국지리학회 동계학술대회 발표초록집, 35-38.
  - ② 외국어 문헌  
Moellering, H., 1993, MKS-AspectTM: A new way of rendering cartographic Z surfaces, *Proceedings, 6th Conference of the International Cartographic Association*, May 3-9, Cologne, Germany, 675-681.
- (6) 신문·잡지 기사와 Web 자료  
중앙일보, 2012년 4월 10일자, “서울시...”  
통계청, <http://www.kostat.go.kr>

## 제6장 발행

### 제14조 (발간된 논문의 소유권)

- 1) 심사가 완료되어 게재가 확정된 논문에 대해 저자는 저작권 이양동의서를 제출한다.
- 2) 한국지리학회지에 게재된 논문에 대한 소유권은 한국 지리 학회가 소유한다.

### 제15조 (학회지 발간)

- 1) 학회지는 연 4회 발행하며, 발간일은 3월 31일, 6월 30일, 9월 30일, 12월 31일로 한다.
- 2) 편집위원회는 이사회의 요청 혹은 편집위원회의 판단에 따라 특집호를 낼 수 있다.
- 3) 학술지의 발행 부수와 인쇄의 질 및 그에 따른 재정은 이사회에서 정한다.

## 부 칙

1. 본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적용한다.
2. 본 규정에 정하지 않은 사항은 편집위원회에서 결정한다.
3. 본 규정은 이사회의 의결로 개폐할 수 있다.



# 한국지리학회 가입 신청서

성 명	한글 (한자)	(                    )	영문	
전공분야	1.	2.	3.	
연락처	주 소	(우.                    )		
	전 화		휴대전화	
	E-mail			
소속기관	기 관 명			
	주 소	(우.                    )		
	전 화		팩 스	
	직 위	<i>학생의 경우 학사과정, 석사과정, 박사과정 등으로 표기</i>		
우편물수령지	소속기관 (                    )		자택 (                    )	
학 력	년 월	학 교		학 위
경 력	년 월	근 무 처		직 위
본인은 한국지리학회의 회원으로 가입하고자 하오니 승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div style="text-align: right; margin-right: 50px;">                     년    월    일                      신청인                    (인)                 </div>				
<b>한국지리학회 회장 귀하</b>				

※ 개인회원 가입 신청자는 연회비 2만원을 아래의 계좌로 송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입신청서는 아래의 주소나 FAX, E-mail을 이용하여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 계좌번호 : 농협 301-0329-4024-61 (예금주 : 한국지리학회)
- 주 소 : (04620) 서울특별시 중구 필동로 1길 30 동국대학교 사범대학 학림관(J동)  
1층 105호 학사운영실
- 전 화 : (02)2260-3113 • 팩스 : (02)2260-3108 • E-mail : geography.akg@gmail.com

# 『한국지리학회지』 투고 신청서

성명	한글				◆ 년 월 일 접수
	영문				
소속/직위	한글				
	영어				
연락처	주소				
	전화		휴대전화		
	E-mail		Fax		
공동투고자	성명		소속/직위		
	전화번호		E-mail		
	성명		소속/직위		
	전화번호		E-mail		
	성명		소속/직위		
	전화번호		E-mail		
논문제목	한글				
	영어				
원고종류	논문 <input type="checkbox"/> 단보 <input type="checkbox"/> 자료 <input type="checkbox"/> 서평 <input type="checkbox"/> 번역문 <input type="checkbox"/> 기타 <input type="checkbox"/>				
원고매수	본문 매	그림 매	사진 매	표 매	
학회발표여부	발표: 했음 ( ) 안했음 ( ) (하였을 경우, 학회명: , 발표일: 년 월 일)				
별쇄본	필요함 ( 부)				
기타 편집시 요망사항					

◆ 표는 기재하지 마십시오.

※ 투고지는 원고(그림, 표 포함)를 아래의 연락처 이메일로 전자 형태로 제출한다.

※ 투고지는 투고 시 심사료(60,000원)를 아래 계좌로 입금한다.

(농협은행) 301-0300-5174-21 (예금주: 한국지리학회)

※ 연락처: (08826) 서울시 관악구 관악로1, 서울대학교 사범대학 지리교육과 한국지리학회 편집위원회

전화 (02)880-7725 팩스 (02)882-9873 이메일 journal.akg@gmail.com